

耽羅文化

제56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院

2017. 10.

耽羅文化

제56호 2017. 10.

차 례

특집 논문 지금, 제주사회의 단면 들여다보기

- 사회변동에 따른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7
윤명희·김선필
-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45
김동주

일반 논문

-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제주 인식 85
장승희
- 신라 文武王의 海洋意識 117
김창겸
-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에 나타난
한중 고대 천지상서의 교응적 자연학 147
김일권
- 물고기 이름 유래담의 내포적 의미 고찰
-인물 관련 유래담을 대상으로 187
박종오

■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	215
김명희	
■ ‘민족-문화’ 개념의 변천 : ‘조선영화’에서 ‘코리안시네마’까지	247
김성경	
■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279
양미경	
■ 지역신문의 대학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301
정용복·김치완	

연구원 소식

회보	34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34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346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350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353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357

특집 논문 : 지금, 제주사회의 단면 들여다보기

사회변동에 따른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윤명희·김선희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김동주

사회변동에 따른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 「바다교회」(가명) 사례를 중심으로

윤명희*·김선필**

- I. 들어가며
- II. 기존 연구 검토
- III.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의 변화
- IV. 제주지역 「바다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 V. 나가며

국문요약

2000년 이후 제주사회는 국내 이주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변동과 종교조직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주사회변동이 제주지역 개신교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에 우리는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 성장과정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2000년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바다교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제주사회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현재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2000년 이후 제주로 이주해온 교인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이주민 교인들이 주류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개별교회

* 제주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주저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교신저자).

확장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인들 간의 갈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탈자본주의적 가치에 경도된 이주민들의 이주 동기와는 달리 종교 조직 내부에 나타난 일부 이주민 교인의 삶의 방식은 근대 자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바다교회」 사례는 2010년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제주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함의를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변동과 종교조직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종교사회학적인 함의 역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회변동, 개신교, 제주도, 이주.

I. 들어가며

2000년 이후 제주사회는 국내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 정착 인구의 증가 배경에는 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되는 중앙·지방정부의 개발정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거부하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향이 혼재되어 있다.¹⁾ 이러한 인구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파괴, 심각한 교통 체증과 생활쓰레기 처리난 등 제주사회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특히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의 충돌은 제주사회가 직면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²⁾ 이렇듯 현재 제주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1) 2010년 이후 제주지역 이주와 관련된 현황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민영·최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耽羅文化』 50, 2015, 39~78쪽; 김정임·윤명희,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耽羅文化』 55, 2017.

2) 연합뉴스, “관광객 물리는 제주 ‘쓰레기 대란 막아라’ 비상” 2016년 8년 22일자; 오마이뉴스, “제주 이주민·원주민 갈등, 급기야 해녀·다이버 충돌”, 2016년 5월 28일자; KBS뉴스, “난개발이 빚은 제주도의 슬픈 자화상”, 2016년 9월 15일자; 한겨레, “제주도 땅값이 치솟아 행복하십니까”, 2015년 1월 11일자.

한편 제주사회의 변동은 개신교회의 양적 성장과 외형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지역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체 신자³⁾의 증가율은 최근 증가한 제주 인구의 수에 정비례하고 있다.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자 비율을 보이던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 성장 추세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교회, 이젠 더 이상 ‘준선교지’가 아닌 선교하는 지역으로 새 차원의 역사를 쓰자”라는 2016년 제주 개신교계 언론의 헤드라인은 제주 개신교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⁵⁾

제주 개신교회의 성장 과정은 급격한 제주사회의 변화 시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제주의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마다 개신교계 교인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관련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⁶⁾ 1900년대 초반에 제주의 개신교는 제주로 온 타 지역민에 의해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를 건립하였다. 6·25 전쟁시기와 직후에는 제주로 피난을 온 개신교 신자들이 제주의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고 교회를 건설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제주의 산업화시기에는 국가 주도의 관광서비스 개발 산업이 성장하면서 제주로 대거 이주한 타 지역민에 의해 교회가 건축(또는 증축)되고, 개신교계 언론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변동에 따라 제주사회의 유입 인구의 폭증하던 시기와 맞물려 개신교 조직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 개신교회는 이주 현상으로 발생된 제주사회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매우 적합하다.⁷⁾ 더욱이 종교조직은 조직 확장을 위해 새로운 구성원을

3) 이 글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를 ‘신자’ 또는 ‘교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4) 제주기독신문, 「예장통합 제주노회 전체 신자수 3만 5758명: 제주노회 ‘2015년도 교세통계표’ 발표…… 전년도 대비 1015명 증가」, 2016년 8월 27일자. 이 기사 내용은 예장통합 제주노회가 발표한 2015년 말 교세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제주 인구유입의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 2015년 12월말 제주도 인구가 3% 증가했듯이 제주노회 교세도 전년도에 비해 2.9%의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5) 제주기독신문, 「인구유입 따른 교세 자연증가 언제까지? 새 차원 복음 제시 등 교회정착을 높여야」, 2016년 1월 6일자.

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015; 제주성내교회, 『제주성내교회100년사』, 2008; 제주성안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2008.

7) 이원규, “제5장 사회변동과 한국교회의 미래”,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kmc, 2010, 144~193쪽.

수용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이며,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종교조직이 새로운 구성원의 적응과 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주와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⁸⁾

따라서 우리는 사회변동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성장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성장을 제주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이 있었던 시기에 따라 검토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바다교회」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제주사회변동과 제주지역 개신교회 관련 문헌들을 검토했으며, 사례분석을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의 한 단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제주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익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사회변동과 종교조직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종교사회학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한국 사회변동과 개신교회

한국의 사회변동과 개신교회에 대한 연구는 개신교회의 성장과 쇠퇴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서 교회 성장과 쇠퇴의 개념은 교인

8) 박노면, 「미주 한국인 사회의 문화구조」, 『교육학연구』 38(2), 2000, 65~77쪽; 김신열, 「종교 활동 참여가 미주 한인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5, 2004, 147~168쪽; 김운용, 「북미 한인교회의 공동체 형성과 예배와 설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실천』 28, 2011, 111~141쪽; 조발그니, 「종교공동체의 사회적지지 역할과 영국, 프랑스, 독일 유학생의 적응」, 『종교연구』 64, 2011, 247~280쪽; 조성윤,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 한울, 2014; 박원석,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2016, 102~119쪽.

의 수, 그리고 그 비율의 증감에 기초한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⁹⁾ 특히 사회변동의 변인 가운데 하나인 인구요인은 한국 개신교의 성쇠와 깊은 관련이 있다. 김형길·김다니엘은 인구요인이 교회의 성쇠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구 절벽이 예측되는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취해야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⁰⁾ 또한 김성건은 한국의 인구 변동과 개신교회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면서,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변동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¹¹⁾ 이처럼 한국의 사회변동으로 인한 인구 변화는 개신교 교인 수의 증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한국 개신교회 성장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개신교 교리의 친화성 속에서 찾는 연구들도 있다. 노치준은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이 해방 후 강조된 서구화, 반공이데올로기,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근대주의와 개신교회의 결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인 수의 급속한 성장과 정체는 ‘개교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한다. 개교회주의란 개별교회의 교인 수 확장 정책으로써,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를 추동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교회 성장주의에 반영된 것이다. 산업화 이후, 한국 개신교회는 근대주의·개별교회 확장주의·물량주의 이념과 결합하면서 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사회변동에 따라 종교조직도 함께 변화하였다. 그가 보기에, 개교회주의가 주류를 이루은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와 교인 숫자 등으로 측정해왔다. 이러한 교회확장 정책은 일면 성공을 이룬 듯 보였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선 순간 개신교회는 사회적 공신력을 잃게 되면서, 개교회주의는 오히려 교회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¹²⁾ 노치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김성건은 한국의 메가처치(초대형교회)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메가처치는 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규모는 가히 세계적이다. 한국에서 메가처치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미국식 변영의 복음과 한국의 무속적 전통 양자 사이에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하기

9) 이원규, 「앞의 글」, 2010.

10) 김형길·김다니엘,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대응」, 『로고스경영연구』 14-4, 2016, 191~201쪽.

11) 김성건,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한국교회」, 『신학과 사회』 29(1), 2015, 77~106쪽.

12)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 교회의 위기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1998, 11~40쪽.

때문이었다.¹³⁾ 이정연은 종교시장론을 통해 자본주의를 내면화한 한국 개신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사례분석을 통해 개신교회가 물량주의와 성장주의, 다양화, 차별화를 통해 교인을 확충해왔다고 주장했다.¹⁴⁾

결국 우리는 기존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한국사회변동의 핵심 변수인 인구 변화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과 쇠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제주의 개신교회의 성장과정을 검토하려면, 최근 제주사회의 이주현상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변동시기와 맞물려 국내 인구가 제주로 유입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주사회변동과 이주 현상

제주의 인구 증가 현상은 제주의 구조적 변동시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제주로 대거 피난민이 유입된 한국전쟁 이후 국내인의 대거 제주 이주는 제주지역의 개발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사회는 해방과 4·3 사건으로 자급자족의 경제 기반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에 편입되었다.¹⁶⁾ 이러한 과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발정책을 통해 나타났다. 이상철은 제주의 개발정책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가 주도의 외생적 지역개발정책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불균형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국가의 경제 개발정책의 첫 단계는 1963년 자유항 설정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제주는 국가 주도 하에 국제자유지역화를 염두에 두면서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 추진은 여러 여건상 불투명하여 관광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 계획이 축소되었다. 자유항 건설을 구상하며 추진 조

13) 김성진,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역사』 38, 2013, 5~45쪽; 「앞의 글」, 2014.

14) 이정연, 「도시화와 종교시장 : 1960-2000년대 창신동지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14년 봄호(통권101호), 226~257쪽.

15) 물론 종교가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사회변동이 종교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16) 김철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 변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33쪽.

치를 검토하던 1980년은 제2차 오일쇼크 등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시기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한 1999년은 IMF(국제 금융 지원) 외환 위기가 진행된 시기였다. 이후 제주는 급속하게 관광산업이 팽창하였고, 한국 경제에서 제주는 이국적인 관광의 섬으로서 분업적으로 통합되었다.¹⁷⁾

2000년대 이후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지방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근원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자본 축적 순환의 공간적 조정이라는 기획 하에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¹⁸⁾

한편 2010년 이후 한국인이 제주로 이주하는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이다. 제주지역은 2010년을 기점으로 지난 5년 간 국내 정착 주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폭증했는데, 이것은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순유입률이다.¹⁹⁾ 제주의 인구 증가 현상은 제주시나 서귀포시와 같은 시 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12개 읍면지역 중에 애월읍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읍면지역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 감소가 계속되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까지 인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²⁰⁾

이러한 이주 인구의 증가는 지역개발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

17)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앞의 책, 1997, 273~311쪽; 동일저자,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1998, 99~136쪽.

18) 김석준, 『도박사회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106~108쪽.

19) 한국은행 제주본부, 「인구 순유입이 제주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년 7월, 2쪽. 제주지역은 전체인구 대비 순유입 규모는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2위)이며 이로 인해 전국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인구 순유입 규모는 세종시 137.8%, 제주 9.2%, 경기 3.7%, 충남 2.9%, 인천 2.7%, 충북 1.1% 강원 0.8%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30~4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 부혜진,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15, 226쪽.

인다. 예를 들어, 제주지역 개발 사업이 활발했던 1960-80년대 산업화시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전남지역 출신들이 제주로 이주하였다.²¹⁾ 그리고 2000년대에는 국제자유도시로 대표되는 중앙·지방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여러 부류의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제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개발정책과는 상관없이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여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국내 정착 주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인구 구성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이주 현상은 사회변동에서 비롯되지만, 이주민을 보내는 지역과 받아들이는 지역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인 행동이므로, 이주 현상은 지역의 사회변동을 추동하게 된다.²²⁾ 특히 이주 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인구의 증감은 지역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요즘 각광받는 한국인의 ‘제주 이주’ 현상은 한국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국내 정착 주민의 증가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제주 사회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 기존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이주자를 특정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주류인데, 전반적으로 제주 이주 현황을 파악한 기초연구이거나 국내 정착 이주민 집단을 유형화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에 머물고 있다.²³⁾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2000년 이후 이주민 증가가 불러온 제주사회변동의 양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조직, 특히 제주지역의 개신교회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21) 염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제주도연구』 35, 2011;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6, 2015

22)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4, 52~53쪽.

23) 김민영·최현, 「앞의 글」, 2015; 김정임·윤명희, 「앞의 글」, 2017; 오윤정 외,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4; 부혜진, 「앞의 글」, 2015.

Ⅲ.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의 변화

3장에서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있었던 제주사회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주 지역 개신교회의 성장과정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주사회의 변동이 개신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2000년대 이전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

개신교회가 제주에 진출한 시기는 대략 1900년대 초반이다.²⁴⁾ 제주도에 파견된 이기풍 목사는 제주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선교 정책 방향에 따라 근대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그는 1907년부터 1910년 2월까지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박영효와 함께 제주에서 학교를 세웠다. 이후 제주 출신인 김재원, 조봉호 등 현지인의 자생적 신앙 모임과 협력하여 교육 활동을 하였고 금성리, 조천리, 일덕리 등에 교회를 설립하였다.²⁵⁾ 또한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제주에서 의료 선교를 하였는데, 적게는 15일에서 많게

24) 제주지역 개신교회 유입한 시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기풍 목사 즉, 성직자가 입도(入道)한 1908년을 시점을 보는 시각과 그 이전부터 자생적인 개신교 공동체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풍 목사가 입도하기 전에 타지방에서 제주출신의 주민과 개신교의 접촉이 있었고 외국인 선교사의 제주 방문 또한 존재했었기 때문에,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진출 시기를 1904년에서 1908년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5)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57~60쪽; 박정환 「앞의 글」, 2013. 제주 최초의 개신교회에 대한 논란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권에서 출발한다. 이는 각 문헌마다 최초의 제주 개신교회 설립연도를 달리 기술한데에서 출발한다. 이 문헌에 따르면, 금성교회가 1908년에, 조천교회가 1909년에, 성내교회가 1910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제주성내교회 선교기념비에는 1908년 2월에 제주성내교회가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촉발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1928), 『제주선교70년사』(1978), 『제주노회사』(2000), 『제주교회총감』(2008), 『제주기독교신문사』(2008), 『제140회 제주노회 보고서』(2014) 등은 제주의 개신교회들의 창립 연대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들 각 자료는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교회로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교회 건물 혹은 예배 공간 확보가 기준이 되거나 해당 지역의 공공예배가 언제 시작되었고 정기적인 예배가 지속되었는가를 교회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교회 설립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1908년 이기풍 목사의 입도로 인해 제주에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예배를 하는 개신교회가 건립됐다는 사실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는 두 달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 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다.²⁶⁾ 이러한 개신교의 교육과 의료 활동은 개신교보다 먼저 시작된 천주교의 포교 활동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거부감 없이 선교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²⁷⁾ 1911년에서 1913년까지의 교회 출석교인 수를 집계한 기록에는 지속적으로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⁸⁾

한편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의 전통적인 구 도심권을 파괴하여 기존 토호세력을 약화시키고 신흥도시를 개발하려고 했다. 이 정책은 제주도에도 적용되어 기존의 3군(제주, 대정, 정의) 제도를 없애고 산북과 산남으로 제주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1912년부터 신작로가 개설되기 시작했는데 해안일주도로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일제는 해안의 작은 포구들을 도시로 개발하려고 하였다. 이때 개발된 곳이 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한림포 등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는 산지포(제주)와 서귀포, 모슬포와 한림포라는 새로운 공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제주의 개신교회는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모슬포에서 나타났다.²⁹⁾ 이 시기에 모슬포교회를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은 중문리교회, 법환리교회, 성읍교회, 두모리교회, 부재리교회(협재교회), 서귀포교회 등 산북지방의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광복 이후, 제주사회는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제주 개신교회는 이도중 목사를 비롯하여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러 교회가 불타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4·3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제주사회는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맞게

26)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70쪽.

27) 신축년(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의 난(제주신축교안)’은 외국인 선교사를 앞세운 천주교 포교활동과 그간 누적된 봉건적 조세수탈에 항의하며 봉기한 제주도민들과 이에 저항한 천주교인 간의 유혈 충돌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서양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개신교회가 제주지역에 정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8)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79쪽. 이기풍 목사가 보고한 개신교회 출석인원 수는 1911년 『제5회 독노회록』, 160명, 1912년 『장로교총회 보고서』 300여 명, 1913년 400여 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9)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94쪽.

된다. 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항과 성산포항에 1만여 명의 피난민이 들어왔고,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벌어진 1·4 후퇴로 인해 5만 명에서 6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기독교 잡지에는 제주에 피난 온 교인이 9,663명이고, 목사가 18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⁰⁾ 이 피난민들은 제주시 무근성(현재 삼도이동)에 천막으로 이뤄진 피난민촌을 마련하고 거주하였다. 이 외에도 모슬포, 서귀포, 한림 등 제주 전역으로 이주한 피난민 신자들이 조직되어 교회를 세웠다. 또한 피난을 왔던 개신교인들은 제주시에 영락, 도두, 화북, 한라교회를 세웠고, 동쪽 조천지역에서는 신촌, 함덕교회를 세웠으며, 서귀포지역에서는 시은, 보목, 효돈, 토평교회를 세웠다. 제주도 서쪽지역인 한림에서는 비양도, 월령교회를 세웠고, 추자도에서는 추광교회를 세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뿐만 아니라 감리교와 성결교 교파에서도 제주에 교회를 세우면서 제주는 다교파 시대를 맞았다.³¹⁾ 또한 제주의 피난민들은 대한신학교 제주분교를 설립하고, 단기 성경학교 및 자녀들을 위한 피난민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³²⁾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제주 개신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피난민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는 제주영락교회(1952년)이며, 제주성내교회(1910)에서 분리된 동부교회와 피난민이 세운 중부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제주 성안교회가 되었다. 이 두 교회는 오늘날 제주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교회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서부교회와 모슬포교회는 갈등으로 인해 교세가 나뉘었지만,³³⁾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교인이 증가하였다. 한국 본토에서 피난 온 개신교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설립·건축하면서,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54년 6월부터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회가

30) 『신앙생활』, 10-78, 35쪽. 재인용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268쪽.

31)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00~302쪽.

32)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268쪽.

33) 참고로 서부교회는 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한신파(조신)와 장신파(노회)로 분리되어 갈등이 발생하였다. 모슬포교회는 조남수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교파 선택 문제로 분쟁이 있다. 조목사는 예장 측과 기장 측의 분열 당시에 기장 측에 가담함으로써 모슬포교회는 기장 측과 예장 측으로 분리되었다.

제주지역 10개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제주지역의 개신교회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³⁴⁾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 조응하도록 이루어졌다. 제주도 개발계획의 주요 방향은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산업개발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불균형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국가의 경제 개발정책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국제자유지역화를 염두에 두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로 인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제주도는 급속하게 관광산업이 팽창하였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제주도가 이국적인 관광의 섬으로 분업화되어 통합되었다.³⁵⁾ 이와 같은 국가 주도 개발로 인해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고, 관광산업에 의해 광주·전남지역 출신들이 제주도로 많이 이주해 왔다. 이들의 유입으로 제주지역의 개신교회는 1970년대 중반부터 또 다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새로운 이주민 교인들의 유입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제주의 개신교회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증축(또는 신축)이 요구되었다.³⁶⁾ 그것은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회,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부인조력회 제주지회, 탈마지 선교사 부자(타마자, 타요한)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³⁷⁾ 이러한 개신교계의 성장은 1980년대 제주

34)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22쪽. 해방 이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는 미국 남장로회의 지원을 받아 피난민 교회에 응급구호 상비품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성경학교와 한림농민성서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개척교회를 세운 전도사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1950년대에 교회 10곳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35) 이상철, 『앞의 글』, 1997, 273-311쪽 재인용; 김정임·윤명희, 『앞의 글』, 144쪽.

36) 염미경, 『앞의 글』, 2011;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04쪽.

37) 특히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회는 1908년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입도한 이래로 1970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 선교를 지원하였고, 1970년에는 선교센터(제주기독교센터)를 세워서, 제주지역사회에 의료 지원과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게선 선교사가 건강 악화로 제주를 떠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가 제주기독교센터의 일체의 재산권을 양도받아 센터의 이름을 ‘제주기독교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제주노회사』, 2000, 46~51쪽 재인용;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22~302쪽. 한국 본토의 교회들과 외국인 선교사들은 제주지역 미자립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물론, 제주도민을 상대로 무료 의료봉사와 치료를 제공하였고, 선교사들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주 전역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지역 개신교회들의 재정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선교기관들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제주에 제주극동방송, 제주기독교방송국, CTS, CBS제주방송, 제주기독신문 등 교계 언론사들이 설립되어 팽창하는 교세를 뒷받침하였다.

2.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

2002년경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것은 IMF 구제금융과 제주지역에 불어닥친 경제불황을 돌파하려는 국가 및 제주사회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³⁸⁾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약칭 JDC)를 설립하여,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³⁹⁾

이처럼 제주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인 및 외국인의 제주 이주가 2000년 이후부터 지속되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제주지역이 2010년 이후 순유입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 정책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올레길 조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이 한국인의 제주 정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⁴⁰⁾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상의 분권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제주특별법은 국무조정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www.jdcenter.com). JDC(약칭)는 2002년 5월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전담기구로서 의료, 첨단 과학 분야의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한다.

40)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2016년 6월 29일자.

이러한 제주사회의 변동은 개신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제주기독신문에서 집계한 제주 개신교회의 수는 총 433개이고, 교단은 34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소속 교회가 123개로 제일 많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46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이 41개, 한국기독교장로회 25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9개 등 순이다.⁴¹⁾ 2008년 100주년 기념행사에 360여개의 제주개신교회가 참여한 사실⁴²⁾을 보더라도, 2016년 현재 제주의 교회가 433개라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위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조사한 2016년 통계를 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2013년부터 이 교단의 총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세례교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입교인(새신자)은 총 교인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 전도되어 교회에 출석하는 수보다 기존에 개신교 신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면서 개신교회로 출석하는 세례교인 수가 증가하면서 총 교인수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즉, 개신교회 신자 수는 증가했으나 육지의 개신교회에 다니던 신자가 제주에 정착하면서 제주지역 개신교회로 수평 이동한 것이다. <표 1>은 제주 개신교회 가운데 교회 수가 가장 많은 교파의 교인 수를 집계한 것이지만, 타 교파의 교인 증가 수를 감안한다면 제주의 개신교회 신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 교세 통계

(단위 : 명)

구분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원입교인	세례교인	총교인수
2013년	1,020	3,057	1,435	1만2876	1만8743	3만3753
2014년	943	2815	1,132	1만3574	1만8955	3만4743
2015년	948	3230	1,204	1만2601	2만874	3만5758

* 출처: 제주기독신문(2016년 8월 27일자), 1면.

** 원입교인은 새신자를 말한다

41) 제주기독신문, “433개 교회, 2016년 제주복음화 향해 새 출발”, 2016년 1월 9일자.

42) 2008년경 제주 개신교회는 제주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였다. 제주 개신교계의 연대모임의 성격인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가 제주기독교 100주년기념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08년 4월에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360여개의 제주 개신교회가 모여서 기념행사를 하였다. 그 시기에 제주도 개신교계는 제주의 교세를 4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69쪽.

종합해보면, 제주사회의 변동은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질 4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의 변동이 개신교회 조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의 한 단면을 사례로 상세하게 검토하려는 것이다.

IV. 제주지역 「바다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변동이 제주지역 개신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제주 「바다교회」 사례를 분석했다. 「바다교회」는 2000년대 이후 여러 이주민 교인들이 출석하게 되면서 교인 구성에 변화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계획을 둘러싸고 교회 지도부와 기존 교인 그리고 이주민 교인 간에 갈등이 깊어졌다. 이처럼 「바다교회」 사례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조직 내부와 외형적인 조건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리는 이 사례가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변동(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이주 인구의 유입)이 현재 제주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제주 「바다교회」는 1993년에 창립한 농어촌교회이다.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며, 인구 1만 5천여 명이 사는 읍소재지에 있다. 「바다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이 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리스도교회 등과 같은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회가 여럿 있다. 그 일대에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늘교회」와 「바다교회」이다.⁴³⁾

「바다교회」의 첫 모임은 한 교인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1994년 1월에 조립식 건물을 임대하여 그곳을 예배처소로 사용하였다. 1994년 7월에 첫 목사가 부임하고, 이후 같은 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의 허가를 받아

43) 「하늘교회」와 「바다교회」은 모두 가명이다.

설립 예배를 진행하였다. 첫 목사의 교회 정책 방향은 제주토착주민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신자를 발굴하여 신앙교육을 주체적으로 지도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목사 중심이 아닌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정책과 초교파적인 개신교회 연대 방식으로 이 교회는 그 일대에서 신선한 교회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교인들 또한 목사의 정책에 동조하며 교회를 운영하였다. 십여 명에서 출발한 「바다교회」는 첫 목사가 부임한 지 몇 년 만에 성인 8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를 발판삼아 1996년에는 교회를 신축할 수 있었다. 이 당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절반 이상은 1990년대 이전에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온 이주민이었다. 이 교인들의 직업은 주로 농업, 자영업자, 군인, 비정규직 노동자, 해녀 등이었고 연령층은 40세 이상이 절반이었다.

2002년에 첫 목사가 타지방 교회로 가게 되자, 두번째 목사가 부임하였다. 두 번째 목사는 교회와 함께 2003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그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임 초기, 두 번째 목사의 교회정책 방향은 첫 목사의 그것과 유사했다. 하지만 부임하고 몇 년 후부터 타지방에서 교인의 수가 급성장한 어느 지방 교회의 성장시스템을 「바다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중심의 개교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바다교회」는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제주로 이주한 가족 단위의 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면서 교회의 신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말부터 2015년 후반까지 「바다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이주민 가정은 열아홉 가정이었으며, 이 가정에서 새로 출석하는 이들의 수는 약 20여 명이 되었다.⁴⁴⁾ 이 시기에 새로 출석하는 이들은 자신의 출생지나 거주지에서 교회를 다니던 개신교 신자이다. 즉 「바다교회」에 의해 새롭게 포교된 미전도인이 아니라,⁴⁵⁾ 타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제주에 정착하면서 출석

44) 2000년대 이후 제주에 들어온 국내이주민들은 귀농·귀촌, 교육, 문화·예술활동, 창업 등 다양한 이주동기를 가지고 있다. 「바다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들은 제주의 해안도로나 중산간 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업, 갤러리 카페 등 관광서비스업체를 경영하는 자본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거의 수도권 출신이었다.

45) 이 용어는 「비종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종교인이거나 개신교 신자가 아닌

하게 된 교인이다.

이렇듯 두 번째 목사의 교회 정책방향의 전환과 이주민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바다교회」는 한동안 기존 체제를 유지해왔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바다교회」는 교회 건축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렸다. 2015년 10월에 목사와 당회 장로들이 교회 건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기존 교인들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건축 비용에 따른 제반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직 내부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최근 이주한 교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회 지도부의 태도가 결부되어 있었다.⁴⁶⁾ 이후 교회 건축에 반대하는 몇몇 기존 교인들이 「바다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다.

현재 이 교회의 갈등 상황은 수면 아래로 잠식된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사례자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갈등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2016년 초반에 시작된 교회 건축은 2017년 초반까지 진행되었다.

우리는 「바다교회」의 증축과 재건축으로 인한 갈등관계가 표면화 된 시점이 국내 정착 주민의 폭증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 신자들로 인해 「바다교회」구성원들이 다양해졌고, 그 이후 교회조직 내부와 외형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⁴⁷⁾

우리는 「바다교회」의 조직에서 일어난 갈등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교회 구성원의 약 120여 명 가운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11명을 중심으로 면접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최근에 출석하는 이주민 신자⁴⁸⁾ 2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교회에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주요 직위를 가진 교인 가운데 20세 이상에서 70대 연령까지 면접하였다. 그것은 「바다교회」의 변화과정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연령별로 심층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각 사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아래 <표 2>과 같다.

사람'을 뜻한다.

46)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기술하겠다.

47) 제주지역은 2010년 이후 순유입 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였는데, 그것은 이 교회 신자 수의 증가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48)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바다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이주민 신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기존 교인들과 달리 삶의 방식과 교회 조직에서의 적응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2〉 사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사례자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교회 출석년수	교회에서의 역할	교회 증축 이후 출석여부
A	20대	대재	학생	무	23년	교사	출석
B	30대	대졸	취업준비	무	18년	(옛 교사)	불출석
C	30대	대졸	교사	유	23년	(옛 교사)	교회 이동
D	30대	대졸	사회복지사	무	23년	교사	출석
E	40대	고졸	공무원	무	23년	(옛 교사)	출석
G	50대	대졸	자영업	유	21년	안수집사	교회 이동
H	50대	대졸	관광서비스업	유	7년	권사	출석
I	60대	중졸	건축업	유	16년	안수집사	불출석
J	60대	초졸	농업	유	23년	권사	출석
K	70대	대졸	관광서비스업	유	3년	안수집사	출석
L	70대	중졸	공공근로	유	23년	장로	교회 이동

심층면접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2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장기간의 인터뷰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다교회」 조직 내부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점부터 교회가 증축된 이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신교 목회자들과 사전에 면접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주의 개신교회가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조직 내부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가 「바다교회」에 주목했던 이유는 이 교회가, 제주의 개신교회 가운데 2010년 이후에 교회 증축이나 재건축 등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하면서 급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2.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바다교회」 교인들의 태도 및 적응

「바다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요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바다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수도권 일대에서 온 문화예술인, 부동산 개발사업자, 노후 생활로 이주한 자 등이 이 교회로 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타지방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개신교인이 된 이주민 신자이다.

“나는 원래 학교 전근을 가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게 원칙이야. 여기 와서 교회를 몇 군데 가봤어. 이 교회는 두 번 와서 보고 결정했지. 지역의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이 교회 분위기가 좀 더 개방적이라는 느낌이랄까. 저쪽 교회는 좀 폐쇄적이고.”(사례자 K씨)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이 교회에 왔는데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모여서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교회가 뭔가 살아있다고 느껴서.”(사례자 H씨)

사례자 K씨는 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이후에 사진예술가로 살고자 3년 전에 제주에 정착한 교인이다. 그는 앞서 이주한 후배의 소개로 제주에 와서 살다가, 1년의 제주살이 경험 이후에 자연환경과 교회가 좋아서 스스로 제주에 정착한 자이다.

이주민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고려하는 점은 ‘종교조직의 개방성(수용성)’이다. 최근에 출석하기 시작한 교인들이 「바다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교회의 분위기와 목회자의 철학이나 수용적인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H씨처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교회의 아동·청소년의 수와 교회 분위기도 선택 요인이 된다.

「바다교회」의 수용성은 교회의 창립 초기의 교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정착한 선행 이주민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인 수가 정체되고 신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교회 조직에 봉사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 출석하는 신자들을 교회 조직의 봉사자로 흡수하려는 목사와 교인들의 노력이 이주민 수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회의 개교회주의가 최근에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 신자의 교회 찾기와 맞물리면서 「바다교회」의 교인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작동됐다고 본다.

적극적인 이주민 신자의 교회 출석과 달리, 기존 교인들은 급증하는 이주민 신자의 교회 출석을 낯설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심층면접을 진행했던 기존 교인 가운데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사례자 D씨는 전라도에서 제주로 온 부모를 둔 이주 2세대이다. 이 사례자는 「바다교회」에 출석한 지 이십여 년이 되었고, 현재는 이 교회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교인이다. 사례자 D씨와 B씨는 교회 내부의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것이 낯설

다고 표현한다.

“요즘은 제주에 잠깐 살려고 왔다가 정착하는 신자가 많은 것 같아요. 한동리, 평대리 쪽으로 많이 이주하는 것 같고. 일주일 새에 새로 등록하는 가정이 두 곳이에요.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낯설어요.”(사례자 D씨)

“엄마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넌. 앞으로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하맨. 뭐하러 건축은 했는지 몰라.”(사례자 B씨)

한편, 최근 교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사례자 E씨는 「바다교회」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인들이 유동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한 때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표현한다. E씨는 새로운 교인들의 출석에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지금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다.

“요즘 교회에 가면 80%가 모르는 사람이고, 20%가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묻혀서 다녀. 교회 가는 건 예배로 영적인 것을 충족하기 보다는 어차피 집에 부모님 보러 촌에 가야하니까 교회에 가는 거지. 조만간 사람들이 5·6년 정도 있다가 떠나지 않을까?”(사례자 E씨)

사례자 E씨처럼 최근의 교인 증가를 지나가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바다교회」의 역사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 교회 창립부터 기존 교인들은 새로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빈번했다. 이와 더불어 이전부터 교인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기존 교인들은 이들이 곧 떠날 사람이라는 전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기존 교인들은 교회 조직에 이주민 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안하게 보거나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바다교회」 교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보면 기존 교인들이 이주민 신자의 교회 출석을 어색해하지만, 교회에 일할 봉사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최근 봉사 인력의 부족을 경험한 교회학교나 성가대 등은 이주민 신자들의 출석을 매우 반기고 있다. 사례자 A씨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십대 청년이다. 교회에서 주요 직위를 가진 부모와 함께 적극적으로 교회에 봉사활동을 한다. A

씨는 교회 구성원이 다양해짐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분(이주민 신자)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입김이 센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가족 같아요.”(사례자 A씨)

사례자 A씨처럼 교회 조직의 지도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교인의 자녀는 이주민 신자의 증가에 부정적이지 않다. 사례자 J씨는 교회 창립과 신축과정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토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교인이다. J씨에게 교인 수의 증가는 신이 베풀어준 결과이다.

“하나님이 동쪽에 부흥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우리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사례자 J씨)

교인의 증가를 신이 일으킨 기적으로 간주하여 이주민 신자에게 호의적인 J씨와 달리, 교회의 각종 모임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교회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이주민 신자의 시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기존 교인도 있다. 사례자 D씨는 교회가 설립되었던 초기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며 교회 분위기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전에 교회가 진보적이었다면 요즘은 교회가 보수적으로 변한 거 같아요. 은퇴하고 이주해 온 나이든 분들이 오셔서 그런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강조하면서, 권위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니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당황해버려요. 교회 행사 때마다 후원금도 많이 내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 좋긴 한데 교회 예산이 있는데도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거 같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사례자 D씨)

이처럼 최근 5년 사이에 두드러진 「바다교회」의 교인 증가에 대해, 기존 교인들은 새로운 변화과정으로 보기보다 인구 이동이 잦은 교회의 특성으로 보고 있는 부류가 있는 한편, 고령화된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봉사자가 출현했다는 점과 그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긍정적으로 보는

교인들이 혼재되어 있다.

3. 교인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및 적응 방식

이주민 신자는 공식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와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에 많은 후원을 한다. 이 때문에 이주민 신자는 목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이주민 신자들은 목사와의 개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조직 내부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이전에 출석했던 수도권 도시교회의 성장지향적인 운영 체계를 소개하면서 목사를 설득시키고 교회 운영방침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이주민 신자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 시도에 대해 사례자 D씨는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주일학교 운영 방식을 어느 순간 상의 없이 목사님과 말해서 썩 바뀌 놓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목사님과 직접 의논해서 결정했다면, 그분들이 와서는 중간에서 목사님과 결정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요구해요.”(사례자 D씨)

기존 교인들은 이주민 신자의 다양한 활동과 의견이 합리적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토대로 교회를 운영해오던 예전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이주민 신자가 제주 정착 이전에 출석했던 도시의 체계적인 교회 운영 방식을 소개하며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기존 교인들의 열패감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으나, 기존 교인이 아닌 이주민 신자가 목사와의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교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주민 신자인 K씨가 기존 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K씨는 자신의 교회 적응력은 높은 교회 출석과 교회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본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여기 교회 사람들은 나오는 등 마는 등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 각성이 필요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해줘야지. 교회는 기본이 출석부터 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니다.’라고 안 해서 이해하기 참 힘들

있어. 문장 끝을 흐리게 발음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문장을 잘 끊어줘야 머릿속에 정리하고 다음 말을 인지하거든.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다음엔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전에 비해 목사님 설교가 더 힘이 있어졌어.”(사례자 K씨)

이주민 신자는 개인적으로 목사를 응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교회의 소규모 조직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한다. 목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이주민 신자의 교회 적응에 한 몫을 한다. 이 때문에 기존 교인들은 목사로부터 교회로부터 소외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가 바탕에 있는 기존 교인은 이주민 신자가 지닌 교회 소속감과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자주 말씀하셔서, 저는 저희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육지에서 예전 다니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사례자 D씨)

사례자 D씨처럼 이주민 신자의 적극적인 행위방식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원인을, 기존 교인들은 최근에 달라진 목사의 교회정책 방향에서 찾는다. 현재 목사가 이주민 신자에게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존 교인들은 면접 당시에 현재 목사의 관심사가 최근 제주에 정착하는 이주민에게 맞춰져 있어서 기존 교인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기존 교인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소외감은 2010년 이전까지 유동 인구가 늘 상존하던 「바다교회」의 지난 역사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한편 이주민 신자의 교회 적응방식은 교회 내부의 기존 교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보다는 2010년 이후 제주에 정착한 선행 이주자와의 친밀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제주 정착을 선택한 이주민이라는 동질의식과 제주 생활에 대한 관심사를 선행 이주자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끼리 친밀해지는 것이다.⁴⁹⁾

“제가 새가족부⁵⁰⁾를 하는 이유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나 같은 이주민들이 교회 등

49) 종교조직은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요인이다.

50)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는 이들에게 신앙적인 교리를 교육하고 교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록을 해도 한참동안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19가정이 새로 등록했잖아? 가만히 지켜 보면, 기존 교인들보다는 이주민들끼리 가까워. 기존 교인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이주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아. 이주민끼리는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 새롭게 등록한 이주자들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그런 면에서 연결점이 되어주지.”(사례자 K씨)

2010년 이후 부동산개발이나 대안적 삶을 이유로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 신자들은 그들의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한다. 이주민 신자들은 기존 교인과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연대하면서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거리감은 기존 교인들과 삶의 방식이 다른 데에서 오는 계층적 차이도 한 몫을 한다. 실질적으로 기존 교인과 이주민 신자 간의 삶의 방식의 격차는 주거형태, 직업, 소득수준, 학력 등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여가생활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최근에 출석하는 이주민 신자는 해외여행, 골프, 요트,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여가를 향유하지만, 기존 교인들은 교회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여가를 향유하는 계층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교회 후원금액에서도 기존 교인과 이주민 신자들을 구별되게 만든다. 이주민 신자들이 교회에 후원하는 현금의 액수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존 교인과 이주민 신자 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기존 교인들이 갖는 이주민에 대한 저항감의 원인은 계층적인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과 더불어 소득수준에서 기존 교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이주민 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교회 내에 커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면접을 했던 대부분의 기존 교인들은 「바다교회」 현금의 절반 이상을 이주민 신자들이 낸다고 응답하였다. 교회 안에서 후원금의 액수가 클수록 이주민 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2015년에 발표된 목사의 교회 증축 선언은 이주민 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교회 정책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일례였다. 지금부터 교회 증축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통해, 「바다교회」가 이주민 신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 교회 증축을 둘러싼 갈등 및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

현재 「바다교회」는 창립 20여 년 만에 새로운 갈등 상황을 맞이했다. 이전부터 조직 내부에서 교인 간의 갈등이나 목사와의 갈등은 첫 목사가 있던 당시나 현재 목사에게도 상존했으나, 개신교 의례나 목사의 설득을 통해 봉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직면하게 된 갈등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교회는 창립 4년 만에 건물을 신축해 본 경험이 있다. 기존 교인들에게 교회 건축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당시 조립식 가건물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기존 교인들이 조립식 건물의 임대가 끝나가는 시기와 맞물려 교인 증가를 이유로 교회 건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첫 목사에게 하였다. 이후 교회 건축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몇 년 동안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1997년 IMF 시기에 가까스로 건축을 마무리하였다.

당시 첫 목사는 교회 신축의 필요성과 절차의 전 과정을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교회 신축에 대해 교인들과 협의를 하면서 교인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교회를 건축하였다. 이때 첫 목사는 자신의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친인척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였고, 기존 교인들도 자발적으로 전 재산을 후원하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여 교회 신축에 힘을 실었다. 당시 지게 된 은행 채무는 건축 이후 18년 동안 변제해갔다. 이와 같은 교회 창립과 건축의 과정을 기존 교인들은 상세히 알고 있었고, 건축 당시에 발생한 각종 위험과 심리적 고통은 교인들이 신을 향해 쌓아가는 하나의 수련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이렇듯 모든 교인들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갈등 없이 교회 건축을 하고 그에 대한 채무를 갚아갔다.

그러나 2015년 「바다교회」의 증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이전에 추진한 교회 신축 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5년 10월초 목사와 두 명의 장로로 구성된 교회 당회(지도부)가 교인들에게 교회 증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여러 교인들과의 정보교환이나 의사결정 과정 없이 발표된 교회 증축 통보는 이주민 신자 일부와 은밀히 협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교회 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사와 교인들은 노후화된 교회 건물을 고치고 새 건물을 지으면, 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있기 전에,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십여 년이 된 교

회 건물의 보수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하자 보수가 아닌 새로운 건물의 증축과 기존 건물의 재건축으로 논의가 갑작스럽게 바뀐 지점은, 최근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 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

교회 증축을 제안한 교인은 제주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땅을 매입하여 리조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주택 관리까지 대행하는 부동산개발업자이다. 몇 년 전부터 그는 목사와 기존 교인들에게 동쪽지역에 개발 바람이 계속 불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바다교회」의 성장론을 주장했던 교인이다. 건물 보수를 고민하는 이 교회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수입할 때 교회도 함께 건축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증축되면 자신이 일정량의 금액을 후원하겠다는 제안도 같이 하였다. 이 제안에 목사와 장로 1명은 이주민이 급증하는 시기에 증축을 하면 교회가 더욱 중요해지며 양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증축은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목사는 교인들과 전반적인 논의 과정을 갖지 않은 채 재빠르게 증축을 감행하였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증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 교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례자 I씨는 이러한 과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건축위원회 어떻게 구성했는지 몰라. 지(목사) 몇대로 안수집사들로 설정 해 놓았어. 서류상으로만 올라간 거지...(중략)... 원칙적으로 하려면 안수집사들 외에도 건축 계통으로 아는 사람들과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작성하고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 것도 일절 없었고.”(사례자 I씨)

위 사례자 I씨는 그 일대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다. I씨는 교회 건물을 보수하는데 봉사하는 자세로 담당해온 인물이므로, 누구보다 교회 건물의 상태를 잘 아는 교인이다. 그는 교회 증축에 대한 결정이 자신처럼 건축업을 하는 전문가나 다른 교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특히 I씨가 가장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근거 없이 저렴한 건축비용과 건축 소요기간이다. 당시 제주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축자재가 폭등한

테다 건축 공사도 지연이 되어 완공도 늦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⁵¹⁾

“〈협의가〉 일절 없었어. 교회 짓는다 말하고 의논도 없이 동의도 없이 밀어 부쳐버린 거라. 내가 몇몇 사람한테 이거는 안 된다고. 김○○, 그 사람 조작으로 이거 시작된 거라. 틀림없이. 비용이 평당 200만원이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적어도 평당 300만원은 있어야 지을 수 있어.”(사례자 I씨)

I씨가 제기했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건축 비용에 대한 의문은 기존 교인 사례자 G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G씨는 「바다교회」가 처음 건축한 이후로 십팔여 년 동안 교회의 채무를 주도적으로 갚아온 인물이다. 교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G씨는 「바다교회」의 목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교인이기도 하다. G씨와 목사와의 신뢰감은 이 사례자의 책임감과 성실함 때문이다. 그러나 G씨는 2015년 10월 당시 교회 증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현재 목사의 설교 내용을 상기하며 격분하였다.

“그날 나는 설교를 듣고 완전 뛰쳐나가고 싶었어. 구토가 나왔어. 그래서 중간에 예배하다가 나가버렸어. 사모님이 나보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저런 설교는 구역질이 나서 밖에 나간다고 했어.”(사례자 G씨)

G씨가 예배 중간에 뛰쳐나갔던 이유는 목사의 달라진 설교내용 때문이었다. 당시 설교의 내용은 대략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 1997년에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바다교회」의 통장 잔고는 1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서 건축을 했다. 이번 성전 건축도 그때처럼 아무 것도 없이 출발하므로, 온 성도가 다 같이 모든 물질을 내놓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이다.

이전 설교와는 달리 교회 증축을 신의 뜻으로 간주하고, 교인들의 희생과 경제적 후원을 설득하려고 했던 목사의 시도는 그 설교 이후에 기존 교인들

51) 제주의소리, “제주 ‘주택 보급률 111%의 불편한 진실’”, 2015년 10월 15일자. 기사내용은 제주지역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인데 반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집값 상승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폭등하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주형 종합주택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의 거센 반발로 멈추었다. 이 일을 계기로 몇몇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동했거나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 그간 목사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던 G씨는 교회 증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사와 장로를 설득하다가 실패하자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다.

“교회가 십팔여 년을 건축 빚을 갚아왔어. 그동안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해도 재정(채무) 때문에 내가 아껴 쓰라고 싫은 소리하면서 시어멍 역할을 했잖아. 이번에 교회를 다시 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천천히 결정하자고 말해도 씨알도 안 먹혀. 교회 더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랜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환상에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더라.”(사례자 G씨)

이처럼 교회 증축 결정에 적극적인 저항과 설득을 시도하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교회 증축을 찬성하는 교인들도 있다. 사례자 G씨처럼 목사의 달라진 설교와 교회 증축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보이는 이들은 젊은 연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 교회의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몇몇 교인을 제외하면, 사례자들의 면접과정에서 교회의 증축 결정과정에서 대한 의문과 부정적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교회 증축 이후의 딜레마

2017년 4월 「바다교회」는 건축을 마무리했다. 지금은 새 건물에서 예배와 아동·청소년의 신앙교육 그리고 각종 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몇 해 전 직장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2016년 초반에 제주로 돌아온 사례자 C씨는 「바다교회」의 갈등 상황이 최고조인 시기에 가족과 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 달 정도 이 교회에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다. 최근에 벌어진 이 교회의 사태에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던 C씨는 「바다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 달쯤 「바다교회」 나가다가 ○○교회로 갔지. 근데 (「바다교회」)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 목사님이 ‘사례자 C씨 선생, 이제 자녀도 낳고 어른이 됐으니깐 어른답게 해야 된다. 어른이면 자기 생각대로만 할 게 아니다. 선생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도 많으니깐 「바

다교회」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 대답하지 않으니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해. 나 같은 중간연령층이 빠져 나가니까 겁이 났겠지.”(사례자 C씨)

C씨처럼 최근 「바다교회」를 떠나는 중간 연령의 교인들이 지속되자 현재 목사는 기존 교인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고 있다. C씨는 자신의 신앙관에 적합한 교회를 찾아 떠났을 뿐인데, 그것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훈계하는 「바다교회」 목사의 태도는 교회 건축과 관련이 있다는 뉘앙스이다. C씨처럼 다른 교회로 떠나는 신자들은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교회 건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그간의 과정은, 창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기존 교인들을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교회 이동을 저지하려는 목사의 태도는 사례자 E씨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E씨는 교회 증축 이전과 이후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현재 목사의 교회 정책 방향과 설교가 달라졌다고 본다.

“예전에는 (지역토착주민 대상의) 선교적인 목표가 먼저였고, 지금은 교회 성장이 목표이지. 그때는 선교에 목적이 있었으니깐 영성이 질적으로 높아졌지만, 지금은 양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니까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스타일이지. 목사가 예전에는 기존에 있던 교인들에게 의지를 했다면, 지금은 새로 온 이주민들한테 골고루 의지하는 거 같아. 작년(2015)에 비해 올해 목사님 설교는 교인들을 달래는 느낌이야.”(사례자 E씨)

E씨는 현재 「바다교회」의 사태에 침묵하며 드물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직장이 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최근 벌어진 교회의 사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E씨는 지금까지 교회에 났던 십일조를 목사의 교회 증축 선언 이후부터 장학금으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십일조를 하고 있다. E씨의 이러한 태도는 교회 증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이다. E씨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목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난 교회에 관심이 없어. 건물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건물이 뭐 중요하겠어, 휴, 목회자들의 로망이 건축이고 개척이잖아. 이 분(현재 목사)은 개척도 안 해봤고 건축도 안 해봤으니...(중략)... 지금 과도기를 걷는 거지. 이리다가 개척까지 하실지 몰라.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사례자 E씨)

현재 「바다교회」에는 사례자 E씨처럼 교회 증축에 대한 찬반 논쟁에 동조하지 않고 관망하며 냉정하게 사태를 관찰하는 교인도 존재한다. 이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은 교회 조직에 분열을 조장한다는 교계의 일반적인 담론이 싫어서 「바다교회」 사태에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E씨처럼 침묵하는 사례자 A씨는 교회 건축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교회를 이동하고 싶으나, 부모가 교회에서 주요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례자이다.

“저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미전도인을 교회로 인도하고 같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민들이 많이 왔다고 꼭 교회로 전도해야 할까요. 이주민들이 여가를 위해서 쉼을 누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주민들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교회 본연의 취지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사례자 A씨)

A씨는 교회의 본질과 건강한 교회 성장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현재 목사의 교회정책 방향의 초점이 이주민 신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선택함으로써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교회 청년모임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교인으로서 현재 목사의 교회 정책과 예전 목사의 교회정책을 비교한다.

“요새는 예전 목사님(첫 목사)의 설교를 영상으로 자주 들어요. 예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는 거는 맘몬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본이 교회를 잠식시킬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신자들이 경계할 것은 맘몬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죠.”(사례자 A씨)

개신교 교리에서 중요한 내세의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가질 만큼 사례자 A

씨는 현재 「바다교회」 사태를 위태롭게 보고 있다. 우리는 「바다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감당하는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A씨의 답변은 매우 부정적이다.

2017년 현재 「바다교회」는 의사결정과정을 생략한 채 증축을 완료하였다. 증축 이후, 우리가 면접한 11명의 사례자 가운데 여섯 명은 다른 교회로 이동했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면접한 사례자들 이외에도 교회의 증축 결정이 합리적이지는 않으나, 신의 뜻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지하는 교인도 다수 존재한다.

“여름성경학교에 도우미로 봉사했는데 예전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대로야. 오후에 배에 참여했는데 몇 명 없더라고. 숫자가 많아지기는…… 몇 달 전에 장로와 권사 뽑았어.”(사례자 E씨)

사례자 E씨의 증언처럼 「바다교회」에 정착한 이주민의 수가 교회 성장론을 주장했던 이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증가하지는 않았다. 최근 「바다교회」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 주요 직책을 맡을 교인들을 선출하였다. 선출 방식은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보이나 그 이면은 교회의 건축 빛과 관련이 있다. 교회가 주요 직위를 최근 수여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건축의 채무를 신임 직위 수여자들에게 일부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사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된 이들이 교회 증축을 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더불어 일정량의 현금을 약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교회 증축을 둘러싼 갈등은 교회 건물이 완공되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으나 여전히 유효하다. 2016년에 이 교회는 건축 비용이 고갈되어 공사가 잠시 멈춰진 상태에서, 「바다교회」의 성장 담론을 만드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일부 이주민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이동했거나 교회의 참여 태도를 소극적으로 바꾸었다. 교회 증축을 위해 일정 비용을 후원하겠다는 이주민 신자의 가족 일부는,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던 타지방의 목사가 제주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결국 교회 증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기존 교인들이 떠맡게 되었다.

“저번에 목사와 장로가 나를 찾아왔더라고, 나한테 맡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건축비용이 17억 들었는데 돈이 모자라던. 부동산 대출로 교회에 보태주라고. 자식들이 말려서 안 했지. 지금 교회 빚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를걸. 교인들도 이런 내용은 모를 거라. 분명히 빚 갚는데 50년은 걸릴 거라.”(사례자 I씨)

교회 증축을 주장하던 당시 이주민 신자가 제시했던 건축 비용 10억은 물가 변동으로 건축비가 상승하여 17억으로 증액되었다. 교회 지도부는 건축비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 없이, 개별적으로 교인들을 만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죽을 때까지 저 빚은 못 갚는다. 교회가 자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도 교회 아이들이 자라서 감당해야 될 거라. 이거 그 (이주민 일부)사람들이 안 갚는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 제주에 왔는데 이런 골치 아픈 거를 책임지겠냐.”(사례자 G씨)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그간의 채무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사례자 G씨는 현재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다. G씨에 따르면, 「바다교회」는 자본가나 소득이 일정한 사람보다는 밭이나 양어장에서 비정규 노동을 하는 주민들이라서 갚을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없다고 말한다. 초기 건축 빚을 갚기 위해 G씨는 교회의 예산에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다. 교회의 대규모 행사나 지역사회에의 후원을 줄이고, 교육 예산을 줄였으며, 각종 교회의 공과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G씨는 건축 재정으로 18년 만에 교회의 건축 빚을 갚을 당시를 상기하며, 「바다교회」의 재정상태와 현재의 구성원으로서는 현재의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과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교회 증축과정으로 인해, 교인들 일부가 「바다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긴 기간 동안 건축에 따른 채무액을 변제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 교회의 빚은 다음세대 교인들까지 안고 가야 하는 악순환의 딜레마가 남아 있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거시적인 제주사회변동 현상을 「바다교회」라는 개신교회의 사례를 통해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조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현상이 인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사회의 일부인 종교 조직의 최근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제주사회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제주사회의 변동이 제주 개신교회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격한 사회변동 시기에 제주로 유입된 인구 가운데 일부 이주민 교인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었고,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이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개신교회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 제주지역의 개신교회는 2000년 이후 제주로 이주해온 교인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이주민들이 교회 운영권을 얻게 되면서, 기존 교인들과 이주민 교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이주민 교인이 내세우는 교회 성장론과 기존 교인들이 조용하면서 주류세력으로 부상하였고, 개별교회 확장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교회의 조직은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더 위계화 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셋째, 탈자본주의적 가치에 경도된 이주민들의 이주 동기와는 달리 종교 조직 내부에 나타난 일부 이주민 교인의 삶의 방식은 근대 자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교회 성장론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교회정책이 ‘교회 건축(또는 증축)’인 것이다. 교회 성장론을 주장한 이들의 예측만큼 「바다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바다교회」는 외형을 키우려다가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성장을 위해 투여된 건축 비용과 위험만 기존 교인들이 떠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바다교회」는 제주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보여주는 프리즘과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앞으로 귀농·귀촌지역에는 개발주의 담론이 확장되면서 기존 주민과 이주민의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그리고 제주에 정착한 이주자는 여러 변인으로 인해 ‘이주 실패’로 재이주할 가능성이 높고,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위험은 제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갈 주민들이 책임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바다교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제주사회의 개발정책이 난무한 제주사회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변동과 종교조직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종교사회학적인 함의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바다교회」 사례가 제주지역 개신교계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밝히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연구논저

- 김민영·최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耽羅文化』 50, 2015.
- 김석준·김준표, 『도박사회학 : 제주지역 도박 산업화 과정과 성격』,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역사』 38, 2013.
- _____,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한국교회」, 『신학과 사회』 29(1), 2015.
- 김신열, 「종교 활동 참여가 미주 한인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5, 2004.
- 김운용, 「북미 한인교회의 공동체 형성과 예배와 설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8, 2011.
- 김정임·윤명희,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耽羅文化』 55, 2017.
- 김철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 변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김형길·김다니엘,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대응」, 『로고스경영연구』 14-4, 2016.
-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 교회의 위기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1998.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015.
- 박노면, 「미주 한국인 사회의 문화구조」, 『교육학연구』 38(2), 2000.
- 박원석,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2016.
-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 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9, 2013.
- 부혜진,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15.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4.
- 염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제주도연구』 35, 2011.
- _____,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6, 2015.

- 오윤정 외,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4.
- 원중권, 「아르헨티나 선교에 있어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 연구, 선교와 신학」 16, 2005.
-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
- _____,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1998.
-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kmc, 2010.
- 이정연, 「도시화와 종교시장 : 1960-2000년대 창신동지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1, 2014년.
- 제주성내교회, 『제주성내교회100년사』, 2008.
- 제주성안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2008.
- 조발그니, 「종교공동체의 사회적지지 역할과 영국, 프랑스, 독일 유학생의 적응」, 『종교연구』 64, 2011.
- 조성윤,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 한울, 2014.
- 한국은행 제주본부, 「인구 순유입이 제주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

2. 언론 및 인터넷자료

- 연합뉴스, “관광객 물리는 제주 ‘쓰레기 대란 막아라’ 비상”, 2016년 8년 22일자.
- 오마이뉴스, 「제주 ‘이주민-원주민’ 갈등, 급기야 해녀-다이버 ‘충돌’」, 2016년 5월 28일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www.jdcenter.com)
- 제주기독신문, 「예장통합 제주노회 전체신자수 3만5758명 : 제주노회 ‘2015년도 교세 통계표’ 발표..... 전년도 대비 1015명 증가」, 2016년 8월 27일자.
- _____, 「인구유입 따른 교세 자연증가 언제까지? 새 차원 복음 제시 등 교회 정착을 높여야」, 2016년 1월 6일자.
- KBS뉴스, “난개발이 빛은 제주의 슬픈 자화상”, 2016년 9월 15일자.
- 한겨레, “제주도 땅값이 치솟아 행복하십니까”, 2015년 1월 11일자.
-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2016년 6월 29일자.

Abstract

Changes and Dilemmas of Protestantism churches in Jeju by Social Change

- Focusing on the case of 「Bada church」

Yun, Myung-Hi*·Kim, Sun-Pil**

Since 2000, the Jeju society has undergone rapid changes due to the continuous influx of the domestic population, and social problems have arisen accordingly. We found that the social change and the religious organization were closely correlation, and reviewed the influence of the Jeju social change on Protestant churches in Jeju. therefore, we briefly reviewed the history of jeju social change and protestant growth, and analyzed the case of "BADA Church" in order to examine the situation later 200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otestant churches in Jeju are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changes in Jeju society. Second, the Protestant churches in Jeju are now being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people who have moved to Jeju later 2000. As part of the growth of some immigrant communities as mainstream forces, the expansion of individual churches is becoming a top priority for the Church.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individual churches is becoming more and more hierarchical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social status. Third, the way of life of some immigrant people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idea of

* Lead Author, Completion of the Doctoral Course in Sociology at Jeju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Postdoctoral Researcher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odern capitalism, unlike the motivations of immigrants hardly influenced by the recent capitalist values.

In particular, the case of “Bada church”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situation of Jeju society that has undergone rapid social change later 2000. It has a practical meaning in that it can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 problems faced by Jeju society. In addition, it can provide religious sociological implications as it enhance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religious organization.

Key Words: Social Change, Protestant, Jeju Island, Immigration.

교신 : 김선필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E-mail : ksp0713@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10. 03

게재확정일: 2017. 10. 04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김동주**

- I. 서론
- II. 선행연구와 분석틀
- III.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 IV. 내부 목표달성과 에너지전환 원칙을 통한 정책 평가
- V. 결론

국문요약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절반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되었다. 지난 몇 년 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예산의 절반을 제주도에 배정한 요인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추가한 제주도의 정책적 의지의 영향이 크다. 이 글은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2012년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정책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내부 기준에 따른 목표달성여부와 함께 에너지전환의 원칙에 따른 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말 까지 1단계로 도내 전체 차량의 10%(2만9천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계량적 보급 목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대규모 예산

* 이 글은 2017년 4월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의 조달과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한계를 아직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 충전기 전력소비량 보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아직은 많은 상태지만,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차 충전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제주도 전체 전력소비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 만큼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량도 부족 늘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 없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지속할 경우 ‘공급전환’과 ‘수요관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향식 일방적 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인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원칙을 지키기 못했다. 여기에 더해 2011년 환경부가 제주도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포한 이후 제주도내에서 증가한 차량은 약 11만 대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보다 20배 이상 더 많이 보급되었고, 전기버스 사업은 실패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경유 버스 267대를 추가 증차하여 운행시키는 것을 보면 전기차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보전의 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된 이유는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목적보다는 지역의 신규 산업육성 전략의 하나로 전기자동차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 천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교통·도시개발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 카본프리 아일랜드, 전기자동차, 에너지전환, 정책평가, 제주도.

I. 서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전 지구적인 생태적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려는 사회적 움직임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 그리고 핵발전소 사고는 세계 각지에서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에너지전환’은 핵·화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 뿐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스템에 내재했던 공급주도·중앙집중·시장의 존적 생산 및 관리에서 벗어나 수요관리·지역분산·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의해 생산 및 관리되는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¹⁾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여파에 따라 2012년에는 4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선언과 함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이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나아가 2015년에는 서울·경기·충남·제주 등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에너지전환 선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에너지전환 정책의 등장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발표 직후부터 개념과 실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혀 녹색스럽지 않다’는 맥락의 비판들이 제기되었다.²⁾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왜곡되었고, 실제 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이나 사업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후 원전의 가동연장과 신규 원전의 추가건설과 해외수출을 추진하는 등 방향과 실제 내용이 어긋난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³⁾

이와 더불어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시작되고 있다. 그중에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수준과 범위에서 이뤄졌지만, 같은 해 발표된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부정적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추진 초기의 내용만을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표 이후 5년이 지나는 현재 그 동안의 정책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에너지전환’의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평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
- 1) 최병두, 「대구의 도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한국경제지리학회, 2013.
 - 2)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이상현,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환경사회학연구 『ECO』 13(2),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 3) 최병두, 앞의 글, 648쪽.

은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와 더불어 지면 제약으로 인해, 여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수송분야의 화석연료 소비를 감축하여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충전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통해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 정책뿐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왔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확대보급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구성하는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전담 부서 설치와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현재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며, 현 시점에서 정책평가의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먼저 지역 수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제주도 정책을 평가할 분석틀을 도출한다. 그리고 환경부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을 정리해 본 후, 도출해낸 분석틀을 대입하여 평가할 것이다. 결론에서 내용을 요약한 후 제주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어떠한지 하는지 모색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환경부와 제주도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해볼 것이다.

II. 선행연구와 분석틀

1. 선행연구 검토

그 동안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는 국가적 수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분석의 단위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구적 맥락에서의 에너지·기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의 에너지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환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⁴⁾

4) 윤순진,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에너지 정책 :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에너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역적 수준의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지난 수 십 년 동안 압축적 성장과정을 통해 형성된 현재의 발전주의적 에너지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쥐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속에서 지역에너지정책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계도활동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목적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과 제주 등 특정한 지역(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분석하고 사례를 비교하는 연구도 제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에너지전환 사례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고, 1970년대부터 풍력발전 연구와 보급을 시작한 제주도의 사례연구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목표와 대상의 확대, (가칭) 서울시 지속가능에너지공사 설립, 안정적 파이낸싱, 분산형에너지원 확대 등 향후 서울시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안한 연구가 있다.⁵⁾ 또 ‘에너지정치’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을 전임 오세훈 시장과 비교·분석·평가하고,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초인프라 구축, 탈핵·분산에너지 도시연대와 국제연대, 에너지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 재생가능에너지동맹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⁶⁾ ‘전환이론’의 맥락에서 도시 에너지 전환의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⁷⁾

지정책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행정학보』 36(3), 한국행정학회, 2002; 윤순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 재생가능에너지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서울행정학회, 2003; 윤순진,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 가능성」, 『경제와 사회』 78, 비판사회학회, 2008; 이필렬,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적, 사회적 위험」, 『문화과학』 35, 문화과학사, 2003; 이필렬,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전환」, 『창작과비평』 122, 창비, 2003.

- 5)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이슈레포트 1호)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제언』, 환경정의, 2014년 4월 22일.
- 6) 이강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경제와사회』 107, 비판사회학회, 2015.

이와는 달리 위에 언급한 연구들이 서울시 수준의 정책을 분석한 것인데 비해, 서울시의 특정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과 미니태양광발전, 에너지자립 마을의 에너지전환운동을 ‘에너지시민성’과 전환이론에서의 ‘전략적 틈새’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다.⁸⁾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도에 대한 사례 연구도 간혹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에너지체제 전환의 맥락에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는 제주도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에너지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발주의 에너지체제의 일부라면서, 이를 ‘녹색 개발주의’라고 명명하였다.⁹⁾ 또 전환 연구의 ‘니치 실험’의 관점에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는 “제주도의 실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때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기술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¹⁰⁾

더욱이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과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의 차이를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을 통해 비교·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전환 관련 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가파도와 마라도의 실험 사례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책적 변화없이 에너지 자립·전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 하다”고 혹평하였다.¹¹⁾

7) 안정배·이태동, 「도시의 에너지 전환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8) 백종학·윤순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미니태양광사업과 에너지 시민성의 변화」, 『서울도시연구』 16(3), 서울연구원, 2016; 윤순진·심혜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1,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박종문·윤순진,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공간과 사회』 55,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9) 김동주,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나타난 녹색 개발주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10) 박진희,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 송위진 외,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235쪽.

11) 이승한·조주은·박용철, 「서울과 제주의 에너지 자립·전환 정책 비교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2), 한국환경정책학회, 2014.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여러 곳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에너지 레짐 전환’의 맥락에서 제주 마라도와 통영 연대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는 “(마라도) 마을주민은 무관심하거나 사실을 인지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경제적이고 산업적 발전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마라도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기술, 거버넌스, 규범의 에너지 레짐 전환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¹²⁾ 또 전북 완주군과 제주도의 지역에너지자립 정책을 재생에너지자원, 추진주체 및 방식, 기술적 특징, 추진과정 상의 주요 변수 등의 부분으로 비교 조사한 연구도 “제주도는 완주군의 관-민협력모델과는 달리 스마트 그리드, 풍력발전, 전기차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공급을 목표로 한 관주도-산업연계 모델이어서 주민참여와 지역거버넌스가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및 참여 자본이 주도하는 사업에 더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¹³⁾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도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서울에 비해 드물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에너지전환의 맥락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평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분석틀 : 평가방식과 기준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국가적 수준이 아닌 지역적 수준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운동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각각의 연구들은 전환연구와 에너지전환론 등 이론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분석틀도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부적 목표달성 여부와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토대로 구성한 외부적 기준 등 두 가지 접근을 통해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12) 강지윤·이태동, 「중간지원조직과 에너지 레짐 전환 : 한국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 비교」, 『공간과사회』 51,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13) 생태지평, 『지역에너지 자립정책 비교조사: 완주군-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시민연대, 2014.

대부분의 정책은 내부적인 계량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획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해서, 그 정책이 수립된 취지와 목적까지 모두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구성한 원칙에 따른 정성적 평가를 통해 상호 간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분석들을 구성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 포함되는 자체평가 방안의 형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목표 대비 수행 실적 비교를 통한 계량적 평가와 지역에너지계획 표준 모델에 제시되어 있는 각 항목의 포함 여부라는 체크리스트 평가가 있다.¹⁴⁾

이러한 평가방안을 적용해보자면, 이 연구에서의 내부적 평가기준은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 중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연도별·단계별로 제시한 계량적 보급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제주도내 차량 100%를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최종목표라면 현 시점에서의 전체 등록차량 중에서 전기자동차 등록 비율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정성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보자. 앞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과제에서 공급전환, 수요관리, 고효율화, 지역분산, 거버넌스, 에너지시민성, 환경영향, 단위연계 등 다양한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는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부분이다. 즉,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지, 전기자동차 충전량으로 인해 전체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에너지효율이 계속 증가하는지 여부이다. 또 전기자동차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존재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환경보전정책의 맥락에서도 평가기준을 설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과 자동차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 에너지경제연구원, 『합리적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실천 강화 방안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표준 지침서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2016.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문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공업지역 주변과 도시지역의 매연 발생이 증가하였다. 점차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각종 산업시설의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의 대규모 증가로 인해 도시의 대기질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환경기준 설정,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 규제, 유류의 황 함량 저감정책과 가스사용 촉진으로의 연료전환 정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등으로 대기보전정책을 추진해왔다.¹⁵⁾

특히 자동차는 인위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중 하나이고,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여줬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연료에 따라 다르지만, 휘발유나 가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이 주로 배출되고, 경유는 미세먼지(매연)와 질소산화물 등이 주로 배출된다.¹⁶⁾ 2012년 기준 전국 대기오염배출량 중 일산화탄소(CO)의 62.9%, 질소산화물(NOx)의 32.2%, 미세먼지(PM10)의 10.6%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자동차가 차지하는 오염물질 배출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¹⁷⁾ 이렇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제작차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연료관리,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¹⁸⁾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하고 있다.¹⁹⁾ 그 결과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10,855대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되었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51.9%) 5,629대가 제주도에 보급되었다. 그런데 제주도의 대기오염 현황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된 육지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되어야 한다.

15) 환경부, 『환경 30년사』, 환경부, 2010, 221~222쪽.

16) 환경부, 앞의 책, 226~227쪽.

17) 환경부, 『2016 환경백서』, 환경부, 2016, 300쪽.

18) 환경부, 『환경 30년사』, 환경부, 2010, 264쪽.

19) 전기자동차에는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구동하여 운행하는 순수 전기차(EV) 이외에, 전기와 다른 연료를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수소와 산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결합시켜 발생한 전기로 움직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 등이 있다. 이 글에서 ‘전기자동차,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 전환]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으로 충전하는가? 전기차 충전량이 전체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그것을 실행할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나. [환경보전] 대기환경질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 연구는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내부 기준 평가와 정책목적 및 에너지전환의 원칙에 따라 구성한 외부 기준 평가를 통해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정량·정성 평가할 것이다.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계획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는 2011년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2012년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인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을 수립·발표하면서 기존의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위 내용으로 포함시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해 정리한다.

1)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정부는 대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자동차가 유발하는 오염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1978년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고, 1990년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과 구매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고,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 제정으로 무·저공해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²⁰⁾

이러한 정책의 흐름 중에서 무·저공해자동차 보급은 1990년대부터 시작

20) 환경부, 『환경 30년사』, 환경부, 2010, 264쪽.

되었다. 서울 등 7대 도시에 전체 자동차의 절반이 집중되었고, 시내버스 등 대형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와 더불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공급확대가 대기보전정책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천연가스버스는 199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98년 시범운행을 하였고, 2002년 FIFA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보급이 확대되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4년에 최초로 수도권 지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보급되었다.²¹⁾

이에 비해 전기자동차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만해도 주요한 보급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2004년 환친차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2005년 말 수립·확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5개년(’06~’10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0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독자기술 확보 및 연료전지 자동차 시범운행 실시였다.²²⁾ 그러나 이 중 연료전지 자동차는 기술개발 등 실증사업 결과 및 시장상황으로 인해 2009년 보급계획부터 반영하기로 했으나,²³⁾ 실제로는 2013년부터 광주광역시 수소에너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범보급하기 시작했다.²⁴⁾

그런데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0월 8일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세계 4대 전기자동차 강국 선점을 비전으로 해서, ①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②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제도 정비, ③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④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이고, 전기자동차 양산·보급 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전기자동차 국내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기겠다고 했다.²⁵⁾

21) 환경부, 『환경 30년사』, 환경부, 2010, 267~269쪽.

22)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시대를 앞당긴다”, 2005년 12월 21일.

23) 환경부, “2007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2006년 12월.

24) 환경부, “2013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2012년 12월 30일.

25)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한국 전기자동차, 가속페달 밟는다”, 2009년 10월 8일.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 이외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실증사업의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지원기준 등을 설정하여 보급기반을 마련하였고, 우선적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의 가격차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²⁶⁾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75대와 44대를 보급했으며, 최고속도가 60km/h의 저속 전기자동차도 보급대상이었다.²⁷⁾ 또한 서울시, 영광군과 함께 제주도를 1세대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하고, 전기차 보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까지 집중 지원을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기차 보급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²⁸⁾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민간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차량구매 보조금 이외에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지원 뿐 아니라 공영주차요금 할인과 전용 주차장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다.²⁹⁾

그런데 정부가 2015년 말 1차 및 2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목표달성을 평가한 결과,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고(104%),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수소차는 각각 5.7%, 1.4%, 4.0%로 보급목표 달성이 미흡하였다. 차량 보급의 측면에서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길고 주행거리가 짧은 기술적 한계와 비싼 차량가격, 그리고 배터리 교체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내연기관 차량 대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짧은 주행거리를 극복할 공공 급속충전시설이 부족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핵심부품의 에너지절감 및 효율 최적화 기술이 미흡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제3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26) 환경부, 『2016 환경백서』, 환경부, 2016, 303쪽.

27) 환경부 교통환경과, “2011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011년 4월.

28)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는 서울, 영광, 제주를 전기차 보급을 주도할 1세대 선도도시로 선정”, 2011년 4월 4일.

29) 환경부, 『2016 환경백서』, 환경부, 2016, 303쪽.

서 전기차 성능을 2.5배 향상하고, 전기차 충전시설확대와 충전형태를 다양화하고, 친환경차 활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³⁰⁾ 환경부는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약 6년간 1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고,³¹⁾ 2017년에는 1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³²⁾

2)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1) 시범실증사업

① 2003년,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제주도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전기자동차는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2003년 11월 5일,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와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장 김상권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업무 협약식을 갖고 쉐타페 전기자동차의 공식 운행을 시작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주도에 임대한 쉐타페 전기자동차(7인승)는 모두 5대로 2005년 10월까지 2년간 제주도 업무용 차량으로 환경지도, 공해단속, 환경교육용과 관광·스포츠 관련 이벤트에 활용될 계획이었다.³³⁾

특히 이 차량을 이용한 주행연구도 있었는데, 전기자동차가 평탄한 도로에서는 주행 가능하지만 산악형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5·16도로나 1100도로와 같은 급경사에서는 차량이 멈추거나 엔진 힘이 떨어져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평탄화도로에는 전기자동차를, 산악형도로에는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카를 도입하는 저공해차 2원화 운영방안을 제시했다.³⁴⁾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30) 관계부처합동,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2015년 12월 8일.

31) 환경부 보도자료, “국내 전기차 1만대 돌파”, 2016년 12월 15일.

32) 환경부 보도자료, “내년도 전기차 1만 4,000대 보급”, 2016년 12월 9일.

33) 한국에너지, “국내최초 전기차 시범운행 개시”, 2003년 11월 12일.

34) 경향신문, “제주 전기자동차 실용화 어렵다”, 2005년 2월 4일.

② 2009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그런데 2009년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사업을 통해 다시 전기자동차 보급이 시작되었다.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사업은 세계 최대·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기에 구축해서, 관련 기술의 상용화와 수출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북부의 구좌읍 일대 약 6,000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2,395억 원(정부 685억 원, 민간 1,710억 원)을 투자해 기본설계와 인프라구축을 마칠 계획이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은 스마트 플레이스(스마트홈·빌딩 : 3개 컨소시엄),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전기차 충전소 : 3개 컨소시엄), 스마트 리뉴어블(신재생 안정화 : 2개 컨소시엄), 스마트 파워그리드(전력망 고도화 : 한전), 스마트 일렉트릭시티 서비스(신전력서비스 : 한전·전력거래소)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고, 전력·통신·자동차·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 기업들로 구성된 12개 컨소시엄(168社)이 참여하고 있다.³⁵⁾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은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인데,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부가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충전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은 제주도내 12개 충전소에 총 36대의 급·완속 충전기를 설치했고, 10여대의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증을 하였다.³⁶⁾ 2011년 7월 말 현재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으로 제주도내에는 45대의 전기자동차가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됐으며, 충전기는 131기를 설치했다.³⁷⁾ 이러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은 제주도내 일부지역 국한되었고, 실험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참여한 기업들은 “급속충전, 완속충전, 출장충전, 예약충전 등 가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제공하였으며 전기차를 활용한 렌트사업, 카쉐어링 등 스마트그리드와 연동한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하였다”.³⁸⁾

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 2010년 9월 17일.

36) 신영식,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Smart Transportation 제주 실증사업」, 『전기저널』, 대한전기협회, 2010.

37)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 친환경 전기차 시대 서막 오른다”, 2011년 9월 13일.

38)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3 스마트그리드 연차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재)한국

〈표 1〉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중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컨소시엄 참여기업 현황

공모분야	주도기업	참여기업
Smart Transport (43개사)	한전	삼성SDI, 롯데정보통신, 피엔이솔루션, KAIST, LG텔레콤 등 22社
	SK에너지	SK네트웍스, 르노삼성, 일진전기, 벽산파워, 등 14社
	GS칼텍스	LG CNS, ABB 코리아, 벡스콘테크놀로지, GS퓨어셀 등 7社

(2) 상용보급사업

시범실증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전기자동차 운행은 2011년부터 실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는 상용보급사업으로 전환되었다.

① 2011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선정

2011년 4월 5일, 환경부는 제주도, 서울시, 영광군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12월 20일부터 도내 공공기관 32곳에 전기충전기 44기(급속 3, 완속 41)를 설치하였고, 고속전기자동차(현대 블루온) 39대, 저속전기자동차(AD모터스 체인지) 2대를 보급했다. 이때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주정차 단속 및 소방·공항순찰, 어린이 체험, 현장 점검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었다.³⁹⁾

② 2012년,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 발표 및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2012년 들어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대대적으로 변하였다. 2012년 5월 2일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카본프리 아일랜드」계획을 발표하였다. 스마트그리드, 해상풍력발전, 전기자동차 보급,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등 그 동안 제주도가 발표하거나 추진해왔던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종합한 것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부문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서 2020년까지 도내 운행 자동차의 30%(9만 4천대)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제주도내 모든 자동차(37만 1천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획기적인 목표였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17년까지 공공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4, 134쪽.

39)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첫 도입”, 2011년 12월 15일.

문 및 렌터카를 중심으로 10%를 대체하고, 2단계로 2020년까지 대중교통을, 마지막 3단계로 2030년에는 100% 상용차 전환을 단계별 계획으로 세웠다. 또한 22만 5천기의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제주도 전역에 구축하기로 했다.

〈표 2〉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 중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중장기 로드맵

구 분	2017년	2020년	2030년
전기차	29,000대 (10% 대체)	94,000대(30% 대체)	371,000대 (100% 대체)
충전기	29,700기	94,900기	225,000기
비 고	공공기관 및 렌터카 중심	버스, 렌터카 등 민간 중심	상용 전기차

(* 자료: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5월 2일.)

제주도는 목표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운행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충전 인프라의 현실화와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조립, 부품, 텔레매틱스 등 제주형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⁴⁰⁾ 이러한 계획 발표와 더불어 2012년 9월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행사를 할 때 공공기관에 1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③ 2013년,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등

제주도는 2013년 하반기 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급사업이 진행되었다. 2013년 160대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451대, 2015년에는 1513대, 2016년에는 3,963대를 보급했다. 2017년 현재 제주도는 7,513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가 6,053대로 재조정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2016년 31곳에서 2017년 101곳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경쟁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 시도별 보급 물량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⁴¹⁾

한편 2013년부터 현재까지 4회째 순수 전기자동차만의 박람회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고, 2014년부터는 가장 경제적인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2012년 5월 2일.

41)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서두르세요! 보급대수 변경공모”, 2017년 4월 18일.

운전기술을 발휘하는 팀이 우승하는 ‘전기차 에코랠리’대회도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기차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 단위의 전략산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기 고장 등 이용자 불편사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5년 8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전기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2015년 9월에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이하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5월에는 전기자동차의 날 및 주간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인해 2015년 5월 6일 세계전기자동차협회가 주최한 제28차 세계 전기자동차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에서 제주도는 “E-visionary Award(세계 전기차 모범도시상)”를 수상하였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IV. 내부 목표달성과 에너지전환 원칙을 통한 정책 평가

이 장에서는 그 동안 제주도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했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 정책내부목표 달성여부와 에너지 전환의 원칙에 따른 질문을 통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본다.

1. 정량적 평가 : 보급목표를 달성했는가?

2012년 제주도에서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는 <표 2>와 같고, 이 내용은 2015년 9월 제주 전기차 조례에 의해 수립된 법정계획인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중 5년이 지난 2017년 말 까지 공공기관 및 렌터카를 중심으로 29,000대의 전기자동차와 29,700기의 충전을 보급해서, 전체 자동차의 10%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5,629대이고,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체결해서 보급한

총 실적은 6,599대이다. 여기에 더해 2017년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보급대수는 6,053대이고 계획대로 전부 계약될 경우, 2017년 말에는 12,65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 말까지 12,34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결국 2012년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통해 발표했던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보급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3〉 전체 등록 자동차대수 대비 전기차 비율

구분	자동차 등록현황	전기차 등록현황	전기차 비율
'15년 12월 말 기준	325,517대	2,366대	0.73%
'16년 12월 말 기준	351,506대	5,629대	1.60%
'17년 7월 말 기준	363,689대	7,418대	2.04%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 업무보고자료, 2017년 2월, 78쪽, 제주연구원 제주전기차정책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동향 및 통계 월간리포트, 2017년 7월호를 바탕으로 구성.)

〈표 4〉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기 현황('17년 7월 말 기준)

	관공서	민간사업자	개인용	합계	완속	급속
충전기수(기)	367	348	5,104	5,819	5,397	422
비율(%)	6.3	6.0	87.7	100	92.7	7.3

(* 자료: 제주연구원 제주전기차정책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동향 및 통계 월간리포트, 2017년 7월호, 18쪽)

또한 공공기관 및 렌터카를 중심으로 보급하려던 초기 계획과는 달리 2017년 7월 말 현재 전체 보급된 전기차의 68%는 자가용으로, 대부분 개인용 승용차 위주로 도민공모를 통해 보급사업이 전개되었다. 물론 2016년에 전체 4,000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인해, 그해 하반기에 남은 물량 2,000대를 렌터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저리융자를 동원해 보급하기는 했지만, 제주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기본 대상은 공공기관과 렌터카가 아니라 일반도민들이었다.

실제 2017년 6월 말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렌터카는 총 29,602대지만,⁴²⁾

42)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 게시관(교통안전과),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현황(2017. 06. 30. 기준), <https://www.jeu.go.kr/open/open/iopenboard.htm;jsessionid=kd18KelSLanPi9D90z>

전기 렌터카는 1,866대로 전체의 6.3%에 불과하고, 제주도에 등록된 관용차는 2,119대이지만,⁴³⁾ 전기 관용차는 333대로 전체의 15.7%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도 공공기관과 렌터카는 전기자동차 보다 내연기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초기 세웠던 보급대상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⁴⁴⁾

〈표-5〉 제주도내 용도별 전기차 등록현황(17년 7월 말 기준)

	자가용	영업용				관용	계
		렌터카	택시	버스	화물		
대수(대)	5,046	1,866	148	23	2	333	7,418
비율(%)	68.0	25.2	2.0	0.3	0.0	4.5	100

(* 자료: 제주연구원 제주전기차정책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동향 및 통계 월간리포트, 2017년 7월 호, 17쪽)

위와 같이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에서 설정한 내부 기준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목표율은 계획대비 50%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환경부에서 진행했던 친환경차 보급계획 목표달성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서 비싼 가격과 짧은 주행거리, 부족한 충전인프라 등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을 수립할 당시부터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한계와 보급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상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 등록률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산의 문제는 중요하다. 2017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목표는

0UGMLplbe01GxvC9rES2L1ZFnsocfJ93idL0CNtpe1D4KG.was2_servlet_engine1?page=5&act=view&seq=1039787 (2017년 9월 1일 인출).

43)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 게시판(교통안전과), “자동차 등록 현황(2017. 06. 30. 기준)”, <https://www.je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080&act=view&seq=1039735>(2017년 9월 1일 인출).

44) 보급대상이 공공기관 및 렌터카 중심에서 일반도민으로 바뀐 이유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환경부의 정책변화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구매·운행단계에서의 각종 혜택 마련과 카셰어링·렌트카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2년 신규 판매 승용차 30대 중 1대는 친환경차”, 2013년 1월 5일).

자동차 보급대수, 보급률, 충전기 보급대수, 보급대상 등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이중 보급률과 보급대상을 제외한 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대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산확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자동차는 2,300만원, 충전기는 8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필요예산은 9,046억 원이고[(2,300만원 × 29,000대) + (800만원 × 29,700기)], 여기에 기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예산을 더해서 2017년까지 5년으로 분할하더라도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당시 기준으로 연간 약 4조원의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 제주도가 전체 예산의 5%를 매년 특정한 개별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수 천 억 원에 달하여, 이 중 핵심 보조금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은 <표 6>에 나온 것처럼 약 2,831억이고, 충전기 구입보조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9,534기(가정용 9,355기, 공공용 179)를 설치하는데 388억 7천7백만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즉, 최근 5년간 제주도에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보급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은 약 3,220억 원이어서, 소요금액의 1/3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계획한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표 6〉 최근 5년간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현황 및 예산 규모

	보급대수	예산(국비 + 지방비)	보조금 수준
2013년	160대	49억 6천만 원	전기차 2300만원+충전기 800만원
2014년	451대	135억 3천만 원	전기차 2300만원+충전기 700만원
2015년	1,513대 (민간 1,486대; 공공 27대)	338억 원 (국비 226억8천만원, 도비 110억6천만원)	전기차 2200만원 (=국비 1500만원+도비700만원) +충전기 600만원
2016년	3,963대 (민간 3,912대; 버스23대; 공공28대)	845억 1천500만원 (국비 565억8천8백만원, 도비 279억2천7백만원)	전기차 2100만원 (=국비 1400만원+도비700만원) +충전기 400만원
2017년 (예정)	6,245대 (민간 6,053대; 버스 40대; 공공 152대)	1463억 1천만 원 (국비 909억 6백만원, 도비 554억 9백만원)	전기차 2000만원 (=국비 1400만원+도비600만원) +충전기 300만원
합계	12,332대	2831억 1천만 원	

(* 자료 :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도의회 업무보고자료, 2017년 10월)⁴⁵⁾

2. 정성적 평가 :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지난 5년 간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계량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지역에너지 전환과 대기환경보전의 정책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웠는지 살펴봐야 한다.

1) 에너지 전환: 공급전환, 수요관리, 거버넌스의 구성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면, 공급전환과 수요관리, 그리고 시민참여적 거버넌스 구성이라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평가해볼 수 있다.

① [공급전환]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가?

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는 기름과 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자연력에 기반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탄소배출저감, 배출권 판매수익 및 석유소비절감 등을 통한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기는 여러 발전기에서 생산되어 실시간으로 단일전력계통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전기가 어떤 발전기를 통해 생산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⁴⁵⁾ 그래서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과 전기차 충전량의 비교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100% 공급할 경우,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는 전부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했다고 볼 수 있다.

45) 단, 2013~2014년 자료는 제주도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전기차 및 충전기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추정하여 재구성하였다.

46) 만일 한국전력의 계통이 아니라, 독립형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에 충전하는 방식이라면 ‘공급전환’을 완벽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7〉 2016년 10월 ~ 2017년 8월 제주 전기차 충전량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교⁴⁷⁾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kwh)	전기차 충전량 (kwh)	재생에너지발전량 대비 전기차 충전량 비율(%)	전체 전력소비량 중 전기차충전기 전력사용비율(%)
2016년 10월	44,576,282	848,445	1.9	0.24
11월	60,827,252	946,860	1.6	0.26
12월	75,816,564	1,144,879	1.5	0.29
2017년 1월	80,239,962	1,467,484	1.8	0.33
2월	84,169,786	1,587,106	1.9	0.34
3월	63,840,478	1,485,636	2.3	0.36
4월	59,146,542	1,701,666	2.9	0.41
5월	40,643,906	1,679,210	4.1	0.45
6월	31,499,198	1,807,417	5.7	0.48
7월	33,176,091	2,034,651	6.1	자료 미확보
8월	37,786,835	2,286,531	6.1	자료 미확보

* 자료: 제주전기차정책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동향 및 통계 월간 리포트, 각월호.

<표 7>은 최근 약 1년 간 제주도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과 전기차 충전기 전력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주도 전체 전력소비량 중 전기차 충전량은 1%가 되지 않지만 매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소비량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전기차 충전량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많이 확충한데 비해,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이 그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전력생산·소비량만으로 단순히 평가한다면,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공급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에너지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제주도의 현재 전력소비상황은 문제가 되고 있다.「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발표한 2012년 제주지역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가능에너지는 4.9%를 차지했는데, 2016년에는 그 보다 두 배 더 많은 11.5%를 공급했고, 같은 기간 제주도내 화력발전 생산량은

47)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과 전기차 충전기 전력사용량을 단순 비교한 것이며, 실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충전량과 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의 값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 신재생발전량은 풍력과 태양광의 합계이고, 충전전기 신재생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11.2% 감소하였다.⁴⁸⁾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카본프리’라는 목표 달성에 점점 근접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기간 전체 전력소비는 약 22%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증가하였고, 결국 해저연계선을 통한 육지로부터의 공급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난 만큼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도 늘어났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주도에 거주하는 상주인구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력수요량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는 재생가능에너지로도 충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보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의 비율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너지 자립보다는 외부 의존 경향이 더 심해졌으므로, 지난 5년간 목표달성과 멀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수요관리] 전기자동차 충전량이 전체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핵·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수요의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전력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주도의 계획에 따라 2017년 기준 전기자동차를 10% 보급할 경우, 제주 지역 전기에너지는 최소 1.5%에서 최대 2.9% 증가하게 되며, 2020년 30%를 보급되면 전기에너지는 최소 4.8%에서 최대 9.4%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전력소비 최대시간(피크 타임)을 피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게 하는 법제도와 시스템의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루 중 전기자동차 충전이 전력 소비 최대 시간에 몰릴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최대소비전력은 전기에너지 증가량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⁴⁹⁾

48) 전력거래소,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현황, 각 년도 자료 분석 결과. 전력거래소는 전년도 계통운영 자료를 다음연도 3월 즈음에 발표하기 때문에, 2017년의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 확보할 수 없다. 다만, 제주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7년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은 약 제주도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1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8〉 전기차 충전기의 최대부하 시간대 사용량 및 비율

	'16.09월	10월	11월	12월	'17.01월	2월
최대부하사용량(kwh)	154,294	144,639	194,861	262,979	342,416	355,398
비율(%)	17	17	21	23	23	23
	'17.0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최대부하사용량(kwh)	324,050	358,286	339,015	383,892	447,123	506,725
비율(%)	22	23	20	21	21	22

(* 자료: 제주연구원 제주전기차정책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동향 및 통계 리포트”, 각월호)

물론 위에서 정량적 평가를 한 결과, 계획대로 2017년 말까지 도내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자동차로 공급하지는 못하겠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수요로 인해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표 8>에서 보여주듯이, 실제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이 주로 전력수요가 많은 저녁과 밤사이 시간이어서 최대부하⁵⁰⁾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최대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⁵¹⁾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1년간 전기차 충전기 전력사용량 중 최대부하 시간의 평균 비율은 약 21%였고, 실제 사용량은 전기차 보급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즉, 전기차 충전량은 전체 전력수요 증가에 일부분 영향을 주고 있으며,

49) 오성보·이개명·황충구,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전기학회논문지」, 63(1), 대한전기학회, 2014.

50) 최대부하 시간대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르다. 겨울철인 12월의 경우 경부하 시간대(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10:00~12:00, 17:00~20:00, 22:00~23:00)로 구성된다. 즉, 출근 시간 직후와 퇴근시간 전부터 저녁 시간대가 전력수요가 많은 최대부하시간대라고 볼 수 있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여름철, 겨울철)과 시간대(최대부하)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계절(봄·가을철)과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강화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C/CYHCHP00204.jsp> 2017년 10월 13일 인출).

51) 현재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중에서는 충전시간 예약기능을 갖춘 기기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기들도 많기 때문에 최대부하시간대를 피해서 충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차 충전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늘어난 전력소비량은 최대전력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전예방을 위한 예비발전력 확보필요성도 커진다. 향후 전기차 100% 전환이 현실화 되고 현재처럼 최대부하 시간대에 충전량이 늘어난다면 공급 위주의 발전소 건설 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관리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간을 최대부하 시간대를 피해서 최대전력수요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③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그것을 실행할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중장기보급계획을 세우면서 언론, 사회단체 등을 참여시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기차 조례(2015년 8월 18일 제정)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관련 중요 시책,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 사업,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광고 및 전기차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기차 보급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제주도가 추진했던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 언론을 통한 홍보, 민간위원 위촉 통한 위원회 구성 등은 전기차 이외 다른 일반적인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했던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현존하는 에너지산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은 보다 대대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결국 제주도는 시민을 단순히 전기차의 소비자로 바라보는데 그쳤고,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전략이 부재하였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면, 대규모의 예산집행을 자가용이 아닌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에 보다 많이 투입하는 등 정책대상도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즉,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030년 100% 전기자동차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참여없이 위로부터 결정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100% 전환은 주유소, 가스충전소, 자동차수리점

등 기존 내연기관자동차와 관련된 산업과 그 종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사전협의 등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폐업지원금 지원과 세제지원, 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정책제언과 함께 관련 업계의 입장과 건의내용을 부록으로 포함시킨 결과를 도출하였다.⁵²⁾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지 5년이 지나서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으려는 제주도의 태도는 에너지전환의 원칙 중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성의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늦었더라도 사후에 의견수렴을 시도한 태도는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책참여는 아니지만, 전기차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문의에 대한 응대 뿐 아니라, 행정 관련 정책건의도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주도하지 않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포럼·페스티벌인 ‘이버프 제주’(EVuFF@Jeju)’가 2016년 열리기도 했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체험기를 공유하고, 이용자가 바라보는 전기차 민간보급 및 전기차 사용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론했으며, 정부와 제주도,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사업자로부터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과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전략 등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환경보전 : 대기환경질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부터 전기자동차를 우선·대량으로 보급해야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가장 먼저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52)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6월

환경부 전기차 보급 예산의 절반을 지급받고 있으며, 전기자동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제주도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인가? 이미 앞서서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대도시 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이고, 실제로 <표-9>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1999년 제주도가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설정한 지역 환경기준은 국가기준 보다 더 높다.⁵³⁾

〈표 9〉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국가 및 제주도 환경기준의 차이

항목	국가기준	제주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 ₂)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평균치0.15ppm이하	·연간평균치 0.01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3ppm이하 ·1시간평균치0.1ppm이하	자외선 형광법
이산화질소 (NO ₂)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0.10ppm이하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4ppm이하 ·1시간평균치0.1ppm이하	화학 발광법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25ppm이하	·8시간평균치 5ppm이하 ·1시간평균치10ppm이하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6, 『2016환경백서』, 303~304쪽.

최근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미세먼지(PM-2.5) 중 토양 기원원소들 또는 인위기원 원소들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날에 대한 기류를 역래적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동부지역 등에서부터의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⁵⁴⁾ 따라서 제주도는 이른바 ‘청정’지역이고, 지역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원이 크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전기차 우선 보급지역으로 선정하여 대규모의 국가예산을 집행한 행위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5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15, 155~156쪽. 자동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는 제주기준이 국가기준보다 높으며, 미세먼지는 기준이 같다.

54) 강진영, 「제주지역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방향」, 제주연구원, 2017년 7월 31일; 허철구, 「미세먼지 관측을 통한 제주지역의 오염원 추정」,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16.

물론 제주지역도 자동차와 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 지역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면, 기존 내연 기관 차량을 먼저 줄이고 전기자동차로 대체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5년 213,310대에서 2015년 435,015대(2016년 467,243대)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2011년 만 하더라도 257,154대 였지만, 불과 4년 만에 엄청난 숫자로 증가했다.⁵⁵⁾ 물론 이중 역외세입 증가를 위해 등록한 리스 차량 약 10만대를 제외하더라도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 이후 약 11만대가 순증가했다. 2016년 말까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5,629대와 비교하자면 같은 기간 동안 내연 기관 자동차는 전기차보다 20배 이상 더 많이 보급되었다. 따라서 내연기관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지 않은 채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면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⁵⁶⁾

사실 제주지역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주요대상인 승용차보다는 경유를 이용하는 버스와 대형트럭, 또는 운행시간이 긴 택시와 렌터카 등을 전기자동차로 바꿔야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승용차는 하루 2시간 미만으로 운행하지만, 버스와 택시, 트럭 등은 하루 종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더 많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체 중에서 유일하게 천연가스(LNG)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압축천연가스(CNG)차량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대신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버스가 시판되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운영하는 공영버스나, 민간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관광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⁵⁷⁾

55)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016년 11월, 103쪽.

56) 내연기관 자동차 보급의 증가는 단순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뿐 아니라,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제주시는 준중형급이상의 신규 차량 등록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서귀포시와 전기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57) 현재 서귀포시내를 운행구간으로 하는 민영버스회사인 ‘동서교통’은 2016년 23대의 전기버스를 시내버스노선에 투입하여 운행하였고, 2017년 9월에는 36대를 추가해서 국내 관련 사업자 통틀어 가장 많은 59대 전기버스를 확보했다(전자신문, “동서교통, 59대

하지만 제주도에서 환경부 예산 지원을 통한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배터리리스’사업이 추진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728억 4000만원을 들여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550대, 전기렌터카 450대 등 총 1,119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6년 8월까지 1차년도 기간 동안 전기버스 49대, 렌터카 48대, 택시 1대 등 72대를 보급해서 목표대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결국 2017년 1월 12일 열린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평가위원회에서는 보급목표 미달성, 추가 수요 미확보,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⁵⁸⁾ 심지어 2017년 8월 26일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과 관련하여 총 79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시키기 위해 기존보다 267대의 버스를 증차하였는데, 전부 경유차량이었다.

이상의 정성적 평가를 종합해보면, ‘카본프리 아일랜드’정책을 발표한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가 추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에너지전환과 대기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도로와 주차장의 증가로 인한 공간활용도의 문제, 대중교통 활성화와 반비례적 관계, 자동차 행정 및 그에 따른 사법행정의 비용문제, 도로에서 잃어버리는 값비싼 생산시간의 문제 등은 자동차의 절대적 숫자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전환계획은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기술적 접근일 뿐, 체제론적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V. 결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연구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초점을 맞춰 정책 추진현황과 더불어 내부 기준에 따른 목표달성여부와

전기버스 제주노선에 투입... 국내 최대 전기버스·충전인프라 확보”, 2017년 9월 28일).

58) 제민일보, “700억대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좌초”, 2017년 2월 10일.

함께 에너지전환의 원칙에 따른 기준을 통해 평가를 해보았다.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다 2013년 하반기부터 민간보급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절반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되었는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예산의 절반을 제주도에 배정한 요인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추가한 제주도의 정책적 의지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2017년 말까지 1단계로 도내 전체 차량의 10%(29,000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계량적 보급목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기차 충전기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제주도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6%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아직은 ‘바람(풍력 발전)으로 가는 전기차’라는 구호가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 전력소비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만큼 육지에서 공급되는 전력량도 늘었기 때문에 ‘공급전환’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요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하향식 일방적 정책 발표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와도 거리가 멀었다.

여기에 더해 2011년 환경부가 제주도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포한 이후 제주 도내에서 증가한 차량은 약 11만 대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보다 20배 이상 더 많이 보급되었고, 전기버스 사업은 실패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경유 버스 267대를 추가 증차하여 운행시키는 것을 보면 전기차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보전의 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제주도가 전기차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9월 수립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⁵⁹⁾

59)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 2015년 9월.

계획의 명칭에서처럼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뿐 아니라 산업육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도가 수립한 이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후방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한 제주 산업구조 개선을 주요 필요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2017년 들어 제주도는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기차 보급 및 개발’,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 및 인력 양성’, ‘거버넌스’ 등 4개 카테고리에 걸쳐 15개의 사업 후보군이 포함된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농림수산업 등의 1차와 관광업 등의 3차에 치우쳐 있고, 2차 산업 비중이 2.8%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산업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지자체의 강력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의 대규모 예산지원을 기회로 하여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와 같은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즉, 그 동안 제주지역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된 이유는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목적보다는 지역의 신규 산업육성 전략의 하나로 전기자동차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⁶⁰⁾

덧붙여 발전국가 대한민국의 부속도시인 제주도에 부여된 공간적 성격중 하나인 ‘시범지역’(테스트베드) 으로서의 역할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내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렌터카 이용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는 지역이라는 요인도 작용했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주행시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여서 그 동안 제주도가 내세웠던 ‘청정환경’의 이미지와도 맞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제주도는 교통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급증한 자동차등록대수(2016년 말 기준주민등록 66만 명/차량등록 45만대)로 인해 그 동안 대도시만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극심한 차량정체와 주차난을 겪고 있다. 도민들

60) 산업진흥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민 소득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업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차 관련 산업은 제조업을 제외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목표대로 구축했다하더라도 산업진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는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즐기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중교통(버스) 수송 분담율은 1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저소득층은 자동차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점점 교통 약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 천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교통·도시개발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가용 보다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이 우선되는 교통체계와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인용 자동차 보다는 공영버스와 공공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공공예산(보조금)을 지출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함께 제시한 해상풍력발전과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한 정책평가도 이루어진다면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저

- 강지윤·이태동, 「중간지원조직과 에너지 레짐 전환 : 한국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 비교」, 『공간과사회』 51,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 강진영, 「제주지역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방향」, 제주연구원, 2017년 7월 31일.
- 김동주,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나타난 녹색 개발주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_____,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개발과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 박종문·윤순진,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공간과 사회』 55,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 박진희,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 송위진 외,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 백종학·윤순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미니태양광사업과 에너지 시민성의 변화」, 『서울도시연구』 16(3), 서울연구원, 2016.
- 신영식,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Smart Transportation 제주 실증사업」, 『전기저널』, 대한전기협회, 2010.
- 생태지평, 『지역에너지 자립정책 비교조사: 완주군-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시민연대, 2014.
- 안정배·이태동, 「도시의 에너지 전환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 에너지경제연구원, 『합리적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실천 강화 방안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표준 지침서 -』, 산업통상자원부, 2014.
- _____,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2016.
- 오성보·이개명·황충구,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전기학회논문지』 63(1), 대한전기학회, 2014.
-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이슈레포트 1호)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제언』, 환경정의, 2014년 4월 22일.
- 윤순진,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에너지 정책 :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에너지

- 지정책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행정학보』 36(3), 한국행정학회, 2002.
- _____,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 재생가능에너지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서울행정학회, 2003.
- _____,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 가능성」, 『경제와 사회』 78, 비판사회학회, 2008.
- _____,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 윤순진·심혜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1,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 이강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경제와 사회』 107, 비판사회학회, 2015.
- 이상헌,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환경사회학연구』 『ECO』 13(2),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 이승환·조주은·박용철, 「서울과 제주의 에너지 자립·전환 정책 비교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2), 한국환경정책학회, 2014.
- 이필렬,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적, 사회적 위험」, 『문화과학』 35, 문화과학사, 2003.
- _____,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전환」, 『창작과비평』 122, 창비, 2003.
-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3 스마트그리드 연차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4년, 134쪽.
- 최병두, 「대구의 도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한국경제지리학회, 2013.
-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6월
- 환경부, 『환경 30년사』, 환경부, 2010.
- _____, 『2016 환경백서』, 환경부, 2016.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15.

2.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2015년 12월 8일.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시대를 앞당긴다”, 2005년 12월 21일.
전자신문, “동서교통, 59대 전기버스 제주노선에 투입...국내 최대 전기버스·충전인프라 확보”, 2017년 9월 28일.

전력거래소, 제주계통운전실적, 각년도.

제주연구원 제주전기차정책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동향 및 통계 월간리포트”, 각월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 계획”, 2015년 9월.

_____ 보도자료,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 2010년 9월 17일.

_____ 보도자료, “제주, 친환경 전기차 시대 서막 오른다”. 2011년 9월 13일.

_____ 보도자료,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첫 도입”, 2011년 12월 15일.

_____ 보도자료,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2012년 5월 2일.

_____ 보도자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서두르세요! 보급대수 변경공모”, 2017년 4월 18일.

_____ 정보공개 현황(교통안전과),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현황(2017. 06. 30.기준).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jsessionid=kd18KelSLanPi9D90z0UGMLp1be01GxvC9rES2L1ZFnSocfJ93idL0CNtpe1D4KG.was2_servlet_engine1?page=5&act=view&seq=1039787 (2017년 9월 1일 인출).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한국 전기자동차, 가속페달 밟는다”, 2009년 10월 8일,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4.jsp> 2017년 10월 13일 인출).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시사무소,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016년 11월, 103쪽.

환경부, “2007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2006년 12월.

_____, “2013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2012년 12월 30일.

_____ 교통환경과, “2011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011년 4월

_____ 보도자료, “환경부는 서울, 영광, 제주를 전기차 보급을 주도할 1세대 선도도시로 선정”, 2011년 4월 4일.

_____ 보도자료, “내년도 전기차 1만 4,000대 보급”, 2016년 12월 9일.

_____ 보도자료. “국내 전기차 1만대 돌파”, 2016년 12월 15일.

경향신문, “제주 전기자동차 실용화 어렵다”, 2005년 2월 4일.

제민일보, “700억대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좌초”, 2017년 2월 10일.

한국에너지, “국내최초 전기車 시범운행 개시”, 2003년 11월 12일.

Abstract

Evaluation of Local Energy Transition Policy: Focusing on Electric Vehicle Supply Projec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im, Dong-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of local energy transition policy, focusing on Electric Vehicle Supply Projec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12, Jeju local government announce the ‘Carbon free island 2030’ policy that consist of smart grid, wind power, and electric vehicle(EV). In this policy, there was a goal to convert 10% of all vehicle to EV until 2017. But Jeju local government didn't achieve the goal at this point in time due to the technical limitations and budget shortages.

Although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s still higher than electricity consumed by EV, the amount of electricity charged by EV at peak load time is increasing, and overall power consumption in Jeju has increased more over the past five years.

If EV supply project is continued in the current state without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t would be fail to follow the principle of energy transition such as ‘energy source change’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Also the principle of ‘citizen participated governance’ failed to be met due to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top-down

* A member of research and planning committee at Energy and Climate Policy Institute.

unilateral policy. In addition,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have increased more than 20 times compared with EV since 2011, the effect of conservation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through the EV policy has not been achieved. In other words, EV supply project in Jeju was strongly promoted, because it was seen as one of the strategies to foster new industries rather than energy transition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 Jeju local government have to revise the ‘carbon free island’ policy based on sustainability standards.

Key Words : Carbon-free island, electric vehicle, energy conversion, policy evaluation, Jeju island.

교신 : 김동주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E-mail: ecodemojeju@gmail.com)

논문투고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10. 06

게재확정일: 2017. 10. 07

일반논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제주 인식

장승희

신라 文武王의 海洋意識

김창겸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에 나타난 한중 고대 천지상서의 교응적 자연학

김일권

물고기 이름 유래담의 내포적 의미 고찰 -인물 관련 유래담을 대상으로

박종오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

김명희

‘민족-문화’ 개념의 변천 : ‘조선영화’에서 ‘코리아시네마’까지

김성경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양미경

지역신문의 대학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용복·김치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제주 인식

장승희*

- I. 머리말
- II. 추사의 생애와 임계국면
- III. 추사의 제주생활에 나타난 제주 인식
- IV. 추사의 제주 인식, 변화의 계기와 의미
- V. 맺음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에서 제주에 대한 인식과 변화, 그 요인을 탐구한 것이다. 추사는 유복한 가정환경을 지닌 왕족으로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과 개성 있는 영혼의 소유자로, 젊은 시절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였다. 다양한 인간관계와 지적·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연경 경험은 그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준과 동시에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제주 위리안치(圍籬安置) 유배는 그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으며, 젊은 시절의 자존감과 자부심에 상처를 안겨준과 동시에 그의 예술과 세계관에 있어 일대 전환기이기도 하였다. 추사에게 임계국면(threshold)이었던 제주 유배는 연경 경험과 더불어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추사는 주역(周易)의 원리에서 곤경을 수용하는 법을, 불교를 통하여 겸허와 달관의 자세를 배웠다. 이후 추사체의 개성적인 ‘괴(怪)’는 고졸한 ‘졸(拙)’로 변화하였고 독창적 예술 경지를 이루게 된다. 제주 유배 경험을 통하여 제주의 사물과 자연에 대한 인식, 예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하는데 그 결과로 추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체가 정립된 것이다. 추사의 편지에서 드러나는 제주인, 제주 자연, 제주의 생활에 대한 묘사는 당시 제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제주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다 하겠다.

주제어 : 추사 김정희, 인식, 추사체, 유배문화, 임계국면, 주역, 불교, 괴(怪)와 졸(拙).

I. 머리말

최근 제주의 인구유입과 지가상승은 제주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현상이다.¹⁾ 이러한 현상은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고 지역적·자연적·문화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며 나타난 결과이다. 제주는 한때 독립된 탐라(耽羅) 국가였던 적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유배지로나 유명한 곳이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천대받던 제주는 오늘날 “그 곳에 있다는 인식만으로 마법에 걸리는”²⁾ 즉 팍팍한 현실의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은 환상과 마법의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상황을 예측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미래 제주도 예측이 쉽지는 않다. 또한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속단할 수도 없다.

오늘날 제주는 제주 역사에서 임계국면이라고 할만하다.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시 역사(Big History) 관점에서 임계국면의 중요성, 인류 역사에서의 그 의미를 분석한³⁾ 크리스천(David Christian)에 의하면 임계국면

- 1) 김승범, 『제주매일』(2016.05.04), “올 제주인구 65만 돌파…기존 주택계획 등 무의미”,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715>(검색일: 2016.05.05).
- 2) <https://brunch.co.kr/@kinzz00/13> by 꾸마(검색일: 2016.05.06).
- 3) 농업의 시작,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 하나의 중요한 계기들에 의한 임계국면에 의해 역사는 커다란 변화를 거쳤고, 그 변화는 큰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137억년 우주의 거대 역사관에서 보면 인류사는 참으로 미미하고, 세이건(Sagan)의 우주력(Cosmic Calendar)에 의한다면 우주의 365일 중 인류가 출현한 것은 마지막 날 오후 10시 30분경이며, 인류 역사는 겨우 2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Carl Sagan(1977), *The Dragons of Eden : Speculations on The Evolution of Human Intelligence*, 임지원 역, 『에덴의 용』,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24-27쪽.

이란 “어떤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 혹은 경계”로,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현상이나 물질이 나타나는 지점 혹은 시기이다.⁴⁾ 우주달력의 기준으로 인간의 수명이 0.15초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 의미가 미미하다. 그럼에도 인류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문명을 이룩하였고, 역사에는 집단지성에 영감을 불어넣어 준 인물들이 존재하였다. 그들의 삶과 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고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해준다.

제주와 연관된 인물들의 제주 경험은 임계국면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암 김정(冲菴 金淨, 1486~1521), 동계 정온(桐溪 鄭蘊, 1569~1641),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은 유배 왔던 인물들이다. 안무어사로 연을 맺은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 목사로 연을 맺은 규암 송인수(圭菴 宋麟壽, 1499~1547) 등 오현(五賢)은 조선 성리학 통치이념을 구현한 인물로 평가받아 굴림서원(橘林書院)에 배향되었다.⁵⁾ 오현의 정신은 사학재단의 명칭에 반영되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김정은 『충암록』에 「제주 풍토록」을 남겼으며, 정온은 위리안치 상황에서 어떤 곤란과 우환에서도正道(正道)를 잃지 않도록 중국 은대부터 남송의 59인의 행적을 모아 『덕변록(德辨錄)』을 지어 자신을 수양하기도 하였다. 송시열은 83세에 100일간의 길지 않은 유배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유림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였다. 광해군의 실정을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 유배를 당한 간옹 이익(1579~1624)은 제주 여인과 혼인하였는데 제자들을 길러 학풍을 진작하기도 하였다.⁶⁾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 정조10~1856, 철종7)는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근거하여 금석학과 고증학 분야의 업적을 남긴 실학자이다. 그는 당시 서예와 그림에서 이른바 ‘완당바람’이라 칭해질 정도로 문

4) David Christian·Bob Bain(2013), *Big history: the Big Bang, life on earth, and the rise of humanity*, 조지형 역, 『빅 히스토리』, 서울: 해나무, 2003, 22쪽.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이 1578년에 처음 배향되고, 1695년에 끝으로 송시열이 배향되어 100여 년에 달하여 추존이 이루어졌다.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eju.grandculture.net>(검색일: 2016.04.25).

6) 『한라일보』(2012.01.09),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간옹 이익(李翼)과 김만일의 딸”,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28454000387599240>(검색일: 2017.03.30).

화 흐름을 주도한 예술가로,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물이다. 추사의 제주 유배 9년은 철학은 물론 서체마저 변화시켰을 정도로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임계국면이었다. 그의 제주 유배 역사는 스토리텔링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정도로⁷⁾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 『완당전집』⁸⁾ 출판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추사 연구는 서예가에 초점을 둔 문화적·예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불교관련 연구⁹⁾, 척독¹⁰⁾과 시,¹¹⁾ 교류관계 연구,¹²⁾ 제주유배 관련 연구들도 있지만 그것들도 문학적·교육적·문화적 활용 연구들로¹³⁾ 추사의 철학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추사의 철학적 인간학에 더하여 추사의 제주 경험을 토대로 제주 인식의 특징, 변화와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인식(認識, recognition, perception, knowledge)은 객관 대상과 무관하게 주체의 관념적 작용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렵다. 앎의 형성은 대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유 주체로서 이성의 능동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험론이든 합리론이든 인식은 주체와 대상의 관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7_0013563825&cID=10813&pID=10800, 『뉴시스 제주』(2015.03.29),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센터, 내달 추사 김정희 체험 행사”(검색일: 2015.09.30).

8) 유흥준, 『완당평전1,2,3』, 서울, 학교재, 2002abc.

9) 임종옥, 「秋史 金正喜의 佛教詩 연구」, 『동악어문학』 47, 동악어문학회, 2006, 227-252쪽.

10) 이병기, 「추사가 한글 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 66, 국어학회, 2013, 197-231쪽.

11) 김현권, 「秋史 金正喜의 산수화」, 『한국미술사학회』 39, 2003, 181-219쪽.

12) 이종찬, 「조선후기 儒·佛 詩人의 交涉樣相 : 東岳과 秋史의 경우」, 『동악어문학』 48, 동악어문학회, 2007, 7-22쪽.

13) 양필순,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55-74쪽; 양진건, 「추사의 제주입도와 초기정착과정에 대한 연구」, 『추사연구』 3, 추사연구회, 2006, 9-28쪽; 현명관·장애란,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 추사 김정희의 전각의 추사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7,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2, 121-130쪽; 양진건·현은선, 「추사 김정희 제주유배기록에 나타난 화목의 교육적 의미」, 『철학·사상·문화』 17, 동서사상연구소, 2014, 244-265쪽; 임춘택, 「제주 유배시기 추사 김정희의 치유적 글쓰기와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 방안」,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213-248쪽; 배영환, 「추사의 제주 유배 연구에 나타난 어휘의 특징」, 『인문학연구』 18,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05-132쪽.

계맞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경험에 의한 앎을 통해 과거의 인식 구조가 변화되어 새로운 인식이 구성된다. 구성주의 인식론 관점에서 앎이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서 개별적 의미의 형성” 과정으로, 지식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와 구성이며, 그러한 지식의 특성은 상황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인 것이어서 주체의 능동적 사유를 통한 지식 구성이 중요하다.¹⁴⁾ 이에 근거하여 추사의 제주 인식에 접근해보면 추사가 제주 유배의 경험들을 어떻게 이전 경험과 지식에 구성하여 새로운 앎으로 발전시켰는지가 관건이 된다.

II. 추사의 생애와 임계국면

1. 추사의 삶과 학문 특성

칼 만하임은 지식사회학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지식인도 이른바 ‘사회적 존재 구속성’(social sein gebunden-heit)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지식인이 아무리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과학의 진리를 정립한다 해도 시대정신, 생애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문과 공동체적 질서를 중시했던 유교적 사회문화에서 자란 인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추사가 살았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조선 말기로, 정조의 죽음 이후 정조, 순조, 헌종, 철종 시대로 세도정치가 이어진 시기이다. 사상적으로는 송유억불정책이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불교에 대한 직접적 억압은 많이 줄어든 시기이고, 성리학적 질서가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성리학을 비판하며 실학이 성립되던 시대이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발전적 측면도 존재하였고,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중인과 서얼(庶孽)들이 정치와 학문에 참여하게 되는 변화도 있었다. 정조의 즉위 다음해(1777년) 선포된 ‘정유서얼허통절목(丁酉庶孽許通節目)’에 의해 이러한 분위기는 19세기의 대세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¹⁵⁾

추사의 천재적 재능은 일곱 살 때 대문에 붙인 입춘첩에 대한 일화에서

14)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문음사, 2005, 62쪽.

15)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8, 141쪽.

드러난다. 당시 세혐(世嫌, 남인과 노론의 질시)의 집안사람인 영의정 체재공이 지나가다가 방문하여 “이 아이는 필시 명필로서 이름을 한 세상 떨칠 것이요. 그러나 만약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반드시 운명이 기구할 것이니, 절대로 붓을 잡게 하지 마시오, 만약 문장으로 세상을 울리게 하면 크게 귀하게 되리라.”하였다고 한다.¹⁶⁾ 어린 시절 글씨가 얼마나 훌륭하였으면 스승인 박제가와 영의정까지 입춘첩에 대한 일화가 두 건이나 있겠는가. 그 정도로 글씨에 혼이 있었으니 추사의 예술가적 능력과 기질은 천부적이었던 듯하다. 또한 추사의 학문적 기반은 당시 선비들처럼 당연히 유교였다. 과거급제를 위해 유교경전을 공부하였고, 『주역(周易)』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 토대가 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것으로 불교로, 집안에 원찰(願刹)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봉은사에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불교를 신앙으로 가까이 하였다.¹⁷⁾

추사의 젊은 시절들이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8세 때 개성유수인 백부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갔고, 15세에 한산 이씨와 혼인하였지만 20세에 이씨가 사망하자 23세에 예안 이씨와 재혼하였다. 12세에 양부와 조부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16세에 친모 기계 유씨가 36세 나이로 죽었으며, 그 해 스승인 박제가가 신유박해로 함경도로 유배를 떠났으며, 21세에는 양모 남양 홍씨가 죽었다. 유교사회의 가치관에서 교육받은 추사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가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개성적 기질임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는 이러한 환경의 산물이 아닌가 여겨진다. 유배 시절 추사는 환갑 때 원당사찰인 화암사 중건에 「무량수각(无量壽閣)」, 「시경루(詩境樓)」 등의 현판 글씨를 써서 보낼 정도로 집안을 쳤었는데, 이것은 어릴 때부터 가문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배려심 때문이었던 듯하다.

추사는 당시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학적 분위기를 적극 수용하여 고증학을 중심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였다. 그는 주체적 비판 정신에 의거하여 청나라 연경에서 체험한 다양한 학문들을 수용하여 특정한 권위에 의

16) 유홍준, 『김정희』, 서울: 학교재, 2006, 30쪽.

17) 장승희, 「김정희, 불심을 바탕으로 조선문예를 빛내다.」, 『불교평론』 제64호, 불교평론, 2015, 238쪽.

지하기를 거부하였고, 판단을 유보하고 여러 학파를 두루 고찰하여 각 입장의 진실성을 찾아 종합하는 특징을 지니는데,¹⁸⁾ 추사의 학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다방면으로 지식욕이 풍부하여 천문·산술·금석(金石)·성운(聲韻)·철학·선학(禪學)·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선진(先秦)·한·송·명·청 여러 시대의 사상들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전통과 문화 속의 인간을 존중하고, 경학 연구에 있어서도 존고(存古) 및 사승(師承)과 가법(家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실증을 통하여 올바른 의리를 구하고, 비판적이면서도 개개 사실에서 실(實)을 찾아서 종합하는 긍정적인 논리를 추구함을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학문적 특성과 자세는 풍요로운 환경과 탐구적 기질, 다양한 삶의 경험 등에 기인한다. 학문적 탐구열에 비해 저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지적 탐구열과 환희를 인지적 논문보다는 주로 감성적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여,²⁰⁾ 자신의 편지에 “저는 평생 저술들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시다. 이와 같은 문자들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 장 단지나 식초 향아리 덮는 데 쓰더라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이것을 즉시 명하여 찢어버리라고 하십시오.”²¹⁾라고 쓰고 있다.

유홍준이 “나이 50에 이미 학문과 예술 모두에서 당대의 대가 위치에 올라 있었다.”²²⁾는 평가에서 드러나듯 추사는 다양한 방면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 보통 유학자들의 지식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왕희순(1786~1847)이 ‘해외묵연(海外墨緣)’에서 음운·천문·경학·시·문장·서예·전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언급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였다고 추사를 평가기도 하였다.

추사의 생애는 유교사회에서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삶, 천재적 재능과 개성적 기질을 지닌 자유인으로서의 삶,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예술과 학문을 종합한 선비로서의 삶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가문의 일원으로서 책임

18)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심산, 2005, 361쪽.

19) 위의 책, 360쪽.

20) 장승희, 앞의 논문, 219쪽.

21)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十八)> : “小人之於平生, 不欲以著述自見. 如此文字, 便不欲留稿, 醬瓿醢瓷, 俱無不可. 卽命扯去, 不勝心禱.”

22) 유홍준, 위의 책, 2006, 156쪽.

감, 자유인으로서 개성, 선비로서 탐구열을 갖춘 그의 삶은 당시 선비들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천재적 재능과 자유로운 사유에서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기질이 더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2. 연경 체험 : 학적 전회(轉回)와 자부심의 상승

추사의 삶은, 아버지와 스승인 박제가에게 교육받은 24세 이전의 교육기, 연경에 다녀온 24세 이후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35세까지의 학예 연찬기, 관직생활을 시작한 35세부터 55세 귀양 전 20여 년의 활동기, 제주 유배와 다시 1년의 복청 유배를 합한 10년의 유배기, 그리고 해배 이후 71세 서거하기까지 8년의 만년기로 나눌 수 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임계국면은 연경 체험과 제주 유배이다. 1809년 순조9년 10월 28일, 부친인 김노경이 동지검사은부사가 되어 연행을 갈 때 추사는 자제군관으로 다음 해 3월 1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채 5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기는 학문적·예술적 자극기로 추사의 세계관 자체가 확대 심화되는 계기가 된다.

추사의 만년 영정을 보면 호상(好相)이면서 귀상(貴相)을 지니고 있다. 젊은 시절 중국 연경에 갔을 때 왕족 가문에다 학문은 물론 서화(書畵)와 시(詩)에 능한 호탕한 젊은이를 연경 중국학자들은 총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완원(阮元, 1764~1849)과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교류하면서 추사는 청의 사상과 문화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조선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경 체험은 그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해주었고, 예술과 학문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도록 해준 중요한 계기였다. 당시 추사는 모든 것을 연경 경험을 기준으로 재단·평가하여 사람들에게 ‘잘난 척 한다’는 인상을 주었던 듯하다.

추사의 유복한 환경과 탁월한 예술적 능력, 다른 유학자들과 다른 독특한 개성과 기질은 당시 경외(敬畏)의 대상이자 질시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철종실록』의 「졸기(卒記)」를 보면, 그의 생애와 기질,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압축되어 있다.

전 참판 김정희가 졸(卒)하였다. 김정희는 이조판서 김노경의 아들로써 총명하고 기억력이 투철하여 여러 가지 서적을 널리 읽었으며, 금석문(金石文)과 도사(圖史)에

깊이 통달하여 초서·해서·전서·예서에 있어서 참다운 경지를 신기하게 깨달았었다. (a) 간혹 ‘거리낌 없는 바’[其所無事]를 행했으나, 사람들이 자황(雌黃)하지 못하였다. 그의 중제(仲弟) 김명희와 더불어 훈지(堦簾)처럼 서로 화답하여 울연(蔚然)히 당세(當世)의 대가가 되었다. 조세(早歲)에는 영명(英名)을 드날렸으나, (b) 중간에 가화(家禍)를 만나서 남쪽으로 귀양가고 북쪽으로 귀양가서 온갖 풍상(風霜)을 다 겪었으니, 세상에 쓰이고 혹은 버림을 받으며 나아가고 또는 물러갔음을 세상에서 간혹 송(宋)나라의 소식(蘇軾)에게 견주기도 하였다.²³⁾

그의 기질 묘사(a)에서, ‘무사(無事)’는 ‘걸릴 것 없음’ 혹은 ‘거리낌 없음’의 뜻이다. 젊은 시절 추사는 귀한 집 도련님으로 20대 청나라 연경에 가서 지적 교류와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돌아왔고, 그 경험으로 그는 모든 대상들을 대함에 자신만만함이 넘쳤으며, 심지어 오만함에까지 이르렀던 듯하다. ‘자황(雌黃)’이란 “옛날 시문(詩文)의 오기(誤記)된 부분에 자황을 칠하여 정정(訂正)하였는데, 시문의 첨삭(添削) 또는 변론의 시비를 이름”이란 뜻이다. 그의 그런 자신만만함, 나아가 오만함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의 재능과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쉽게 비평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추사의 집안을 살펴보면, 자신만만함의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는 경주 김씨 월성위(月城尉)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할 때 수렴청정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는 추사의 11촌 대고모이다. 영조는 추사의 증조부인 김한신(金漢薰, 1720~1758)²⁴⁾을 사위로 맞이하여 서울에 월성위궁과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일대를 사전(賜田)으로 내려주었다. 그리고 충청도 53개 군현의 각 고을에서 한 칸씩 건립비용을 분담케 하여 53칸 집을 짓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추사고택이다. 월성위 타계 후 조카 김이주(金頤柱)를 양자로 삼아 집안을 이었으니 바로 추사의 조부이며, 그는 외할아버지인 영조의 비호로 높은 벼슬을 지내고 네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 김노영이

23)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국역 조선왕조실록 > 철종실록 > 철종 7년 병진(1856) > 10월 10일(갑오) > 전 참판 김정희의 졸기 : “前參判金正喜卒。正喜，吏判魯敬子，聰明強記，博洽群書，金石圖史，窮微蘊奧，艸楷篆隸，妙悟眞境。時或行其所無事，而人不得以雌黃。與其仲弟命喜，塤簾相和，蔚然爲當世之鴻匠。早歲蜚英，中罹家禍，南竄北謫，備經風霜，用舍行止。世或比之於有宋之蘇軾。”

24) 김한신이 39세 나이로 대를 이을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자 화순옹주는 열흘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고 왕족 최초로 열녀문을 받았다.

추사 양부이고, 넷째 김노경(1766~1837)이 추사 친부로, 모두 대과에 급제하여 출세의 길을 걸었다. 집안의 양명(揚名)과 추사의 자신만만함이 세도정치 상황에서는 하나의 빌미로 작용하여 (b)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부친 김노경을 비판한 내용을 보자.

(c) 요사스런 아들이 항상 반론(反論)을 가지고서 교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으로 삼으면서도 인륜(人倫)이 허물어지는 두려움을 돌보지 않았었고, 사나운 조카가 권세를 독차지하여 호기를 부리는 것이 남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계획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惡)을 구제하는 데로 돌아가기를 깨닫지 못하니, 동조(同朝)에서의 수치와 여론에서의 타매(唾罵)가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²⁵⁾

순조 당시 김노경을 탄핵하는 내용을 보면[(C)], ‘요사스런 아들’, ‘항상 반론을 가지고서’라는 반감어린 용어로 추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철종 당시 “양사에서 김정희와 그 형제들을 절도 안치할 것을 청하다[兩司啓以爲]”라는 상소에서도 추사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혹하다.

대개 그는 천성이 간독(奸毒)하고 마음 씀이 빼뒀어졌는데 약간의 재예(才藝)가 있었으나 한결같이 (d) 정도(正道)를 등지고 상도(常道)를 어지럽혔으며, 억측(臆測)하는 데 공교했으나 나라를 흥하게 하고 집에 화를 끼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²⁶⁾

철종 당시 대왕대비인 김조순의 딸로서 순조의 비가 된 순원왕후(純元王后)로, 그녀가 낳은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철종을 왕으로 삼아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극치에 달했던 시기로, 경주김씨 김관주의 탄압에 앞장섰던 영안부원군 김조순 이후 추사 집안에 대한 탄압이 심하던 때였다. 귀역(鬼蜮, 음흉한 사람을 비유) 심지어 와주(窩主, 범죄자의 우두머리)라고까지 표현하였으니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25) 『조선왕조실록』 純祖 31卷, 30年(1830 庚寅/淸 道光(道光) 10年) 8月 27日(壬子), <副司果金遇明疏略曰> : “而妖子之常持反論, 巧作涉世之良方, 而不顧敦倫之畏, 悍姪之席勢使氣, 認爲魯人之愚計, 而莫覺濟惡之歸, 同朝之差恥, 輿論之唾罵, 去而益甚.

26) 哲宗實錄 二年(1851年) > 二年 七月 > 哲宗 2年 7月 21日(乙巳) : “蓋其賦性奸毒, 宅心回曲, 薄有才藝, 一是背經而亂常, 工於揣摩, 不出兇國而禍家. 世濟其惡, 是父是子, 陰結匪類, 如鬼如蜮, 爲世不齒, 亦已久矣.”

는 어렵지만 그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알만하다. 이에 대한 비답으로 “그런 논단은 너무 과중하여 윤택하지 않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²⁷⁾고 한 것을 보면 타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내용을 보면 추사가 당시 일반적인 유학자들의 행하는 보편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출한 면을 지닌, 개성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추사가 보여준 재능과 자신감의 표출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추사의 개성적 기질 특성을 ‘괴(怪)’라고 할 수 있는데, 유배 길에서 만난 전주의 창암 이삼만에 대한 행동과 초의선사가 머물던 대운사의 원교 이광사의 글씨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괴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²⁸⁾

3. 제주 유배 : 추사체의 전변(轉變)

추사의 제주 유배는 그의 나이 55세인 9월에 시작하여 64세 1월 서울에 돌아오기까지 9년 정도이다. 그의 유배는 집안 배경과 추사가 지닌 개성, 즉 괴(怪)의 특성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안동김씨의 정치적 공격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추사는 34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38세에 규장각 대교, 42세에 예조참의, 44세에 효명세자 시강원 보덕을 역임했다. 41세에 충청우도 암행어사 시절 봉고파직 시킨 사람이 김우명으로, 그 집안인 안동김씨는 세도정치를 업고 김노경과 추사(동부승지, 45세)를 탄핵하였다. 당시 윤상도가 호조판서 박종훈과 전 유수 신위 등을 탄핵했다 추자도로 귀양 가는 ‘윤상도 옥사 사건’이 있었는데 모함으로 판명되어 묻혔다. 그러나 대사헌 김양순과 대사간 안광직은, 김노경이 김로에게 아부하고 왕세자 가례 때 국혼을 저주하였다고 모함하였고 이에 삼사의 신하 14명이 다시 탄핵하고 삼정승(三政丞)과 삼사(三司)가 김노경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왕이 65세인 김노경을 고금도(完道)에 위리안치 시켰으며, 추사는 벼슬에서 물러나 부친을 찾아뵈었다. 추사는 47세에 두 번이나 임금의 행차 앞에서 팽과리를 두드리며 부친의 무죄를 호소하는 ‘격쟁(擊錚)’을 시도하였으나 1년이 지나서야 해

27) 哲宗實錄 二年(1851年) > 二年 七月 > 哲宗 2年 7月 21日(乙巳) : “批曰. 金正喜兄弟事, 若是論斷, 殊涉過中, 并不允. 未段三漢事, 如渠卑微, 何必如是張皇乎. 勿煩.”

28) 장승희, 「괴(怪)와 졸(拙)로 본 추사 김정희의 철학적 인간학」, 『유학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151쪽.

배되었고, 그 2년 뒤 판의금부사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고 추사 52세에 부친은 72세로 서거하였다.

추사 집안에 대한 탄핵은 20여년 고위관직을 지낸 아버지와 추사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다. 추사는 청나라 연경에서 새로운 지적 자극과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경험 후 자신감이 가득하였다. 유홍준에 따르면, 귀국 후 추사는 무슨 논거를 댈 때면 “내가 연경의 석목서루에서 이 진본을 보았는데 그 진본에 의하면 이렇지 않았다.”는 등 혼자만의 경험과 감동으로 재단하고 비평하였다 한다. 그런 오만과 편견과 치기가 본인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고 간혹 그것이 심하여 미움도 받았다고 한다.²⁹⁾ 문제는 추사가 동지부사로 임명받아 연경행이 예정되어 있던 해에(55세), 김우명과 김홍근이 죽은 김노경을 공격하며 윤상도 옥사를 재조사 할 것을 상소하자, 대리청정 하던 대왕대비는 추사와 아우 명희의 관직을 삭탈하고 죽은 김노경의 관직까지 추탈하였다. 다행히 우의정이던 벗 조인영의 상소로 죽음을 면하였지만 결국 추사는 제주로 위리안치 되었다.

유배 이전 추사는 자신의 능력과 기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를 만들어갔다. 눈치 볼 것이 없었던 환경에서 추사체의 개성은 그의 삶의 여정과도 맞닿아 있었다. 유홍준은 추사체가 추사 중년에 자신의 모든 서체에 하나의 틀을 갖추고 제주도 유배생활에서 한 차원 높여 무궁한 변화를 얻음으로써³⁰⁾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는 “각이 진 글자 구성에 힘이 있고, 획의 굵기에 강약이 강하게 드러난” 글씨를 추사체의 특징이라고 보고, 이른바 추사체가 제주 유배 6년째인 회갑 시절의 편지글에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³¹⁾

두 번의 임계국면을 겪으면서 추사는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만의 학문과 예술, 철학적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연경 체험이 그로 하여금 자신감과 자유로운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괴(怪)의 경험이었다면, 두 번째 임계국면인 제주 유배는 그런 개성과 자신감을 다듬어 겸손과 줄(拙)로 승화시켜 추사체를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9) 유홍준, 앞의 책, 2006, 60쪽.

30) 유홍준, 앞의 책, 2002a, 294쪽.

31) 유홍준, 앞의 책, 2002b, 424-425쪽.

Ⅲ. 추사의 제주생활에 나타난 제주 인식

추사의 유배생활은 제주 9년 북청 1년, 모두 10년이다. 55세(1840년 9월 2일)에 위리안치 명을 받아 전주, 남원, 나주, 해남, 완도를 거쳐 배를 타고 제주 화북에 도착하고 이어서 80리 떨어진 대정현(10월 2일)에 도착하였다. 의금부 관리 금오랑과 하인 봉이가 한 달 넘게 유배 길을 동행한다. 완도에서 해 뜰 때 출발하여 풍랑이 거세어 석양 무렵에 당도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동생 명희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이렇게 빨리 도달한 것은 61일 동안 보기 드문 일로 모두 배멀미에 시달렸지만 나는 뱃머리에서 죄인으로서 쫓쫓이 버티었다.”라고 자세히 묘사하였다.³²⁾ 화북진에서 하루 유숙하고 다음 날 대정으로 출발하였는데, 대정에 도착해서는 군교(軍校) 송계순의 집에 머물렀다. 위리안치의 이동제한으로 인한 한계와 제주 풍토에의 적응 문제, 부적응으로 인한 심신의 고달픔으로 당시는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시울타리를 둘러치는 일은 이 가옥 터의 모양에 따라서 하였는데, 마당과 뜨락 사이에 또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할 수가 있으니, 거처하는 곳은 내 분수에 지나치다 하겠네. (...) 이밖에 잡다한 일들이야 설령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어찌 감내할 방도가 없겠는가?³³⁾

추사의 유형(流刑)은 집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만 거동해야 하는 극단적 형태이다. 처음 가옥의 모양을 따라 가시울타리 치는 작업을 하였는데 집 안에서라도 거동이 자유롭다는 사실에 그나마 만족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인다. 유배 초기 나름 건디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은 건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음이 그의 편지마다 여실히 드러난다.

나는 근래에 와서 눈이 어른어른한 것이 더욱 가중된 데다, 밥 못 먹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밥상을 대할 적마다 구역질만 나므로 목구멍에 넘기는 것이 전혀 없는

32) 『阮堂全集』 卷二 <書牘, 與舍仲 命喜> 내용 참고.

33) 『阮堂全集』 卷二 <書牘, 與舍仲 命喜> : “籬園遵家形址爲之, 庭階之間, 亦可以行飯, 所處則於分過矣. (...) 外此瑣細, 設有不便, 豈無地忍之道也.”

지라, 이 때문에 신기(神氣) 또한 따라서 몹시 쇠진하여 수습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글을 경영한 지 오랜만에 이제야 비로소 붓을 들었으나 또한 계속해서 써나갈 수가 없네. 그러나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서 또한 그대로 내버려둘 뿐이로세. 비록 의약(醫藥)으로 다스리고자 하나 또한 약재료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³⁴⁾

당시 추사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적응이 쉽지 않았다. 왕족 자체로 물질적·정신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추사의 가세는 편지에 나오는 많은 종의 이름만 보아도 추측할 수 있다. 제주에 같이 내려간 봉(鳳)이를 비롯하여 안(安)이, 갑금(甲金)이, 용손(龍孫)이, 철(鐵)이, 양득(景得)이, 성노(聖奴), 단(段)이, 양예, 차예, 가예, 팔룡이, 용손이 등이 번갈아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편지와 음식, 물품과 서책을 배달하였다. 풍토가 다른 제주생활은 물갈이로 인해 기운이 빠져 편지쓰기도 힘들었던 듯하다. 큰 동생 명희와 막내 상희와의 우애를 그리워하는 편지 속에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절절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설창(舌瘡, 혀에 난 종기)과 비식(鼻癰, 코 속에 난 혹)이 아직도 이렇게 아파 5~6개월 이어지고 있네. 이게 비록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토록 지루하게 고통을 주는 병이 있단 말인가. 음식물은 점점 더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삼킨 것은 또 체해서 소화가 되지 않으니, 실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네. 만일 실낱같은 목숨이 구차하게 연명된다면 소식이나 서로 전할 뿐이니, 또 어찌 하겠는가. 어깨통증[臂疼]과 종기[痔症]가 또 극성을 부리니, 도대체 무슨 업보로 이처럼 내게만 치우치게 고통을 준단 말인가.³⁵⁾

지금도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제주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는데 한참 걸리는데 55세인 추사가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대정에서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이다. 게다가 대정현은 한라산 남쪽이어서 한라산을 넘지 못

34) 『阮堂全集』卷二 <書牘, 與舍仲(二)> : “吾比近來, 眼花益添, 阻食之証轉甚, 對案輒欲嘔, 全無所下喉者. 神氣隨以澌頓, 收拾不得. 此書經營多日, 今始染毫, 亦不能接續寫就. 不知其何緣如此, 亦惟任之. 雖欲醫藥, 又無藥料, 亦奈何.”

35) 『阮堂全集』卷二 <書牘, 與舍仲(三)> : “吾舌瘡鼻癰, 尙此作苦, 彌延五六朔. 雖係醫藥之無以爲之, 而寧有如許支離難堪者. 食物轉難燕下, 下者又滯隔不消, 實不知何以爲好. 若一縷苟延, 則與之消息而已, 亦奈何, 臂疼與痔症, 又一以并肆, 此是何報而偏苦若此耶.”

한 습기 많은 공기가 머물러 장마철에는 벽에 물기가 뚝뚝 떨어질 정도이다.

이 죄인은 3개월 동안이나 풍토병[瘴氣]으로 인하여 학질(瘡疾)을 앓으면서도 이를 다스릴 수가 없어 한열(寒熱)이 침학(侵虐)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럭저럭 80여 일을 경과하였더니, 원기(元氣)가 점차 손상되어 남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식보(食補)나 약보(藥補)는 모두 논할 것도 아니거니와, 우선 몸에 살이 온통 빠져버려서 자리에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궁둥이에 부스럼이 생길 지경이니, 이렇고도 어떻게 오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벌레와 뱀까지 따라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반 자[半尺]나 되는 지네와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침석(枕席)을 횡행하는가 하면, 처마에서는 새끼 가진 참새가 날마다 뱀을 경계하여 지저귀곤 하는데, 이는 모두 북쪽 육지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입니다.³⁶⁾

추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묘사하면서도 생활의 불편함, 음식과 약재의 부족함, 풍토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물질의 결핍, 특히 의식주의 결핍은 쉽지 않은 고난이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여 여전히 고된 삶을 호소하는 것이 편지마다 보인다.

이 죄인은 여기서 어느덧 3년이 되었는데, 바다 하늘은 아득하기만 하고 세월은 급급히 흐르기만 하니, 비록 면목이 있은들 인간의 면목이겠습니까. (...) 몸뚱이의 피와 살은 남김없이 말라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으니, 비록 등골뼈를 일으켜 세워 조물주와 서로 버티어 유한한 인간으로 무한한 조물주를 따르려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³⁷⁾

이 천한 사람의 병은 요즘에 또 발작했다 그쳤다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친 때이기는 하나 그 그친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양 병이 곁에서 쑥 내밀고 나오는 것이 마치 죽순[筍]이 섬돌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어볼 만한 의원이 없으니 약은 또 어디서 의논하겠습니까. 게다가 겹하여 여름 내내 우마(牛馬)의 도살을 금하였으므로, 마맥(麻麥)과 복령(茯苓) 등 채식만을 마치 계울을 지키듯이 먹어 왔는데,

36)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五)> : “累狀瘴瘧三朔, 無以醫治, 任其寒熱之凌虐, 任冉過八餘日, 眞元漸敗無餘. 食補藥補, 俱非可論, 肌肉盡脫, 不能坐穩床茲, 屢欲生瘡, 如是而安能久乎. 重之蟲虺從以惱之. 半尺之蜈蚣, 掌大之蜘蛛, 橫行枕席, 簷際乳雀, 日以警蛇, 皆北地所未見.”

37)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六)> : “累收居然三載于茲. 海天茫茫, 歲月騰騰, 視然人面乎哉. (...) 血肉之軀, 漸削無餘, 日異而時殊, 雖欲豎起脊梁, 與造物者相支柱, 而以有涯隨無涯, 其可得乎.”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애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천(水泉)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름에는 빗물, 겨울에는 눈물[雪]로 밥 짓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특별히 가물지 않았는데도 우물이 멀리 5리 밖에 있으므로 물을 길어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일 충암(沖庵)의 판서정(判書井)의 고사(故事)³⁸⁾와 같이 우물을 파서 얻을 수 있다면 또한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이 위리(圍籬) 밑에 어디서 샘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또 읍(邑)이 들 가운데 위치하여 토성(土性)이 더욱 건조하니, 설령 천맥(泉脈)이 있다 하더라도 샘물의 품질이 반드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읍 밑에 우물 하나도 없는 것인데, 이는 또 3백 60개 고을 가운데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³⁹⁾

게다가 이토록 심한 추위와 눈은 북녘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처마는 얇고 다 흠벽[單壁]이어서 바로 얼음집이요 눈구덩이로, 겹쳐한 점 햇빛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머리를 감히 이불 밖으로 쳐들지 못하고 손도 감히 토시[袖套] 속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벼루와 붓이 꽂꽂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는 헤아릴 겨를이 없습니다.⁴⁰⁾

근래에는 우물하여 근심 고통이 심하고 위급하고 절박함으로 인해 초췌해지며, 이미 억눌린 자리는 활발하지 못한데, 또 오래 묵은 질병은 떠나지도 않아 겁나고 두려운 심사(心思)를 수렴(收檢)할 길이 없고, 손목은 느슨하게 풀리어 굽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허공을 날아오르는 것 같고 풍운(風輪)을 타고 도는 것 같아 승묵(繩墨)으로 바로잡으려 하면 더욱 어긋나고, 법도로 나가려 하면 더욱 어그러집니다.⁴¹⁾

38) 충암은 김정(金淨)의 형조판서로 있다가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당하여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되었을 적에 자신의 적려(謫廬) 곁에다 우물 하나를 파서 얻었는데, 물이 매우 맑고 시원했으므로, 후인들이 그를 사모하여 이 우물을 ‘판서정(判書井)’이라 이름 한 데서 온 말이다.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BT_0614A_0040_010_0080&viewSync=\(검색일: 2017.06.28\)](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BT_0614A_0040_010_0080&viewSync=(검색일: 2017.06.28)).

39)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八)> : “賤恙近又更作更止, 現是止時, 止不可恃. 每旁闕如筍穿于階, 無醫可問, 藥又何論. 重之全夏斷屠, 麻麥伏令, 如持戒茹素. 尚能支到今日, 非始料所及, 水果果不佳, 夏雨冬雪之炊, 亦或有之. 今夏特不早耳, 并爲五里之遠, 汲運極難. 若鑿而得之. 如沖庵判書井故事, 亦幸甚, 顧此籬底, 何處覩泉耶. 且邑在野中, 土性尤爲浮燥, 設有泉脉, 品必不好. 邑底所以無一井, 此又三百六十之所未聞.”

40)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二十一)> : “加之甚寒甚雪, 北之所未經. 所居簷淺壁單, 卽一水窠雪窖, 重以一片陽氣不及, 頭不敢舉被窩外, 手不敢出袖套中. 硯斲筆凍, 又不暇計擬.”

41)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三十)> : “邇還以來, 鬱紆而憂毒, 危迫而焦頰, 旣壓次之不揚, 又沉絀之不發, 心思怔, 無由收檢, 手腕懈緩, 莫得卷曲. 如騰空界, 如轉風輪, 拉繩墨而愈錯, 就矩矱而益舛.”

추사의 편지에서 음식과 추위, 질병과 외로움으로 겪은 고난, 궁핍한 생활과 질병에 대한 절절한 사연들은 귀공자의 투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IV. 추사의 제주 인식, 변화의 계기와 의미

1.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추위와 질병, 음식과 물로 인한 어려움, 외로움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처지 등 힘든 유배지의 삶을 견디기 위해 추사는 편지와 글씨에서 위안을 얻었고 자신의 처지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첫째, 가족친지와 지인들과의 편지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권돈인과의 편지와 그의 물질적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 권돈인은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로 추사보다 3살 위의 봉우(朋友)로, 추사와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여서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한 신세한탄을 하곤 했다. 꾸준한 편지 왕래는 추사의 심사를 달래주었는데, 특히 그가 보낸 인삼은 추사의 건강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다.

더구나 인삼(人蔘)과 연초(煙草)를 계속 많이 내려주어 높으신 비호에 의탁하여 인삼은 먹어서 원기(元氣)를 보충하고 연초는 피위 장기(瘴氣)를 막게 되었으니, 더없이 머리 들어 사례하는 바입니다.⁴²⁾

보내주신 인삼에 대해서는 주는 대로 사양치 않고 받아서 마치 나에게 분디 있는 것처럼 복용하고 있으니, 이 어떤 공덕입니까. 만일 지난번에 주신 것으로 바짝 마른 창자를 적셔주지 않았더라면 이 실낱같은 완둔한 목숨을 지금까지 연장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것이 떨어졌는데, 또 계속하여 대주시는 성대한 은덕으로 끊임없이 감로수(甘露水)를 정수리에 부어주심을 입으니, 우러러 감사할 뿐입니다.⁴³⁾

42)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六)> : “況三種鼻烟, 連蒙便蕃之貺, 仰託崇庇, 服之以補元, 嗅之以禦瘴, 到底翹謝.”

43)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十五)> : “下送靈糧, 有頒不辭, 若固有之, 是何功德. 如非前貺之沾稿潤乾, 無以延此一縷之頑. 近頗罄乏, 又蒙繼廩之盛, 置之不竭之原, 甘露灌頂, 頂謝而已.”

둘째, 추사는 사람 좋아하는 기질을 적극 활용하였고, 제자와 지인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 제자인 허련과 이상적은 그의 옆에서 서책을 구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허련은 유배 다음 해 추사를 찾아와 제주목사 이용현의 막하로 들어가 추사의 유배처를 왕래하면서 그를 도와주었고, 이상적은 계복(桂復)의 『만학집(晩學集)』, 윤경(惲敬)의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槁)』,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 120권을 북경에서 구해 보내줄 정도여서 추사는 「세한도(歲寒圖)」를 그려주기도 하였다. 초의선사는 1843년 늦은 봄에 와서 6개월 정도 머물다 9월 경 육지로 돌아갔다. 물론 그의 가족인 양자 상무(商懋)와 서자 상우도 다녀갔다. 또한 백파(白坡) 선사와의 편지를 통한 선 논쟁에서는 자신의 불교지식을 마음껏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교류는 추사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의 외로움과 곤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책을 읽고 학문적 탐구열을 불태우면서도 예술적 기질을 한껏 발휘하였다. 유배 오는 도중 권돈인에게 「모질도(耄耄圖)」를 그려 보내고 초의가 머물던 해남 대흥사에서는 「무량수각(無量壽閣)」현판을 썼으며, 유배지에서 보낸 그의 편지글들은 추사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다. 또한 「화암사 상량문」, 「무량수각」, 「시경류」 등 편액을 써 보내기도 하였다. 심지어 임금은 허련에서 추사의 글씨를 가지고 상경 입시하라고 할 정도로 그의 글씨는 당대에도 유명하였던 듯하다.

넷째, 제주 자연, 특히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제주 자연에 대한 추사의 인식은 수선화에 잘 드러난다. 부친이 평안감사일 때 추사는 복암(茯菴) 이기양(李基讓)이 중국 사신으로 갔다 올 때 부친에게 선물로 준 수선화 한 그루를 고려자기 화분에 심어 유배지에 있던 다산 정약용(당시 57세)에게 보냈다. 다산은 “늦가을에 벗 김정희가 향각에서 수선화 한 그루를 부쳐 왔는데, 그 화분은 고려 청자였다.”라고 부제를 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신선의 풍채나 도사의 골격 같은 수선화가, 30년을 지나서 나의 집에 이르렀다. / 복암 이기양이 옛날 사신 길에 가지고 왔었는데, 추사가 이제 대동강가 아문으로 옮겼다네. / 외딴 마을 동떨어진 골짜기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서,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기에 서로 다투어 떠들썩하다 / 어린 손자는 먼저 익센 부추 잎에 비유하더

니, 어린 여종은 도리어 일찍 짝든 마늘 짝이라며 놀란다. / 흰 꽃과 푸른 잎 서로 마주 서 있으니, 옥 같은 골격 향그런 살결에서 향내가 절로 풍기는데 / 맑은 물 한 사발과 바둑알 두어 개라, 티끌조차 섞이지 않았으니 무엇을 마시는지 / 시진의 본초강목과 부옹의 시구에서, 너무나 더럽히어 글을 보니 울고 싶으라 / 진흙에 뿌리내린 걸 더러운 데 처했다 하고, 건땅에 꽃 피운 걸 습한 곳 좋아한다고 한다 / 이제야 알겠노라 대은은 때로 저자에 숨어도, 검은 물도 들지 않고 닳지도 않는다는 것을.⁴⁴⁾

다산의 시에서 추사에 대한 고마움, 수선화의 희귀성,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볼 수 있다. 추사는 다산의 둘째 아들인 학유와 동갑으로 다산 집안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다산을 존경하는 마음에 수선화를 고려자기에 심어 보낸 것이다. 다산과 추사는 유형(流刑)은 같지만 지역적 한계에만 머물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다산에 비해, 추사는 거동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활동이 불가능하였다. 한라산을 올라간 것도 유배 후 몇 년 제주병사의 배려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다산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비해 추사가 척독(尺牘) 외에 글씨만 남긴 이유를 알 만하다. 유배 초기 수선화에 대한 첫 인상은 제주 자연에 대한 추사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수선화는 과연 천하에 큰 구경거리입니다. 절강성 이남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는 촌 동네마다 한 치, 한 자쯤의 땅에서도 이 수선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화품(花品)이 대단히 커서 한 가지에 많게는 10여 송이에 꽃받침이 8~9개, 5~6개에 이릅니다. 그 꽃은 정월 그믐께부터 2월 초에 피어서 3월에 이르러서는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마치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려 있는 듯, 흰 눈이 광대하게 쌓여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토착민들은 수선화가 귀한 줄 몰라서 소와 말에게 먹이고 함부로 짓밟아버립니다. 또한 수선화가 보리밭에 잡초처럼 많이 나기 때문에 시골의 장정이나 아이들이 보자마자 호미로 파내어 버립니다. 파내고 파내도 다시 나기 때문에 이를 원수 보듯 하고 있으니, 수선화가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이와 같습니다.⁴⁵⁾

44) 『茶山詩文集』 제6권, <詩, 松坡酬酢, 秋晚金友喜香閣, 寄水仙花一本, 其盆高麗古器也> : “仙風道骨水仙花, 三十年過到我家. 荻老曾携使車至, 秋史今移淚水街. 窮村絕峽少所見, 得未曾有爭喧譁. 穉孫初擬薤動拔, 小婢翻驚蒜早芽. 縞衣青相對立, 玉骨香肌猶自浥. 清水一盃蕃數枚, 微塵不雜何所吸. 時珍本艸涪翁詩, 厚誣直欲臨書泣. 糞泥托根云處汚, 肥土開花稱好濕. 始知大隱時隱市, 猶自緇磷不相入.”

45) 『阮堂全集』 제3권, <書牘, 與權彝齋(五)> : “水仙花, 果是天下大觀. 江浙以南, 未知如何, 此中之里里村村, 寸土尺地, 無非此水仙花. 花品絕大, 一朵多至十數花, 八九萼五六萼, 無不皆然. 其開在正晦二初, 至於三月, 山野田壠之際, 漫漫如白雲, 浩浩如白

당시 육지에서 보기 드물었던 수선화를 지천에서 볼 수 있었으니 수선화에 대한 인상이 어찌 강렬하지 않았겠는가. 이와 같은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면서 점차 자신의 유배생활에서도 의미를 찾았던 듯하다. 추사가 수선화를 보고 시를 짓곤 했는데, 하나는 눈 내린 밤에 천엽으로 이루어진 제주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은 시도 있다. 감상해보자.

푸른 하늘 한바다에 낮같이 확 풀리니/ 선(仙)이란 끝내는 인색한 게 아니로세 /
호미 끝에 버려진 심상한 이 물건을 / 창 밝고 채 초췌한 그 사이에 공양하네⁴⁶⁾

술 푸르고 등 파란 낚아 빠진 떠 집에 / 천엽의 수선화 영롱한 옥이로세 / 심상한
저 설의도 관계가 많이 되니 / 시경은 공몽해라 화경도 마찬가지⁴⁷⁾

2. 주역 공부를 통한 자기 이해와 수용

추사의 제주 유배에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주역이었다. 주역을 깊이 공부한 내용은 권돈인에게 쓴 편지에 잘 드러난다. 주역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人道)를 통하여 천도(天道)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보고, 주역이란 것은 허물을 고치는 글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비록 비괘(否卦)·박괘(剝卦)·곤괘(困卦)·건괘(蹇卦)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변통할 수 없는 도리는 없기 때문에, 궁하면 통할 수가 있고, 죽으면 살아날 수가 있으며, 어지러우면 다스려질 수가 있고, 끊어지면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일찍이 시운(時運)을 어찌할 수 없다거나 기질(氣質)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데에 맡겨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길이 비색[否]한 때만 있지 않고, 또 길이 형통[泰]한 때만 있

雪. 累居之門東門西, 無不皆然. 顧茲坎窞憔悴, 何可及此. 若閉眼則已, 開眼則便滿眼而來, 何以遮眼截住耶. 土人則不知貴焉, 牛馬食齧, 又從以踐踏之, 又其多生於麥田之故, 村丁里重, 一以鋤去. 鋤而猶生之故, 又仇視之, 物之不得其所, 有如是矣.”

46) 『阮堂全集』 제10권, <詩, 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 田畝之間尤盛 土人不知爲何物 麥耕之時盡爲鋤去> : “碧海青天一解顏, 仙緣到底未終慳, 鋤頭棄擲尋常物, 供養窓明几淨間.”

47) 『阮堂全集』 제10권, <詩, 雪夜偶吟> : “酒綠燈青老屋中. 水仙花發玉玲瓏, 尋常雪意多關涉, 詩境空濛畫境同.”

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색한 운수를 형통한 운수로 돌리고, 아낌없이 허물을 고치며, 환난을 생각하여 미리 방지하고, 편안한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평균하게 조제(調劑)시키는 것이니, 『대학(大學)』의 치평(治平 치국·평천하)과 『중용(中庸)』의 중화(中和)가 모두 이것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는 것입니다.⁴⁸⁾

추사는 주역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논리와 허물을 고치는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모든 것이 넘치고 지나치면 기울어서 평균을 찾고자 하는데, 그에 의하면 평균이란 “물마다 각각 제자리를 얻은 것”⁴⁹⁾이다. 추사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위로하며 주역의 원리에서 해배(解配)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다. 자신의 궁한 처지가 반드시 균형을 찾을 것이고 통(通)하는 때가 올 것임을 확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추사는 제주에서의 힘든 삶을 토로하면서도 점차 제주 아름다움과 풍물의 기이함에 눈을 뜨고 새롭게 느끼기 시작한다.

거미와 지네는 예전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고, 파리도 무척 많아서 아침에 갈아입은 흰옷이 저녁이면 마치 검은 물을 뿜어놓은 것처럼 까맣게 되며, 밤이 되면 벼룩과 모기가 서로 득실거리어서 잠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또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으나 혹 붉기도 하고 검기도 한 마치 먼지처럼 자잘한 벌레들이 있어 날카로운 독침이 가시와도 같고 벌침과도 같은데, 이것들이 베개와 요[枕褥] 사이에 서로 득실거리면서 내 몸과 피와 살을 저들의 생계로 삼고 있습니다. …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한결 같이 하는 대로 맡겨둘 뿐입니다.⁵⁰⁾

이곳에는 감로수(甘露樹)가 있어 나무의 굴기는 겨우 한 줌(一握) 혹은 두 세줌(二三握) 쯤 되기도 하는데, 그 밑둥을 자르면 나무의 즙이 폭포처럼 솟아 나와서 한 나무에 물을 큰 병으로 가득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은 마치 유천(乳泉)과 같고 단맛은 마치 상품(上品)의 꿀(石蜜)과 같아 맑고 차가우면서도 향기가 있어, 다른

48) 『阮堂全集』卷3, <書牘, 與權彝齋 敦仁> : “是以易者, 改過之書也. 雖否剝困蹇, 元無不可變通之道, 窮可以通, 死可以生, 亂可以治, 絕可以續, 曾不以諺之於時運之不可爲, 氣質之不可化. 而蓋未有長否之時, 又未有長泰之時, 是以回否反泰, 改過不吝, 思患豫防, 安不忘危, 使之平均調劑. 大學之治平, 中庸之中和, 皆是相爲表裏.”

49) 『阮堂全集』卷3, <書牘, 與權彝齋 敦仁> : “平均者, 物物各得其所也. 不得其所, 所以不平均也.”

50) 『阮堂全集』卷3, <書牘, 與權彝齋(九)> : “蜘蛛蜈蚣, 依舊作苦, 且蠅甚, 朝澣之衣, 夕而如噴鴉, 夜則蚤蚊相仍, 無由成眠. 又不知何樣小蟲, 或赤或黑, 細若微塵, 利侔棘心, 銛比鋒尖, 互發交作於枕褥之間, 血肉之軀, 爲渠家計. … 亦復奈何. 一以任之.”

꿀의 달기가 모두 이만 못하니, 참으로 기이한 산품(產品)이라 하겠습니다. 선가(仙家)의 옥장, 옥액(瓊漿·玉液)이라는 것도 아마 이보다 좋지 않을 듯합니다. 이 나무는 깊은 산에 있는데, 간혹 만날 때가 있을 뿐, 많이 볼 수도 없고 이곳 사람들 또한 알지 못합니다.”⁵¹⁾

벌레들 때문에 생활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마저 감수하기로 이전과 변화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로수가 고로쇠 혹은 하수오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제주 자연을 묘사한 추사의 표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역의 이치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노력한 결과인 듯하다.

궁하면 통할 수가 있고, 죽으면 살 수가 있고, 어지러우면 다스려질 수가 있고, 끊어지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은 쇠세(衰世)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한 것입니다.⁵²⁾

추사는 주역의 변화원리에 자신의 처지를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위로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도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것이 바로 소식(消息)의 지극한 이치인데, 나의 경우는 궁함이 아직 궁함이 다 되지 못하고 변함이 아직 변함이 다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또 소식하는 한 가지 이치가 지금은 또 증험이 없어, 기수(氣數)의 주장(主張)이 한결 같이 어긋나는 데 맡겨져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까?”⁵³⁾라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였다.

추사는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승진된 종질(從姪) 상일을 축하하면서는 “생활의 풍검(豐儉)에 대해서는 세속의 생활 방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없었던 때를 가지고 생각하면 여유 있는 것이 기쁘겠으나, 서생(書生)

51)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十)> : “此中有甘露樹, 樹身大座一握, 或二三握, 截其本則樹汁湧如瀑泉. 一本可得水一大瓶, 水如乳泉, 味甘如石蜜之上品. 清冽有香, 他蜜之醴, 皆不如也, 儘奇品異產矣, 仙家之瓊漿玉液, 恐不多於是. 樹在深山, 或有遇之而不多見, 此中人亦不知也.”

52)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七)> : “是以窮可以通. 死可以生, 亂可以治, 絕可以續, 故曰易爲衰世而作.”

53)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八七)> : “窮則變, 變則通, 卽消息之至理, 而窮有未窮, 變有未變耶. 抑復消息一理, 今且無驗, 氣數主張, 一任其乖.”

에게는 매양 분수에 넘침을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검박함도 또한 기쁜 것이다. 「대역(大易)」에서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은 집에서 먹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니, 기쁜 대로 순리대로 지낸다면 어디 간들 여유작작하지 않겠느냐.”⁵⁴⁾라고 하였다. 주역 대축괘(大畜卦)에 “크게 기쁨은 곧은 것이 이로우니,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大畜利貞 不家食吉]”의 내용인데, 집에서 먹지 않고 베풀하여 조정(朝廷)에서 녹봉을 받아먹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베풀이 오른 것을 축하하면서도 자족(自足)하는 마음과 절약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조언한 것이다. 채종손(再從孫) 태제(台濟)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중(中)에 대하여, “주역의 384효, 64괘도 서로 끊임없이 왕래하고 반복하여 오르내려서 중을 향해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때문에 중용(中庸)이 주역과 서로 통하는 것”⁵⁵⁾이라고 하였다. 추사가 말한 중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내가 다니고 머물고 앉고 서고하는 곳이 모두가 중이다. 그래서 이 중이 아니면 다닐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것이니, 굳이 따로 할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곧 다니고 머물고 앉고 서고하면서도 이것이 곧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른바. 당나귀를 타고서 당나귀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자신에게 반성하여 구하는 것이 바로 구함에 유여하게 되는 것이니 지나치게 구하는 것도 중은 아니다.⁵⁶⁾

이 말은 추사가 태제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중(中)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경지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리라.

54) 『阮堂全集』 卷2, <書牘, 與從姪 商一> : “至於腴薄之計, 固不能免俗商裁. 若以未有此之時思之, 豐實可喜, 每有書生濫分之戒, 薄亦可喜. 大易不家食之吉, 非家食可比, 隨喜隨順, 安往而不裕如也.”

55) 『阮堂全集』 卷2, <書牘, 與再從孫(三)> : “易之三百八十四爻, 六十四卦. 往來憧憧, 反復上下, 無非向中去, 所以中庸與易通耳.”

56) 『阮堂全集』 卷3, <書牘, 與權彝齋(十)> : “今汝行住坐立處皆中. 而非中無以行無以住無以坐無以立, 不別別尋一逕. 今乃行住坐立, 而不知是中者, 是所謂騎驢覓驢耳. 此非一二言說可了, 惟回身返求, 是歸求有餘者. 且過求非中.”

3. 불교 신앙을 통한 달관의 경지

추사에게 불교는 유교와 더불어 그의 사상 형성이 중요한 토대이자 신앙의 역할을 하였다. 불교는 신앙으로, 예술로서, 사상으로 유배시 큰 힘이 되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⁵⁷⁾

첫째, 추사 집안에 원당(願堂) 사찰인 오석산(烏石山) 화암사(華巖寺)를 두고 있었다는 데서 신앙으로서 불교 인연을 알 수 있다. 33세 때 해인사 대적광전 중수에 시주하고 상량문을 써주고, 제주 유배 시절 화암사 중건시 2종의 현판을 써서 집으로 보내는 등 인연이 생길 때마다 사찰에 현판과 상량문을 써 보내주었다. 초의 선사를 비롯하여 스님들과도 교류가 많았는데, 제주 유배시절 6개월 및 이후 강상(江上)에서 2년을 함께 한 초의선사와의 관계는 단순히 벗을 넘어 학문적 동지였던 듯싶다. 40여 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면, 안경을 보내고 효험을 보았는지 묻거나 차를 보내주는 그런 일상적 교류를 넘어선다. 추사에게 초의선사는 불교적 사유를 공유하는 봉우이자 불교에 대한 탐구를 검증하는 사우(師友)였던 것이다. 만년의 추사는 더욱 불도(佛道)에 귀의하여 일흔 살에는 봉은사에 기거하면서 발우공양하고 자화참회(刺火懺悔)하며 살았고, 과지초당(瓜地草堂)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불자로서 생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⁸⁾ 봉은사 ‘판전(板殿)’ 현판은 세상을 떠나기 삼일 전에 쓴 것으로 그의 마지막 불심이 담겨 있다.

둘째, 예술로서의 불교를 보면 180여 개의 별호를 자유자재로 짓고 활용한 데서 창의성과 독창성이 드러난다. 그 중 불교와의 인연을 나타낸 이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 불노(佛奴) 등이 있다. 불심이 깊었던 추사는 원찰인 화암사 현판 뿐만 아니라 혼허지조(混虛智照) 스님의 부탁으로 경북 영천 은해사(銀海寺)의 현판들, 즉 일주문의 「은해사」, 「대웅전」, 「보화루(寶華樓)」, 「불광(佛光)」, 요사채의 「시흘방장(十笏方丈)」 등을 흔쾌히 써주었으며, 또 스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절집 암자의 현판도 자주 써주었다. 부안 변산의 「소요암(逍遙庵)」, 계룡산 동학사의 「자묘암(慈妙庵)」도 있다.⁵⁹⁾ 추사는 기침, 혈담, 눈병, 소화불량 등 제주에서 잔병치레가 심하

57) 이 부분은 장승희, 앞의 글, 2015, 226-237쪽에서 가져와 수정함.

58) 유홍준, 앞의 책, 2006, 443쪽.

59) 유홍준, 앞의 책, 2002b, 675쪽.

었는데, 소치 허련(小痴 許鍊, 1809~1892)이 그린 「완당선생海天一笠像(阮堂先生海天一笠像)」을 보면, 왼손으로 수염을 어루만지고 오른손으로는 배꼽 근처를 움켜쥐고 연단도인의 몸짓을 하고 있다. 평소 손에 염주를 쥐고 만지작거리며 굴렀다고 하는데, 일종의 건강유지 방법이었던 듯하다. 추사의 불교적 사유는 그림에도 잘 드러나는데,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는 난을 치면서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추사의 염원을 담고 있다.

난화를 치지 않은지 스무 해 / 우연히 본성을 흰히 그려 냈구나 / 문 닫고 찾기도
또 찾은 곳 / 경지가 바로 유마의 불이선이라네⁶⁰⁾

재가불자로서 유마거사의 삶을 본받고자 하였던 그는 유마경의 가르침, “보살은 본래 병이 없으나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이 든다.”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행과 “지혜를 어머니로 하고 방편(方便)을 아버지로 한다.”는 경전의 맥락을 그의 삶에서 꾸준히 추구하며 살았다. 그것을 그림으로 승화시키고 그 기쁨을 “제란(題蘭)”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마거사를 자처하였던 추사는 글을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 대립과 차별을 버리고 분별 의식과 집착을 벗어난 불이(不二)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비록 세속에서이지만 유마거사처럼 이 삶 속에서의 해탈을 추구하였고 번뇌와 해탈, 중생과 붓다의 불이적 사유야말로 추사가 추구했던 바인 것이다.

셋째, 사상으로서의 불교는 제주 유배 4년째(58세), 77세의 백파선사와 편지를 통해 벌인 선(禪) 논쟁이 유명한데, 추사의 불교에 대한 인식과 화두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두드러진다. 백파선사는 법명이 공선(巨璇)이고, 전주(全州) 이씨(李氏)로 선조(宣祖)의 부친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10세손이며, 18세 때 연곡화상(蓮谷和尚)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24세 때 당시 화엄종장인 설파상언(雪坡尙彦, 1707~1791)에게 구족계를 받고 화엄경을 배웠다. 26세 백양사 운문암 강사스님이 되었고, 30세 때는 구암사에서 사미계를 설해 율사로서 발을 디디고, 49세 때부터 정읍의 용문동에 들어가 8년간 습정균혜(習定均慧)하였다. 한국 선종의 역사에서 백파선사는 서산휴정(西山休

60) 『阮堂全集』 卷十, <詩, 題蘭> : “不作蘭花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靜)과 그 문하에서 주도해왔던 조선 선문의 체질강화 작업을 착실히 계승한 인물이며,⁶¹⁾ 그의 『선문수경(禪文手鏡)』은 전통적인 선종 각 종파들의 미묘한 차이를 ‘중도’와 ‘돈오’를 기준으로 종합, 정리한 저술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몰락해가는 선종의 중흥을 시도한 것이기도 하다.⁶²⁾ 그의 삼종선(三種禪) 논의는 범통이라는 다분히 유교적인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던 임제선의 정통성을 이론적으로 객관화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⁶³⁾

논쟁은 백파선사가 지은 『선문수경』이 발단이었는데, 핵심은 의리선, 여래선, 조사선의 구도에서 그것을 임제삼구(臨濟三句)에 배당시키고 선종오가에서 하택종을 의리선에, 법안종과 위양종과 조동종을 여래선에, 운문종과 임제종을 좌선에 배당하고, 운문종과 임제종 가운데 기용(機用)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최상승종은 임제종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추사가 그 주장에 대한 오류를 편지로 보내고, 백파선사가 「13가지로 논증한 답신」을 보냈으며, 다시 추사가 「백파망증15조(白坡妄證十五條)」로 논증한 글을 보낸 것이 핵심이다. 초의선사도 백파선사의 주장을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추사는 화두선을 비판하며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불교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불교의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고 한다. 붓다가 인생과 존재의 본질을 고(苦)라고 선언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무상(無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더라도 결국 무아(無我)이므로 집착할 것이 없고, 따라서 삶에서 물질적·세속적인 것을 갈망하기보다 깨달음을 갈망하고 궁극에는 그것도 놓으라는 의미였다. 추사는 유배를 겪으며 삶과 죽음,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의 분별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불이(不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원당사찰을 지니고 있을 만큼 독실한 불자로서 불심(佛心)으로 불교적 사유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졸(拙)의 경지에 이르는데, 유마거사의 불이의 경지이자 선(禪)이며 공(空)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61) 박재현, “조선 후기 선(禪) 논쟁에 내포된 원형지향성”, 『불교학연구』 제7호, 불교학연구회, 2003, 150쪽.

62) 최일범, “백파선사-삼종선 논쟁을 일으킨 종문의 거인”,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민족사, 1990, 379쪽.

63) 박재현, 앞의 논문, 150쪽.

V. 맺음말

지금까지 추사의 제주인식, 그 변화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인간의 삶에서 경험은 이미 형성된 사유구조와 조응하면서 경험 이전과는 새로운 인식이 형성된다. 고증학과 추사체에서 독자적 경지를 이룬 추사에게 제주유배는 임계국면으로 작용하여 예술과 학문에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질적인 제주의 환경과 문화, 궁핍한 여건을 경험하면서 이전의 도도하고 자부심 많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된다. 주역과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을 놓는’ 중(中)을 깨치게 되고 그 결과 역경을 수용하고 겸허해지면서 졸(拙)의 특성을 지닌 추사체로 변화였다. 개성이 있으면서도 겸손을 갖춘 품격이 생긴 것이다. 또한 육지와 오고간 추사의 편지에서 제주에 대한 소감과 느낌은 당시 제주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추사의 개성적인 삶과 추사체는 오늘날 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성과 맞닿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과 끼’를 통해 개성과 능력을 강조한다. 이는 복제품 같은 인간유형이 아닌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인간상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을 키우고자 함이다. 감각주의·물질주의·경쟁주의로 획일화되어가는 자본주의 문명에서 미래사회에서는 개성과 창의성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앞으로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의 직업들은 사라질 것이고,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일’만이 살아남는다고 한다.⁶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인간이 직접 몸과 마음으로 해야 하는 창의적 분야들이다. 그것은 몸으로 이루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술과 정서분야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며 새롭게 조명해야 하는 역사 속 인물이 바로 추사 김정희이다.

64) <http://news.joins.com/article/13925157>, 『중앙일보』(2014.02.18), 「송길영의 빅데이터, 세상을 읽다 :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검색일: 2015.11.07)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장인(匠人·artisan)이나 예술가가 돼야 하는 세상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저

-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문음사, 2005.
- 구사회, 「實學과 佛敎의 交涉-秋史 金正喜를 중심으로」, 『불교어문논집』 2, 한국불교어문학회, 1997.
- 구사회, 「추사 김정희의 문학과 불교적 수용」, 『어문연구』 2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4.
- 김규선, 「새로 발굴된-추사 김정희의 암행보고서」, 『한민족문화연구』 38, 한민족문화학회, 2011.
- 김영두, 「草衣意恂의 禪思想과 茶道精神」, 『보조사상』 26, 보조사상연구원, 2006.
- 김현권, 「秋史 金正喜의 산수화」, 『미술사학연구』 240, 한국미술사학회, 2003.
- 로저 트리그(Roger Trigg), 최용철 역,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자작나무, 1997.
- 류호선, 「추사 김정희의 불교시 연구」, 『한국불교학』 46, 한국불교학회, 2006.
-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완당전집 I-III』, 솔, 1996.
- 민중서림편집국 편,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8.
- 박재현, 「조선후기의 선(禪) 논쟁에 내포된 원형지향성」, 『불교학연구』 7, 불교학연구회, 2003.
- 박철상, 「추사 김정희 장서(藏書)의 특징」, 『추사의 삶과 교유』(추사박물관 학술총서 1), 추사박물관, 2013.
- 선주선, 「추사 김정희의 불교의식과 예술관 연구」, 『서예학연구』 55, 한국서예학회, 2004.
- 심경호, 「추사 김정희의 서독(書牘)에 담긴 사유양식과 정신세계에 대한 일 고찰」,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 양순필,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연간 고」, 『어문연구』 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0.
- 유홍준, 「추사 김정희」, 『역사비평』 1998년 겨울호(통권 45호), 역사비평사, 1998.
- 유홍준, 『김정희』, 학고재, 2006.
- 유홍준, 『완당평전 1,2,3』, 학고재, 2002abc.
- 이동국, 「한국 문인화의 원형 탐색미술세계-추사 김정희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를 중심으로」, 『미술세계』 363, 미술세계, 2015.

- 이병기, 「추사가 한글 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 66, 국어학회, 2013.
- 이종찬, 「조선 중후기 儒·佛 詩人의 交涉樣相-東岳과 秋史의 경우」, 『동악어문학』 48, 동악어문학회, 2007.
- 임종욱, 「秋史 金正喜의 佛敎詩 연구」, 『동악어문학』 47, 동악어문학회, 2006.
- 장승희, 「김정희, 불심을 바탕으로 조선문예를 빛낸다」, 『불교평론』 제64호, 불교평론, 2015, 217~238쪽.
- 장승희, 「괴(怪)와拙(拙)로 본 추사 김정희의 철학적 인간학」, 『유학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139-164쪽.
-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8.
- 정후수, 「추사 김정희와 북경 법원사」, 『한성어문학』 2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5.
-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 연구(Ⅰ)』, 경문사, 1990.
- 최일범, 「백파선사·삼종선 논쟁을 일으킨 종문의 거인」,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1990.
- 한국철학사연구회 엮음, 『한국실학사상사』, 심산, 2008.
-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5.
-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 Carl Sagan(1977), *The Dragons of Eden : Speculations on The Evolution of Human Intelligence*, 임지원 역, 『에덴의 용』,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 David Christian·Bob Bain(2013), *Big history: the Big Bang life on earth, and the rise of humanity*, 조지형 역, 『빅 히스토리』, 서울: 해나무, 2003.

2. 기사 및 온라인 자료

- http://buddha.dongguk.edu/bs_list.aspx(운허스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 완당전집(阮堂全集).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국역 조선왕조실록 > 순조실록.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국역 조선왕조실록 > 철종실록.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301) > 완당전집(阮堂全集).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348) > 매천집(梅泉集).
-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

BT_0614A_0040_010_0080&viewSync=(검색일: 2017.06.28).

<http://dic.daum.net/index.do?dic=hanja>(검색일: 2015.12.04).

<http://dic.daum.net/index.do?dic=kor>(검색일: 2015.12.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7_0013563825&cID=10813&pID=10800, 『뉴시스 제주』(2015.03.29),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센터, 내달 추사 김정희 체험 행사” (검색일: 2015.09.30).

<https://brunch.co.kr/@kinzz00/13> by 꾸마(검색일: 2016.05.06).

김승범, 『제주매일』(2016.05.04), “올 제주인구 65만 돌파…기존 주택계획 등 무의미”,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715>(검색일: 2016.05.05).

『한라일보』(2012.01.09),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간옹 이익(李瀾)과 김만일의 딸,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28454000387599240>(검색일: 2017. 03.30).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eju.grandculture.net>(검색일:2016.04.25).

Abstract

Chusa Kim-Jeonghee's Recognition of Jeju

Jang, Seung-He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hilosophical thought and recognition of Jeju of Chusa Kim Jeonghui(秋史 金正喜, 1786~1856), through the life in Jeju and the effects of it. Chusa banished Jeju during nine years putting up bramble fence around[圍籬安置]. Chusa lived in affluence while young as descendants of royalty. He is a man of marked individuality without reserve who inborn talent of art. When 55 years old, he was exiled in Jeju, threshold which conversion of recognition of art and world which his own. He perceived freshly nature, culture, and inhabitants in Jeju. The experience of Jeju produced good results named Chusache(秋史體) which Goe(怪) and Jol(拙), the former is artistic presentation of his personality and the latter is unadorned condition of overcoming Goe(怪). The excellent art result of Chusa was caused by the recognition of Jeju. That was the results of meeting a deportee and treasure island

Key Words : Chusa, Kim-Jeonghee, Chusache(秋史體), banishment culture, the Book of Changes, Buddhism., Goe(怪) and Jol(拙), recognition, threshold

* Prof. of Elementary Ethic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 장승희 63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윤리 교육전공
(E-mail: imhundang@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7. 09. 01

심사완료일: 2017. 10. 01

게재확정일: 2017. 10. 05

신라 文武王의 海洋意識

김창겸*

I. 머리말

II. 문무왕의 해양의식 형성 - 통일전쟁과 海戰

III. 문무왕의 해양의식 실천 - 船府 설치와 護國龍

IV. 맺음말

국문요약

신라 문무왕의 호국적 해양의식의 형성과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과정에서 陸戰은 물론 금강 하구에서 백제부흥군과 왜의 연합세력을 패퇴시킨 白江戰鬪와 나당전쟁시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여 한반도 내지에 주둔하고 있던 당 육군에게 군수물자 공급과 이들의 합세를 차단한 서해안에서의 여러 海戰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일의 완수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무왕의 해전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삼국통일후 船府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한편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해양 및 불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해양경험과 해양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해양에 대한 의식은 그가 일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을 화장하여 동해에 散骨하면 왜의 침입으로부터 신라를 지키는 동해 大龍이 되겠다고 유언하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은 백강전투에서 패배하고 일본열도로 망명한 백제유민과 왜 세력의 침공을 우려한 강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제어 : 文武王, 海洋意識, 護國精神, 東海龍, 船府.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콘텐츠편찬실장.

I. 머리말

신라 문무왕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죽어서는 나라를 지키는 동해의 龍이 되어 왜의 침입을 막겠다는 遺言을 하였으며, 이것은 이른바 大王岩說話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후대에 문무왕과 대왕암은 호국정신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전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왕암이 문무왕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와 더불어 이것의 진위 논쟁이 제기되었다. 전통적으로는 대왕암이 水中陵說(藏骨處)이나 散骨說(葬骨處)이건 문무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¹⁾ 반면에 문무왕 당대의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倭寇의 침입과 附會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²⁾ 특히 문무왕의 鎮倭說을 사실로 보는 입장과³⁾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⁴⁾ 그럼에도 필자는 이것은 신라 문무왕과 신문왕대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⁵⁾ 여기에 후대에 설화적 윤색이 가미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삼국통일과정에서 신라는 백제·고구려 및 당과 많은 전투를 치렀다. 육지에서 전투와 함께 강과 바다에서도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 문무왕은 여러 차례 海戰을 치루면서 海洋의 중요성을 충분히 실감하였다. 더구나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백제유민과 왜의 연합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 어려움이

- 1) 국립박물관, 『감은사지발굴조사보고서』, 1960; 황수영, 『신라의 동해구』, 열화당, 1994; 정영호, 「석굴 창건과 동해구 신라유적과의 관계」, 『정신문화연구』 48, 1992; 장충식, 「문무대왕의 위적」, 『신라문무대왕』, 경주군, 1994.
- 2) 대표적인 사례로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이 있다.
- 3)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250쪽; 武田幸男, 「創寺緣起からみた新羅人の國際觀」, 『中村治兵衛先生古稀記念東洋史論叢』, 362~365쪽; 木村誠, 「文武大王代の對倭關係」, 제18회 신라문화학회학술회의 발표문, 1999.8.30.
- 4) 중국과 사이에 용궁(용왕)이 있다는 인식을 일본으로 대가한 것(新川登龜男, 「入唐求法諸相」, 『日本古代の對外交渉と佛教』, 吉川弘文館, 1999, 184쪽)에 불과하여 굳이 말하자면 이른바 「가상적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다(두창구, 「만파식적고」, 『강원민속학』 7·8, 1990, 20쪽).
- 5)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1981.

있었다. 이러한 이유와 배경에서 문무왕은 통일전쟁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해양과 선박을 전담하는 관부인 ‘船府’를 설치하였으며, 또 왜와 일본열도로 망명한 백제 세력의 침공에 대한 노심초사하는 강박감이 드디어 그가 죽어서는 나라를 지키는 동해의 龍이 되겠다는 遺言을 하였으며, 그것은 대왕암과 感恩寺를 비롯하여 萬波息笛說話가 승화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문무왕이 이러한 해양의식을 갖게 된 배경으로 신라 삼국통일의 위업을⁶⁾ 이루는 과정에서 있었던 해양을 무대로 했던 해전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통일전쟁 종료후 설치한 해양 전담 관부인 船府에 대해 검토하며, 그리고 문무왕의 遺詔와 大王岩 설화를 통해 호국성이 강한 문무왕의 해양의식이 가진 역사문화적 의미를 밝히겠다.

사실 고래로 삼국통일과 문무왕에 대해 언급한 글이 대단히 많은 까닭에, 여기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사적 분석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본고의 서술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언급하고 인용함을 해량해 주길 바란다.

II. 문무왕의 해양인식 형성 - 통일전쟁과 海戰

1. 백제·고구려 병합과 해전

신라의 해양 진출이 확대된 것은 6세기 중반에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이다.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하였고, 또 唐軍의 지원을 받아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신라 중앙정계의 중심인물인 金春秋의 아들이요 金庾信의 외조카인 金法敏(문무왕)은⁷⁾ 청년기부터 해양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진덕여왕대 고구려와 백제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唐으로 들어가서 외교 활동을 하였다.

6) 이명식, 「신라 문무대왕의 민족통일 위업」, 『대구사학』 25, 1984.

7) 문무왕은 신라 제30대 국왕으로(재위 661~681), 성은 金氏, 이름은 法敏이며, 아버지는 태종무열왕 金春秋이고, 어머니는 금관가야 왕족 출신인 金舒玄의 작은딸, 즉 金庾信의 누이 文明王后 寶姬이다. 또 왕비 慈儀王后는 善品の 딸이다.

6월 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를 이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비단에 5言詩 太平頌을 써서, 이를 춘추의 아들 法敏으로 하여금 당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 高宗이 이 글을 아름답게 여기고, 법민에게 大府卿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이 해에 처음으로 중국 연호 永徽를 사용하였다.⁸⁾

이처럼 김법민은 650년(진덕여왕 4) 당에 사신으로 들어가 탁월한 외교 능력을 발휘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⁹⁾ 당으로부터 大府卿이란 관직을 받아 귀국하였다. 이 일을 통해 김법민은 한반도의 신라를 벗어나 당의 長安을 둘러봄으로써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을 넓힘은 물론, 특히 바다를 건너 당에 들어가고 또 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해양과 해로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태종무열왕(김춘추)이 즉위한 뒤, 波珍滄으로 兵部令을 맡았으며, 얼마 뒤 태자에 책봉되었다. 660년(문무왕 7) 3월 蘇定方이 거느린 13만 대군은 백제를 치기 위해 山東半島의 萊州를 출발하여 黃海를 橫斷하여 마침내 德物島에 이르렀을 때, 김법민은 덕물도로 직접 가서 소정방을 맞이하였다. 즉 김법민은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 정벌 전쟁을 추진할 때에 해양을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월) 21일 왕이 태자 법민으로 하여금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德物島에 가서 蘇定方을 맞이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법민에게 “나는 7월 10일 백제 남쪽에 도착하여 대왕의 군사와 만나 義慈의 도성을 격파하려 한다.”고 말했다. … 정방은 기뻐하며 법민을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를 징발하게 하였다. 법민이 돌아와 정방의 군세가 매우 성대하다고 말했다. 왕은 기쁨을 금치 못하고, 태자와 대장군 庾信, 장군 品日, 欽春(春을 純이라고도 함) 등으로 하여금 정병 5만을 거느리고 가서 응원하게 하였다. 왕은 金戛城에 머물렀다.¹⁰⁾

이처럼 김법민은 660년 6월 21일에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¹¹⁾ 德物島에 가서 당 蘇定方과 백제 침공에 대한 군사작전계획을 합의하고 돌아왔으며,

8) 『삼국사기』 권5, 진덕여왕 4년.

9)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11년.

10) 『삼국사기』 권5, 태종무열왕 7년 6월.

11) 당시 신라 수군의 隻數는 동해의 수군을 합하면 150~200척은 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이종학, 「문무대왕과 신라해상세력과 발전」, 『경주사학』 11, 1992, 69쪽).

심지어 직접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때 김법민은 太子이자 군사통수의 최고 관직인 兵部令으로서, 山東半島의 萊州(또는 成山)를 출발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의 서해 渡航과 신라 수군의 항해와 전투 능력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바가 컸을 것이다.

더구나 黃海를 건너와 伎伐浦에 상륙한 당군은 황산벌전투를 치루고 炭峴을 넘어온 신라군과 합세하여 백제를 단기간 내에 멸망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군의 상륙지역이 기벌포라는¹²⁾ 것이다. 태자로서 신라측 최고 군사통솔자였던 김법민은 당군이 기벌포로의 상륙작전을 통해 백제를 멸망시킨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전쟁에서 수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강한 인상과 신라 수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을¹³⁾ 것이다.

한편 김법민은 661년 아버지 태종무열왕이 죽자 이어서 즉위하니, 곧 문무왕이다. 문무왕은 부왕의 뜻을 계승하여 삼국통일전쟁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무왕이 재위한 21년 동안은 백제부흥군, 고구려, 당과 전쟁의 연속이었다. 물론 육지에서 전투도 많았지만, 여러 차례 해전을 치루고, 또 수륙양동작전을 수행하였다.

먼저 백제부흥군과 전쟁과정에서의 신라 수군 및 해전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문무왕이 즉위한 661년에 甕山城과 雨述城에 웅거하던 백제 殘賊을 공격해 항복을 받고 그 곳에 熊岷城을 축조하였다. 한편 백제부흥군은 661년 4월 사람을 보내어 倭에 가 있던 백제왕자 扶餘豐의 귀국을 거듭 요청하여, 9월에 부여풍은 5,000여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귀국하였다. 백제부흥군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선, 周留城에 근거를 두고 熊津城을 공격해 신라와 당의 주둔군을 괴롭혔다. 왜는 백제부흥군을 지원하여 662년 1월 무기와 물자를, 5월 170척 함대의 수군을 파견해 주었다. 왜의 지원으로 기세가 강해진 백제부흥군은 복신의 지휘 하에 본부를 任存城에서 周留城으로 옮기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였다.¹⁴⁾

한편 백제부흥군의 저항이 거세지자 당의 熊津都督 劉仁軌는 위협을 느끼

12) 혹은 熊津江口(『구당서』 권83, 열전33 소정방조, 彌資之津(『일본서기』 권26, 제명천황 6년 9월)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으나, 이곳들은 크게는 오늘날 금강 하구로 추정된다.

13) 고경석, 「통일 직후 해양체제의 구축과 해양이념의 고양」, 『한국해양사』Ⅱ, 한국해양재단, 2013, 110쪽.

14) 『구당서』 권199상, 열전 149상, 동이 백제전.

고 본국의 당 高宗에게 병력을 증원해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은 右威衛將軍 孫仁師에게 淄州·淸州·萊州의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황해를 건너 출병시켰다. 산동반도를 출발한 孫仁師는 덕물도를 거쳐 熊津府城에 가서 유인원 군대와, 또 신라군과 합세하였다. 손인사가 거느린 군대는 山東 해안 지역에서 선발되었다. 그러므로 당군은 수군이 주력을 이루었다.¹⁵⁾

663년(문무왕 3)부터 신라군의 압박이 강화되자 扶餘豐은 고구려와 왜에 구원병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구려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으나, 663년 3월 왜는 上毛野君稚子が 27,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출병하였다.¹⁶⁾ 부여풍은 白江으로¹⁷⁾ 가서 왜군을 맞이하고 합세하여 진영을 정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수륙양동작전으로 백제부흥운동의 본거지인 周留城을 진격하였다. 문무왕과 유인원 그리고 손인사는 육군을 지휘하여 주류성을 향해 진격했고, 유인개 등은 수군과 군량선을 이끌고 주류성의 앞바다를 향해 진격하였다.¹⁸⁾

한편 왜의 군선 1,000척은 白江에 정박하고 백제부흥군의 정예 기병이 강 언덕에서 군선을 호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즉 백제·왜 연합군은 해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나당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려는 작전을 폈다. 웅진강을 출발한 당의 수군은 663년 8월 17일 백강에 도착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이것이 白江(白江口, 白村江)戰鬪이다.¹⁹⁾ 8월 27일 왜군 선발대와 당 수군이 백강에서 대치하면서 벌어진 제1차 전투에 이어, 8월 28일 제2차 전투가 벌어졌다. 신라와 당의 연합 수군은²⁰⁾ 네 차례의 접전 끝에 백제·왜 연합군을 火攻하여 군선 400척을 불태우는 대승을 거두었다.²¹⁾

15) 김영심, 「신라-당의 황해횡단항로의 연계와 백제·고구려의 멸망」,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576쪽.

16) 『일본서기』 권27, 天智天皇 2년 3월.

17) 白江, 白村江, 白江口에 대해서는 심정보, 「백강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2, 1989; 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004;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김영관, 「백강구의 위치와 백강전투」, 『군사』 65, 2007 참조바람.

18) 『구당서』 권84, 열전34, 劉仁軌.

19) 변인석, 『백제의 최후, 백강구전쟁』, 무공문화, 2015.

20) 당 수군에 신라 수군이 합류하여 편성된 조직이었다(김영관,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5, 197쪽).

21) 한편 나당연합군이 승리한 요인의 하나로서, 신라가 미리 전남 도서 중간기착지들의 배후지를 점령하고 방화하여 왜군의 진군속도를 지연시키는 작전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

이처럼 백강전투에서는 나당연합군의 수군이 왜의 수군을 대파하였고, 육상에서는 신라군이 백제부흥군을 격파하였다. 문무왕은 김유신 등 28명의 장군과 함께 당에서 파견되어 온 孫仁師의 증원병과 연합해 수륙양공작전을 펼쳐 백제부흥군의 본거지인 주류성을 비롯해 여러 성을 함락하였다.

용삭 3년(663)에 이르러 총관 孫仁師가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부성을 구원할 때, 신라의 병마도 역시 정벌에 참여하였다. 행군이 주류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 왜국의 수군이 와서 백제를 도우려 하였다. 왜선 1,000척이 白江에 머물러 있었고, 백제의 정예 기병들이 강가에서 배를 지키고 있었는데, 신라의 정예 기병들이 중국 군대의 선봉이 되어 먼저 강 언덕의 진지를 쳐부수니, 주류성은 대적할 용기를 잃고 곧바로 항복하였다.²²⁾

아울러 나당연합군이 주류성을 공격하는 수륙병공작전을 펼 때, 수군이 군사와 군량을 탑재한 병선을 운용하였다. 이것은 당시 수군의 주요 임무가 군수물자와 원군의 수송·보급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²³⁾

이어서 신라가 遲受信이 끝까지 항거하던 任存城마저 정복함으로써 백제 부흥운동은 종식되고 말았다. 백강전투는 백제와 왜, 신라와 당의 세력이 충돌한 국제전으로 동아시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백제에 구원군을 보낸 왜는 백강전투를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신라는 백강전투를 통해 신라 수군의 실력을 왜의 수군, 당의 수군과의 비교 검증해 볼 기회가 되었다. 게다가 당 수군과의 합동전투를 통해 당 수군이 가진 전술과 무기, 부대편성체계 등을 습득할 수 있었다.

반면에 백제부흥군은 백강전투의 패배와 주류성의 함락으로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 그 결과 백제 고지에서 부흥운동은 종지부를 찍기에 이르렀고 당시 백제유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신라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으려면 본토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²⁴⁾ 특히 일본 열

다서영교, 「백강구전투와 신라」, 『역사학보』 226, 2015, 56쪽.

22)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23) 강봉룡, 「나당전쟁과 해전,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635쪽.

24) 周留城의 扶餘豐, 任存城의 遲受信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삼국사기』 권28, 의자왕 20년 말미).

도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671년 11월경 백제유민들이 대규모 일본으로 이주하는 일²⁵⁾이 발생하였듯이, 많은 수의 백제 유민이 피눈물 속에 뒤틀린 고향을 되찾고 신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고국을 등지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²⁶⁾ 그런데 대규모 백제유민들의 일본으로 도망과 이주현상을 지켜본 문무왕에게는 평생 동안 이들의 침공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포괄적으로는 왜의 침입에 대한 의구심과 공포심으로 정신적 압박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 문무왕은 당과 연합해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우선 문무왕은 즉위하던 해(661) 당의 소정방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함에, 문무왕은 김유신을 비롯한 金仁問·眞珠 등 장군으로 하여금 신라군을 출병시켜 당군의 고구려 공격에 호응하게 하였다.²⁷⁾ 그리고 666년에는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漢林과 三光을 당에 보내 출군을 요청해, 667년 李世勣이 이끄는 당군과 연합해 평양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또다시 668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당군이 新城·扶餘城 등 여러 성을 차례로 공격해 쳐부수고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포위, 공격하자 문무왕도 이해 6월 金庾信·金仁問·金欽純 등이 이끄는 신라군을 파견해 당군과 함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9월 고구려 寶臧王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신라는 육로로의 공격이 중심이었으나, 아울러 해상과 해군도 최대한 이용하였다.

- ① 乾封 2년(667) 대총관 英國公이 遼東을 친다는 말을 듣고, 나는 漢城州에 가서 그곳에서 병사를 보내 국경에 모이도록 하였다. 신라 군대가 홀로 쳐들어갈

25) 『일본서기』 권7, 천지천황 10년조 참조.

26) 그 예로 664~669년 백제왕 善光를 포함한 백제인 3천여 명 이상이 왜로 이주하였으며, 왜에서는 백제 멸망후 이주한 백제인들에게 관위를 주기 위해 天智天皇 4년(665) 백제국의 고급 계급을 검토하였고(『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4년), 671년(천지천황 10) 백제인들에게 작위를 주었다(『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10년 정월). 한편 상당수 백제유민들, 특히 반신라적 인물들은 바다를 통해 遼東을 거쳐 당으로 이주하였다(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2007, 64쪽).

27) 대동강을 통해 고구려의 平壤城을 공격하던 소정방의 당군이 淵蓋蘇文의 거센 항전으로 고전하자, 662년 김유신을 비롯한 9명의 장군으로 하여금 당군에게 군량까지 보급하게 했으나 소정방은 물러가고 말았다.

수 없어서 우선 세 차례 첩보병을 보내고, 배를 잇달아 띄워서 중국 군대의 상황을 살피도록 하였다. 첩보병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중국 군대가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우리는 우선 고구려의 七重城을 쳐서 길을 열어 통하게 해놓고, 중국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²⁸⁾

- ② 건봉 3년(668) 대감 金寶嘉를 시켜 바닷길로 들어가 英公의 명령을 받아오도록 하였는데, 그가 신라 군사는 평양에 모이라는 분부를 받아 왔다.²⁹⁾

신라는 고구려 공격을 위해 군대를 국경지대인 漢山州에 주둔시키고 당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때에도 신라는 선박을 이용하여 서해 바다에 첩보병을 보내어 당군의 도착을 살피며 공격 시기를 맞추고 있었다. 심지어 신라는 大監 金寶嘉를 시켜 서해 바닷길로 들어가 李世勣으로부터 군사협력 명령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에도 당군과 공동작전을 펴면서, 수군을 최대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는 이미 백제 멸망시에 당 수군의 역할을 경험한 바 있기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공격할 때에도 당의 수군과 보조를 맞추었으며, 그것이 서해상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신라는 고구려 침공에도 해양과 당 수군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또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 나당전쟁과 해전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당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달리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당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치루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지에서 전투와 함께 해전이 갖는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이른바 나당전쟁은 670년 3월 신라의 薛烏儒가 고구려 유민 高延武와 함께 압록강 넘어 遼東으로 진출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676년까지 7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전투를 치렀다. 당은 670년 高侃·李謹行의 行軍을 편성하였고, 671년 薛仁貴의 熊津都督府 구원군을 파견하였으며, 674년 劉仁軌의 추가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당군은 675년 買肖城

28)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29)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戰鬪에서 패배함으로써 대세가 기울어졌고, 마침내 676년 伎伐浦 전투를 끝으로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나당전쟁에서는 초기 高侃·李謹行의 육군이 遼東을 거쳐 한반도로 투입되었으나, 671년 설인귀의 웅진도독부 구원군은 해로로 투입되어 상륙전을 감행하였으며, 674년 편성되는 劉仁軌의 신라원정군 다수도 海路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675년 買省城戰鬪에 앞서 이와 연계된 당 수군의 공격으로 泉城戰鬪가 있었으며, 676년 伎伐浦戰鬪 또한 당 수군의 상륙전을 수반한 전투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지금부터는 나당전쟁시 여러 해전에서 문무왕을 비롯한 신라인들이 경험한 해전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라가 당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과 배경에는 육전에서 승리와 함께 해전, 수륙합동전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야기된 바가 많다. 그 사례를 들면 문일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① 唐兵과 交戰한지 前後 7년 동안에 百濟 故地에서와 高句麗 舊疆에서 水陸 대결전이 여러번 연출되었다.³¹⁾
- ② 문무왕 十一年 辛酉에는 신라가 公然히 唐兵을 石城에서 격파하니 이로부터 무릇 六七年 동안에 百濟 故地에서와 高句麗 舊境에서 여러 번 水陸大戰이 연출된 바 그 결과는 흔히 신라측이 유리하게 되었고 최후에 가서는 大小 二十二戰에 모두 신라가 全勝하였는데 이후에는 唐兵이 다시 來犯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라통일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 셈이다. 이해가 곧 文武王 十六年 丙子이다.³²⁾

사실 나당전쟁시 전투는 육지에서도 있었지만 바다와 강에서도 중요한 대전이 벌어졌다. 당시 당군은 육지로 침공도 했지만, 보다 이동과 운송이 유리한 해로로 수군을 동원하여 공격하였다.³³⁾ 그리하여 신라는 당 수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하였다.

30) 이상훈, 「나당전쟁기 당의 병력운용과 전후수습책」, 『중국사연구』 55, 2008, p.72 주77.

31) 문일평, 「掌篇新羅史 - 신라의 통일과 및 그 성운」, 『조광』 1-1, 1935.11.

32) 문일평, 「丙子를 통해 본 朝鮮 - 新羅가 半島서 唐兵擊退(1)」, 『조선일보』 1936.1.3.

33)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이문화사, 2006, 221~238쪽.

總章 원년(668) … 또한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면서 길으로는 왜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은 신라를 치려는 것이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니, 백성들이 듣고서 놀라고 겁을 내면서 불안해 하였다.³⁴⁾

이처럼 당 수군과 선박의 움직임에 신라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더구나 669년에 백제부흥군이 ‘신라가 반역한다.’고 당에 거짓으로 알렸다. 이에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반역할 뜻이 없음을 해명하고, 곧 백제고지를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문무왕은 670년 品日·文忠 등이 이끄는 신라군으로 하여금 63개 성을 공격해 빼앗도록 했으며, 그 곳의 인민을 신라의 영토로 이주시키고, 天存 등은 7개 성을, 軍官 등은 12개 성을 함락시켰다. 신라군은 이 과정에서 백제고지에 주둔한 당군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러자 당은 엄청난 수의 선박과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신라가 백제부흥군을 진압하면서 백제고지를 영토화해 나감에, 당은 대군을 파견하여 신라를 치고자 하였다.

咸亨 원년(670) … 당에서는 한 명의 사신을 보내어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서 곧바로 우리의 터전을 뒤엎고자 수만의 군사를 보냈으니, 병선은 푸른 바다를 덮어 배의 머리와 꼬리가 강어귀에 줄을 이었다.³⁵⁾

당은 한반도를 차지하고자 서해 바다를 덮을 듯한 병선을 보내어 錦江 하구에 이르렀던 것이다. 백제고지를 차지하고자 파병된 당군은 바다를 건너와 한반도에 상륙해야 했기에, 신라로서는 해전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당 수군의 침입을 방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신라는 백제 사비성의 함락과 백제부흥군 진압시에 당의 수군이 상륙함으로써 백제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에 신라는 나당전쟁을 치루면서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는데 주력하였다. 당의 수군이 상륙하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당의 육군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또 이들이 합세하는 세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작전을 폈다. 신라는 나당전쟁과정에서 서해상으로 침공하는 당군에 맞서 치른 여러 차례 전투에서 당시 신라의 수군은

34)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35)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매우 힘들고 버거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것에 대한 해결책, 즉 문무왕과 신라인들이 가졌던 당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물리치려는 의식은 마침내 초월적 존재인 佛力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때 당나라의 遊兵과 여러 將兵들이 鎮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신라를 치려했으므로 왕이 이를 알고 군사를 내어 쳤다. 이듬해 唐 高宗이 仁間 등을 불러들여 꾸짖기를, "너희가 우리 군사를 청해다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우리를 침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하고 이내 圓扉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훈련하여 薛邦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치려고 했다. 이때 義相法師가 留學하러 당나라에 갔다가 인문을 찾아보자 인문은 그 사실을 말했다. 이에 의상이 돌아와서 왕께 아뢰니 왕은 몹시 두려워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이것을 막아 낼 방법을 물었다. 角干 金天尊이 말했다. "요새 明朗法師가 龍宮에 들어가서 秘法을 배워 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명랑이 말했다. "狼山 남쪽에 神遊林이 있으니 거기에 四天王寺를 세우고 道場을 開設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 보고한다. "당 군사가 무수히 우리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돌고 있습니다." 왕은 명랑을 불러 물었다. "일이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어찌 하면 좋겠는가." 명랑이 말한다. "여러 가지 빛의 비단으로 절을 假設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채색 비단으로 임시로 절을 만들고 폴로 五方의 神像을 만들었다. 그리고 瑜伽의 明僧 12명으로 하여금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文豆婁의 秘法을 쓰게 했다. 그때 당 군사와 신라 군사는 아직 交戰하기 전인데 바람과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서 당나라 군사는 모두 물속에 침몰되었다. 그 후에 절을 고쳐 짓고 四天王寺라 하여 지금까지 壇席이 없어지지 않았다. 國史에는 이 절을 고쳐 지은 것이 調露 元年 己卯(679)의 일이라고 했다. 그 후 辛未(671)에 당나라는 다시 趙憲을 장수로 하여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으므로 또 그전의 비법을 썼더니 배는 전과 같이 침몰되었다.³⁶⁾

의상의 귀국시기는 대체로 670년(문무왕 10)으로 보고 있다.³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당시 貞州 사람이 달려와 "당 군사가 수없이 우리나라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돌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貞州는 오늘날 임진강 어구의 황해도 풍덕지역에 해당한다. 이곳에 당군이 왔다는 것은 당군이 신라를 침공하고자 서해를 건너와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위협을 느낀 신라 문무왕은 명랑법사에게 佛力, 즉 文豆婁秘法을 쓰게 하

36)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虎王法敏.

37) 이호영, 「대당전쟁, 『신편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여 당군을 서해 바다에 沈沒시켰다고 한다. 이렇듯이 문무왕의 국가수호는 불교신앙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태풍의 도움으로 신라의 해군이 승리한 것을 불교 색채를 가미하여 설화화한 것이다.

671년(문무왕 11) 정월 신라는 군사를 출전시켜 백제를 공격하여, 웅진 남쪽에서 전투를 하였다. 또 신라는 당군이 백제를 구원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大阿飡 眞功 등을 보내 금강 하류의 서해안에 위치한 甕浦를 지키게 하였다.³⁸⁾ 그러나 당군은 웅포를 지키던 신라의 수군을 물리치고 기벌포를 통해 백제 내지로 진입하였다.³⁹⁾ 671년 6월 竹旨 등이 石城戰鬪에서 당군 5,300명을 죽이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에 7월 26일 설인귀는 글을 보내 “본인 설인귀의 병선은 돛을 펴고 깃발을 달아 북쪽 해안을 순시하면서도, 예전에 받은 신라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차마 병사를 풀지 않았는데, 왕은 도리어 외부의 원조를 믿고 나와 대적하려 하니, 이것은 어찌된 잘못인가”라고 항의하였다. 다시 말해 당의 설인귀가 이끄는 수군은 북쪽 서해 바다를 순시하면서 신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비록 당이 신라에게는 신라를 위한다는 핑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신라를 침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라인들은 이러한 당의 행위에 위협을 느끼었으며, 당에 강하게 대적한 것이다. 薛仁貴의 항의에 대해 문무왕은 신라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보냈다.⁴⁰⁾

이처럼 문무왕은 당의 설인귀가 이끄는 수군의 침입에 위협을 느끼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당의 수군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671년 9월에는 당 장군 高侃 등이 변병 4만을 거느리고 평양에 도착하여,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고 대방을 침범하자, 신라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6일 당의 선박을 공격하였다.

38) 1월 신라가 당 구원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웅포에 수비케 한 것은 군량을 실은 함대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6월 가림성의 벼를 짓밟은 것은 백제에 주둔하고 있는 당군에 대한 군량 등 군수물자의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강봉룡, 앞의 논문, 637쪽).

39)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52쪽.

40)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에 대해서는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002 ;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참조.

문무왕 11년(671) 겨울 10월 6일, 당 나라 수송선 70여 척을 공격하여, 郎將 鉗耳大侯와 군사 100여 명을 사로잡았다.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이루 셀 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級飡 當千의 공로가 첫째이므로 沙飡의 관등을 주었다.⁴¹⁾

당천을 비롯한 신라 수군은 당의 漕船 70여 척을 공격하여 많은 당 수군을 수장시키고 낭장 겸이대후를 비롯한 100여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다. 즉 신라군이 당의 설인귀가 웅진을 공격하고자 수군을 금강 입구에 정박시키려는 것을 대파한 것이다. 신라가 당이 해로를 통하여 수십 척의 운송선을 보내 무기와 군량을 보급하려는 것을 저지한 사건으로, 나당전쟁에서 중요한 전과를 거둔 해전의 하나이다. 그리고 672년(문무왕 12) 7월 당의 高侃이 군사 1만, 李謹行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동시에 평양에 와서 8개의 군영을 짓고 주둔함에, 8월 신라는 韓始城과 馬邑城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또 당은 군대를 진군시켜 白水城에서 500여 步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설치하였다. 신라는 고구려군과 연합하여 그들과 격전을 벌여 수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 고간 등이 퇴각하자, 이를 추격하여 石門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漢山州에 晝長城을 쌓고, 어쩔 수 없이 672년 9월에 문무왕은 전년에 사로잡아 두었던 당의 兵船 郎將 鉗耳大侯, 萊州司馬 王藝, 本州州長史 王益 등과 병사 170명을 돌려보냈다.⁴²⁾

문무왕은 다른 한편으로는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서해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았다.

문무왕 13년(673) 9월 ... 임금이 대아찬 徹川 등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다. 당의 병사가 말갈과 거란의 병사와 함께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9차례 싸워 우리 병사가 승리하였다. 2,000여 명의 목을 베었고, 당의 병사 중 瓠瀟와 王逢 두 강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⁴³⁾

문무왕은 673년 철천에게 한반도 서해안을 지키게 하여 당 수군의 침략에 대비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신라는 육지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 당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승리의 이유는 신라가 육군을 보강하

41)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10월.

42)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2년 9월.

43)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3년 9월.

는 한편 서해를 철저히 방비하여 당 수송선의 상륙을 저지하면서 군량과 무기의 보급을 차단한 상황에서 당의 육군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⁴⁴⁾ 것이라 보겠다.⁴⁵⁾

675년 나당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675년 2월 劉仁軌는 당의 船軍으로 七重城을 공격하였다. 칠중성전투는 당의 船軍을 이용하여 신라의 교두보를 공격한 것이다. 또 말갈병을 보내 바다로 가서 南境을 공략하도록 하였다.⁴⁶⁾ 특히 675년 9월에는 泉城에 주둔한 신라군은 설인귀 함대의 포위를 받았으나 도리어 반격하여 승리하였다.

9월 설인귀가 … 風訓을 길잡이로 삼아 천성을 쳐들어 왔다. 우리 장군 文訓이 맞아 싸워 이겨서 1,400명을 목 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뚫고 도망감에 전마 1,000필을 얻었다.⁴⁷⁾

설인귀는 당시 당에 숙위하고 있던 신라인 風訓을 안내자로 삼아 泉城에 쳐들어와 상륙하고자 함에 신라 장군 文訓이 1,400명을 죽이고 병선 40척, 전마 1,000필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천성에 대해서는 白水城·泉山과 함께 동일지역인가와 또 천성의 위치 비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천성전투는 海戰으로 이해된다.⁴⁸⁾ 사실 천성전투에서 대패한 당의 설인귀 군대는 보급선단과 그것을 호위하는 전함으로 이루어졌기에⁴⁹⁾ 수군부대로 보겠으며, 이 전투는 신라 수군이 승리한 해전이었다. 이어 신라군은 9월 29일 李謹行이 당의 20만명 대군을 이끌고 주둔하고 있던 買肖城을 공격하여 크게 격파해 이들을 물리쳤으며, 말 30,380필을 얻고 그

44) 고경석, 앞의 논문, 2013, 110쪽; 강봉룡, 앞의 논문, 638~639쪽.

45) 나당전쟁기 당군은 군사작전은 물론 군량 등 군수물자의 보급까지도 스스로 해결했다. 신라는 이러한 당군의 약점을 노렸다. 적극적으로 해전을 수행하여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시키고 지원군과 군수물자의 수송, 보급을 차단함으로써, 이미 주둔해 있던 당 육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폈다(강봉룡, 앞의 논문, 635쪽).

46) 이것은 劉仁軌가 이끈 군대가 船兵을 동원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윤경진, 「매소성 전투와 나당전쟁의 종결」, 『사립』 60, 2017, 168쪽).

47)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 9월.

48) 민덕식, 「나당전쟁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 40, 1989, 429쪽.

49) 서영교, 앞의 책, 2006, 234쪽.

밖의 많은 수의 병기를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 지점에 있었던 천성해전과 임진강 중상류의 貫肖城戰鬪의 승리는 북쪽 육로를 통한 당군의 침략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당 수군과 군수물자의 상륙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과의 합세를 차단함으로써 거둔 신라의 승리였다. 결과적으로 매소성전투는 나당전쟁에서 실질적 승패를 가른⁵⁰⁾ 결정적인 水陸戰鬪라 하겠다.

한편, 泉城海戰에서 참패한 설인귀는 水軍으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해로로 계속 남하하여, 드디어 676년 伎伐浦를 공격해 왔다.⁵¹⁾

11월 沙飡 施得이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귀와 所夫里州 伎伐浦에서 싸웠으나 크게 패하였다. 다시 진군하여 크고 작은 22차례 싸움에서 승리하고 4,000여 명을 목 베었다.⁵²⁾

비록 신라군은 처음에는 설인귀에게 패했지만, 결국은 沙飡 施得이 지휘하는 신라 수군은 당군을 대파하였다.

기벌포에서 금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 도성과 직접 연결되며, 금강은 병력의 수송과 군수물자의 보급로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백제 도성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 하구의 기벌포를 장악해야만 했다.⁵³⁾ 보다 앞서 660년 7월 당과 신라연합군이 백제의 도성 泗沘城을 공격하여 함락할 때에도 기벌포는 요충지로서 중요시된 바 있다. 백제 成忠이 의자왕에게 올린 상소에서 “만약 다른 나라의 군사가 오면 육로로는 험한 沈峴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伎伐浦의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⁵⁴⁾ 기록이 있다.

50) 서영교, 앞의 책, 228쪽;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205쪽;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51) 비록 『삼국사기』에는 기벌포전투가 676년 11월에 기록되어 있으나, 671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다(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2, 吉川弘文館, 1951, 464~484쪽).

52)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6년 11월.

53)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56쪽 주55. 이런 이유로 660년 소정방이 상륙한 지점과 663년 백강전투시 상륙을 나당연합군이 상륙을 시도한 곳도 기벌포 지역이었다고 보겠다. 한편 기벌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상훈, 앞의 책, 228~242쪽 참조.

54)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16년 3월.

당의 수군이 기벌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하여 이곳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興首도 “白江(혹 伎伐浦라고 한다)과 炭岨(혹 沈岨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요충지이다. … 당군이 백강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이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라”고⁵⁵⁾ 하였다.

신라 문무왕은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군이 기벌포에 들어오면서 사비성이 함락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로서는 기벌포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당군의 기벌포로 공격과 상륙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다하여 싸웠다. 그 결과 22번 싸워 이기고 4,000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거두었다.

기벌포해전에서 신라군은 당군과의 전투에서 樓船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접전도 물론 발생하였지만 소규모 병선을 이용한 게릴라식 전투도 적잖이 발생하였다.⁵⁶⁾ 그런데 기벌포해전에서 신라군이 사살한 당군의 수가 4,0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벌포 일대로 집결하던 당 잔류군과 옛 백제군을 비롯한 반신라적 백제유민도 상당수가 포함되었을 것이다.⁵⁷⁾

기벌포해전에서 대패하자 백제고지에 주둔해 있던 당군은 모두 철수하였다.⁵⁸⁾ 다시 말해 신라가 기벌포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서해에서 제해권을 상실하였고,⁵⁹⁾ 한반도에서 당의 군사적 위치는 추락하였다.⁶⁰⁾ 그 결과 신라는 당으로 하여금 재침략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였다. 이처럼 기벌포해전은 나당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지닌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의 승리는 당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점령 통치하려는 생각을 포기케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쳐,⁶¹⁾ 마침내 영토화하려는 야욕을 확실하게 꺾었다. 이로써 신라는 서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당은 어쩔 수 없이 676년 安東都護府를 평양으로부터 遼東城으로 옮겼다. 이로써 신라는 통일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의 통일전쟁은 육지에서 승리도 중요했지만, 백제부흥군 및 당군과의 바다에서 직접간접 전투의 승리, 또 해로를 이용해

55)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20년 5월.

56)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65쪽.

57)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26쪽.

58) 서인환,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150~152쪽.

59) 신형식, 「삼국통일전후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문화』 2, 1985, 10~11쪽.

60) 노태돈, 「나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14쪽.

61) 이종학, 「신라삼국통일의 군사적 고찰」, 『군사』 8, 1982, 196쪽.

당군의 육지에서 전투를 위한 군수물자의 수송을 차단한 해양군사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통일전쟁 과정에서 문무왕은 자신이 직접 해양을 통한 활동과 경험을 하였고, 또 해양에서 전투를 신라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지휘하고 지켜보았다.⁶²⁾ 그리하여 문무왕은 이미 생전에 바다(해양)에 대해 관심이 매우 컸고,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였다.

Ⅲ. 문무왕의 해양인식 실천 - 船府 설치와 護國龍

1. 船府 설치

신라는 중고기에 이르러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하면서 적극적인 해양활동을 전개하였다. 467년(자비왕 10) 담당 관부에 명하여 戰艦을 수리하도록 하였고,⁶³⁾ 505년(지증왕 6)에는 선박 이용의 제도를 정하였다. 더구나 512년(지증왕 13) 何瑟羅軍主 異斯夫가 동해상의 于山國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532년(법흥왕 19) 해상왕국 金官加耶를 병합하고, 또 562년(진흥왕 23) 大加耶를 멸망시킴으로써 이들의 선박 건조와 항해 기술이 신라로 유입되어 급격한 해양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졌다.⁶⁴⁾ 아울러 553년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하고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서해로의 해양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해 바다를 이용해 동북방면으로 더욱 북상해 556년(진흥왕 17) 比烈忽州를 설치하고 沙飡 成宗을 군주로 임명하였으며, 곧이어 함흥지역까지 진출하여, 568년에는 黃草嶺과 磨雲嶺에 眞興王巡狩碑를 건립하였다.

특히 553년 신라는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주로 黨項城을 서해 진출의 거점 기지로 삼아 적극적으로 중국의 南朝와 北朝와 교류하였다. 신

62) 660년 백제토벌전에 태자로서 직접 참전한 이래 문무왕은 재위 동안 있었던 주요 전쟁에 참가하여 최고군통수권자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포상과 처벌을 시행하였다(이문기, 「신라 문무왕대의 군사정책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 32, 2004, 189쪽).

63) 『삼국사기』 권3, 자비마립간 10년.

64) 김창겸,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 101, 2011, 68쪽.

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대중국사신을 파견하지 못하고, 백제의 사신을 따라, 또는 고구려의 사신을 따라서 통교를 하다가, 드디어 한강유역을 비롯한 경기만 일대를 장악한 뒤에는 남쪽 백제와 북쪽 고구려의 방해를 피해가면서 나름대로 대중국항로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중국외교를 통한 외교활동이 한층 확대되자 수군과 선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583년(진평왕 5) 兵部 내에 선박과 해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船府署를 설치하고,⁶⁵⁾ 여기에 大監과 弟監 각각 1인을 소속시켰다. 그러나 이때 선부서는 아직까지는 독립된 관부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에서 병부의 지휘를 받는 관부였다.

이 무렵 중국 대륙에서 수·당의 교체와 더불어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마침내 6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삼국 간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신라에 대한 백제의 공세가 매우 격심해져 642년에는 신라의 서변 40여 성을 함락되었다. 특히 백제와의 전략상 요충지인 大耶城이 함락되었는데, 이때 金春秋의 사위인 金品釋과 딸 古陀炤娘이 죽임을 당하였다. 더구나 643년 11월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작전으로 신라의 黨項城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라에게 당항성은 당과 통교하는 중요한 해양거점이고 기지였다. 그러므로 신라는 이곳을 상실하면 당과의 교통로가 막히게 되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에 부딪히게 되자,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고구려와 백제군을 물러가게 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 연합에 의한 신라 당항성 공격은 아마도 해상항로를 봉쇄하려는 전술로 이어진 듯하다.⁶⁶⁾

이것은 648년 김춘추가 당에서 귀국할 때 고구려 수군이 항로를 차단하고 김춘추 사행단을 공격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신라가 당과 맺은 나당동맹을 방해하려는 군사적 행동이었다. 결국 이제는 삼국간의 전투무대가 육지에서 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645년 당이 고구려의 遼東을 공격한 이후에는 국제관계가 고구려—백제—왜, 당—신라의 양진영으로 형성되고, 그 결과 서해 바다를 무대로 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65) 『삼국사기』 권4, 진평왕 5년.

66) 임기환, 「7세기 발해·황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세계의 갈등」,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528쪽.

의 많은 국가와 세력들이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660년부터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는 과정과, 또 이후 신라가 한반도 전체를 영역화하려는 당 세력에 맞서 이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많은 해전을 치루면서 문무왕은 제해권 장악의 필요성은 물론 해양과 선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663년(문무왕 3)에 船府卿 2인을 두었다.⁶⁷⁾ 아마 선부경 2인은 국가 소유는 물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해양업무를 맡았을 것이다.

더구나 신라는 나당전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큰 해전을 치루면서 軍船과 모든 선박이 동원되었을 것이며, 특히 663년 백강 입구와 676년 기벌포에서 치룬 치열한 해전에서 신라의 선박들이 크게 망가졌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했고,⁶⁸⁾ 또 새로운 선박의 건조와 더불어 선박과 해양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신라 정부는 선박과 해양을 관리하는 중앙 관부를 설치하였다.

- ① 문무왕 18년(678) 봄 정월, 船府令 1인을 두어 선박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左右理方府에 卿을 각 1인씩을 더 두었다.⁶⁹⁾
- ② 선부 : 예전에는 兵部の 大監과 弟監으로 하여금 선박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문무왕 18년에 선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경덕왕 때 그 명칭을 利濟府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이전 명칭으로 회복시켰다. 여기에는 令 1명을 두었는데, 관등은 大阿飡으로부터 角干까지이다. 卿 2명을 문무왕 3년에 두었는데, 신문왕 8년에 1명을 증원하였다. 관등은 조부의 卿과 동일하다. 大舍는 2명인데 경덕왕 때 그 명칭을 主簿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대사라고 하였다. 관등은 조부의 대사와 동일하다. 사지는 1명인데 경덕왕 때 사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사지라 하였다. 관등은 조부의 사지와 동일하다. 사는 8명인데 신문왕 원년에 2명을 증원하였고 애장왕 6년에 2명을 감하였다.⁷⁰⁾

문무왕은 통일전쟁이 종료된 직후인 678년 정월에 船府令을 둠으로써, 선부라는 독립된 관부를 설치하였다. 이에서 보건대, 병부 설치 이전에는 군사

67) 『삼국사기』 권6, 문무왕 3년.

68) 이에 대해서 2017년 7월 7일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장에서 서영교(중원대학교 교수)의 교시가 있었다.

69) 『삼국사기』 권7, 신문왕 18년.

70)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적 업무와 함께 선박에 대한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담당(1단계)하다가 516년(법흥왕 3년)경 병부가 설치되어 병부에서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2단계). 그리고 583년 별도로 선부서가 설치되어 대감과 제감이 선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3단계), 통일전쟁이 종료된 직후에 678년(문무왕 18) 문무왕이 선부령을 설치하고 선부로 승격시켜 독립 부서로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4단계).⁷¹⁾

그러면 문무왕이 통일전쟁이 종료된 직후에 선부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아무래도 통일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한반도를 무대로 한 신라와 백제·고구려 간의 통일전쟁에 바다 건너 당과 왜가 참전하여 동북아 국제전으로 확대되고, 특히 이들 간의 전투는 육전보다는 해전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 더욱이 백강전투와 기벌포전투를 치루면서 신라는 물론 왜와 당에게도 바다에서의 주도권 경쟁, 이른바 제해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그리하여 문무왕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이동 수단인 선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져 선박과 해양을 전담할 선부를 설치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선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연구자들은 선부를 신라 수군과 연계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선부가 신라의 수군을 관장하는 부서였는가 하는 문제이다.⁷²⁾ 舟楫을 관장하였다고 하니 선박과 해양 관련 업무를 전담한 것은 물론이고, 아마 이와 관련된 일부 수군도 운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전체 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兵部이지만, 선부에도 선박의 운용과 관련한 수군과 기술병이 배속되었고, 이들을 관장하였을 것이다.⁷³⁾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661년 즉위한 문무왕은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전을 치루면서 해양은 물론 선박과 수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백강전투가 치열했던 663년(문무왕 3) 선부서에

71) 강봉룡, 「문무대왕의 선부(船府) 설치와 신라선」,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2』, 2017, 58쪽.

72) 井上秀雄이 진평왕대에 선부서를 설치한 것이 신라의 군제에서 별도 水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이후(『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는 실정이다.

73) 그러므로 수군을 독립시켜 선부에 속하게 하였다거나, 선부가 수군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경석, 앞의 논문, 2013, 114~115쪽).

卿 2인을 두어 선박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678년(문무왕 18) 선부서를 병부로부터 완전히 독립 승격시켜 船府라 하고, 장관 船府丞을 두었던 것이다.

결국 선부는 통일전쟁 중 여러 차례의 크고작은 해전을 치루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들이 파손되었거나 또는 건조한지 오래되어 노후된 선박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한편으로는 향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쟁과정에서 습득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해 훌륭한 성능을 갖춘 새로운 선박을 제조하였을 것이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군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로써 종전 군사적 업무에 한정되었던 선부서의 업무가 민간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해양업무를 맡게 되었다.⁷⁴⁾

2. 대암왕 설화와 해양의식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수한 위대한 영주라는 평가와 함께 호국의 상징으로 숭배되었다. 文一平은 문무왕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新羅의 疆域은 辰韓地에 始起하니, 今 慶州가 卽 肇基 한지라. … 文武王 麗濟를 併有함이 三面은 際海하고 西北은 涇江以南의 地를 有 한지라.⁷⁵⁾

이처럼 문무왕이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함으로써 신라가 드디어 삼면의 바다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은 문무왕의 위업이라 하였다.

高裕燮은 문무왕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다음과 같이 찬미하였다.

경주에 가거든 文武王의 偉蹟을 찾으라. 구경거리의 경주로 쏘다니지 말고 문무왕의 精神을 기려 보아라. 太宗武烈王의 偉業과 金庾信의 勳功이 크지 아님이 아니나 이것은 文獻에서도 우리가 기릴 수 있지만 문무왕의 위대한 정신이야말로 경주의 유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니 경주에 가거들랑 모름지기 이 문무왕의 유적을 찾으라. 乾川의 富山城도 南山의 新城도 安康의 北兄山城도 모두 문무왕의 國防의 經營이요, 鳳凰臺의 高臺도 臨海殿의 雁鴨池도 四天王의 護國刹도 모두 문무왕의 政經的

74) 권덕영, 「삼국시대 신라의 해양진출과 국가발전」, 『Strategy21』 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207쪽.

75) 「지리」1, 『대한자강회월보』 3, 1906년 9월 25일 간행.

治績 아님이 아니나,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東海의 大王岩을 찾으라.⁷⁶⁾

흥미로운 것은 문무왕의 대표적인 정신으로 護國思想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특히 해양과 불교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 문무왕은 해양을 매개로 한 호국정신과 불교숭배의식이 매우 각별하였다. 이러한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스스로 유언하기를 화장하여 동해 바다에 散骨하면 자신이 신라를 지키는 동해의 龍이 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 ① 가을 7월 1일 왕이 별세하였다. 시호를 文武라 하고 여러 신하들이 유언에 따라 동해 어구 큰 바위에 장사지냈다. 俗說에 전하기를 왕이 용으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바위를 大王石이라고 불렀다.⁷⁷⁾
- ② 大王이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만인 永隆 2년 辛巳(681)에 죽으니 遺命에 의해서 東海 가운데 큰바위 위에 장사지냈다. 왕은 평시에 항상 智義法師에게 “나는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大龍이 되어 불법을 崇尚하고 나라를 수호하려 한다.”고 말했다.⁷⁸⁾

문무왕의 유언은 실제 시행되어 화장한 뒤 東海中 바위에 장사지내니, 그것을 大王岩(石)이라고 하였으며, 또 신라인들은 물론 후대인들도 그가 龍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고 숭배하였다. 문무왕을 비롯한 신라인들의 이와 같은 해양을 통한 국가방위와 호국의식은 통일과정에서 백제부흥군과의 전쟁, 그리고 당과의 해전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이미 앞에서 약간 언급하였듯이, 백제 멸망과 백강 전투에서 패전 후 일본열도로 망명간 백제유민을 포함한 왜세력이 동해와 남해 바다로 침략할 것에 대비하면서, 아울러 당의 서해 바다로 침공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상 문무왕의 해양의식은 아주 특별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생전에 삼국통일을 이루면서 직접 해양활동과 해양을 무대로 한 전투를 치른 경험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문무왕의 이러한 인식은 해양과 선박을 전담하는 선부를 설치하고 선부령을

76) 高裕燮, 「慶州紀行의 一節(中)」, 『高麗時報』 1940년 8월 1일.

77) 『삼국사기』 권7, 문무왕본기 말.

78)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虎王法敏.

임명하여 제도적으로 완비하였다. 하지만 이것에 안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후까지 걱정하고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비장하고도 특별했다. 다시 말해 문무왕의 해양의식은 사후에 바다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발전하였다.

신라 사람의 문무왕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신문왕대에 이르러 感恩寺의 창건, 利見臺와 萬波息笛 설화를 낳았다.

제31대 神文大王의 이름은 政明이고 성은 金氏이다. 開耀 元年 辛巳(681) 7월 7일 즉위했다. 아버지 文武大王을 위하여 東海 가에 感恩寺를 세웠다. 절에 있는 기록에는 이렇게 말했다. 文武王이 倭兵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 創建했는데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龍이 되었다. 그 아들 神文王이 王位에 올라 開耀 2년(682)에 공사를 끝냈다. 金堂 뜰아래에 동쪽을 향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으니 龍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遺言으로 遺骨을 간직해 둔 곳은 大王 암이고, 절 이름은 感恩寺이다. 뒤에 龍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利見臺라고 했다. 이듬해 壬午 5월 초하루(다른 책에는 天授 元年이라 했으나 잘못)에 海官 波珍浪 朴夙淸이 아뢰었다. “동해 속에 있는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합니다.” 왕이 이상히 여겨 日官 金春質(혹 春日)을 명하여 짐을 치게 했다. “대왕의 아버님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三韓을 鎮護하고 계십니다. 또 金庾信公도 33天의 한 아들이로서 지금 인간세계에 내려와 大臣이 되었습니다. 이 두 聖人이 德을 함께 하여 이 성을 지킬 보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만일 폐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으실 것입니다.” … 왕이 대궐로 돌아오자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月城天尊庫에 간직해 두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敵兵이 물러가고 病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 지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는다. 이 피리를 萬波息笛이라 부르고 國寶로 삼았다.⁷⁹⁾

이처럼 신라사회에서는 문무왕이 동해의 용이 되었고, 또 金庾信이 불교에서 33天의 한 아들이로서 다시 天神이 되어, 이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 하여 三韓을 鎮護한다고 믿었으며, 더구나 이들이 내린 만파식적으로 신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대인들은 문무왕이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동해의 大龍, 즉 護國龍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사실로서 「신라문무왕릉비」에 “火葬을 하라 하니, 그달 초열흘에 화장하여 … 부처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장작을 쌓아 장사를 지내니 … 鯨津(동

79) 『삼국유사』 권2, 기이2 萬波息笛.

해)에 뼈 가루를 날리셨네.”라는 기록이 있듯이, 그의 장례는 실제 화장을 하였으며, 동해 바다에 散骨하였다. 이러한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당시 신라사회의 정신적 지주인 불교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라 삼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은 護國佛教이다.⁸⁰⁾ 더욱이 문무왕은 나당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서해상에서 明朗法師의 文豆婁秘法으로 唐軍을 물리쳤다.⁸¹⁾ 그리고 그는 백제 승려 璟興을 높이 받들었듯이⁸²⁾ 백제와 고구려의 불교사상을 신라에 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무왕의 佛力을 통한 국가수호의식은 결국 자신이 생전에 東海口에 感恩寺를 세움으로써 欲鎮倭兵하고자 하였으며, 또 죽어서 직접 大龍이 되어 불교를 숭상하여 왜의 침입을 격퇴하겠다는 유언으로 종결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비록 倭라고 표현하였으나, 여기에는 백제멸망 후 왜와 연계하여 신라를 공격할 것으로 여겨진 백제유민 세력에 대한 공포심과 강박감이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⁸³⁾

그리고 이 유언의 내용을 아들 신문왕이 문무왕을 화장하고 대왕암에 안골하였고, 감은사를 창건하는 것으로써 문무왕의 염원을 효행으로 실천하였던 것이다. 또 護國龍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문왕에게 만파식적을 주었다는 설화로 상징화되었다.⁸⁴⁾ 결국 문무왕의 불교와 해양을 매개로 하는 호국정신은 7세기 삼국의 항쟁과 통일전쟁을 주도하고 완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지난한 삶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80) 이기영, 「삼국통일에 기여한 신라불교의 정신」, 『국토통일』 1973년 11월호, 38~39쪽.

81)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虎王法敏; 권5, 신축6 明朗神印.

82) 『삼국유사』 권5, 감통7 憬興遇聖; 김수태, 「백제 의자왕대의 불교」, 『백제문화』 41, 공주대학교, 2009; 박찬홍, 「『三國遺事』 感通篇 ‘憬興遇聖’조를 통해 본 憬興의 생애」,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2, 경주시, 2011.

83) 최근 이재석도 문무왕의 유언으로 조영된 대왕암과 감은사의 전승 속에서 신라측에게 남겨진 백촌강전투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이재석, 「백촌강 전투의 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57, 2015, 168쪽). 반면 서영교는 이것을 문무왕이 당과 일본이 신라를 치기 위해 동맹군을 형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괴로워 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서영교, 앞의 책, 아세아문화사, 335쪽).

84) 이와 더불어 문무왕의 鎮倭兵은 신문왕대에는 鎮護三韓意識으로 확대된 듯하다.

IV. 맺음말

필자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한 뒤에 선부를 설치하고, 특히 그의 호국정신이 삼국통일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해전을 통해 형성된 해양인식과 깊은 연계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문무왕은 통일과정에서 백제 멸망과 백제부흥군 진압시 서해안 금강 하구에서 치른 해전과 나당전쟁시 당 세력을 몰아내고자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여 당시 한반도 내지에 주둔하고 있던 당의 육군에게 군수물자 공급과 이들의 합세를 차단한 서해안에서의 여러 차례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삼국통일이 가능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무왕의 해전의 중요성과 해양에 대한 인식이 삼국통일후 선박의 수리와 건조 그리고 해양을 관리하는 船府를 설치하였고, 마침내 자신이 東海龍이 되는 유언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사실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통일전쟁을 치루면서 확고해졌다. 아울러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해양과 불교승배의식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 역시 문무왕의 해양경험과 해양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무왕의 해양에 대한 이상과 정신은 그가 일생을 마감하면서 유언하기를 자신을 화장하여 동해에 散骨하면 신라를 지키는 동해의 大龍이 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은 동해를 통한 왜와 백제유민 세력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노심초사한 강박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세력의 침공마저도 물리친 문무왕은 아주 강한 신라의 自主性和 天下觀을 강하게 드러냈다. 문무왕은 스스로 신라는 제후국이 아니라 三韓一統을 이룬 天子國이라는 의식을 표현하였다. 아버지 무열왕에게 太宗이라는 묘호를, 어머니 訓帝夫人에게 文明皇后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자신이 황제임을 자부하고, 또 報德國과 耽羅國 등을 제후국으로 편재하여 중앙 황제국의 위상을 가졌다.⁸⁵⁾

85) 김창검, 「신라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220~221쪽. 또 先代廟에 제후국의 5대조가 아니라 천자국 7대조를 모셨다는 견해도 있다(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2016, 302쪽).

참 고 문 헌

- 강봉룡, 「나당전쟁과 해전,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 _____, 「문무대왕의 선부(船府) 설치와 신라선」,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 회자료집2』, 2017.
- 고경석, 「통일 직후 해양체제의 구축과 해양이념의 고양」, 『한국해양사』 II, 한국해양 재단, 2013.
- 국립박물관, 『감은사지발굴조사보고서』, 1960.
- 권덕영, 「삼국시대 신라의 해양진출과 국가발전」, 『Strategy21』 4, 한국해양전략연구 소, 1999.
-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1981.
- 김영관, 「백강구의 위치와 백강전투」, 『군사』 65, 2007.
- _____,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5.
- 김영심, 「신라-당의 황해횡단항로의 연계와 백제·고구려의 멸망」,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 김창겸, 「신라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 _____,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 101, 2011.
-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 노태돈, 「나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 _____,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두창구, 「만파식적고」, 『강원민속학』 7·8, 1990.
-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2016.
-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002.
- 변인석, 『백제의 최후, 백강구전쟁』, 무공문화, 2015.
-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 _____, 「백강구전투와 신라」, 『역사학보』 226, 2015.
-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 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004.

-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 신형식, 「삼국통일전후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문화』 2, 1985.
- 심정보, 「백강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2, 1989.
- 윤경진, 「매소성 전투와 나당전쟁의 종결」, 『사림』 60, 2017.
- 이기영, 「삼국통일에 기여한 신라불교의 정신」, 『국토통일』, 1973년 11월.
- 이명식, 「신라 문무대왕의 민족통일 위업」, 『대구사학』 25, 1984.
- 이문기, 「신라문무왕대의 군사정책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 32, 2004.
- 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2007.
- 이상훈, 「나당전쟁기 당의 병력운용과 전후수습책」, 『중국사연구』 55, 2008.
-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 이재석, 「백촌강 전투의 사적 의의」, 『한국민족문화』 57, 2015.
- 이종학, 「신라삼국통일의 군사적 고찰」, 『군사』 8, 1982.
- _____, 「문무대왕과 신라해상세력과 발전」, 『경주사학』 11, 1992.
- 이호영, 「대당전쟁」, 『신편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임기환, 「7세기 발해·황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세계의 격돌」,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 장충식, 「문무대왕의 위적」, 『신라문무대왕』, 경주군, 1994.
- 정영호, 「석굴 창건과 동해구 신라유적과의 관계」, 『정신문화연구』 48, 1992.
- 황수영, 『신라의 동해구』, 열화당, 1994.
- 木村誠, 「文武大王代の 對倭關係」, 제18회 신라문화학술회의 발표문, 1999.8.30.
- 新川登龜男, 「入唐求法諸相」, 『日本古代の對外交渉と佛教』, 吉川弘文館, 1999.
-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2, 吉川弘文館, 1951.

Abstract

A Study on Ocean Consciousness of King Munmu in Silla

Kim, Chang-Kyum*

This paper analyses patriotic consciousness of 30th King Munmu in Silla toward ocean. Furthermore He gave considerable thought to awareness of worship to Buddhism. For example, even after his body was cremated and scattered in the East Sea, according to his will, he described himself as a dragon in the East Sea(東海) that is to protect **Silla**.

As it illustrated above, King Munmu has his own specific ocean consciousness. it was proved by the fact that he made the system for shipping business, called ‘**Sunbu**’(船府).

It exams if the consciousness was caused by his obsessional emotion about the Baekje(百濟) people and Japanese invasion.

Key words : King Munmu, Ocean consciousness, Patriotic spirit, Dragon in the East Sea, Sunbu

* Head, Division of cultural Content Compli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교신 : 김창겸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E-mail : kimck@aks.ac.kr)

논문투고일: 2017. 08. 31

심사완료일: 2017. 09. 22

게재확정일: 2017. 09. 24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에 나타난 한중 고대 천지상서의 교응적 자연학*

김일권**

- I. 서론
- II. 『천지서상지』의 판본과 전승 문제
- III. 『천지서상지』의 구성과 신화자연학 텍스트
- IV.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의 교응적 자연학
- V.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방식으로서 천지상서를 통한 한중 고대의 교응적 자연학 관점을 더듬어보기 위하여, 우리 역사의 한 시기 동안 중요한 자연학 텍스트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묻혀져 버린 『천지서상지』를 재조망하면서, 여기에 담긴 천변지재(天變地災)의 논리와 오행지학적 상서재이론 방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당나라 초기 저작된 『천지서상지』는 남북조의 상서재이학을 집성한 편찬물이고, 천지상서에 관한 기록을 여러 천문서, 도참서, 재이서, 예서 등에서 뽑아 모아, 하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하는 천견사상과 덕치의 상서부응 등 여러 천지상서의 교응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년도 ‘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 공동과제 지원을 받은 <동아시아 자연과 인간의 교응관계론 탐색에 관한 한국적 자연학과 치생의 문화론 연구> 2차년도 결과보고서 논문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고려시대는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교응적 자연학 논변을 풀어간 것으로 보이며, 천변재이론의 기준이 되는 분야론에 대해서도 28수 9주 성토편야설, 28수 12차 성토편야설, 5행성 측후토편야설 등 여러 논리가 개진되어 있고, 빛나는 하늘의 천체인 삼광론(三光論)을 통해 해와 달과 별에 생기는 천변현상, 28수 별자리의 사방칠수, 내외관 전천 별자리 체계, 무리와 운기 현상, 천지사이의 풍우상설 기상현상, 월령의 계절 변화와 오행의 재이론, 일상기물에 따른 물정(物精) 재이론, 신라와 당나라가 천지맹약을 거행한 백제 취리산 회맹제의(665년 8월)를 비롯한 여러 제천의례와 계절의례 등 당시 고대인들이 인식하였던 천지와 물정, 자연과 인간, 생활과 자연의 관계론 등을 담아내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 고대 동아시아적 교응적 자연관을 풀어내기에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고려사』에서 『천지서상지』를 직접 활용하여 재이현상을 논한 3건의 기록은 필자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 조망되었고, 특히 『고려사』 「예지·군례」 중 <계동대나의> 조목은 당시 고려가 『천지서상지』에 따른 대나의를 거행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 원전 부분인 『천지서상지』 권20 「제례편」의 <나조(儺條)>에는 분석 결과, 『주례』 「하관」 <방상씨조>의 축귀 의례 성격과 『예기』 「월령」의 계절적 환절의례 성격을 동시에 담아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례의 나(儺)란 용어가 계절(時) 변화가 자연순리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곤란(困難)을 뜻하는 말이고, 그 계절 이변에 의한 역질과 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일종의 계절조절의례가 나례(儺禮)로 성립 전개된 것임을 읽을 수가 있었다.

요컨대 고려시대 사천대(司天臺) 관원들이 천지 상서와 재변 및 의례 해석의 중요한 준거로 『천지서상지』를 적극 준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은 물응과 물정, 서응과 이징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사람 모두에게서 찾는 천지 상서의 신화 공간을 해석한 신화물리서 성격을 지남에 따라 고대인들이 사유하였던 신화자연학 교재이기도 하였다.

주제어 : 천지서상지, 신화자연학, 고려시대 교응적 자연학, 천지 상서와 재이, 천변과 기상재이론, 나례와 계절의례.

I. 서론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다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는 순정적 자연주의 철학은 전근대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던 삶의 양태이자 전형적 자연학의 관점이다. 단순화하자면 자연을 타자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교감하는 교응적 존재로 간주하는 방식이 발달하였다 할 것인데, 문제는 이 자연에 대한 교감 정도에 따라 감응적 자연학과 유심적 자연학 및 생태적 자연학의 세 범주로 가를 수가 있고, 그 중에 조선 중후기 산림서류에 개진된 산림사상은 우리 산하풍토에 생위적응(生爲適應)하려던 생태 자연학의 주요 마당이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¹⁾

본고는 이에 이어서 감응자연학의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라는 고대사의 새로운 문헌 발굴을 중심으로 천착한다. 이 문헌은 우리 역사의 한 시기에 중요한 자연학의 텍스트로 주목받았고 활용하였던 책이나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된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제목 그대로 한중 고대의 천지 상서 관련 내용이 집성되어 있다. 특히 이 책은 고려시대에 활용되었던 천지 상서에 관한 종합서 성격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바이다.

II. 『천지서상지』의 판본과 전승 문제

이 문헌은 부산외대 권덕영 선생이 『백산학보』 52호(1999.3)에 「『天地瑞祥志』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 日本에 전래된 신라 天文地理書의 일례」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새롭게 발굴하면서 알려진 바 되었다. 이 논문의 요지는 일본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에 소

1) 김일권, 「전통시대 치생의 문화론과 생태자연학적 산림사상」, 『동아시아 자연과 인간의 교응관계론 탐색에 관한 한국적 자연학과 치생의 문화론 연구』, 한중연, 2014. 10 발표논문. 여기서 한국적 자연학의 주요 세 범주로 제시한 감응자연학은 인간의 삶이 하늘과 자연의 물적 원리와 긴밀히 동류상응한다는 사유를 일컫고, 유심자연학은 노장학이나 화엄학의 주지적 자연주의 논의를 말하고, 생태자연학은 한반도의 생태적 지표에 우리 삶을 적응시키려는 치생적 생태문화론 흐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별하였다.

장되어 있던 살수진(薩守眞) 편찬의 『천지서상지』(666) 자료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이 책의 찬자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문무왕대 병법가로 기록된 신라인 설수진(薛秀眞)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서 잃어버린 신라사 문헌의 신발굴로 조망하였다. 국내에 처음 언급되는 신자료라서 그 가치가 매우 높고, 신라사의 공백을 메우는 자료로 기대되었기에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책 제목부터 천지의 서상을 모은 책이란 뜻이고, 내용이 고대 천문과 상서에 관한 것이어서, 마침 이 때는 필자가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서울대, 1999)로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이고, 한중의 고대 천문사상을 연구하는 중이었기에 필자에게 이 논문의 검증과 자료 검토가 요청되었다. 한국고대사학회의 동학사 연례 학회에 참여하러 올라온 권덕영 선생을 2002년 2월 대전역 커피숍에서 뵙고 경도대학 소장 마이크로필름의 채복사본을 전해받았고, 이후 검토 결과를 한국고대사학회 제65회 발표회(2002.4.20., 국립대구박물관)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수정보완하여 학회지 논문으로 수록하였다.²⁾ 이 논문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한 결과 신라인 설수진으로 보기 어렵다 보았고, 이 책의 <계문(啓文)>에 기록된 그대로 당나라 고종대 천문 역상(曆象)을 담당하던 태사(太史) 살수진(薩守眞)의 편찬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책은 장차 황제가 될 당시 당고종조 황태자 이홍(李弘)에게 찬진할 목적으로 천지의 상서 전반을 정리한 것이고, 그런데 이홍이 고종의 제5자로서 현경 원년(656)에 황태자로 책봉되고서 20년 뒤 상원 2년(675)에 축천의 뜻을 여러 차례 거슬렀다가 비명에 죽은 인물이다 보니 이 책의 유포와 인용이 어렵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고려시대 역사서인 『고려사』에 태조왕건 15년(932) 5월 갑신일조와 정종 6년(1040) 11월 무인일조 및 인종 8년(1130) 8월 을미일조에 “天地瑞祥誌云”이라 직접 인용되는 등 『천지서상지』가 당시 사천대(司天臺) 관원들이 천지의 상서재이를 해석할 때 참조한 주요 텍스트였음을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고, 그 끝에 이 책의 가치가 신라사가 아니라 고려사 연구에 귀중한 1차 자료의 발굴 원

2) 김일권, 「『천지서상지』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 :찬자에 대한 재검토와 『고려사』所引 記事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6, 한국고대사학회, 2002.6.

전으로서 재조망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 책은 中村璋八(1968)과 太田晶二郎(1972)의 그 찬자와 전승 및 보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미 고대 일본에서 『三代實錄』 876년 8월 6일조와 『扶桑略記』 927년 9월 29일조 등에서 『천지서상지』에 의거한 천변현상 설명을 남기는 등 9세기 후반에서 시작하여 무려 16세기까지 꾸준히 활용되고 유통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³⁾ 현재로서 『천지서상지』가 일본에서만 보존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때문에 중국 북경도서관이 소장한 것은 1932년 일본 東方文化學院 京都研究所藏 抄本을 영인한 複印本이며, 이 자료가 중국 역대 천문서를 집대성한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1995) 제4책에 수록됨으로써 일반에 공개되었다.⁴⁾

이와같이 『천지서상지』는 7세기 당나라에서 편찬된 이래, 아마도 신라를 거쳐 9세기 고대 일본으로 전승되었고, 10~12세기 고려에서도 활용한 천문서임을 알 수가 있는 바, 그래서 이 책은 고대 한중일에 범용적이었던 천지상서에 의한 자연학 교재라 부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지난 논문은 찬자의 쟁점 중심으로 접근하였다면, 본고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고대가 추구하였던 천지상서의 교응적 자연학 면모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Ⅲ. 『천지서상지』의 구성과 신화자연학 텍스트

1. 『천지서상지』는 살수진(薩守眞)의 권1 「계문(啓文)」⁵⁾에 언급되어 있듯

3) 中村璋八, 『天地瑞祥志について : 附引書索引』, 『漢魏文化』 7, 漢魏文化研究會, 1968; 太田晶二郎, 『天地瑞祥志略說 : 附けたる, 所引の唐令佚文』,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7, 1972.

4) 薄樹人 主編,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 河南教育出版社, 鄭州, 1995, 제4책.

5) 『천지서상지』 권1은 「조례목록(條例目錄)」이란 제하(題下)로 찬자 살수진이 이 책의 편찬 경위와 목적, 관련 용어 풀이, 전체 목차 등을 1.啓 2.明載字 3.明災異例 4.明分野 5.明災消福至 6.明目錄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통상적인 서문보다는 자세하고, 천지서상에 관한 찬자의 이론적 개진이 강조된 특성을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편찬의 변을 담는 ‘계(啓)’이고 나머지는 그에 딸린 범례와 목록 정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이 권1 전체를 포괄적인 「계문(啓文)」이라 별칭하여 그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천지 서상에 관한 기록을 여러 천문서와 도참서, 재이서에서 뽑아 모으되 종류별로 편장하여 20편으로 구성한 책이다.⁶⁾

이를 편찬한 목적은 “하늘의 견계(譴誡)를 삼가 공경히 받들고 재열(災孽)을 미리 피하도록 하여, 천자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으면 백성이 또한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使祗承譴誡, 預避災孽. 一人有慶, 百姓又安.)라고 하여, 하늘이 꾸짖고 훈계하는 바를 잘 받들고 자연의 재변과 이열(異孽)을 예방함으로써, 천자의 올바른 정치교화를 이루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에 두고 있다.

여기서 견계(譴誡)는 고대 동아시아 정치사상에 중요한 줄기를 이루는 천견론(天譴論)을 일컬으며, 지상의 군주가 정사를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 하늘이 그에 상응하는 견책과 상서를 내린다는 논리이다. 주지하듯,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군왕의 잘잘못을 자연의 재변을 통해 포폄하는 춘추재이론(春秋災異論)을 펼쳤는데, 이 유가적 천견의 정치사상은 인간이 하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히 상호 감응한다는 천인감응 세계관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재이론은 단순한 자연의 재난과 이변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의지가 반영된 유의미한 사건이 된다.

그렇다면 자연의 재변과 인간의 행위에는 어떤 연결성이 있으며 어떤 해

이 「계문, 파트를 번역하고 주석한 글이 필자의 논문 등을 바탕으로 삼은 「천지서상지 제1, (김용천·김경섭·최현화 공역, 『동국사학』 25, 2003)로 나왔고, 뒤이어 권20의 번역까지 진행하고자 『천지서상지』(김용천·최현화 역, 예문서원, 2007)란 책으로 출간하여 참조가 된다. 이 번역서는 권1 「조례목록」과 권20 「제총재(祭愍載)」의 두 권차에 대해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으며, 인용원전에 대한 교감도 진행하여 전체는 아니지만 『천지서상지』의 이해를 크게 돕고 있다. 또한 『천지서상지』에 대해 최근까지 일본측 연구를 정리한 미즈구치 모토키(水口幹記)의 『日本古代漢籍收容の史的研究』(汲古書院, 2005) 성과가 대폭 반영되어 있어 주목된다. 다만, 이 번역서에는 『천지서상지』의 성립과 독해에 가장 핵심이 되는 논지로서 천지 상서가 지니는 오행지학(五行志學)적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잘 드러나 있지는 않다.

6) 守眞憑日月之光耀, 觀圖謀於前載, 言涉於陰陽, 義開於瑞祥, 纖分之惡無隱, 秋毫之善必陳. 今拾明珠於龍淵, 抽翠羽於鳳穴, 以類相從, 成二十卷. 物阻山海, 耳目米詳者, 皆據『爾雅』·『瑞應圖』等, 盡其形色, 兼注四聲, 名爲『天地瑞祥志』也, 『通彙』 4-315쪽.

본고의 『천지서상지』 원전은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薄樹人 主編, 河南教育出版社, 鄭州, 1995)의 제4책에 실린 영인본을 기준으로 삼았다. 『통회』 4-315는 제4책 315쪽이란 뜻이다.

석의 틀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 재변의 해석 방법론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목되고 다양하게 개진되었는데, 전국시대 『상서』 「홍범편」에 기자(箕子) 명의로 제시된 홍범구주론(洪範九疇論)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자 천견재이사상의 경전적 권위가 부여된 것이며, 다음은 전한초 동중서(董仲舒)가 『춘추번로(春秋繁露)』를 통해 같은 종류끼리 감응한다는 동류상응(同類相應)의 천인감응 원칙론과 함께 음양오행론을 크게 활용한 춘추오행학으로 이론들을 강화하였고, 후한초 반고(班固)는 『한서(漢書)』를 편찬하면서 오행지(五行志)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역사서 편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의 재변을 폭넓게 해석해내는 이른바 오행지학(五行志學)적 자연학의 밑바탕을 제공하였다.

이 오행지학의 주요 골격은 대략 세 가지 범주로 나뉘지며, 첫째는 수화 목금토의 오행 성질에 따라 기상이변과 자연재변을 분류하여 기술하는 오행재이론(五行災異論) 범주이고, 둘째는 홍범구주론에 의거하여 인간의 행위 유형을 용모, 언어, 시각, 청각, 사변(貌言視聽思)의 다섯 가지 사태로 환원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는 오사재이론(五事災異論) 범주이며, 셋째는 천지인의 한 축으로써 인간을 대표하는 군주에 대해 매우 강한 견책과 자성(自省)을 요구하는 황극재이론(皇極災異論) 범주이다.⁷⁾

이들을 층차에 따라 부연하면, 오행재이론은 홍수와 가뭄, 지진과 화재 등 자연발생적인 대자연의 재해들을 오행별로 분류하여 해석하는 것이어서 전통시대 자연재해를 다루는 범주라 할 수가 있고, 오사재이론은 민간에서 세태를 풍자하는 동요가 유행하거나 풍속이 사치스러워지는 등 각종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것에도 하늘의 뜻이 담긴 것이라 해석하는 소위 인문의 차원에서 접근되는 사회현상적 재이론 범주이다. 마지막 황극재이론은 군주인 황(皇)이 하늘의 뜻을 대행하여 정치교화의 중심(極)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정치를 촉구하는 범주이며, 정치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일월식이 발생하고 혜성과 무지개가 출현하는 등의 일월난행(日月亂行)과 성진역행(星辰逆行) 재변이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상 천변(天變) 위주의 재이론 범주를 다루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마정(馬政)이나 사요(射妖), 군주의 상

7) 이 세 가지 재이론의 개념과 이들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오행지학적 자연관에 대한 논의는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한중연, 2011)에 자세히 개진한 바 있다.

징인 용사(龍蛇)의 재변 등을 함께 포괄한다.

이처럼 오행지학은 자연재해와 사회현상, 정치행위까지 두루 포괄하는 전통시대 감응적 자연학의 전형을 담은 체계이다. 이 관점은 자연과 인간이 별개의 구별된 존재가 아니며 모두가 하늘의 천의(天意)와 교섭하는 상관적 존재로서 상호의존성을 띠게 됨을 역설한다.

이같은 오행지 기반의 오행지학적 자연학이 『한서』 성립 이래 팽배해짐에 따라 천지 교응적 자연주의 사유가 더욱 발달하게 되었으며, 서양의 대자(對自)적인 자연주의와는 크게 다른 방향의 색채를 견인하기에 이른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고려시대의 자연학 역시 이와 동일한 호흡을 지닌다.

한편 『한서』 「오행지」에서 덜 주목되었던 개개 자연물에 대한 재이론적 관찰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확장되었고, 『위서』의 「영징지(靈徵志)」와 『송서(宋書)』의 「부서지(符瑞志)」란 편명이 보여주듯 각종 동식물과 자연물의 징후조차 모두 망라하려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특히 부서(符瑞)란 주제는 『춘추』-『상서·홍범』-『춘추번로』-『한서·오행지』 등이 강조하던 재이(災異)와는 다른 측면을 강조한 관점이다. 재이가 천재지이(天災地異) 혹은 천변지재(天變地災)의 줄임말로써, 부정적인 재해와 재앙 및 이변과 변이를 주목한 것이라면, 부서는 가화(嘉禾)나 감로(甘露), 예천(醴泉), 지초(芝草) 등 덕치(德治)의 부응(符應)으로서 상서(祥瑞)로움을 긍정하려는 측면이 다분하다.

2. 당나라 초기에 편찬된 본 『천지서상지』는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문헌인 것이다. 살수진은 장차 황제가 될 동궁(東宮) 대왕전하(大王殿下)에게 덕치의 상서와 교화의 치복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이 책의 찬진을 기획한 것이라 하겠다.

살수진이 「계문」에서 “이른바 서상(瑞祥)이란 것은 길흉이 먼저 나타나면 화복이 뒤따라 응하는 것으로, 비유컨대 소리가 텅빈 계곡에서 일어나고, 거울이 바탕과 형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⁸⁾고 서술하여, 천지간에 각종 서상이 지닌 길(吉)과 흉(凶), 화(禍)와 복(福)의 양면을 동시에 말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천지서상지』에는 춘추오행지 계통에서 견지된 견책의 재이론과 영징부서지 계통에서 강조된 덕치의 상서론이라는 두 상반된 관점이 함께 개진

8) 所謂瑞祥者，吉凶之先見，禍福之後應，猶響之起空谷，鏡之寫質形也，『동회』 4-316.

되어 있다.

「계문」 중 <명재소복지(明災消福至)>는 바로 재변이 소멸하고 복이 이르는 원리와 사례를 설명한 부분이며, “매양 전적을 펼칠 때마다 성스런 황제[聖帝]와 밝은 군왕[明王]들이 호천(昊天)을 공경하고 견계(謹誠)를 만들지 않음이 없었다. 무릇 제왕이란 덕이 천지에 짝하고 음양에 협계(叶契)하며, 정령(政令)의 발호 시행이 어둡고 밝음에 따라 작동하고 열리니, 휴징(休徵)과 구징(咎徵)이 감응에 따라 지어진다.”⁹⁾라고 하여, 제왕이 된 자가 하늘이 내리는 견책과 계고(戒告)를 성실히 공경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적 근거를 성제명왕(聖帝明王)의 역사적 사례에서 찾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이르는 것이니, 재변이 화복(禍福)과 길흉(吉凶)이 되는 계기는 오직 임금된 자가 정사를 잘 닦는가 아닌가의 행위 여부에 달린 것임을 피력한다. 곧 『한서』 「오행지」에서 “인군이 정사를 잘 닦아서 공손히 그 징벌을 잘 다스린다면 재변이 소멸하고 복(福)이 이르며, 만약 정사를 잘 닦지 않는다면 재변이 번성하여 화(禍)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듯 길흉의 존망은 행함을 따라 화복을 이룬다.”¹⁰⁾고 한 재소복지(災消福至)의 재이론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재변은 한꺼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이가 모여 하나의 재앙을 이루거나, 혹은 재앙이 먼저 일어난 뒤에 재이가 출현하는 등 그 관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 예시로, 『천문요집(天文要集)』¹¹⁾을 지은 진나라 태사령 한양(韓楊)이 『치맹점(郗萌占)』에서 말한 8가지 중대한 성변(星變)이 너무 극단적인 사례임을 비판하고서, 재화(災禍)의 원리는 여러 재이가 일어난 뒤에 함께 하나의 화(禍)를 이루는 것(必待衆災, 并成一禍)이라 하였음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치맹점』의 8조 성변은 모두가 왕의 교체를 뜻하는 현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곧 역수(曆數)의 기원(紀元)을 관장하는 섭제성(攝提星)이

9) 緬尋千古，每披典籍，聖帝明王，莫不欽若昊天，祇承謹誠也。夫帝王者，配德天地，叶契陰陽，發號施令，動開幽顯，休咎之徵，隨感而作，『통회』 4-319.

10) 『漢書』曰，“人君能修政，恭御厥罰，則災消而福至，不能修政，則災息而禍生。吉凶亡常，隨行而成禍福也”，『통회』 4-319.

11) 『수서』, 「경적지」의 천문가(天文家)에서 진(晉)나라 태사령을 역임한 한양(韓楊)이 『天文要集』 40권을 지었다고 기록하였다(天文要集四十卷，晉太史令韓楊撰).

옆으로 길게 펼쳐지거나, 천제가 타는 네 필 말의 수레를 모는 마부인 왕량성(王良星)이 말을 채찍[策星]질하듯 광망이 요동하거나, 하늘 창고인 천고성(天庫星)이 텅 비거나, 뾰족한 봉성(鋒星, 更河星의 다른 이름)이 별빛뿔[光角]을 내거나, 전쟁을 담당하는 활모양 호성(弧星)과 사나운 이리의 낭성(狼星, 가장 밝은 Sirius)이 더욱 밝아지거나, 진성(鎭星, 토성)의 정기인 잔성(殘星)이 돋보여 나타나거나, 유성의 일종인 왕시성(枉矢星)이 흐르거나, 형혹성(熒惑星, 화성)의 정기인 치우기(蚩尤氣)가 출현하면, 이 여덟가지 성변은 각각 기성(紀聖)을 경장하고 왕을 교체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¹²⁾

이 『치맹점』의 8조 성변을 통해 고대인들이 천변을 본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엿볼 수가 있고, 또 인사의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짓는지를 참조할 수가 된다.

다음으로 살수진은 재변을 설명하기에 앞서, <명재자(明載字)>에서 여러 학자들의 글자와 새김(字訓)에 차이가 많아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르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상지』에 쓰인 여러 상서재이 관련 용어를 모아서 설명하고 있어 적절한 참조가 된다. 하늘을 거스르는 재(災)와 땅의 본성에 반하는 요(妖), 덕을 거스르는 난(亂)과 정상적이지 않는 이(異), 사물의 변이가 속에서 발생하는 생(眚)과 때를 어겨 나타난 반(反) 등등. 이를 아래에 정리하여 고대인들의 재이론적 사유를 참작토록 한다.

- 재(災)와 요(妖): 『좌전』에서 “하늘에서 때를 거스르는 것이 재(災)이고, 땅에서 사물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 요(妖)이다.”(天反時爲災, 地反物爲妖.) 두예(杜預)가 반시(反時)는 추위와 더위가 본성을 잃는 것(寒暑失性)이라 하였고, 또 하늘이 질서를 잃은 것을 재(災)라 하며, 이 재란 해친다(傷)는 뜻이다.(又天失曰災, 災之言傷也.) 재(裁)와 재(災)는 재(災)와 같은 글자이다. 두예가 반물(反物)은 못 사물이 본성을 잃는 것(群物失性)이라 하였고, 『한서』는 초목이 일찍 죽는 것이 요(妖)이고, 요(妖)는 어리다는 요(夭)와 같다. 완(禾+宛), 요(詔)는 요(妖)와 같은

12) 臣按『圖讖』曰, “非災必俱至, 或待衆災成一殃. 或一災則受殃, 或事在前, 災在後也.” 『邵萌占』曰, “攝提橫, [守曰, 橫之言引而張也]. 王梁策馬, [策馬謂有光芒而動] 天庫虛, 鋒星角, [鋒星謂更河別名也] 弧狼張, [張, 明光也] 殘尤出, [鎭星之精] 枉矢流, [流星名也] 蚩尤出, [熒惑之精] 此八條, 各言更紀聖代王也.” 韓揚(楊의 오기)讖邵萌言, “凡八變至重, 古今希有, 必待衆災, 并成一禍, 而萌占書, 別輕就重, 此萌所失也”, 『통취』 4-317쪽.

글자이다.

- 난(亂)과 이(異): 인간이 덕(德)을 거스르는 것이 난(亂)이고, 정상(定常)적인 것과 달라지는 것이 이(異)이다.(人反德爲亂, 異於常謂之異.) 또 병란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난(亂)이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구(寇)이다. 이(異)는 괴이(怪異)하다는 말이다.
- 열(孽)과 화(禍): 『한서』에 충치류(蟲多類)에 생기는 재변을 열(孽)이라 하고, 육축(六畜)에 생기는 재변을 화(禍)라 한다. 다리가 있는 것이 충(蟲)이고, 다리가 없는 것이 치(多)이다.
- 생(眚), 반(反), 앙(殃): 사물의 변이가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생(眚)이라 하고, 신화와 자식이 반영하는 것을 반(反)이라 하고, 흉한 구앙(咎殃)이 생기는 것을 앙(殃)이라 한다.¹³⁾
- 승평(升平), 등(登), 평(平), 대평(大平): 『한서』의 장안(張晏) 주(注)에서, 백성들이 3년간 쌓아둔 것이 있으면 승평(升平)이라 하고, 3년을 넘는 여유 식량으로 생업에 나아가는 것을 등(登)이라 하고,(登은 잘 익는다는 熟의 뜻이다.) 다시 등이 되면 평(平)이 되고,(再登曰平) 6년을 넘는 식량으로 세 번 등하는 것을 대평(大平)이라 한다.¹⁴⁾ 하였다.
- 겸(嗛), 기(飢), 기(饑), 근(饉), 강(歉): 『곡량전』에서 한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으면 겸(嗛)이라 하고,(식량이 모자란 것은 아니다) 두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는 것을 기(飢)라 하고,(『이아』는 곡식이 익지 않는 것을 饑라 하였다. 饑는 飢와 같은 글자이다) 세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는 것을 근(饉)이라 하며,(채소마저 익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으면 강(歉)이라 하고,(『설문』은 텅 비어 주린 것이라 하였다) 다섯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는 것을 일러 대침(大祲)이라 하였다.(鄭玄은 음양의 기가 相浸하여 災를 이룬 것을 祲이라 하였다.)¹⁵⁾

다음으로 천변(天變)이나 성변(星變)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서』 「천문지」에 주석을 붙인 위(魏)나라 맹강(孟康)의 주(注)를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 일월박식(日月薄蝕)이란 말에서 식은 개기일식, 박은 부분일식을 뜻

13) 『漢書』에는 “蟲多之類謂之孽。孽則牙孽矣。及六畜，謂之禍，言其著也。及人，謂之病。病，病貌，言漸深也。甚則異物生，謂之眚。自外來，謂之祥。祥猶禎也”로 되어 있다. 『漢書』, 「五行志」, 제7中之上, p.1353.

14) 『漢書』, 「食貨志」, 제4上, p.1123.

15) 『春秋穀梁傳』襄公 24년조에 “五穀不升謂大饑。一穀不升謂之嗛，二穀不升謂之饑，三穀不升謂之饉，四穀不升謂之歉，五穀不升謂之大侵”이라 한 바와 같다.

하는 면이 있는 등 역시 참조할 바가 적지 않다.

- 사(邪)와 정(正): 일월 오성의 운행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邪)라고 하고, 궤도를 따르는 것을 정(正)이라 한다.¹⁶⁾
- 존(存)과 망(亡): 열수(列宿)가 이지러지지 않는 것을 존(存)이라 하고, 항성(恒星)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망(亡)이라 한다.
- 실(實)과 허(虛): 천뢰(天牢, 하늘 감옥)에 별이 많으면 실(實)이고, 모두 나가 별이 적으면 허(虛)라 한다.
- 활(闊)과 협(狹): 삼태성(三台星) 사이가 서로 멀면 활(闊)이고, 서로 가까우면 협(陜)이다.
- 예(曳)와 합(合):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예직(曳直)이고, 같은 사(舍)에 있으면 합(合)이라 한다. [守曰: 숨는 28수의 1宿와 같다.]
- 범(犯), 능(凌), 투(鬪): 7촌(寸) 이내로 광망(光芒)이 서로 미치는 것은 범(犯)이라 하고, 서로 마주보며 정면으로 지나가는 것은 능(凌)이고, 서로 부딪치는 것은 투(鬪)라 한다. [또는 유성이 침입해 이르는 것이 범(犯)이고, 천천히 움직이며 범하는 것은 간(干)이고, 빨리 달리며 누르는 것은 투(投)이고, 두 마리 소가 서로 들이받는 것 같은 것은 축(觸)이라 한다.]
- 식(蝕)과 박(薄): 서로 능범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식(蝕)이라 하고,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박(薄)이라 한다. [무함(巫咸)은 달이 별을 가리되, 별이 사라지면 월식성(月食星)이라 하고, 별에 빛이 있으면 성식월(星食月)이라 하였다. 『경방역전』에 해와 달이 붉고 누렇게 보이면 박(薄)이고, 또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서 식(蝕)이 되는 것을 박(薄)이라 하였다. 위소(韋昭)는 기체가 가까이 닥치는 것이 박(薄)이고, 이지러지고 혈면 식(蝕)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행성과 별이 만드는 천체 운동에 대한 용어를 여러 천문서에서 모아 수록하고 있다. 전통시대 역사천문학 연구에 참조가 되는 용어 풀이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중에는 천문학적으로도 유의미한 내용이 적지 않다.

- 출(出)과 입(入): 갈 때가 아닌데 가는 것이 출(出)이고, 올 때가 아닌데 오는 것이 입(入)이라 한다.

16) 『한서』, 「천문지, 제6의 맹강 주석에서 사(邪), 존(存), 망(亡), 실(實), 허(虛), 활(闊), 협(狹)에 대한 다음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孟康曰, “伏見蚤晚, 謂五星也。日月五星下道爲邪。存謂列宿不虧也, 亡謂恆星不見。虛實, 若天牢星實則囚多, 虛則開出之屬也。闊狹, 若三台星相去遠近也。”

- 승(乘), 수(守), 류(留): 위로 지나가는 것은 승(乘)이고, 배회하면서 그 도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수(守)이며, [守曰: 배회는 방황하면서 가는 듯 오는 듯하는 것이니, 떠날 듯하면서 오래 머무는 것과 같다. 맹강은 자신의 별자리에 머무는 것이 수(守)라 하였다. 『광아(廣雅)』에서 守는 久라 하였다.] 머물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은 류(留)이다. [守曰: 이는 머무는 시기가 다 되었는데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아』에서 류(留)는 오래 머무는 것이라 하였다.]
- 사(舍)와 요(繞): 운행이 정상적이면 사(舍)라 하고, 주위를 도는 것은 환요(環繞)라 한다. [守曰: 『주례』에 의거하면, 여행하는 자가 짐을 풀어놓는 올바른 곳을 사(舍)라 한다. 여행하는 중에 잠시 머물기 때문에, 『좌전』에서 “하룻밤 묵는 것을 사(舍)라고 한다”고 한 것이다.] (守據周禮行者所解之正處曰舍也。應行而暫住，故左傳曰，一宿爲舍也.)
- 구(句)와 기(己):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구(句)라 하고, 거둬 구(句)하는 기(己)라 한다. [『백호통(白虎通)』에서 기(己)란 꺾어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뜻이라 하였다.]
- 변(變)과 동(動): 그 정상이 아닌 것이 포함되면 변(變)이라 하고, [또는 사물이 허물을 만들면 변이라 한다] 빛이 빛나면서 흔들리는 것을 동(動)이라 한다.
- 희(喜), 노(怒), 제(提): 운택하고 화순하면 희(喜)라 하고, 큰 것을 막고 강한 것을 싸고 있으면 노(怒)라 하고, 좌우에서 꺾박하는 것을 제(提)라 한다.
- 망(芒), 록(角): 그 빛이 5촌 이상이면 망(芒, 별까끄라기)이라 하고, 1척 이내면 각(角, 별빛뿔)이라 한다.
- 지(遲), 평(平), 질(疾): 하루에 1~2촌을 운행하면 늦는 지(遲)라 하고, 5촌 이상 1척 이내면 보통의 평(平)이라 하고, 1도(度)이면 빠른 질(疾)이라 한다.
- 조(朧)와 녹(朧): 그믐에 달이 서방에 나타나면 조(朧)라 하고, 초하루에 달이 동방에 뜨면 녹(朧)이라 한다. [맹강은 “조(朧)는 달의 운행이 빨라 태양 앞에 있는 까닭에 일찍 출현하는 것이다. 녹(朧)은 달의 운행이 늦어 태양 뒤에 있으니,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데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¹⁷⁾
- 영(盈)과 축(縮): 오성(五星)이 일찍 나오는 것을 영(盈)이라 하고, 늦게 나오는 것을 축(縮)이라 한다.

3. 그러면 살수진이 『천지서상지』를 어떤 관점에서 입론하고 편찬하였는지 그 이론적 기반 문제를 살펴본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계문」의 <명재자(明載字)>에서 어느 정도 개진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서상지』에 인용한 경문(經文)이 당시의 “근대(近代) 유가(儒

17) 『한서』, 「오행지」, 제7下之下, p.1506의 孟康注.

家)에서 말하는 것과 왕왕 괴리되고 착종되는 바가 있다.”¹⁸⁾고 하면서, 경전 본래의 해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고, 그러면서 『상서(尙書)』 「홍범편」에서 은나라 기자(箕子)가 주무왕에게 설파한 홍범구주론(洪範九疇論)을 수록하였다. 이 56글자로 된 문장이 바로 『낙서(雒書)』의 본문이며, 자신의 『천지서상지』는 바로 이 홍범구주의 항목에 따라 종류별로 서술한 것이므로 “국가(國家)를 위한 서상(瑞祥)”은 이것으로 모두 설명될 수가 있다고 파악하였다.¹⁹⁾

주지하듯, 『상서』 「홍범편」의 홍범구주는 반고가 『한서』 「오행지」를 지을 때 핵심 이론틀로 삼았던 경문이며, 하늘이 우임금에게 내렸다는 치세(治世)의 대법구장(大法九章)으로서,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五福)·육극(六極)의 9개 범주를 일컫는다.

위 『서상지』에서 56글자라 한 것은 필사 과정의 오류이며, 『한서』 「오행지」에서 말한 65글자가 옳다. 이 홍범구주의 65글자 경문은 다음과 같다.

곧 홍범구주의 첫째 규범은 오행(五行)이며, 둘째는 오사(五事)를 공경히 쓰는 것이며, 셋째는 여덟가지 정사(八政)에 힘쓰는 것이며, 넷째는 다섯가지 기율(五紀)을 조화시키는 것이며, 다섯째는 군주의 중정(皇極)을 세우는 것이며, 여섯째는 세가지 덕(三德)을 다스리는 것이며, 일곱째는 의심나는 것(稽疑)을 밝히는 것이며, 여덟째는 여러 징험(庶徵)을 숙고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다섯가지 복(五福)을 기르고 여섯가지 궁함(六極)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였다.²⁰⁾

살수진에 따르면, 이상에서 제1 오행 범주는 『천지서상지』의 제16 「오행편」에서 다루었고, 제4 오기 범주는 해[歲], 날[日], 달[月], 별[星辰], 역수[曆數]를 말하며 『서상지』의 제3~12에 실렸고, 제6 삼덕과 제9 오복 육극 범

18) 今『瑞祥志』所列經文，與近代儒家，往往乖錯。但恐俗人少經多怪，貴遠賤近，守株膠柱，迷於變通。所以更求河雒本文也，『통휘』 4-316.

19) 凡此五十六字，皆『雒書』本文也。以類相從，分在諸篇也，爲國家之瑞祥，盡於此也，『통휘』 4-316.

20) 初一日五行，次二曰羞用五事，次三曰農用八政，次四曰協用五紀，次五曰建用皇極，次六曰艾用三德，次七日明用稽疑，次八曰念用庶徵，次九曰嚮用五福，畏用六極。凡此六十五字，皆雒書本文，所謂天乃錫禹大法九章常事所次者也，『한서』，「오행지」 권7상, 1316쪽.

주는 『서상지』의 제2 「인편(人篇)」에 실렸으며, 나머지 제2 오사, 제3 팔정, 제5 황극,²¹⁾ 제7 계의, 제8 서징 범주는 『서상지』의 각편에 나뉘어 실렸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천지서상지』의 성격이 홍범구주의 오행지학적 관점 아래 천지 자연에 나타난 제반 서상을 모두 모은다는 취지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수록 내용 중에 풍우(風雨), 물정(物精), 금충(禽蟲), 백수(百獸) 등 다른 문헌에서 쉽게 보기 힘든 자연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또한 사물의 물리적 서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산해경』이 신화지리서라면, 이 책의 성격은 신화물리서 혹은 신화자연학 텍스트로 부를 만하지 않을까 한다. 현대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 시대이고 보면,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이만큼 다양하게 담아내기가 당시로서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비록 상서와 재이라는 감응신화론 기초가 다분하다 하더라도 당나라, 신라, 고려,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사유하였던 자연학에 대한 일면을 엿보는데는 좋은 자료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가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자료가 귀한 고려시대에 활용된 문헌으로서 새롭게 발굴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니 만큼 『천지서상지』가 지닌 고대적 자연학 텍스트로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그러면 이에 따른 『천지서상지』의 20권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서 그 신화자연학 내지 신화물리서 측면이 어떠한 지를 고찰한다.

전체 20권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제1, 7, 12, 14, 16, 17, 18, 19, 20의 9권으로 절반에 못미치는 분량이다. 필사본으로 274쪽에 이르고, 1쪽에 10행 20자이니, 빈 면을 제외하면 대략 5만 2천자 내외가 남아있는 셈이다. 전체는 10만 글자를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추산할 수 있겠다.

아쉬움이 크에도, 다행히 전체 목록이 「계문」에 붙어있어 편찬의 전모를 구성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목록의 목차명이 본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필사 과정에 누락된 것인지 목차명은 있으나 그에 해

21) 예컨대, 제5 건용황극(建用皇極)에 대해, 황(皇)은 크다[大]는 뜻이고, 극(極)은 중정하다[中]는 뜻인 바, 일을 세울 때 크고 중정한 도를 써야함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살수진은 황극의 재변은 운기(雲氣)와 용사(龍蛇)이며, 각기 『서상지』의 유사한 편에 실려있다고 하였다.

당하는 본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아래의 목차가 어느 정도 글자 출입이 있을 수가 있음을 염두하되, 남아 있는 경우는 본문과 대조를 하였다. 또 각 편의 성격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필자가 해당 개요를 괄호로 덧붙였음을 밝힌다.

〈『天地瑞祥志』 20권 전체 목록〉²²⁾

* ■은 현전하는 부분. * 괄호는 필자가 매긴 주제어

* 목록내 번호: 원문에서 매긴 것이 제1~10, 12~14, 나머지 제11, 15-20은 필자가 매김.

- 제1권 (조례목록) 條例目錄 1.啓 2.明載字 3.明災異例 4.明分野 5.明災消福至 6.明目錄
- 제2권 (천지인 삼재) 1.三才始 2.天地像 3.天 4.天[地]²³⁾ 5.人 6.人變相
- 제3권 (일월성 천변) 1.三光 2.黃道 3.日蝕²⁴⁾ 4.救蝕 5.²⁵⁾日光變 6.日雜異 7.日鬪 8.晷 /1.月蝕 2.月光變 3.月雜異 /1.五星惣載 2.歲星 3.熒惑 4.鎮星 5.太白 6.辰星 7.五星會 8.[四星會]²⁶⁾ 9.三星會 10.二星會
- 제4권 (28수 :동방 · 북방칠수) 1.東七宿(附見六星) 2.北七宿(附見二星)
- 제5권 (28수 :서방 · 남방칠수) 1.西七宿(附見三星) 2.南七宿(附見三星)
- 제6권 (내관 102관) 內官九十八官(附見四官)
- 제7권 (내외관 :내관 51관 외관 92관) 1.內官卅六官(附見五官) 2.外官九十官(附見二官)
- 제8권 (유성) 1.流星名狀 2.流星卅八宿 3.流星內官 4.流星外官 5.流星晝 6.流星日月 7.流星五星(五星自流附見) 8.星 9.流星羣[羣]²⁷⁾上
- 제9권 (객해성) 1.客彗惣載 2.客彗別名 3.客彗晝出 4.客彗出(日月辛) 5.客彗出五星 6.客彗出卅八宿 7.客彗出內官 8.客彗出外官 9.天漢
- 제10권 (무리 운기) 羣 · 雲氣 1.羣[羣]²⁸⁾珥狀 2.日羣抱珥 3.月羣 4.羣五星(五星自

22) 김일권, 「『천지서상지』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2002)에도 목차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 원문 대교와 오탈자 문제를 전면 수정 보완하였다.

23) 원문의 天은 地의 오키일 듯함.

24) 원문의 蝕(동)은 蝕(식)의 오키로 보아 교정함.

25) 원문의 四는 五의 오키로 보여 교정함.

26) 원문에 비어 있으나 앞뒤 상황상 [四星會]로 보여 보충함.

27) 원문 羣(휘)는 羣(훈)의 오키일 가능성.

28) 원문 羣(휘)는 羣(훈)의 오키일 가능성.

暈附見) 5.暈^卅八宿 6.暈內官 7.暈外官 8.虹蜺(日旁虹蜺附見)

雲氣 1.雲氣惣載 2.正月朔旦雲氣 3.五色²⁹⁾雲氣 4.日旁雲氣 5.月旁雲氣 6.卅八宿雲氣 7.內官雲氣 8.外官雲氣

제11권 (뇌전 상설) 雷·電 1.雷惣載 2.始雷 3.雷而無雲及雨 4.冬雷 5.雷而後電 6.軍[暈]³⁰⁾上雷 7.霹靂 8.電 / 1.陰暄 2.晝冥 3.露 4.雪 5.霰 6.雹 7.霜 8.霧 9.旱 10.熱 11.寒³¹⁾

- 제12권 (풍우 점후) 1.風惣載 2.風期日 3.正月朔旦[候]³²⁾風 4.五音風 5.六情風 6.八風(主客附見) 7.廻風[雨]³³⁾

雨 1.雨惣載 2.候雨 3.候雨晴 4.四時雨(正月朔附見) 5.當雨不雨 6.偏雨 7.無雲而雨(軍雨附見) 8.異雨 9.霖雨

제13권 (五事 災異) 夢 1.夢惣載 2.天地 3.人鬼神 4.人體 5.文書衣服 6.金玉瑟鼓 7.宅田 8.飲食·屎 9.訴訟 10.劔弓 11.龍蛇 12.六畜 13.禽獸 14.魚龜 15.水火 16.道路行臥 17.船車 18.山草木 19.冢墓

- 제14권 (五事 災異) 1.音聲 2.童謠 3.妖言 4.草³⁴⁾俗 5.神 6.鬼 7.魂魄 8.物精

제15권 (草木 災異) 1.農業(농업) 2.百穀³⁵⁾(백곡) 3.禾(화) 4.秬³⁶⁾(거창) 5.稻(도) 6.黍(서) 7.稷(직) 8.秠(출) 9.粟(숙) 10.穠(제) 11.菽(숙) 12.麥(맥) 13.麻(마) 14.蠶(잠) 15.草(초) 16.蓍(시) 17.芝英(지영) 18.蕒³⁷⁾莆(경보) 19.華平(화평) 20.朱草(주초) 21.蓂莢(명영) 22.福井(복병) 23.延嘉(연가) 24.紫蓬(자봉) 25.平甫(평보) 26.賓連(빈련) 27.萍實(평실) 28.屈軼(굴질) 29.蜚燕(비렴) 30.菊(국) 31.蒺藜(질려)³⁸⁾ 32.苦買(고매) 33.薏苡(의이) 34.薑(강) 35.瓜(과) 36.薺(제) 37.葶藶(정력) 38.水藻(수조) 39.艾(애) 40.三蔓³⁹⁾(삼만) 41.葵(규) 42.福草(복초) 43.禮草(예초) 44.葳蕤⁴⁰⁾(위유)

- 제16권 (月令 五行) 1.月令 2.五行 木 火 土 金 水 (禮泉井附見)

- 제17권 (物精 災異) 1.宅舍 2.光 3.血 4.穴⁴¹⁾ 5.毛 6.衣服 7.床 8.刀劔 9.鏡 10.鼎 11.

29) 원문은 色의 이체자로 쓰여 있으나 폰트 지원이 안되어 色으로 표기함.

30) 원문 軍(군)은 暈(훈)의 오기로 보임.

31) 제11권 항목명에는 숫자가 없으나 필자가 편의상 붙여 표기함.

32) 본문 제목에는 [候]가 들어가 있음.

33) 본문 제목은 廻風이고, 또 내용상 雨는 잘못 붙여진 衍字임.

34) 원문에 革과 비슷한 글자는 草의 이체자. 본문에 草俗과 이체자를 혼용하고 있다.

35) 穀(곡)은 穀(곡)의 이체자임.

36) 원문 형태가 必凶匕의 합자형인 𪎭으로 보이고, 이 글자는 울창주 창(鬯)의 이체자임. 己는 乚으로도 읽힘. 거창(拒鬯)은 검은 기장쌀(黑黍米)로 만든 제례용 울창주 술.

37) 원문 글자는 𪎭+蕒이나 蕒으로 대체함.

38) 藜(러)는 藜(러)의 이체자임. 남가새 리(藜)와 상통함.

39) 원문은 (𦰩+蔓)이나 蔓(만)으로 대체함.

40) 원문 (卅+𦰩)은 蕤(우거질 유)의 이체자. 蕤, 蕤 등 여러 이체자가 있다.

釜 12.甌 13.甕 14.印璽 15.金膝 16.環 17.玉 18.貝 19.蘓 20.胡鉤⁴²⁾ 21.山 22.石 23.船 24.金車 25.根車 26.象車 27.山車 28.烏⁴³⁾車 29.威香^[車]⁴⁴⁾

- 제18권 (禽蟲 災祥) 禽惣載(금총재) 1.鳳凰(봉황) 2.發明(발명) 3.焦明(조명) 4.鸛鶴(숙학) 5.幽昌(유창) 6.鸞(란) 7.吉利鳥(길리조) 8.富貴鳥(부귀조) 9.鶯鶯(악작) 10.商翔⁴⁵⁾(상상) 11.鷄鵬(계거) 12.海鳧(해부) 13.鶯丘(목구) 14.號⁴⁶⁾(호) 15.跂⁴⁷⁾踵(기종) 16.潔鉤(결구) 17.泉溪(호계) 18.酸興(산흥) 19.蜚⁴⁸⁾鼠(자서) 20.鶻鶻⁴⁹⁾(필방) 21.勝遇(성우) 22.鷗⁵⁰⁾(우) 23.大鵬(대악) 24.鴝(구) 25.鷗(一名比翼) 26.鷗(구) 27.鶴(학) 28.鸛雀(관작) 29.鶯(아) 30.鴈(안) 31.鳧⁵¹⁾(부) 32.鶻鶻⁵²⁾(제호) 33.鶻(추) 34.鴈(역) 35.鷗(구) 36.白鶻(백로) 37.世樂(세락) 38.鷄(계) 39.雉(치) 40.烏(오) 41.鷗(작) 42.鶻(순) 43.鷗胡(자호) 44.鶻(연) 45.雀(작) 46.鶻(안) 47.鶻鶻(구옥) 48.鶻(격) 49.鶻鶻(구옥) 50.反舌(반설) 51.載鶻(재임) 52.鶻(응) 53.鶻(구) 54.鶻(연) 55.鶻(호) 56.鶻(호) 57.蟬(선) 58.蠅(승) 59.蠅蠅(멸몽) 60.胡蝶(호접) 61.蜂(봉) 62.蟪蛄⁵³⁾(당랑) 63.魚(어) 64.龜(귀) 65.黿(궤) 66.蟹(해) 67.虫(충) 68.蜘蛛(지주) 69.蝗(황) 70.蚯蚓(구인) 71.蟻(의) 72.螻蛄(루고) 73.蝦蟆(하마) 74.射妖(사요)
- 제19권 (百獸 災祥) 獸惣載(수총재) 1.麒麟(기린) 2.象(상) 3.馬(마) 4.牛(우) 5.羊(양) 6.犬(견) 7.虎(호) 8.狼(랑) 9.熊(웅) 10.猪(저) 11.麋(미) 12.麋(주) 13.麋(군) 14.麋⁵⁴⁾(괘) 15.鹿(록) 16.驪(장) 17.駿牙(준아) 18.狐(호) 19.菟(토) 20.獾(원) 21.狸(리) 22.獺⁵⁵⁾(유) 23.獺(달) 24.犀(서) 25.獺(해치) 26.兕⁵⁶⁾(시) 27.白澤(백택) 28.狡(교) 29.比肩(비견) 30.周巾(주건) 31.角端(각단) 32.狸力(리력) 33.長舌(장설) 34.猾(활) 35.

41) 穴(육)은 肉의 이체자.

42) 목록에는 있으나 본문에는 蘓(어), 胡鉤(호구)가 없다.

43) 이체자 형태를 권18의 글자와 대조하면 烏(오)가 됨.

44) 목록은 威車(위거)이나 본문에 威香(위향)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반절음을 許昌反이라 하므로 威香이 타당해 보임.

45) (羊+鳥)는 翔의 이체자

46) 목록은 이체자(號)로 표기하나, 본문에서 호(號)로 표기하고 있음.

47) 목록은 跂(발)이나 본문에서 반절음 丘跂反(구시반)의 跂(기)로 표기하고 있음.

48) 蜚는 (此+鼠)의 이체자

49) (方+鳥)는 鶻의 이체자

50) 鷗(우)는 鷗(우)의 이체자. 새 종류로, 올빼미와 흡사하고 사람 얼굴에 네 눈에 귀가 있다. 이 새를 보면 큰 가물이 든다.

51) 원문 鳧(부)는 鳧(부)의 이체자.

52) 목록은 鶻(고)이나 본문은 鶻(호)임.

53) 蟪(랑)은 蟪(랑)과 같은 글자.

54) (鹿+旨)는 麋의 이체자

55) 獺(유)는 獺(유)의 이체자

56) 兕(광)는 兕(시)의 이체자

朱厭(주염) 36.玃⁵⁷(기) 37.朱儒(주유) 38.蚩(비) 39.蝟(위) 40.鼠(서)(服翼附見) 41.龍(룡) 42.蛟螭(교리)

- 제20권 (祭禮 交應) 祭惣載 1.封禪 2.郊 3.祭日月 4.迎氣 5.巡狩 6.社稷 7.宗廟(拜墓附見) 8.藉田(蠶附見) 9.靈星 10.三司 11.明堂 12.五祀 13.高禩 14.祭風雨 15.雩 16.祭水 17.禘 18.儺 19.祭馬 20.治兵 21.祭向神 22.祭鼓鼙 23.盟誓 24.振旅 25.樂祭 26.祭日遭事

5. 이상에서 권1 「조례목록」은 대왕전하에게 올리는 「계문」과 재이 용어 설명, 재이 해석의 사례, 천지의 분야설, 소재복지의 길흉 화복론에 이어 전체 목록까지 수록한 것으로 총론격에 해당한다.

이중 <명분야(明分野)>는 재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자세히 살펴본다.

살수진은 “대저 분야(分野)란 구주(九州)의 전야(田野)이며, 아울러 우리러서는 상천(上天)에 연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례』 ‘춘관’에 ‘보장씨(保章氏)가 성토(星土)로써 구주의 땅을 분변하고, 재요와 상서를 관찰하였다.’고 하였다.”⁵⁸⁾ 이와같이 분야는 지상의 땅을 9개 밭으로 나눈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하늘에도 9개의 성토(星土)를 구분하여 지상과 상천을 대칭시켰고, 그 구주와 성토에 발생하는 요상(妖祥)을 살핀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토(星土)란 말이 흥미로운데, 하늘에 별의 땅을 만든 것이다. 『서상지』가 제시한 9개의 성토는 28수 별자리를 9개 구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를 지상의 9주 분야와 연계하였는데, 이를 살수진은 분야지성(分野之星)이라 일컬었다. 말하자면 28수 9주 성토 분야론이 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 다음의 정나라와 진나라 경우를 수록하고 있다.

※ <28수 구주 성토 분야설>

9국(國) - 9주(州) - 9방(方) - 9 성토(星土)

정(鄭)나라 - 하남(河南) 예주(豫州) 지역 - 동남방 - 각수(角宿)와 항수(亢宿)

진(晉)나라 - 하내(河內) 기주(冀州) 지역 - 서남방 - 삼수(參宿)와 성수(星宿)

57) (玃+几)는 玃(기)의 본자. 토끼 주둥이에 뱀 꼬리를 가진 野獸.

58) 夫分野者，九州之田野也，並仰繫上天矣。故『周禮』曰，保章氏以星土，辨九州之地，以觀祲祥也，『동휘』 4-318.

그런데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9개로 가르다는 것은 동서남북의 8방위에다 중앙을 합한 9궁(宮) 관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위의 각수, 항수 등은 적도 주변의 28수 별자리여서 중앙 방위에 배당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28수 별자리를 처음으로 9궁의 구천(九天)으로 분속하였던 『여씨춘추』 「유시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8수를 단순히 9개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었다. 이에 따라 구천 중 중앙 하늘인 균천(鈞天)에는 28수의 처음인 각수, 항수, 저수를 배치하였고, 동쪽 하늘인 창천(蒼天)에 방수, 심수, 미수를, 동북방 변천(變天)에는 기수, 두수, 우수를, 북방 하늘인 현천(玄天)에는 녀수, 허수, 위수, 실수를 배당하는 방식이었다.(표 1) 살수진이 말한 것은 각수(角宿)와 항수(亢宿)를 중앙이 아닌 동남방에 배당한 것이어서 『여씨춘추』의 구야론(九野論)과는 다른 계통임을 보여준다.

〈표 3〉 『여씨춘추·유시람』 및 『회남자·천문훈』에 실린 구야론

방위	중앙	동	동북	북	서북	서	서남	남	동남
9천	鈞天	蒼天	變天	玄天	幽天	顯天	朱天	炎天	陽天
28수	角亢底	房心尾	箕斗牽牛	婺女虛危營室	東壁奎婁	胃昂畢	觜窩參東井	興鬼柳七星	張翼軫

28수가 중앙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는 문제점 때문인지 『서상지』는 이어서 『낙서(洛書)』의 것이라 인용하면서, 28수를 12지 방위와 12차 성토 및 12주와 12국으로 대응하는 28수 12차 분야론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는 적도의 360도 원주를 12등분하는 관점이므로 한 분야당 30도 구간을 갖게 되며, 그에 따라 9주도 12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12차(次)는 고대 중국에서 목성의 공전궤도를 관찰하고서 매년 목성이 머무르는 별자리 구역을 제1 성기차(星紀次)부터 매겨 제12 석목차(析木次)까지 순환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12차 성토 관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8수 12차 성토 분야설>

12차(次) - 28수 분도(分度) - 12진(辰) - 12주(州) - 12국(國)

1. 성기(星紀) - 남두 12도~수녀 7도 - 축(丑) - 양주(楊洲) - 오(吳)와 월(越)
2. 현효(玄杲) - 수녀(須女) 8도~위 15도 - 자(子) - 청주(靑州) - 제(齊)
3. 추자(婁) - 위(危) 16도~규 4도 - 해(亥) - 병주(并州) - 위(衛)
4. 강루(降婁) - 규 5도~위(胃) 6도 - 술(戌) - 서주(徐州) - 노(魯)
5. 대량(大梁) - 위 7도~필 11도 - 유(酉) - 기주(冀州) - 조(趙)
6. 실침(實沈) - 필 12도~정 15도 - 신(申) - 익주(益州) - 진(晉)과 위(魏)
7. 순수(鶡首) - 정 16도~류 8도 - 미(未) - 옹주(雍州) - 진(秦)
8. 순화(鶡火) - 류 9도~장 17도 - 오(午) - 삼하(三河) - 주(周)
9. 순미(鶡尾) - 장 18도~진 11도 - 사(巳) - 형주(荊州) - 초(楚)
10. 수성(壽星) - 진 12도~저 4도 - 진(辰) - 연주(兗州) - 정(鄭)과 한(韓)
11. 대화(大火) - 저 5도~미 9도 - 묘(卯) - 예주(豫州) - 송(宋)
12. 석목(析木) - 미 10도~두 11도 - 인(寅) - 유주(幽州) - 연(燕)

이 12차 성도 분야론은 『한서』 「율력지」에서 처음 제시된 천문학 이론이며, 『서상지』는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 축자해술 등의 12지는 지상의 방위가 아니라 목성이 운행하는 궤도인 천구상 황도의 위치를 말한다. 천구에는 방위가 있을 수가 없고, 또 황도상 궤도는 지구에서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이에 착안하여 1년 12월에 매기는 12지 부호를 대응하여 축자해술 등으로 환원시켰고, 그런데 목성의 운행 방향과 지상의 시간 방향이 거꾸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어 자축인묘의 순서가 아니라 축자해술의 역순으로 배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12지는 시간상 방위라 일컬을 것이어서 12세(歲) 혹은 12진(辰)이라 이름하게 된다. 남두와 수녀 사이의 구간에 12차의 처음인 성기(星紀)를 붙인 이유는 이곳에 태양이 동지날 머무는 동지점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성기의 뜻도 그래서 별의 벼리라 명명한 것이라 이해된다. 또 이 성기차에 대응하는 12진이 12진의 처음이 자(子)가 아니라 축(丑)인 이유는 이 12차론을 처음 설립할 때 목성의 위치가 축년(丑年)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구주는 지상의 중국 대지를 9궁으로 가른 것인데, 하나라 우임금에 가탁한 지리서 『우공(禹貢)』(『상서(尙書)』 소재)에 기주(冀州) 이하 9주가 처음 수록되었고, 이를 계승한 『여씨춘추』 「유시람」은 양주(梁州) 대신에 요서지역 연나라 분야인 유주(幽州)로 교체하고서, 여기에다 다시 9국(國)의 분야를 대응시켜 수록하였다. 이 「유시람」의 구주 분야는 예주(豫州, 周), 기주(冀州,

晉), 연주(兗州, 衛), 청주(靑州, 齊), 서주(徐州, 魯), 양주(揚州, 越), 형주(荊州, 楚), 옹주(雍州, 秦), 유주(幽州, 燕)이다.

이후 12차 분야설이 대두되면서 9국이 12국으로 늘어났고, 9주도 12주로 늘어난 것이 여기 『서상지』에 실린 28수 12차 12주 12국 분야설이다. 이렇게 12 분야설이 확립되고서는 천상에 천변이 어느 분야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지상 지역의 길흉재이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상지』는 춘추 위(魏)나라 성점가였던 석신(石申)의 이름에 가탁하여, “갑은 제(齊), 을은 동이(東夷), 병은 초(楚), 정은 남이(南夷), 무는 위(魏), 기는 한(韓), 경은 진(秦), 신은 서이(西夷), 임은 진(秦), 계는 북이(北夷)를 관장한다.”고 하여, 중국 주변의 나라를 10개의 십간(十干) 분야로 배당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을(乙) 분야가 되는 셈이다.

또 『서상지』는 『한서』 「천문지」를 인용하여 오행성 성토 분야론을 덧붙이고 있다.

“진(秦)의 강역은 태백성(太白星)으로 측후하고, 낭성(狼星)과 호성(弧星)으로 점을 친다. 오(吳)와 초(楚)의 강역은 형혹성(熒惑星)으로 측후하고, 조수(鳥宿)와 형성(衡星)으로 점을 친다. 연(燕)과 제(齊)의 강역은 진성(辰星)으로 살피고, 허성(虛星)과 위성(危星)으로 점을 친다. …”는 식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행성 측후 분야설>

강역 - 측후 - 성점

진(秦)의 강역 - 태백성(금성) - 낭성(狼星)과 호성(弧星)

오(吳)와 초(楚)의 강역 - 형혹성(화성) - 조수(鳥宿)와 형성(衡星)

연(燕)과 제(齊)의 강역 - 진성(수성) - 허성(虛星)과 위성(危星)

송(宋)과 정(鄭)의 강역 - 세성(목성) - 방성(房星)과 심성(心星)

진(晉)의 강역 - 진성(수성) - 삼성(參星)과 별성(罰星)

오행성을 이렇게 대응시킨 이유는 강역의 방위에 따른 정도라 하겠다. 금성(金星)은 금(金)이므로 오행의 방위상 서쪽이고, 진(秦)나라는 중국의 서쪽 강역이어서 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오와 초나라는 남쪽 강역이어서 남방의 화성(火星)이 담당하고, 연과 제는 북쪽 강역이어서 북방의 수성(水星)이 담

당하며, 송과 정은 동쪽이어서 동방의 목성(木星)이 담당한다. 그런데 진(晉)나라는 위치상 중앙이라기 보다 북쪽 강역이라 보이므로 토성이 아니라 역시 북방의 수성이 담당한다고 보았다.

이 때 측후한다는 것은 날씨를 점후한다는 뜻이어서 이들 오행성을 살펴 각 지역의 날씨를 미리 예상한다는 말이 된다. 『서상지』는 오행에 따른 오방색도 갖다 붙이는데, 『칠요천문(七曜天文)』을 인용하여, 적색은 초(楚), 청색은 제(齊), 황색은 위(衛), 흑색은 연(燕), 백색은 진(秦)을 맡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강역의 점성을 담당하는 별자리로 두 개씩을 덧붙인 이유는 이들이 28수의 사방칠수(四方七宿)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곧 방성과 심성은 동방 청룡칠수(靑龍七宿)의 중심 별자리이고, 목성이 동방의 기운이므로 이것으로 점성한다는 식이다. 오초 강역을 맡은 조수(鳥宿)는 주작(朱雀) 별자리의 다른 이름이며, 따라서 남방의 주작칠수(朱雀七宿)로 점성한다는 것이고, 허성과 위성은 북방 현무칠수(玄武七宿)의 대표 별자리이므로 북쪽의 강역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삼성과 별성은 서방 백호칠수(白虎七宿)에 속하는 별자리여서 서쪽의 강역으로 배당되어야 하는데, 서쪽 강역인 진(秦)나라가 이미 낭성과 호성으로 배당되어 있어서 나머지 남은 진(晉)나라에 대응시킨 정도로 보인다. 이 때 낭성과 호성은 28수에 속하는 별자리가 아니어서 무언가 착란된 것이 아닐까 보이며, 그렇지만 이 두 별은 서방 백호의 삼성(參星, 오리온)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쪽의 별자리라는 인식이 가능하기는 하다. 아마도 진(秦)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것에는 활을 상징하는 호성(弧星)과 사나운 이리를 상징하는 낭성(狼星)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성적 믿음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서상지』 권1은 점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 지상의 주국(州國) 전야(田野)와 하늘의 성토(星土) 분야(分野)를 나누고 대응하는 각종 이론들을 설명하는 것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

6. 다음으로 권2는 목차상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며, 앞에서 살수진이 홍범구주 중 삼덕(三德) 및 오복(五福)과 육극(六極)의 내용을 권2 「인편(人篇)」에 다루었다고 한 바 있으므로, 내용상 홍범구주론에 입각한 천지인의 재이론을 다루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여기서 삼덕은 상황에 따라 정직(正直, 곧음), 강극(剛克, 강함), 유극(柔克, 부드러움)을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르며, 이 때 극(克)은 능(能)으로, 스스로 성품을 잘 다스리는 것(克爲自治其性)을 말한다.

오복은 오래 살고(壽), 넉넉하고(富), 강녕하고(康寧), 덕을 즐겨 행하고(攸好德), 편안히 임종하는 것(考終命)이며, 육극은 요절횡사하고(凶短折), 질병들고(疾), 우환들고(憂), 가난하고(貧), 흉악하고(惡), 쇠약한 것(弱)이다.⁵⁹⁾ 따라서 오복은 천심(天心)에 합당하여 받는 보응(報應)이고, 육극은 불선(不善)하여 내리는 징벌을 이른다. 권2의 <인변상(人變相)>은 이런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다음 권3은 <삼광(三光)>이라 제명을 달고 있듯이 하늘에 빛나는 세 개의 존재인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재변론을 다루었을 것이라 보인다. 이 삼광으로서의 별은 여기서는 오행성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권3은 세 부분으로 나뉘고, 첫째는 태양에 대한 것이다. 태양의 궤도인 황도(黃道)를 다루었고, 일식의 재변과 이를 없애는 구식(救蝕)을 다루었으며, 그 밖에 태양에 햇무리가 생기고, 해귀고리(日珥) 등 여러 광학현상을 다루고 있다. 둘째는 달에 대한 것이며, 월식과 각종 달에 관한 천변현상을 다루었다. 셋째는 오행성에 대한 것으로, 먼저 오성총론을 말한 뒤, 세성, 형혹성, 진성(鎮星, 토성), 태백성, 진성(辰星, 수성)의 각각을 자세히 논하였고, 다시 이 오행성이 한 곳에 모이는 오성취합(五星聚合) 현상, 나머지 네 개 혹은 세 개, 두 개가 동시에 출현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다음 권4와 권5는 오행성 다음으로 중요한 28수 별자리를 다루었으며,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를 수록하고 있다.

권6과 권7은 하늘의 항성(恒星) 중에서 28수 별자리 외에 하나씩의 모양을 이루는 별자리 전체를 수록하고 있다. 내관(內官)은 기준선이 되는 적도 28수 별자리의 안쪽 별자리를 뜻하며, 북극성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 적도 이북에 위치하는 별자리를 망라한다. 외관(外官)은 그 반대로 적도 28수의 바깥으로 적도 이남에 위치한 별자리를 뜻한다. 여기서 관(官)은 별자리 곧 성좌(星座)를 일컬으며, 고대에 별자리를 인간 세계의 관부(官府) 관직(官職)

59) 번역에는 김학주 역주, 『서경』, 명지대출판부, 1982, 151쪽과 清皮錫瑞撰, 『今文尙書考證』, 中華書局, 1989, 243-276쪽을 참조.

으로 인식한 흔적이다. 이들 수량이 많아서 권6은 내관 98좌와 그에 딸린 4좌를 다루었고, 권7은 내관 46좌에다 부속 5좌 및 외관 90좌와 부속 2좌를 다루었다. 모두 합하면, 내관이 153좌, 외관이 92좌로, 도합 245좌에 달한다. 이 수량은 당나라 초기에 편찬된 『진서』 「천문지」의 별자리 숫자인 245관(1290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서상지』의 권4, 5, 6, 7에 서술된 항성 별자리는 『진서』 「천문지」 체계를 따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진서』가 외관 71좌라 한 것과 차이가 나므로 이 문제는 현재 권7이 남아있어 이를 분석하면 좀더 자세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문제는 후일의 기회로 돌린다.

다음 권8은 유성(流星)에 대한 형상과 현상을 망라하였고, 권9는 혜성과 객성에 대한 현상 전부와 은하수를 다루고 있다.

이상 권3에서 권9까지 7편이 모두 일월성신에 대한 것이며, 천상(天象)으로서 나타나는 천문현상 전체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천상의 천공 공간에서 발생하는 『서상지』 영역이라 하겠고, 그 다음 권10에서 권12까지 3편은 천공보다는 낮고 지상보다는 위에 펼쳐지는 기상현상들로서, 기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이다.

권10은 무리와 운기를 함께 묶어 다루었으며, 달무리와 무지개 등 각종 무리와 각종 기체를 수록하였다. 권11은 우뢰와 번개에 대한 뇌전 및 우박, 이슬, 눈, 서리, 가뭄, 더위, 추위 등 여러 날씨현상을 다루었다. 권12는 내용이 남아있어 더욱 흥미로운 부분이며, 바람과 비에 대해 모두 망라하고 있다. 7세기 당시에 이렇게 자세한 기상현상을 세분하고 체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신라와 고려가 이러한 기상 체계에 기초하여 기상현상을 인식하고 설명하였을 것이라 보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다음 권13에서 권19까지 7편은 오행지학적인 재이론에 따라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권13과 권14는 오사(五事) 재이 내용으로 포괄할 수가 있고, 권15는 백곡과 초목에 대한 재이, 권16은 월령의 계절 변화와 오행의 재이, 권17은 일상기물에 따른 물정(物精) 재이를 다루었고, 권18은 각종 조류와 충류, 어류를 다루면서 발생하는 재이와 상서를 수록하였고, 권19는 네 발의 각종 짐승을 수록하면서 백수(百獸)의 재이와 상서를 다루었다. 특히 권17에서 권19까지는 서술 형식상 해당하는 기물과 동물에 대해 각각의 도면을 첨

부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일부만 전해지고 대부분은 사라져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 자료를 통해 당시 인식하였던 자연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볼 수가 있어 당시의 자연관을 읽어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 권20은 길례(吉禮)로서의 제례 전체를 수록하여, 국가 차원의 제천 의례부터 1년 시간변화에 따른 계절의례들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나당연합군의 공략으로 멸망한 백제와 함께 3자가 천지맹약을 거행하는 취리산(就利山) 회맹제의(665.8)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이 『서상지』(666.4)가 쓰여지기 불과 8개월 전의 사건까지 기록한 부분도 있어 당시로서 매우 생생한 제의 종합서 성격을 지닌다. 여기 길례가 대부분 천지, 일월, 계절, 산천, 수한(水旱)과 풍우 등 당시 고대인들이 인식하였던 천지와 물정,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설정, 생활과 자연의 관계론 등을 담아내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 고대 동아시아적 의례의 자연관을 풀어내기에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보인다.

20권 전체의 구성을 일별하면, 권1에서 권9까지 9편은 천변 중심의 천문의 자연학 측면을 담고 있고, 권10에서 권12까지 3편은 기상 현상 중심의 기상의 자연학이 자세히 담겼고, 권13과 권14의 2편은 꿈, 의복, 육축, 도로, 선박, 동요, 귀신, 혼백 등 일상생활상 만나는 신비와 이상 현상에 대한 나름의 해명이어서 생활신비의 자연학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권15는 식물, 권16은 오행으로 분류되는 자연물, 권17은 기물, 권18은 금충, 권19는 동물을 다루고 있어 각종 분야별 자연물에 따른 상서 재이의 자연학으로 포괄할 수가 있고, 권20은 천인관계를 의례의 자연학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 이 전체는 묶어내는 키워드는 자연과 인간이 비분리되어 있다는 감응적 자연학이 될 것이다. 각각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감응의 논리에 대해서는 분량상 추후의 기회로 돌린다.

IV.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의 교응적 자연학

1. 마지막으로 『고려사』에 인용된 『천지서상지』의 자료를 통해 고려인들의 자연학 면모를 엿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사』의 「태조세가」 15년(932) 5월 갑신일 기록에서, 태조가 신하들에게 효유(曉諭)하기를, 고려 건국 직후 장차의 도움으로 정하고자 서경(西京)을 복구하였는데, 그 노역과 세금이 심한 때문이었는지 민가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재변(民家雌雞化爲雄)과 대풍이 불어 관사가 무너지는 재변(大風官舍頽壞)이 발생하였다 하고서, 이에 대해 복자(卜者)가 해석하기를, “사람이 분에 넘치는 뜻을 품었으므로 하늘이 경계(警戒)를 내린 것”(人懷非分 天垂警戒.)이라 하였고, 또 『상서지(祥瑞志)』에 이르기를 “행역(行役)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부(貢賦)가 과중하면 하민(下民)들이 위를 원망하여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且祥瑞志云, 行役不平 貢賦煩重 下民怨上 有此之應.)고 하였으니, “과인은 이로 인해 천谴(天譴)이 이를까 밤낮으로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감히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竊恐緣此 以致天譴 夙夜憂懼 不敢違寧.), 그리고 이 재이는 군신들이 공도(公道)를 잘 행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원망과 비분을 품어 발생한 것이라 하겠으니 각자 마음을 고쳐 먹어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타일렀다.⁶⁰⁾

이상에서 두 재이 사건을 거론하고서 “『상서지(祥瑞志)』”를 인용하여, 과중한 행역(行役)과 공부(貢賦)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까닭에 재변이 발생하였다 하고서, 이를 하늘이 내리는 견고(譴告)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고대 제왕학의 하나인 천견론이 고려 건국기부터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천견의 징조가 재이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재이 해석의 근거로 제시된 『상서지』가 바로 본고의 『천지서상지』를 지칭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중국 고대 문헌 중에서 ‘상서지(祥瑞志)’란 제명의 책을 찾아보면 『남제서(南齊書)』 「상서지(祥瑞志)」⁶¹⁾가 있으나 해당 내

60) 『高麗史』 2卷 世家2 太祖2 15년조 (壬辰)十五年 夏五月甲申 諭群臣曰, “頃完葦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 今者民家雌雞化爲雄 大風官舍頽壞 夫何災變至此. 昔晉有邪臣 潛畜異謀 其家雌雞化爲雄. 卜云: ‘人懷非分 天垂警戒.’ 不悛其惡 竟取誅滅. 吳王劉渚之時 大風壞門拔木. 其卜亦同 渚不知戒 亦底覆亡. 且祥瑞志云: ‘行役不平 貢賦煩重 下民怨上 有此之應.’ 以古驗今 豈無所召. 今四方勞役不息 供費既多 貢賦未省, 竊恐緣此 以致天譴 夙夜憂懼 不敢違寧. 軍國貢賦 難以蠲免. 尙慮群臣 不行公道 使民怨咨 或懷非分之心 致此變異, 各宜悛心 毋及於禍.”

61) 『남제서』 권18, 지제10에 지명(志名)으로 「상서지(祥瑞志)」가 18쪽 분량으로 짧게 수록되었고, 이어서 권19 지제11 「오행지(五行志)」가 역시 19쪽 가량으로 짧게 실렸다. 만약 위의 계화(雞禍) 재변이 수록된다면 「오행지」에 실릴 성격이라 보이며, 「상서지」는

용이 없고, 문맥상 재이와 천건을 논한 『천지서상지』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잔존본 『서상지』에서 해당 내용을 아직 찾지 못하여 실전된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이나, 이 문제는 『서상지』 전체를 활자화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을 때 더욱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위에 언급된 두 재이 사건 중에서 첫째,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재변은 닭에서 발생하는 계화(雞禍)를 일컫는다. 『고려사』 「오행지」는 이를 목(木)의 재변으로 수록하되, 태조 15년(932) 4월 서경 사람 장견(張堅)의 집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였는데 석달 만에 죽었다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계화에 대한 해석으로, 『한서』 「오행지」는 닭이 시간을 주관하여 생활의 절도를 맞도록 하는 모습이 마치 작은 신하(小臣)가 정무를 돌보는 것과 같으므로 신하가 원인이 되는 재이 사건으로 보았고, 『한서』 「오행지」 제7 중지상 『진서』 「오행지」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업신여기는 징조라 해석하였다. 이런 오행지적 해석에 따라 고려 태조는 신하들이 공도를 잘 못하여 재변이 발생한 것이니 마음을 고쳐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훈시한 것이다.

둘째 대풍으로 관사가 무너지는 재변은 『고려사』 「오행지」가 토(土)의 재변으로 수록하되, 태조 15년(932) 5월 갑신일 서경에 대풍이 불어 관사가 무너지고 지붕기와가 다 날라간 재해가 발생하자, 승려들을 불러모아 경전을 외우게 하는 송경(誦經) 기양(祈禳)을 시행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대풍 퇴괴(頽壞)에 대한 재변적 해석은 『남제서』 「오행지」의 토행편에 따르면, 토(土)는 명철한 마음(思心)으로 오사(五事)의 주인이 되는데 인군(人君)이 명철하지 못하고 전횡하면 그 징벌로 대풍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군주인 태조가 신하들의 잘못을 명철히 판단하여 백성들이 원망을 품지 않도록 하기를 촉구한 것이 된다. 여기서 대풍(大風)은 지금의 태풍과 같다.⁶²⁾

황문랑(黃門郎) 소간(蘇侃)이 찬한 『성황서응기(聖皇瑞應記)』와 영명(永明) 연간에 유온(庾溫)이 찬한 『서응도(瑞應圖)』 등을 참조하여 편찬한 것인데, 백작(白雀), 삼족오(三足鳥), 가화(嘉禾), 연리수(連理樹) 등 상서로운 동식물과 자연물의 사건 위주로 엮었고, 「오행지」는 홍범구주의 오행과 오사(五事) 재이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다.

62)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한중연, 2011)에서 『고려사』 「오행지」 전체가 역주되어 있다.

2. 다음으로 『고려사』, 「오행지」 권53, 화행조(火行條), 인종 8년(1130) 8월 기록 중 일자(日者)가 올린 주언(奏言)에는 명백히 “『천지서상지(天地瑞祥誌)』”를 인용한 대목이 있다.

인종 8년(1130) 8월 을미일 초경(初更, 초저녁 8시경)에 불그림자 같은 적기(赤氣)가 감방(坎方, 북방)에서 일어나서 북두칠성 두괴 안으로 들어가 불규칙하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다가 삼경(三更, 자정 전후)에 이르러서야 없어졌다. 일자(日者)가 아뢰기를, “『천지서상지(天地瑞祥誌)』에 의하면 적기(赤氣)가 화영(火影)처럼 나타나는 것은 신하가 그 임금을 모반할 징조이니, 옆드려 바라건대 덕을 닦아 재변을 해소토록 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⁶³⁾

여기서 적기(赤氣)는 극광(極光)의 일종인 오로라를 뜻하며, 『고려사』 「오행지」에 무려 204건이 기록될 정도로 매우 빈번히 발생한 천변현상이다. 이 적기 천변의 해석에 『천지서상지』를 인용하였고, 내용상 적기는 운기(雲氣)의 일종으로 파악되므로 해당 대목은 아마도 실전된 권10 「운기편(雲氣篇)」 중의 <오색운기(五色雲氣)>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료는 전칭으로 『천지서상지』라 하였기에 더욱 살수진의 『천지서상지』를 분명하게 지칭한다.⁶⁴⁾ 지(誌)는 지(志)와 통하는 글자이다.

이로써 『고려사』 「오행지」와 「천문지」에 실린 천변과 각종 재이 사건의 해석에 『천지서상지』가 원용되었을 측면이 다분함을 읽게 된다. 또 이 『고려사』의 대목은 실전된 『서상지』의 일문(逸文)을 보충하는 역할도 겸하여 그 사료적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아직 잔존하는 『서상지』의 전문이 판독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자화하고 번역하는 작업이 전면적으로 요청된다 하겠다. 이 번역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고려사』 전체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자료 발굴이 가능할 기대성이 있다.

화영의 적기가 북쪽 하늘 북두칠성 두괴 근처에 서너 시간 출현한 사건이 재이 현상으로 간주된 것은, 아마도 이 천변이 기록된 인종 8년(1130) 무렵

63) 『高麗史』 53卷 志7 五行1 火, 仁宗八年, 八月乙未初更 赤氣如火影 發自坎方 覆入北斗魁中 起滅無常 至三更乃滅. 日者奏: “天地瑞祥誌云 赤氣如火影見者 臣叛其君 伏望修德消變.”

64) 김일권, 『高麗史 五行志 譯註(3) 火行篇』, 『고려시대연구』 VIII, 한중연, 2005, 1-79쪽.

이 묘청의 서경 천도 문제를 놓고 정치적 대립이 벌어지던 때여서 그 서경 천도의 부당성이 이미 하늘로부터도 견계(譴誡)로 내려진 것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라 하겠다.⁶⁵⁾

묘청은 요나라(916~1125)가 멸망하고 금나라(1115~1234)가 일어서는 대 격변기에 국권 강화를 위한 서경 천도 운동을 벌였으며, 인종 7년(1129) 서경에 새 궁궐을 지었고, 마침내 인종 13년(1135) 1월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라 하면서 서경 천도난을 일으켰으며 1년여를 버티다 인종 14년(1136) 2월에 진압되었다.

『고려사』 「오행지」에는 이를 시사하는 재이 사건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었다. 예컨대, 인종 7년(1129) 9월에 서경 중흥사(重興寺) 탑에 벼락이 쳤고, 동 8년(1130) 9월에 역시 중흥사탑에 벼락이 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동 9년(1131) 8월 서경 대화궐(大華闕)의 서쪽 산에 산불이 났고, 동 11년(1133) 12월 짙은 안개가 5일간이나 지속되었고 또 나무에 얼음이 맺혔는데 이 대무(大霧)와 목빙(木冰)의 재변은 묘청 등이 왕을 서경으로 행차토록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태사(太史)의 재이적 해석도 실려있다. 자연 재변의 정치적 해석이 강하게 통용된 시대임을 잘 보여준다.

3. 마지막으로 『고려사』 「예지·군례(軍禮)」 중 <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 조목에서도 『천지서상지』가 직접 인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종(靖宗) 6년(1040) 11월 무인일 왕의 조칙에서, “짐이 즉위한 후 호생(好生)할 것을 마음 먹고 새, 짐승, 곤충까지도 모두 나의 혜택을 입도록 하려 하였다. 그런데 세종(歲終)에 행하는 나례(儺禮)에 닭을 다섯 마리씩이나 찢어죽여 역기(疫氣)를 구축(驅逐)하려 하니 짐의 마음이 몹시 아프다. 될수록 다른 것으로 대용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에 사천대(司天臺)에서 아뢰기를, “『서상지(瑞祥志)』에서 말하기를, ‘계동의 달(12월)에 해당 부서에 명하여 대나의(大儺儀)를 행할 때에 두루 토우(土牛)를 찢어 한기(寒氣)를 보내도록 한다’ 하였으니, 청컨대 각각 길이 1척, 높이 5촌 되는 황색의 토우 네 마리를 만들어 닭의 대용으로 삼기 바랍니다.”고 하니 왕이 그대로 하게 하였다.⁶⁶⁾

65) 이희덕, 「高麗史·五行志 譯註」, 『고려시대 천문사상과 오행설 연구』, 일조각, 2000, 254쪽 참조. 여기서는 天地瑞祥誌를 “未詳”(256쪽)이라 처리하였다.

여기 인용된 「서상지운(瑞祥志云)」의 구절은 살수진 편찬의 『천지서상지』 권20 「제례편(祭禮篇)」의 <나조(儺條)>에 “季冬之月, 命有司大儺, 旁磔出土牛, 以送寒氣.”(출이 더 있음)로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고려사』 「예지」의 『서상지(瑞祥志)』가 『천지서상지』의 줄임말임이 분명하다.⁶⁷⁾ 이 때 「오행지」의 인종 8년조에서 지(誌)라 한 것과 달리 지(志)라 표기하고 있다. 곧 『천지서상지(天地瑞祥誌)』와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의 두 표기가 혼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태조세가」 15년조의 『상서지(祥瑞志)』도 허용되는 범위의 글자 출입 문제로 다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예지」의 『서상지(瑞祥志)』와 동일한 서명(書名)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천지서상지』에 인용된 나례(儺禮) 구절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를 인용하고 있듯이 조사 결과, 『주례』 「하관(夏官)」의 <방상씨(方相氏)조> 및 『예기』 「월령」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예기』 「월령」이 계춘(季春)과 중추(仲秋) 및 계동(季冬)으로 분리하여 서술한 것에 비해, 『천지서상지』는 이들을 묶여놓은 정도이다.

그렇다면 『천지서상지』가 왜 『주례』와 『월령』 둘을 인용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나례가 지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주례』의 방상씨 나례 측면으로 장례식에 행하는 축귀(逐鬼) 의례 성격을 말하고자 하였고, 다른 하나는 『월령』의 계절(季節) 의례 측면으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換節期)마다 더위와 추위를 잘 보내고 맞이함으로써 계절적 질병과 역병을 방지하려는 계절적 송기(送氣)와 영기(迎氣) 의례 성격을 담고 있다. 둘다 역귀(疫鬼)를 쫓는 축역(逐疫) 축귀(逐鬼)를 목적으로 삼는 까닭에 같은 나례 형식을 취한 것이며, 그러나 장례식 방상씨는 망자의 천도에 부정을 타지 않게 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월령의 나례는 계절 변환에 따른 한난(寒暖) 기운의 원만

66) 『高麗史』 64卷 志18 禮6 軍禮·季冬大儺儀條, 靖宗六年 十一月戊寅, 詔曰: “朕卽位以來, 心存好生, 欲使鳥獸昆虫, 咸被仁恩. 歲終儺禮, 磔五雞, 以驅疫氣. 朕甚痛之, 可貸以他物.” 司天臺奏: “瑞祥志云: ‘季冬之月, 命有司, 大儺, 旁磔土牛, 以送寒氣.’ 請造黃土牛四頭, 各長一尺 高五寸, 以代磔雞.” 從之.

67) 『天地瑞祥志』 권20 儺條의 전문, “『周禮』曰: 方相氏 [掌] 蒙熊皮 黃金四目 玄衣朱裳 執戈揚楯 帥百隸, 而時難 以索室毆疫. / 大喪先柩(亡+舊). 及墓入壙以戈擊四隅毆方良. 『禮記月令』曰: 季春之月, 命國儺, 九門磔穰, 以畢春氣. / 仲秋之月, 天子乃儺, 以達秋氣. / 季冬之月, 命有司大儺, 旁磔出土牛, 以送寒氣. / 祠令曰: 季冬晦, 堂贈儺儺牲, 於宮門及城四門, 各用雄雞一, 將預前一日, 所司奏聞”(『通彙』 4-445).

한 교체를 목표로 내세운다.

『천지서상지』 및 『주례』 「하관」의 <방상씨>조를 번역하여 살펴보면, 이상 시절(時節)의 축역 나례와 장례식 축귀 나례라는 두 측면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 ① 방상씨는 황금으로 만든 4개의 눈을 박은 곰가죽을 뒤집어쓰고, 검은 색 상의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양손으로 창과 방패를 들고, 100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시절(時節)의 곤란(困難)이 있을 때 집안을 뒤져 역질을 몰아낸다.
- ② 대상(大喪)이 있을 때는 영구(靈柩)의 앞에 가고, 묘지에 이르면 묘광(墓塋)에 들어가 창으로 네 모서리를 쳐서 망량(魍魎)을 쫓아낸다.⁶⁸⁾

위 ①에서 ‘시난(時難)’을 말하고 있는데 나례(儼禮)의 나(儼)가 여기에서 나온 말임을 보여준다. 이에 시난(時難)은 시나(時儼)인 것이다. 말하자면 계절[時]이 때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무언가 어긋나 때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곤란(困難)을 뜻하는 말이 나(儼)이고, 이 계절 이변에 따른 역질과 재해를 방지하고 억제하는 행사를 나례(儼禮)라 이른 것이다. 후술하는 자료를 보면 특히 한기(寒氣)와 난기(暖氣)에 따른 기상변화의 계절조절 의례는 나례의 핵심 관점이 되고 있다.

다음 『천지서상지』에는 『예기』 「월령」과 『사령(祠令)』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번역하여 살펴보면, 시나(時儼)의 환절 의례로 접근되어 있다.

- ① 계춘의 달에, 나라에 명하여 나례를 행하며, 구문(九門, 모든 문)마다 허수아비를 찢어갈라 춘기(春氣)가 마쳤음을 보인다.
- ② 중추의 달에, 천자가 곧 나례를 행하여 추기(秋氣)를 도달하게 한다.
- ③ 계동의 달에, 해당 유사에게 명하여 대나(大儼)를 행하며, 두루 토우(土牛)를 찢어갈라 한기(寒氣)를 보낸다.
- ④ 사령(祠令)에 이르기를, 계동(季冬) 그믐날에 본당(本堂)에서 나(儼)를 보내 궁문(宮門) 및 도성 4대문에서 희생을 찢도록 하되, 각기 소용되는 수탉 한 마리씩을 나의를 행하기 하루 전에 소속 관사에 주문토록 한다.

여기서 『사령』은 당시 당나라 조정의 예부(禮部)에서 사용하던 세부 시행

68) 지재희, 이준영 역, 『주례』, 자유문고, 2002, 362쪽 참조.

령을 일컫는다. 『서상지』에는 많은 사령들이 언급되어 있어 이를 모아 연구하는 의미도 클 것이다. 그런데 『예기』 「월령」은 『여씨춘추』 「십이기」를 전승한 것인데 글자 출입이 있다. 이를 대조하여 제시한다.

자료 1. 『천지서상지』 소재 나례

『禮記月令』曰：季春之月，命國儺，九門磔攘，以畢春氣。

仲秋之月，天子乃儺，以達秋氣。

季冬之月，命有司大儺，旁磔出土牛，以送寒氣。

祠令曰：季冬晦，堂贈儺磔牲，於宮門及城四門，各用雄鷄一，將預前一日，所司奏聞。

자료 2. 『예기』 「월령」의 나례

季春之月，命國難(儺)，九門磔攘以畢春氣。

仲秋之月，天子乃難(儺)⁶⁹⁾，以達秋氣。⁷⁰⁾

季冬之月，命有司大難(儺)，旁磔，出土牛，以送寒氣。⁷¹⁾

자료 3. 『여씨춘추』 「십이기」의 나례

季春之月，國人儺，九門磔攘，以畢春氣。行之是令，而甘雨至三旬。⁷²⁾

仲秋之月，天子乃儺⁷³⁾，禦佐疾，以通秋氣。⁷⁴⁾

季冬之月，命有司大儺，旁磔，出土牛，以送寒氣。⁷⁵⁾

이와 같이, 「십이기」에는 「월령」보다 좀더 자세하며, 계춘의 달에서 “이 월령을 시행하면 감우(甘雨)가 30일간 이른다.”란 말이 덧붙여 있다. 중추의 달에서도 “천자가 곧 나라를 행하여, 역질을 방어토록 도움으로써 가을 기운(秋氣)이 잘 소통토록 한다.”고 부연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나례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음기(陰氣)가 성할 때 역귀(疫鬼)가 이를 타고 일어나 질병과 음해를 일으킨다고 보고서 이를 예방하

69) 「십이기」는 儺.

70) 「십이기」는 禦佐疾，以通秋氣.

71) 『禮記訓纂』，清 朱彬 撰，中華書局，1996，饒欽農 點校排印本.

72) 『예기』, 「월령」에는 ‘行之是令，而甘雨至三旬’의 문장이 없음.

73) 「월령」은 難.

74) ‘禦佐疾，以通秋氣’가 「월령」은 以達秋氣.

75) 高誘注，『呂氏春秋』，上海書店刊，諸子集成本.

고 억제하려는 목적의 역귀 방제 의례라 하겠다. 계절조절의례로서 시나(時儼)로 들어가면, 첫째, 계춘 나 의(儼儀)를 통하여 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寒氣)를 물리침으로써 역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추 나례는 계추(季秋)가 아닌 한가을에 행하는 것인데, 중추의 달에도 여름철 양기가 쇠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되어 역질이 발생한다고 보고서 천자가 가을 기운을 소통시켜 음기를 지상으로 도달하게 하는 의식이다.

셋째, 계동 나 의는 계절이 바뀌는 때이기도 하지만 더욱 큰 한 해가 바뀌는 때이므로 더욱 큰 의의가 부여되며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대나(大儼)라 이름하였다. 따라서 계동 대나 의는 가장 음기가 성한 계동의 끝무렵이자 그 해의 마지막인지라 신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묵은 해의 악귀와 역질을 모두 몰아내는 커다란 의식으로 거행된다. 『고려사』 「예지」나 조선시대에서 계동 대나 의가 연말 궁중의 대규모 행사로 묘사되어 있다. 일제시기 고종황제의 운구행렬에서 황금 눈 네 개를 박은 형상의 방상씨 나 의(儼儀)가 맨 앞에 선도하고 있는 근대사진첩 장면은 그 나 의의 매우 오래된 전승문화 측면을 잘 보여준다. 지금의 우리 민속에서는 설날 직전의 제석(除夕)날 풍속으로서 보다 정월 대보름날 풍속으로서 다소 이동하여 지신밟기나 매굿놀이 등으로 유구한 대나례의 흐름을 쇠고 있다.

덧붙여 『고려사』 「예지」의 정종 6년(1040)조 기록에서 정종대 사천대(司天臺)의 담당자가 대나 의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예기』 「월령」을 제시하였어도 충분하였을 터인데, 굳이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를 전거로 내세웠다는 것은 고려시대 사천대 관원들이 천지 상서와 재변 및 의례 해석의 중요한 준거로 『천지서상지』를 적극적으로 준용하였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⁷⁶⁾

V. 결 론

지금까지 『천지서상지』라는 새로운 문헌 발굴과 분석을 통해 전통시대 자

76) 이상 『고려사』의 『서상지』 인용 대목과 해석은 김일권의 논문(2002)에 다루었던 바이나 이를 좀더 보완하여 여기에 재수록하였다.

연관에서 비중이 매우 큰 감응의 자연학 측면을 살펴보았다. 『천지서상지』가 이제 고려사 연구의 주된 문헌으로 더욱 조망할 필요성이 커지며, 비록 신라에서 흔적이 잡히지는 않지만 고려 태조 15년(932)조 기록은 아직 신라가 존속할 때이기도 하므로 통일신라에서 이 『서상지』를 활용하였을 측면도 앞으로 주목하여 살펴볼 일이다. 고려 초기와 거의 동시기 고대 일본에서 이 『서상지』를 활용한 사실 등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천지서상지』가 가지는 감응적이고 재이론적인 자연학의 가치로 인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에 대해 아직 학계가 주목하지 않고 있기에 본고는 발견은 아니지만 자료 발굴의 성격을 지닌다.

앞으로 잔존본 『천지서상지』에 수록된 동식물, 광물, 기물 등의 자연물과 비바람, 꿈, 혼백 등 자연현상 전반에 대한 서술 내용을 분석하면, 이 시대가 추구하였던 감응 자연학의 면모를 더욱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대 상상력의 보고인 『산해경』이 땅위에 있을 법한 존재들의 신비적 관찰과 보고에 의한 신화지리서 성격을 지닌다면, 『천지서상지』는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지는 자연현상 전반에 대한 관찰과 해석을 담은 신화물리서 성격을 지닌다. 다양한 제례를 통해 자연과 닿고자 하였기에 의례의 신화서 성격도 읽힌다.

여기에는 하늘의 견책이라는 천견사상에 의거하여 천지 사이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서 하늘의 의지를 읽으려 하였고, 이의 역관 방향으로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관찰되는 다양한 자연물을 통하여 하늘에 소통하려 하였던 인간과 자연의 또다른 교응의 방정식이 담겨있다. 그 자연과의 교감 정도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고 상상적이거나 현상적이고 내밀하거나 급격한 까닭에 이들을 포괄하자면 교응의 자연학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 교응의 통로가 크게는 상서(祥瑞)와 재이(災異)로 대별되고, 이에 상통하는 용어로 휴징(休徵)과 구징(咎徵)이 있고, 길조(吉兆)와 흉조(凶兆), 서응(瑞應)과 재응(災應)이 있다. 휴징은 서징(瑞徵)의 뜻이다. 따라서 이 둘을 묶는 말은 재상(災祥)과 휴구(休咎) 및 길흉(吉凶)이 된다. 또 서응(瑞應)과 부응(符應)이 좀 다른 맥락을 지니고, 서응(瑞應)과 이징(異徵)이 가능하고, 물응(物應)과 물정(物精)도 있다. 이렇게 많은 용어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 시대마다 고심이 다르고 자료마다 성격이 같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자체가 우리

문화에서 발달한 교응의 자연학이 매우 풍부할 것임을 시사한다. 재앙(災殃)과 재해(災害), 재변(災變), 재이(災異) 등의 말이 여럿인 것도 다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대개 상서(祥瑞)의 상(祥)이 상서롭다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고대 어법으로는 재앙의 측면을 상(祥)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초상 치르고 나서 1주기를 소상(小祥), 2주기를 대상(大祥)이라 하는 용법에 남아있는데 길(吉)과는 다른 흉(凶)의 맥락이 담긴 말이다.

그럼에도 상(祥)을 서응(瑞應)으로 보는 것에는 남북조 이래 강조된 상서의 관심 때문이다. 대략 시대로 나누어 보면, 재이론은 재변이 강조되는 어법이고, 춘추-진한시대에 발달한 천견(天譴) 중심의 사상이라 보이며, 위진당송대 이후로는 상서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면서 서응이 부각되었다. 이 서응은 견책과 책망을 위주로 하는 천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신상필벌(信賞必罰) 중 신상의 측면이며, 하늘이 보상(報償)하고 위무한다는 의미가 있는 바, 이를 천보론(天報論) 혹은 천찬(天贊)이라 불러 두 방향의 교응 방식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바로 『천지서상지』는 이러한 천보사상 관점이 강한 맥락이다. 아마도 고려인의 관점에서 책망과 보상의 두 관점 중에 서응 위주의 천보를 선호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본다. 고구려 벽화에 화려한 서물(瑞物)적 묘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시대 분위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화물리서로서 『천지서상지』는 물응과 물정, 서응과 이징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사람 모두에게서 찾는 천지 상서의 신화 공간학을 해석한 이야기책이자, 고대인들이 사유하였던 신화자연학 교재라 할 바이다.

참 고 문 헌

1. 저서

- 김용천·최현화 역, 『천지서상지』, 예문서원, 2007.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중연, 2011.
김학주 역주, 『서경』, 명지대출판부, 1982.
이희덕, 『고려시대 천문사상과 오행설 연구』, 일조각, 2000.
지재희, 이준영 역, 『주례』, 자유문고, 2002.
薄樹人 主編,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 河南教育出版社, 鄭州, 1995.
清 朱彬 撰, 『禮記訓纂』, 中華書局, 1996, 饒欽農 點校排印本.
清皮錫瑞撰, 『今文尙書考證』, 中華書局, 1989.

2. 연구논문

- 김일권, 「高麗史 五行志 譯註(3) 火行篇」, 『고려시대연구』 Ⅷ, 한중연, 2005.
김일권, 「전통시대 치생의 문화론과 생태자연학적 산림사상」, 한중연, 2014.
김일권, 「『천지서상지』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 : 찬자에 대한 재검토와 『고려사』 所引 記事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6, 한국고대사학회, 2002.
김용천·김경섭·최현화 공동, 「천지서상지 제1」, 『동국사학』 25, 2003.
中村璋八, 「天地瑞祥志について : 附引書索引」, 『漢魏文化』 7, 漢魏文化研究會, 1968.
太田晶二郎, 「天地瑞祥志略說 : 附けたる, 所引の唐令佚文」,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7, 1972.

Abstract

A Study of Ancient Corresponding Naturology of Sky-Earth Represented in Cheonji-Seosangji During Koryŏ Dynasty

KIM, Il-G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uspicious records written in 『Cheonji-Seosangji(天地瑞祥志)』 as a way of human communicating with the nature in ancient Korea and China. 『Cheonji-Seosangji(天地瑞祥志)』 written in early Tang Dynasty contains various auspicious omens and natural calamities and explains the meaning of these phenomena. Because this book was used to account for astronomical phenomena and many political incidents in Koryŏ Dynasty, it gives a clue to understand the thought about communion with nature and human at that time.

This paper reveals the value of the book 『Cheonji-Seosangji(天地瑞祥志)』 as a key to figure out the ancient mythical thought, showing the contents of this book and the various records that quoted this book during Koryŏ Dynasty.

Key Words : Cheonji-Seosangji, ancient mythical naturology, corresponding naturology during Koryŏ Dynasty, auspicious records of Sky-Earth, communion with nature, ancient astronomy.

* Professor of the Folklor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교신 : 김일권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연구동 414호
(E-mail: namdookim@naver.com)

논문투고일: 2017. 09. 08

심사완료일: 2017. 09. 30

게재확정일: 2017. 10. 01

물고기 이름 유래담의 내포적 의미 고찰

-인물 관련 유래담을 대상으로-

박종오*

- I. 머리말
- II. 인물 관련 물고기 이름 유래
- III. 물고기 이름에 내포된 의미
- IV. 맺음말

국문요약

세상 만물에는 그에 알맞은 이름이 존재한다. 물고기도 각기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고기 이름은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져 왔다. 한자는 한국어 표기에 적합한 문자가 아니기에 어원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물고기 이름이 시작된 유래를 보여주는 설화가 있어 주목된다.

본 글에서는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물고기들의 이름 유래담과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물고기 이름 유래담을 살펴보았다.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유래담은 이름 없는 물고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과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인물의 이름에 근거하여 물고기의 이름이 유래된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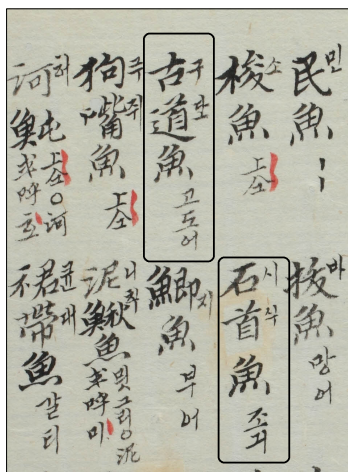
* 목포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강사.

래담에서는 물고기와 관련된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제시된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열되고, 기존 이름에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된다.

이러한 유래담에서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정 지역이 강조되거나 특정 지역을 강조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으로 인식되거나 인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즉, 이명(異名)이 붙여줌으로써 나름대로의 의미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설화를 전승하는 특정 지역 전승집단들의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가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식되기 위한 일정한 의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이다.

주제어 : 물고기 이름, 유래담, 특정 인물, 특정 지역, 의미화.

I. 머리말



<『역어유해(譯語類解)』에 표기된
물고기 이름(부분)>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¹⁾고 하였듯이 세상 만물에는 그에 알맞은 이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바다에 사는 물고기 또한 각기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물고기 이름의 어원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2006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 어도보(韓國魚圖譜)』에 기록되어 있는 약 1,200여종의 어류 이름을 분류한 결과 ‘갈치’, ‘꽂치’처럼 ‘~치’로 끝나는 물고기 이름이 18%로 가장 많

1) 『明心寶鑑』, 省心篇, “天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

았고, ‘고등어’, ‘숭어’처럼 ‘~어’로 끝나는 물고기 이름이 약 16%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물고기 이름이 ‘치’ 못지않게 ‘어’가 많은 것은 한자문화권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주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고기들은 순 우리말 이름 대신 한자 이름을 붙인 까닭이다.²⁾

바닷물고기 이름 어원을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 오는 것이기에 본디 고유 명칭을 찾기도 어렵다. 하나의 예로 1690년에 간행된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고등어를 한자로 ‘古道魚’, 한글로 ‘고도어’³⁾라 표기하고 있다. 조기는 ‘石首魚’, ‘조괴’로 표기하는 등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어가 전면적으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한자(漢字)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어 표기에 적합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런 중에도 고대 삼국에서는 인명, 지명을 비롯한 고유어 표기 방법이 고안(考案)되었고, 신라에서는 향가의 표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나마 이들 고대 자료가 많이 전해져 내려왔다면 그때의 언어의 모습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을 터이지만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적은 일부분뿐이다.

지금까지 물고기 이름 어원을 밝히는 연구는 주로 어휘를 분류하고 계통을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⁵⁾ 그런데 어휘 중심이 아닌 특정 물고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어원 혹은 내력을 밝히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명태의 명칭 기원과 전파를 살핀 김경혜의 연구와 임연수어, 도루묵, 명태의 한자표기와 설화에 관해 고증한 김양섭의 연구가 그것이다. 김경혜는

2) <‘치’와 ‘어’-물고기 이름의 유래>, 『SBSNEWS』, 2009년 11월 20일자 기사 참조(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73839, 2017년 8월 25일 접속).

3) ‘한자 ‘어’(魚)는 그 음이 오늘날에는 ‘어’이지만 15세기에는 ‘어’, 즉 ‘옛이음’(◌)에 ‘ㄱ’이 연결된 음이었다. 그래서 ‘고도어’는 ‘고동어’로 발음된다(홍윤표, 「‘기물치’와 ‘붕어’의 어원」, 『섬표, 마침표』 12, 국립국어원, 2006년 9월).

4) 이기문, 「한국어 어원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47(1), 대한민국 학술원, 2008, 52-53쪽.

5) 물고기 이름과 관련된 어휘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장태진,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 143, 한글학회, 1969; 노재민, 「물고기 이름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윤정옥,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의 형태·의미 구조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명태의 출연시기, 명칭의 기원과 발달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명태의 출현을 최소 조선초기로 설정하고, 조선 중기에 진상품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무태어(無泰魚)를 명태의 선칭(先稱)으로 보고 있으며, 수요가 늘면서 명태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⁶⁾ 김양섭은 임연수어, 도루묵, 명태의 명칭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임연수어는 연승어업의 모습을 담은 한자어에서 명칭이 유래되었고, 도루묵은 그 설화의 내용을 살펴볼 때 태조 이성계가 설화의 주인공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명태의 명칭이 ‘기름을 이용해 불을 밝힌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명 태조 주원장의 묘호 ‘明 太祖’와 한자 표기가 같아 조선 전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이처럼 물고기의 이름을 분류하고 어휘를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명칭 유래에 관한 설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도 물고기 이름이 생겨나게 된 유래담이다. 유래담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틀렸거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유래담의 사실 여부보다는 전승의 지속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래담에는 물고기 이름이 생겨나게 된 내력과 함께 설화 전승집단의 철학적 사유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유래담에 내포된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설화가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원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인물⁸⁾과 관련 있는 유래담은 명명(命名)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화 전승 집단 내에서 전승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물과 관련 있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 여섯 편⁹⁾을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임연수어’, ‘명태’, ‘도루묵’, ‘굴비’ 유래담과 함께

6) 김경혜, 「명태 명칭의 기원과 전파」, 『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국학자료원, 2009.

7) 김양섭, 「임연수어·도루묵·명태의 한자표기와 설화에 대한 고증」, 『民俗學研究』 38, 국립민속박물관, 2016.

8)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인물이란 ‘물고기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된 사람’이나 ‘물고기 이름을 지어주는데 관여된 사람’을 뜻한다.

9) 필자가 찾아본 설화 중에서 인물과 관련 있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래담이 있을 수 있고,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설화들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 의미를 지닌 편수는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군평선이’, ‘을문이 고기’ 유래담이 그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나름대로 이름 유래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있고, 지속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 설화들을 대상으로 인물과 관련된 물고기 이름 명명 방식을 살펴보고, 설화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물 관련 물고기 이름 유래

1. 특정 인물의 이름과 관련된 명칭(名稱)

물고기 이름 중에는 특정 인물의 성씨(姓氏) 혹은 이름 - 성과 이름을 모두 합쳐 이름이라고도 한다 - 을 따서 지어진 것들이 있다. ‘임연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임연수어’, ‘평선’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딴 ‘군평선이’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물고기를 잡은 어부의 성씨를 따서 붙여진 이름 ‘명태’도 있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물고기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임연수어(林延壽魚)

임연수어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데, ‘찻치(함경남도)’, ‘새치(강원도 명주)’, ‘가르쟁이(치어; 강원도 강릉)’ 등으로 불리는 물고기이다. 모양이 쥐노래미와 비슷하나 꼬리자루가 가늘고 꼬리지느러미가 깊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이 다르다.¹⁰⁾ 평소에는 수심 100~200m 암초지대에 서식하지만, 산란기(9월~이듬해 2월)에는 해수와 담수가 뒤섞이는 기수지역으로 떠 지어 몰려와서 먹이사냥을 한다. 강원도 영북지역에서는 임연수어가 기수지역으로 몰려오는 2~4월경에 주로 어획한다. 이때 수심 20~30m의 연안에서 자망(刺網; 물속에 옆으로 쳐놓아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그물)으로 어획한 임연수어를 ‘가리쟁이’ 또는 ‘가르쟁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 지역 어부들은 임연수어를 ‘새치’, 청록색 몸빛을 띠는 어린

10) 정문기, 『韓國魚圖譜』, 일지사, 1977, 522쪽.

임연수어를 ‘청새치’라고도 부른다. 즉 ‘새치’라는 명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고기’로 이해된다.¹¹⁾

중종 25년(1530)에 증보·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함경도 토산 조¹²⁾와 영조 33년~41년(1757~1765)에 편찬된 『여지도서』 함경도 물산 조¹³⁾에 각각 ‘臨淵水魚’라는 기록이 보인다.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지은 『난호어목지』에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과 함께 ‘林延壽魚’라는 기록이 등장하게 된다.

임연수어(林延壽魚) 【임연수어】 관북의 먼 바다에서 난다. 배가 불룩하고 몸이 축굽하다. 등은 푸르고 배는 희다. 비늘이 잘고 눈도 작아 황복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머리가 크고 양쪽의 뺨이 납작하면서 넓다. 큰 것은 1자 남짓이고 작은 것도 5~6치가량 된다. 예전에 임연수(林延壽)란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잘 낚았다. 그래서 현지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서 불었다. 『길주지』에는 임연수어(臨淵水魚)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이 비슷해 와전된 것이다.¹⁴⁾(밑줄 필자)

‘임연수어란 물고기는 함경북도에서 주로 잡히는데, 임연수(林延壽)라는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잘 낚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물고기에 붙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물고기를 잘 잡은 사람의 이름에서 물고기 이름이 유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김양섭은 ‘林延壽魚’를 ‘낚시마다 줄줄이 낚여서 올라오는 연승어업(延繩漁業)의 모습을 담아낸 한자표기’라고 하였다. 즉, 임연수어 잡이에 연승어법이 도입된 이후 설화의 창작 소재로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다.¹⁵⁾ 김양섭의 견

11) 김양섭, 위의 논문, 8~9쪽.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咸鏡道, 吉城縣, 土產, ‘사, 삼, 철 다신포에서 산출된다. …<중략>… 삼치, 방어, 임연수어 …<후략>…’, ‘土產 絲·麻·鐵 出多信浦 …… 麻魚, 魴魚, 臨淵水魚 …….’

13) 『輿地圖書』, 咸鏡道(關北邑誌), 咸鏡北道吉州牧邑誌, 物產, ‘사, 삼, 사철 …<중략>… 삼치, 방어, 임연수어 …<후략>…’, ‘物產 絲 麻 沙鐵 …… 麻魚 魴魚 臨淵水魚 …….’

14)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林延壽魚 【임연수어】 出關北海洋. 肚飽身促, 背青腹白. 鱗細目小, 頗似河豚, 而頭大兩頰扁廣. 大者尺許, 小或五六寸. 昔有林延壽者, 善釣此魚, 土人因以名之. 吉州志 作臨淵水魚, 音近而訛矣.’

15) 김양섭, 앞의 논문, 12~13쪽 참조.

해처럼 연승어업을 한자로 기록한 것이 후에 사람 이름으로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설화 내용의 옳고 그름 보다는 현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이 잘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서유구가 『난호어목지』에 기록을 할 때 현지인들이 부르는 물고기 발음에 주목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한자어 표기는 현지인들이 발음하는 물고기 이름을 표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난호어목지』의 기록은 실제 이름이 유래된 설화가 그 지역에 전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따라서 ‘임연수어’라는 물고기 이름은 특정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군평선이

임연수어와 비슷하게 사람 이름에서 이름이 비롯된 물고기가 있으니 바로 ‘군평선이’이다. 군평선이는 온대성 어종으로 우리나라 중부이남 연해에 분포하는데, 여수, 순천 등지에서는 ‘군평선이’, 벌교에서는 ‘엘게빋등어리’, 고흥 등지에서는 ‘썩썩이’, 통영에서는 ‘꾸돔’ 등으로 불린다.¹⁶⁾ 산란기는 4~8월이며 이 시기가 되면 연안으로 몰려온다. 성장 속도가 늦은 편으로 3년이 지나야 10~11cm 정도 자란다. 봄이면 중국 및 우리나라 남서연안으로 이동하여 얕은 바다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면 남쪽으로 이동한다.¹⁷⁾

군평선이는 여수 지방에서 알아주는 생선으로 ‘금풍생이’라고도 부르며, 굴비보다 더 값지게 친다. 이러한 군평선이의 명칭 유래가 여수 지역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로 여수에 부임했을 때다. 어느 날 아침에 처음 보는 생선요리가 식탁에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 맛본 생선의 맛이 너무 좋아 이순신 장군이 놀라며 시중드는 관기에게 이름을 물었는데 관기는 물론이고 아무도 이 생선의 정확한 이름을 몰랐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시중을 드는 관기의 이름이 ‘구평선’인지라 “그럼 이제부터 ‘평선이’라 불러라” 해서 ‘평선이’가 됐

16) 정문기, 위의 책, 345쪽.

17) 《수산생명자원연구센터》(http://www.nifs.go.kr/frcenter/species/?_p=species_view&mf_tax_id=MF0009845, 2017년 8월 25일 접속).

는데, 그 이후로 구워서 먹으면 특히 맛이 좋았기에 평선이 앞에 군(구운)자가 붙기 시작하면서 ‘군-평선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¹⁸⁾(밑줄 필자)

이순신 장군의 일화처럼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군평선이라는 물고기 이름의 유래를 담고 있다. 이름 없는 생선에 ‘평선’이라는 기생의 이름을 붙여주어 ‘평선이’라 불렀다는 내용이다. 그러다가 이 물고기는 구운 것이 더 맛있다는 의미로 앞에 ‘구운(군)’을 붙여 ‘군평선이’가 되었다. ‘불에 구운 평선’이라는 뜻인데, 특정 인물의 이름이 물고기의 이름으로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수지역에서는 ‘군평선이’를 ‘샐서방고기’라고도 부른다. 이는 군평선이가 얼마나 맛이 있든지 ‘본 남편에게는 아까워서 안 주고 샐서방에게만 몰래 차려주는 고기’라는 의미이다. 실제 『한국어도보』에 보면 ‘여수군해에서 잡히는 군평선이가 도미류 중 가장 맛이 좋다.’¹⁹⁾는 기록이 있어 여수지역에서 이 물고기에 대한 소비가 많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명태(明太)

‘임연수어’나 ‘군평선이가’ 사람 이름에서 유래 된 것이라면, 사람의 성(姓)씨에서 이름이 유래 된 물고기가 있는데, ‘명태’가 바로 그것이다. 명태는 우리나라 함경도, 강원도 및 경상북도 연안에서 잡히는 한류성 어종으로, ‘북어(강원도)’, ‘동태(동해)’, ‘선태(동해)’, ‘망태(함남)’, ‘간태(동해)’, ‘강태(동해)’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러한 명칭들은 명태의 상태를 보고 붙여진 이름들이다. 예를 들면 상인들이 신선한 명태를 가리킬 때 ‘선태(鮮太)’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조태(釣太)는 낚시로 잡은 명태를 말하며, 11월경에 강원도 간성 연안에서 잡힌 명태를 간태(杆太)라고 부른다. 평소에는 수심 200~500m의 해저 근처에 서식하지만, 산란기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50~100m 깊이의 모래와 진흙이 섞인 지대에서 산란한다. 한 마리의 산란 수는 25~40만 마리고, 수정 후 10일 만에 부화한다.²⁰⁾

18) ‘군평선이&자리돔’, <수산물이야기>, 《어업 in 수협》, 2014. 08. 21 기사(<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3>, 2017년 8월 25일 접속).

19) 정문기, 앞의 책, 345쪽.

20) 정문기, 앞의 책, 259~260쪽.

현재까지 확인된 ‘明太’의 한자 표기 기록은 1652년에 작성된 『승정원일기』에²¹⁾ 처음 보인다. 이후 국가기록문서에 공식 명칭으로 등장하게 된다. 조선 초기에는 명 태조 주원장의 묘호인 ‘명 태조(明太祖)’를 연상케 하는 ‘명태(明太)’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644년 명조 멸망으로 인해 1652년에 ‘명태’라는 한자표기가 처음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²²⁾

명태라는 명칭과 관련된 설화는 조재삼(趙在三, ?~?)의 『송남잡지』와李裕元(1814~1888)의 『임하필기』에 기록되어 있다.

명천에 태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처음으로 북어를 잡았는데 크고 살 찌고 맛있어 명태라고 이름 하였다. 겨울에 잡으면 동태요, 봄에 잡으면 춘태요, 그 알은 명란이라고 한다.²³⁾(밑줄 필자)

명천(明川)에 사는 어부(漁父) 중에 태씨(太氏) 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 어느 날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고을 관청의 주방(廚房) 일을 보는 아전으로 하여금 도백(道伯)에게 드리게 하였다. 도백이 이를 매우 맛있게 여겨 물고기의 이름을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단지 “태 어부(太漁父)가 잡은 것이다.”라고만 대답하였다. 이에 도백이 말하기를, “명천의 태씨가 잡았으니, 명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 물고기가 해마다 수천 석씩 잡혀 팔도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북어(北魚)라고 불렀다.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300년 뒤에는 이 고기가 지금보다 귀해질 것이다.” 하였는데, 이제 그 말이 들어맞은 셈이다. 내가 원산(元山)을 지나다가 이 물고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오강(五江 지금의 漢江 일대를 말함)에 쌓인 뿔나무처럼 많아서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²⁴⁾(밑줄 필자)

21) 『承政院日記』, 孝宗 三年 九月 十日(戊寅), “사용원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강원도에서 궁궐에 올릴 진상품 가운데 연어알젓을 대구알젓으로 대답하라고 선장(膳狀)에 써놓았는데 명태알(明太卵)을 보내어 일이 혼란스럽습니다. …<후략>…”, “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江原道各殿進上中, 鱈魚卵醢, 代以大口卵醢, 膳狀中書填, 而以明太卵來納, 事極可駭 …<後略>…”

22) 김양섭, 앞의 논문, 20~21쪽.

23) 『松南雜識』, 魚鳥類, “【北魚明太】 …<前略>… 明川 太姓人釣 始得北魚 大而肥美 故名明太. 冬捉則冬太 春捉則春太 其卵謂明卵…<후략>…”.

24) 『林下筆記』 卷二十七, “【明太】 明川漁父有太姓者. 釣一魚使廚吏供道伯. 道伯甚味之. 問其名皆不知. 但道太漁父所得. 道伯曰. 名爲明太可也. 自是此魚歲得屢千. 石遍滿八路. 呼爲北魚. 閔老峰之言. 三百年後. 此魚當貴于今. 其言預驗. 余過元山. 見魚

명천(明川) 고을에 사는 태씨 성을 가진 어부가 잡은 고기라는 의미에서 어부의 성을 따 고기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이다. 명천은 광복 당시 함경북도 동남부에 있었던 군(郡)으로, 갈마포(葛麻浦)·하평(荷坪)·황암진(黃巖津) 등지에서 명태, 대구, 고등어 등을 어획하였다. 명태가 한류성 물고기로 경상북도 이북의 동해안에 널리 분포하며, 함경남도 연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것²⁵⁾을 감안하면 물고기의 특성을 반영한 설화라고 할 수 있다.

명태는 ‘북어’, ‘춘태’, ‘동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그만큼 명태가 많이 잡히고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 되어 소비되었음을 방증(傍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정조 때 학자 이만영(李晩永, ?~?)이 쓴 『재물보』에는 “북해에서 나므로 ‘북어’라 한다.”²⁶⁾는 기록이 있고, 『난호어목지』에는 “생것을 ‘명태’, 건조한 것을 ‘북어’라 한다.”²⁷⁾고 되어 있다. 李圭景(1788~1856)은 『오주연문장전산고』 <북어변증설>에서 “이름은 북어이고, 민간에서 명태라고 부른다. 봄에 잡히는 것은 춘태(春太)라고 일컫고, 겨울에 잡는 것은 동태(凍太)라고 일컫는다. 동짓달에 시장에 나오는 것은 동명태(凍明太)라고 부른다”²⁸⁾고 하였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여항의 가난한 백성들은 신령에게 제사를 모실 때 말린 것으로 중요한 제수로 삼는다.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도 제사 때 올려야 하는 각종 고기 제물을 이것으로 대신한다. 그러니 값은 싼데 비해 귀하게 쓰인다”²⁹⁾고 하면서 명태가 각종 의례에 제수(祭羞)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섭은 “명태의 간에서 얻은 기름으로 어둠을 밝히고, 생사를 수없이 반복하는 까닭에 환생하는 바닷물고기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종 고사나 제사에 올리는 제물(祭物)이 될 수 있었다”³⁰⁾고 보고 있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이름 없는 물고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積如五江之峙柴. 不計其數.”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천군>, <명태>,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내용 참조.

26) 『才物譜』, 卷之七, “【北魚】 出北海 名북어”.

27)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明鮐魚】 俗出呼關生者爲北 명ᄃᆞᆫ 乾者爲 북어”.

28)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北魚辨證說」, “其名曰北魚. 俗其稱則明太. 春漁曰春太. 冬捉曰冬太. 以至月登諸市曰凍明太”.

29)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北魚辨證說」, “而閭巷細民 以此爲脯脩享神 儒家貧匱 亦充籩豆 物賤用貴者也”.

30) 김양섭, 앞의 논문, 26쪽.

있다. 여기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과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인물(A)이 등장한다. 특정 인물(A)은 이름 없는 물고기를 잘 잡거나 혹은 요리를 해서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인물(B)에 의해 인물(A)과 연관된 이름이 물고기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다. 즉 특정 인물(A)의 이름에서 물고기의 이름이 유래된 셈이다. 이 이야기들을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³¹⁾

내용 이름	궁(窮)		변(變)		통(通)	
	지역	내용	인물(A)	내용	인물(B)	내용
임연수어	함경도	이름 없는 물고기	임연수	고기를 잘 잡음	지역민	임연수어라 명명
군평선이	전라도 여수	이름 없는 물고기	평선이	식사 시중	이순신	평선이라 명명
명태	함경도 명천	이름 없는 물고기	태씨	고기를 잡음	도백(道伯)	명태라고 명명

2. 특정 인물의 사건과 관련된 이명(異名)

앞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물고기의 이름으로 붙여진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유래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묵어 : 은어(도로묵)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말짱 도루묵’이란 관용구가 있다. 관련 설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관용구인데, 물고기 이름이 실생활과 연결되면서 이름만은 잘 알려져 있는 물고기이다.

도루묵은 ‘도루묵이’, ‘도루매이’, ‘은어(銀魚;함경도)’, ‘도루묵[還麥魚;경기도]’, ‘도루맥이(함남)’ 등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 동해 연안 중북이북 지역

31) “궁변통(窮變通)은 변화율에 근거한 동양의 변증법이다. ... 『주역』에 ‘역의 원리는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결국 통하게 되면 오래 간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역(易)과 변(變)은 같은 뜻이다. 동양철학의 종주로서의 『역(易)』은 결국 변화를 설명하는 묶음인 셈이다”(나경수, 「광주칠석동고싸움놀이의 문화적 표상과 가치」,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38~39쪽).

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이다. 평상시에는 150m 내외의 모래 진흙지대에 살다가 산란기(11월~12월)가 되면 해초가 많은 물 깊이 1m 내외의 연안에 몰려와 알을 낳고, 먼 바다로 나간다.³²⁾

고려왕과 관련된 도루묵의 이름 유래는 李義鳳(1733~1801)이 쓴 『고금석림』에 다음과 같은 설화로 전한다.

환목(還木). 고려(高麗) 도로묵. 고려왕이 동쪽으로 파천하여 이 물고기를 먹었더니 맛이 좋아 그 이름을 묻기에 ‘목어(木魚)’라고 아뢰니 이름을 고쳐 ‘은어(銀魚)’라고 불렀다. 환궁하여 그것을 먹었더니 맛이 없기에 이름을 도로 ‘목어(木魚)’라 불렀다. 이러한 까닭으로 도로묵이라 칭한다.³³⁾(밑줄 필자)

이 기록에 따르면 도루묵의 본래 이름은 ‘목어(木魚)’였다. 임금이 난(亂)중에 맛을 보고 ‘목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아까웠는지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下賜)한다. 그러다가 환궁(還宮)하여 ‘은어’를 맛보았는데,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맛있게 먹었던 맛이 아니기에 ‘은어’라는 이름 대신 다시 ‘목어’로 바꾸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즉 ‘목어’가 ‘은어’가 되었다가 다시 ‘목어’가 된 셈이다. 이때 ‘먼저와 다름없이. 또는 본래의 상태대로’를 뜻하는 부사 ‘도로’가 이름 앞에 붙어 ‘도로목어’가 되었고, 이후 ‘도루묵이’, ‘도루매이’ 등의 이름을 갖게 된 셈이다.

도루묵을 은어(銀魚)로 하는 것은 “배와 옆구리에 운모가루를 발라 놓은 듯 빛나며 희어서 토박이들이 ‘은어’라고 부른다.”³⁴⁾고 『난호어목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도루묵의 원래 이름인 ‘목어’ 대신 ‘은어’라는 이름이 강조되는 이야기도 전한다.

“〈조사자〉 그 도루묵 유래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옛날에 아마 선조 임금인가 봐. 000한테 피난을 가다가 어디 함경도 쪽 어디 가까운 쪽으로 갔던가봐. 그래서 이제 뭐 참 집을 떠나서 마 쫓겨 가는 판이니까 어떤

32) 정문기, 앞의 책, 376쪽.

33) 『古今釋林』, 東韓譯語, 二字類, 還木, “【還木】 高麗 도로묵. 麗王東遷食此魚而甘問其名則曰木曰 更名銀魚. 還都後食而不甘 還名曰木 故仍稱還木”.

34)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銀魚【도로묵】 …<前略>… 腹肚光白如傳雲母粉 土人呼爲銀魚 …<後略>…”.

음식인들 맛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또 도루묵이 거기 아주 그 담백하고 시원 하잖아요? 이 000 끓여 놓으면은.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은어라 은어. 원래 표준어가 은어입니다, 은어. 은어.”

“(조사자) 언어예요? 은어?”

“은, 은, 은자”

“(조사자) 은자”

“은자. 은어. 말 그대로 은, 은. 은언테, 그이 뭐 인제 피난 생활하고 다시 인제 궁에 돌아 와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그 때 맛이 안 나더란 얘기야. 그래서 임금이 이거 도루 물려라. 도루묵.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유래가. 그거 사실인거 같아요.”

위의 것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2010년에 채집된 도루묵 관련 설화이다.³⁵⁾ 이 설화에서는 ‘은어’라는 이름과 ‘도루묵’이라는 이름만 나올 뿐 ‘목어’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즉, ‘은어’라는 이름이 ‘도루묵’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원래의 이름인 ‘목어’는 설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라는 의미의 사동사 ‘무르다’에 관심을 두어 ‘도로 무르다’가 ‘도루묵’으로 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목어’라는 본래의 이름보다는 이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사건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두 기록에서 강조되는 것은 ‘고려왕(혹은 선조)이 어려운 시절에 맞본 물고기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가 어려운 시절이 끝나자 본디 이름으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절’ 혹은 ‘궁핍한 시기’로 이야기 되는 사건이 특정 물고기의 이름을 하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어려움 혹은 궁핍이 해소되면서 하사한 이름을 거두고 본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즉 특정 인물이 겪은 사건에 의해 본디 있었던 물고기의 이름에 새로운 이름(異名)이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을문이 : 효자 (물)고기

을문이 고기는 우리나라 여러 하천 및 호수에 분포하는 민물고기로 공식 명칭은 ‘밀어(密魚)’다. 비교적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이나 모래가 깔려 있는

35) “은어가 도루묵으로 불리는 사연”, 『한국구비문학대계』(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3_01_FOT_20100207_KDH_DHS_0002&dbkind=2&highlight=도루묵, 2017년 8월 25일 접속).

곳에서 살며, 돌 밑에 잘 숨고, 강 하구의 기수 구역에서도 흔히 보인다. ‘밀어(경기)’, ‘갈통이(평북)’, ‘통거니(평북)’, ‘얼문, 을문어(乙文魚: 충남 논산)’ 등으로 불린다.³⁶⁾

밀어에 관한 기록은 『난호어목지』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棘魚【밀어】 밀어 또한 한강 상류에서 산출된다. 밀알처럼 작기 때문에 내어(棘魚)라고 이름이 붙었다. 래(棘)는 소밀(小麥)이다. 밀어는 초여름에 나타나는데,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삼베이불을 그물삼아 물가에 펴서 잡는다. …<중략>… 속칭 밀어(密魚)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방언으로, 밀의 이삭이 뽕뽕하게 붙은 것처럼 밀어떼가 이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³⁷⁾ (말줄 필자)

밀알처럼 작기 때문에 ‘내어(棘魚)’라고 부르고, 밀의 이삭처럼 뽕뽕하게 붙어서 이동하기에 ‘밀어(密魚)’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밀어를 ‘을문이 고기’라고 부르는 충남지역에는 ‘강웅정’이라는 효자와 관련 된 설화가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조 중엽 가야곡면 산노리에 지체 높은 첨지중추 부사의 의(毅)의 둘째 아들 강웅정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마저 죽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였다. …<중략>… 또 어느 겨울이었다. 어머니는 웅정에게 “야아, 을문이 고기가 먹고 싶구나” 하였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고기를 이 엄동설한에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마당에 소반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청수를 떠다 놓고서는 정성을 다하여 빌었다. “하느님, 저의 어머니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을문이 고기를 잡수시고 싶답니다. 저에게 을문이 고기를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 동안을 빌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더니 소나기와 함께 물고기 한마리가 떨어져 내렸다. 웅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인천리 냇가에 나가 고기의 배를 가르고 내장과 함께 알을 냇가에 버렸다. 그 후 그 알이 부화되어 지금도 을문이 고기는 인천리 냇가에서부터 논산 저수지 사이 5.6km 안에서만 볼 수 있다 하며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강효자 고기”라고도 부르고 있다. …<후략>…³⁸⁾

36) 정문기, 앞의 책, 477쪽.

37) 『蘭湖漁牧志』, 魚名攷, 江魚, “棘魚【밀어】 又產漢水上流 細如棘粒 故以名 棘小麥也 其出以初夏 濱水居人 以布衾張于水濱 罩取之 …<中略>… 俗呼爲密魚 方言呼小麥爲密也”.

위의 이야기는 을문이라는 물고기 이름과 강웅정이라는 효자의 일화가 만나 ‘효자 (물)고기’라는 이명(異名)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설화의 중요 내용은 강웅정이라는 인물의 효행이다. 그런데 이 효행담의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는 물고기가 바로 을문이 고기이다. 즉, 을문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렸고, 이에 물고기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즉 효자의 간절함에 하늘에서 보내준 물고기인 셈이다.

설화의 내용대로라면 을문이 고기는 단순한 민물고기의 한 종류가 아니라 효자를 위해 하늘이 내려준 고기라는 의미를 가진 물고기가 된다. 더군다나 효자는 하늘이 내린 물고기를 마을 앞 냇가에서 손질하는데, 이 때 버린 물고기 알이 부화하여 마을 앞 냇가에서만 서식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 본 마을 사람들은 ‘을문이 고기’에 강웅정이 겪은 사건, 그리고 자기마을 냇가에 서식하는 고기라는 의미를 더해 ‘효자 (물)고기’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3) 조기 : 굴비

앞에서 살펴본 ‘도루묵’이나 ‘효자 (물)고기’ 이야기는 본래 이름이 있던 물고기에 특정 사건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이름이 생겨난 것들이다. 이에 비해 조기와 굴비 이야기는 앞의 두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것이다. 앞의 두 물고기는 특정 물고기에 사건이 더해지면서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면, 조기와 굴비는 특정 물고기의 가공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즉 날 생선과 건조 생선을 상호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는 의미이다. 조기는 특정 물고기의 이름이고, 이를 말린 것을 ‘굴비’라고 불러 서로 구별한다. 이는 청어나 꽂치를 그늘에 말려 과메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만, 이름이 붙게 된 유래가 자세히 전하고 있고, 지역민들도 이를 사실(事實)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조기는 우리나라 서남해 일대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수심이 40~100m인 근해의 모래진흙 바닥에 서식한다. 산란기는 5~8월인데, 곡우(穀雨)를 전후하여 떼를 지어 남쪽에서 서쪽으로 회유한다. 참조기, 수조기, 흑조기 등이

38) 논산문화원 編, 『논파(論山)의 傳說』, “효심의 물고기 을문이(가야곡면 산노리)”, 1988, 69~71쪽.

있는데, 일반적으로 참조기를 조기라 칭한다. ‘참조기’, ‘투망조기’, ‘곡우살조기’, ‘황석어’, ‘석수어’ 등으로 부르며, 어획하여 생선, 굴비 및 젓갈 등으로 소비되는데, 굴비 중에는 초봄(곡우)에 잡아 말린 전남 영광 굴비가 제일 굵고 맛이 좋다.³⁹⁾ 조기는 ‘석수어(石首魚)’라고 기록하는데, 『난호어목지』에는 한글로 ‘조기’라 쓰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석수어(石首魚) 【조기】 몸이 납작하고 비늘이 잘다. 등마루가 얇은 검은색이며 몸 전체가 누른빛 도는 흰색인데 윤기가 난다. 머리에 흰 돌이 2개가 있는데 옥처럼 반짝인다. …<중략>… 동해에서는 나지 않고 오직 서해와 남해에서만 난다. 곡우 전후에 무리를 이루고 떼를 지어 남해에서 서쪽으로 빙 돌아 올라온다. 때문에 조기 잡이는 호남의 칠산에서 시작해서 황해도의 연평도 바다에서 왕성하며 관서의 덕도 앞 먼 바다에서 끝난다. 이곳을 지나면 중국 등래의 바다로 들어간다.…<후략>…⁴⁰⁾

위의 기록을 보면 ‘석수어’라는 명칭이 ‘머리에 돌이 두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곡우를 전후해 이동을 시작하는 조기의 습성과 조기잡이의 시작이 영광 칠산 바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굴비의 이름 유래에 관한 설화가 영광지역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유명한 영광굴비. 이자검으로 인해서 영광굴비가 유명해졌다는 것을 이야기로 말해줄게. 원래 서해안에서 추자도에서 우리 봄 되면은 임자도로 복상하는 조기가 오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 서해안이 물이 좋고, 알이 배는, 알 배어가지고 푸는 그런 바다가 물이 좋다 그것이야. 여기서 머물면서 여 가는데 칠산어장으로 해서 범성포가 수산업으로 다른 데 보다 유일하게 유명해. 그래서 이자검이가 척신으로 맞아가지고 범성포로 유배될 당시에 밥상 우애(위에) 올라오는 조기가 황금조기로서 누래서 알이 배졌는디, 먹어보니 맛이 좋거든. 그래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굴비로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인조대왕한테 올라갔어. 그래서 왕한테 진상을 허니까 왕께서 보고, “이것이 무슨 고기냐.” 고긴 줄 여태 모르고 먹어보고 맛이

39) 정문기, 앞의 책, 348~353쪽.

40)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石首魚 【조기】 身扁鱗細 脊淡黑 通身黃白滋潤 首有白石二枚 瑩潔如玉 …<中略>… 我東東海無之 惟產西南海 穀雨前後 成羣作隊 自南迤西 故其漁之也 始自湖南之七山 盛于海西之延平海 終于關西之德島前洋 …<後略>…”

종고 해서. “나라님한테 거시기 진상해서 잡사보시라고 가져왔다”고.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지어 달라고, 명명해 달라고. 인조대왕께서 보고. 이 황금조기가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고 속에가 골이 들어 있어서 빠다구(빠다귀) 같은 골이 들어 있어서 독(돌) 같이 배겨 있어서 석수어(石首魚)라 하자. 돌 석자, 머리 수자, 또 석두어(石頭魚)라 하자. 돌 석자, 머리두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명명해서 지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왔어, 이자검이가. 그때부터서 조기가 말려서 굴비로 변한다, 이름이 이 이자검이가 어쭙고 꾹꾹하던지, 넘 한테 굴허지를 얹아. 누구한테도. 자기 혼자 주장이지 절대 굴하지 않아. 그래서 굴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굴을 거꾸로 굴비라고 이름을 지어서 오늘날 우리영광에서는 유명한 굴비골이라고 하고, 우명해지지 않았는가? 그때부터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굴비로 인해서 법성단오제가 자연스럽게 생겼고 난장도 트고 모든 풍월객이든지 뭍이든지 모여서 행사도 진행되지 있었지 않았나. 이자검 굴비 이야기로 해서 전설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어.⁴¹⁾

위의 이야기는 ‘굴비’라는 명칭의 유래와 ‘석수어’라는 명칭 유래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자검이 영광으로 유배되어 왔을 때 조기를 말린 것을 굴비라고 불렀다. 이때 굴비는 ‘자신이 비굴하지 않게 살았다’는 의미로 ‘비굴(卑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 ‘굴비’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굴비를 임금에게 진상하였더니 ‘머리에 돌이 있는 고기’란 의미로 ‘석수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즉, ‘석수어’와 ‘굴비’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이자검이라는 인물과 이자검이 임금께 진상한 내용 등을 엮어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본래 이름이 있었던 물고기에 또 다른 이름이 붙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는 물고기와 관련된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제시된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관련된 사건(A)과 사건(B)이 나열되고 이에 따라 기존 물고기 이름에 새로운 이름이 붙는 과정이 설명된다. 즉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셈이다. 이 이야기들을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영광문화원, ‘영광굴비 이야기’, 『영광의 설화』, 2016, 491~492쪽.

내용 이름	궁(窮)		변(變)		통(通)	
	인물	내용	사건(A)	내용	사건(B)	내용
목어	고려왕	동쪽으로 파천(播遷)	목어를 맛있게 먹음	‘은어’라는 새로운 이름 하사	환궁하여 다시 먹으니 맛이 없음	왕이 도로 ‘목어’라 부름
을문이 고기	강응정	어머니 병환	을문이란 고기를 먹고 싶어함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줌	부화한 고기가 인근 지역에 서식	사람들이 ‘효자(효)고기’라 부름
조기 (굴비)	이자겸	영광으로 유배	굴비를 임금께 진상	석수어라는 이름을 하사	남에게 굴하지 않음	조기 말린 것을 비굴을 뒤집어 굴비라 칭함

Ⅲ. 물고기 이름에 내포된 의미

지금까지 인물과 관련 있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 여섯 편을 살펴보았다.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물고기의 이름이 유래된 ‘임연수어’, ‘군평선 이’, ‘멩태’와 함께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도루묵’, ‘을문이고기’, ‘조기(굴비)’의 유래담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여섯 편의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역을 강조하여 토속성 부각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물고기 이름을 붙이게 된 과정이기도 하지만,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지역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 가) 임연수어(林延壽魚) 【임연슈어】 **관북**의 먼 바다에서 난다.
- 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직전 전라좌수사로 **여수**에 부임했을 때다.
- 다) (함북)**명천(明川)**에 사는 어부(漁父) 중에 태씨(太氏) 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
- 라) 옛날에 아마 선조 임금인가 봐. 000한테 피난을 가다가 어디 **함경도** 쪽 어디 가까운 쪽으로 갔던가봐.
- 마) (충남 논산)**가야곡면 산노리**에 지체 높은 첨지중추 부사의 의(毅)의 둘째 아들 강응정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바) 이자점이 척신으로 맞아가지고 **법성포**로 유배될 당시에 밥상 우에(위에) 올라오는 조기가 황금조기로서 누래서 알이 베겼는디, 먹어보니 맛이 좋거든.

위에서 보듯이 특정 물고기는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명태처럼 물고기가 산출되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지역이 강조되고 있다. ‘을문이 고기’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물고기도 있고, 굴비처럼 법성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최고인 것⁴²⁾으로 이야기되는 물고기도 있다. 또한 ‘군평선이’처럼 여수에서 잡히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알려진 물고기도 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들이지만, 특정 지역이 강조되거나 강조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으로 인식되거나 인식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하는 설화도 있다.

은어환목(銀魚還木) 소위 ‘도로목어’라고 한다. 우리 인조께서 남쪽으로 공주를 순행하실 때 ‘목어’를 수라상 위에 올렸는데, 매우 맛있어 ‘은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셨다. 임금께서 궁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다시 진상하였는데 매우 맛이 좋지 않아 명을 내려 도로‘목어’라고 하게 하시니, 이 때문에 지금 ‘도루목’이라고 이름 한다.⁴³⁾

위의 설화는 1624년 이괄(李适)의 반란 때 인조가 공주로 10일간(음력 2월 8일~18일) 파천한 사실을 대입시켜 ‘도루목’과 관련된 내용이 공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실제 도루목은 동해 중부 이북에 서식⁴⁴⁾하기 때문에 공주에서는 잡을 수 없는 고기이다. 그러함에도 ‘도루목’ 관련 설화를 공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은 인조가 다녀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공주라는 지역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설화를 구연하

42) “...<전략>... 그리고 石首魚를 鹽으로 干하야 乾燥하면 ‘굴비’라고하하니 이 이른바 靈光法聖浦 굴비로서 일찍이 朝鮮의 名産으로 著名한 者이다...<후략>...”, ‘巡迴探訪(三百八) 百四十八의 島嶼로 爲群’(『동아일보』, 1927년 05월 06일 5면 기사.)

43) 『松南雜識』, 魚鳥類, “【銀魚還木】俗謂都路木魚. 我仁祖南巡公山 木魚登水刺上甚珍之改名銀魚 駕返更進甚不珍之命還爲木魚 故名還木魚.”

44) ‘도루목’, 『국립생물자원관』(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58878, 2017년 8월 25일 접속).

고 전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선 설화의 진실성 여부 보다는 지역을 강조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물고기 이름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명을 강조하고자 하는 구연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과 연관된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인물의 이름으로 물고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특정 인물이 관련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물고기 이름 유래담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물고기가 특정 지역의 특산품이나 토속 음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은연중에 드러내 놓고 있다.

2. 이명(異名)을 통한 의미화 시도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는 이름이 없던 물고기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도 있지만, 본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즉, 이명(異名)이 붙는 것도 있다.

- 가) 여수에서는 굴비보다 더 값지게 치고, 우스갯소리로 일명 ‘셋서방 고기’라고 부르는데, 본 남편에게는 아까워서 안 주고 셋서방에게만 몰래 치려준다는 의미를 가진 고기이다. 따라서 이 지방에선 군평선이만 잘 먹어도 제대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⁴⁵⁾
- 나) 그이 뭐 인제 피난 생활하고 다시 인제 궁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그때 맛이 안 나더란 얘기야. 그래서 임금이 이거 도루 물려라. 도루묵.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유래가. 그거 사실인거 같아요.
- 다) 그 후 그 알이 부화되어 지금도 을문이 고기는 인천리 냇가에서 부터 논산 저수지 사이 5.6km 안에서만 볼 수 있다 하며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강효자 고기”라고도 부르고 있다.

‘군평선이’의 다른 이름은 ‘셋서방 고기’이다. ‘너무 맛있는 물고기’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담았다. ‘도루묵’은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물고기의 맛과 편안할 때 먹는 물고기의 맛이 다름을 통해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을문이 고기’는 강웅정이라는 사람의 효도 이야기와

45) 전도근, ‘아끼는 사람에게만 주는 금풍생이 구이’, 『원더풀 여수 미래를 창조하다』, 무한, 2008, 218~219쪽.

겹쳐지면서 사람들의 ‘어머님을 위해 효자가 잡은 고기’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특정 물고기가 특정 사건을 만나 의미 있는 이름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특정한 작가에 의해 창작된 텍스트가 아닌, 전승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소통되어 온 설화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서사 텍스트보다 훨씬 더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단의 문화적 기억 물로 구전설화는 이야기 전승집단의 삶의 방식과 사유 체계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라 할 수 있다.⁴⁶⁾ 따라서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는 설화 전승집단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게 마련이다. 즉, 기존 이름에 문화적 의미가 더해져 새로운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화는 많은 시간과 인식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 가) “...<전략>... 그런데 굴비라는 명사가 어느 때 어대서 명명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굴비는 조기(石首魚)를 말린 것인마 년산 七八十만원으로 전남수산업 중에서도 중요한 산물의 하나이라고 한다 ...<후략>...”⁴⁷⁾(띄어쓰기, 밑줄-필자)
- 나) “...<전략>... 李資謙은 귀양살이 도중 영광굴비의 별미를 알고 왕에게 진상 하기까지 했으며 이때부터 영광굴비는 진상품으로 「石魚」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후략>...”⁴⁸⁾(띄어쓰기, 밑줄-필자)
- 다) “...<전략>... 고려 인종 때 威臣 李資謙이 역적으로 몰려 靈光에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다는 뜻을 담아 仁宗에게 진공하면서 「非屈」을 거꾸로 「굴비」라 하였다 한다 ...<후략>...”⁴⁹⁾(띄어쓰기, 밑줄-필자)

위의 예는 ‘굴비’라는 명칭이 신문에 기록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설화 채록 가능성에 관한 문제 등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위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굴비’와 ‘이자점’, ‘비굴’, 그리고 ‘영광’이라는 지역의 의미화 과정을 볼 수 있다.

46) 오세정,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158쪽.

47) ‘聲價 잇는 特産’, 『동아일보』, 1934년 01월 03일 7면 기사.

48) ‘新八道紀(90) 靈光’, 『동아일보』, 1978년 08월 22일 5면 기사.

49) ‘굴비와 돌김의 名産地 靈光’, 『동아일보』, 1984년 06월 08일 5면 기사.

음식문화는 다른 문화요소와 동일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호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 발전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문화요소이다.⁵⁰⁾ 즉 음식은 단순히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 유통, 요리 등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복합된 문화복합체라는 것이다. 음식은 때로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먹을 때가 있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고 알려지기 보다는 일정 지역 내에서 주로 먹었던 토속음식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토속음식으로의 자리매김은 특정 지역의 생물기후학적인 조건과의 연계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명성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구축된 연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⁵¹⁾가 있다. 유래담에 등장하는 이명(異名)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의미화(意味化)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가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식되기 위한 의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물고기들의 이름 유래담과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물고기 이름 유래담 여섯 편을 살펴보았다.

바닷물고기 이름들은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져 왔는데, 한자는 한국어 표기에 적합한 문자가 아니기에 어원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이름 유래에 관한 설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름 유래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진실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설화가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전승되는 이유나 과정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설화에는 이야기를 전승하는 전승집단의 철학적 사유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인물의 성씨나 이름에서 유래된 물고기 이름 유래담은 이름 없는 물

50) 박종오, 「토속음식의 상품화와 어민들의 대응-‘물메기’를 대상으로」, 『인문과학연구』 30,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74쪽.

51) 박정석, 「홍어와 지역정체성 : 흑산도·목포·영산포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8, 179쪽.

고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과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인물(A)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인물의 이름에 근거하여 이름이 붙여진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된 유래담에서는 물고기와 관련된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제시된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열되고, 기존 이름에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된다. 즉 특정 사건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래담은 물고기 이름을 붙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물고기와 관련된 특정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는 명태처럼 물고기가 산출되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들이지만, 특정 지역이 강조되거나 특정 지역을 강조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토속품(음식)으로 인식되거나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즉, 이명(異名)이 붙여줌으로써 의미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는 특정 물고기가 인물과 관련 있는 특정 사건을 만나 의미 있는 이름이 새로 하나 생겨난 셈인데, 이 속에는 설화 전승집단의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여러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고기가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식되기 위한 의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이다.

인물과 관련된 물고기 이름 유래담은 ‘이름 없는 물고기’ + ‘특정 지역의 인물’ = ‘새로운 이름’이라는 도식과 함께 ‘이름 있는 물고기’ + ‘특정 사건(의미)’ = ‘또 다른 이름’이라는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의미’라는 복합적인 문화현상이 어우러지는 의미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됨을 알 수 있다.

물고기 이름 유래담을 좀 더 명확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화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질이 까마귀 먹기를 좋아해서 매번 물위에 떠 있다가 날아가던 까마귀가 그것을 보고 죽은 줄로 여겨 내려가 쪼면, 다리로 감아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기 때문에 오적어(烏賊魚)라고 한다”⁵²⁾

52) 『蘭湖漁牧志』, 魚名攷, 海魚, ‘性喜食烏, 每自浮上, 飛鳥見之, 以爲死而啄之, 乃卷入

와 같이 인물과 관련 없는 유래담이나, “가자미는 전처 자식을 몹시 미워하던 계모가 죽어서 태어난 것으로서, 생전에 하도 전처 자식에게 눈을 흘긴 까닭에 그 죄로 눈이 한 쪽으로 물려 붙었다”⁵³⁾는 물고기 내력담 등과의 비교가 그것이다.

본 글은 특정 인물과 관련 있는 물고기 이름 유래담을 살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설화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외의 물고기 이름 유래담에 대한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水食之, 故謂之烏賊’.

53) ‘바다 50년을 투망하다⑭’, 『어업 in 수협』, 2012. 12. 06 기사.

참 고 문 헌

1. 사료

- 《新增東國輿地勝覽》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才物譜》
《古今釋林》
《蘭湖漁牧志》
《五洲衍文長箋散稿》
《林下筆記》
《松南雜識》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 연구논저

- 김경혜, 「명태 명칭의 기원과 전파」, 『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국학자료원, 2009.
- 김양섭, 「임연수어·도루묵·명태의 한자표기와 설화에 대한 고증」, 『民俗學研究』 38, 국립민속박물관, 2016.
- 나경수, 「광주칠석동고싸움놀이의 문화적 표상과 가치」,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 노재민, 「물고기 이름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논산문화원, 『논피(論山)의 傳說』, 1988.
- 박정석, 「홍어와 지역정체성 : 흑산도·목포·영산포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2,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08.
- 박종오, 「토속음식의 상품화와 어민들의 대응-‘물메기’를 대상으로」, 『인문과학연구』 30,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영광문화원, 『영광의 설화』, 2016.
- 오세정,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윤정옥,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의 형태·의미 구조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이기문, 「한국어 어원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47(1), 대한민국 학술원, 2008.

장태진,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 143, 한글학회, 1969.

전도근, 『원더풀 여수 미래를 창조하다』, 무한, 2008.

정문기, 『韓國魚圖譜』, 일지사, 1977.

홍윤표, <‘가물치’와 ‘붕어’의 어원>, 《섬표, 마침표》 12, 국립국어원, 2006년 9월.

3.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http://www.nibr.go.kr>.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어업 in 수협》, <http://www.suhyupnews.co.kr>.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gubi.aks.ac.kr>.

《SBSNEWS》, <http://news.sbs.co.kr/news/newsMain.do>.

Abstract

An Implied meaning in the fish name derivation tale

-Focused on the related person derivation tale-

Park, Jong-O*

Everything in the world has a name. Each of the sea fish has its name and It also has meaning. But Sea fish names have been written in Chinese writing. However, since Hanja is not a suitable character for Korean writing,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root of Korean. By the way there is a story that shows the origin of the fish name.

In this Research, I looked at the name of the fish that came from the name of a certain person, and the name of the fish that got another name in addition to the original name due to events related to a specific person.

The name of the fish, derived from the surname or name of a particular person, describes the process of naming an unnamed fish. In this process, certain characters related to the fish-friendly area and fish appear, and the name of the fish is derived from the name of this person. In addition to the original name due to an incident related to a specific person, another name is given in the literature. The person related to the fish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person is present are presented. It then lists the events related to the fish and explains the process by which the new name comes into existence.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specific areas related to fish in these

* Instructor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derivation tale. This is because a specific area is emphasized or emphasized on a specific area, thereby recognizing or recognizing it as a local specialty or a local product (food). It also attempts to signify by giving it a name other than its original name. It contains the cultural meaning of tradition groups. In other words, fish from various regions are subjected to a semantic process to be recognized as a special food in a certain area. These things are imaged with another name.

Key Words : Fish name, derivation tale, specific person, Specific area, the process of making meaning.

교신 : 박종오 61035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로 41번길 39번
(E-mail: kfolk@naver.com)

논문투고일 2017. 09. 13

심사완료일 2017. 10. 06

게재확정일 2017. 10. 07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

김명희**

- I. 들어가며: 거대한 유족사회와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 II.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
- III.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 루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1. 억압되고 지연된 애도의 감정공동체:
오월어머니회와 4·16 가족협의회
 - 2. 원통과 깨달음의 감정동학: 유족과 유족을 잇는 세월호 연대
 - 3.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세월호 연대
 - 4. 추모의 지역네트워크와 확대되는 공감장:
지역과 지역을 잇는 세월호 연대
- IV. 토론 및 전망: 대안적 수행집단과 친밀한 공공권의 가능성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5·18과 4·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통하고 있는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을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은 세월호 연대의 작동방식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감정동학에 주목했다. 첫째, 5·18 유가족과 4·16 유가족의 상호응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743). 날카로운 논평으로 글의 논지를 다듬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사회학.

과정에서 발현된 원통과 깨달음의 감정동학, 둘째, 세대와 세대를 동시대적으로 엮어 내고 서로를 참조하여 생성되고 있는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 셋째, 추모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확대되고 있는 공감장이다. 각각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얹힌 생애사적 고통을 뚫고 역사적 반성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새로운 사회연대의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글은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사회운동의 감정적 토대와 문화적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에 구체성을 더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세월호 연대, 유족의 상(喪)의 과정, 루트 패러다임, 감정동학, 역사적 반성.

I. 들어가며: 거대한 유족사회와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한국현대사에서 ‘죽음’이 지닌 사회적 함축은 실로 강렬하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 개발독재와 국가폭력, 사회적 재난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양산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남한 전체 인구 2000만 명 중 4-5%, 북한은 1000만 명 중 13-14%가 사망했다. 사망자의 직계가족만 해도 남한전체 인구의 20-25%, 북한은 50-60%이 달한다.¹⁾ 나아가 전후 현대사의 오랜 침묵을 깨고 1970년대 한국 민중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전태일의 죽음에서, 권위주의 시대 발생한 수많은 의문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 4·16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한국현대사는 죽음을 통해 소통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거대한 유족사회’에 비견할만하다.²⁾

추상수준을 낮춰 구체적인 역사적 국면들로 들어가 보면, 죽음을 통해 소통하는 한국현대사에서 ‘유가족’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였다는 점을 곧 알

1) 『국민일보』, 2016. 4.12.

2)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자살자 유가족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의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그 해 자살자는 13,092명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6). 통상 한 사람의 자살자 배후에는 최소 5-10명의 자살 유가족이 있다고 상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에만 자살유가족은 대략 6만 5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추산 가능하다.

수 있다.³⁾ 실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과정을 견인했던 오월광장 어머니회는 물론 한국 과거청산 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였던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가족, 5·18 유가족, 그리고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사례는 정부와 미디어에 의해 표상된 ‘피해자로서의 유족’이라는 일면적 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유가족’이라는 범주를 서구 근대화 경험에 기반한 확대가족·핵가족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또는 정상가족(the Family)의 이데올로기적 함축에 맞서 제안된 다양한 가족형태론(‘families’)으로도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 한국 정치문화의 심층에 자리한 가족의 존재형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⁴⁾

즉, 정치적 폭력 및 민주화 이행 과정에 연루된 유가족들의 행동동학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구조화할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대항적 친밀권(counter intimate sphere)’, 혹은 ‘친밀한 공공권(intimate public sphere)’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공공적 공간의 대상(代償) 공간으로서 친밀권의 생성 원리에 주목한 사이트에 따르면, 친밀권은 추상적인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간인격적(interpersonal)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친밀한 연대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친밀권은 곧 공공권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공공권의 대부분은 친밀권이 전환되어 생겨났다. 이것이 가족에 기반하되 가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확장으로서 친밀한 공공권이 지닌 정치적 잠재력이다.⁵⁾ 이 개념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유족회의 행위양식

3) 정치적 행위자(political agent)란 행위성을 발휘하여 세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과정에 개입하는 역사적 주체들을 의미한다. 정치적 행위성은 의식과 의도성을 전제하지만, 특정한 역사와 사회, 문화 속에 위치하여 그 사회의 담론, 사유양식, 감성들에 정박된 것이기도 하다. Aretxaga, Begonia, *Shattering Silence: Women, Nationalism and Political Subjectivity in Northern Irel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8-9.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에 연루된 정치적 행위자로서 경상남북도피학살유족회에 대한 연구로는 이동진,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유족회 사건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9(2), 한국사회사학회, 2014; Wright, Brendan, “Raising the Korean War Dead: Bereaved Family Associations and the Politics of 1960-1961 South Korea”, *The Asia-Pacific Journal* 41(2), 2015을 참고하라.

4) 김동춘·김명희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역사비평사, 2014, 11쪽.

5) 사이트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에 대한 전향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 같은 견지에서 정치적 유가족들의 행위 양식은 분단 현대사의 굴곡을 재현하는 동시에 기존의 사회질서를 ‘비트는’ 사회형성의 메커니즘과 긴밀히 맞닿아있다.

이 글이 제목으로 상정한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은 이러한 쟁점을 환기 시키는데 제한적이거나 유용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이 용어는 프랑스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스트르(P. Clastres)의 논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 차용한 것이다.⁶⁾ 그가 국가 이전 사회의 정치원리에서 야만의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원형을 추출해냈다면, 이 글의 맥락에서 이 개념은 거꾸로 문명화된 국가에 의해 야만상태로 내몰린 사회적인 것의 작동방식에서 대안적인 사회형성의 원리를 추출하는데 정향된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 국가가 사회계약의 수호자라기보다 폭력 - 뒤르케임이 말한 ‘강제된 분업’ - 의 주체일 때, 사회가 어떻게 자신을 유지·변형해 가는가에 대한 해명은 한국 특유의 저항적 시민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전(前)-계약적 연대, 즉 신념과 감정에 기초한 공동체가 사회를 결속시키는 분업의 토대라는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대를 사회학 고유의 과제로 상정했던 뒤르케임에게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은 집합의식(consience collective)의 변동 과정으로 설명된다.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평균적 구성원들에게 공통적 믿음과 감정의 총체”이자 “사회적 정신적 유형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과 생존 조건 및 발전 양식을 가지고 있다.”⁷⁾ 그는 자신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 집합적 멜랑콜리, 아노미의 시대로 규정하였고, 지적 아노미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상을 창

율김, 서울: 이음, 2009, 104쪽. 사이토의 논의를 재구성해 필자가 개념화한 친밀한 공공권(intimate public sphere)은 친밀한 영역에 기반한 공공권의 정치적 잠재력을 지칭한다. 김명희,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재구성 장치로서 친밀적 공공권(親密的 公共圈)의 기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6(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366-369쪽; Kim, Myung-Hee, “The Possibility of Intimate Public Sphere: Political Familism of Divided Koreans”, S/N *Korea Humanities* 2(1), 2016.

- 6) 중남미에서 인디언 사회를 연구했던 클라스트는 국가 없는 사회인 원시사회의 경험에 기반해 국가가 문명이 아니라 야만적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는 국가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피에르 클라스트,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홍성흠 율김, 이학사, 2005. 270쪽.
- 7) 에밀 뒤르케임, 『사회분업론』, 민문홍 율김, 아카넷, 2012, 128쪽.

출하는 지적 열광을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시대의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이 집합적 멜랑콜리로부터 집합적 열광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역사적 반성이 매개한다.⁸⁾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반성을 매개하는 감정기제와 동인에 대한 탐구는 아직 미개척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탐구는 - 아담 스미스를 원용한 사이트의 표현을 끌어오자면 - ‘결이 촌촌한 정치감정론’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인다.⁹⁾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시론적이나마, 세월호 참사를 매개로 역사적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연대¹⁰⁾의 국면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형성된 ‘오월 어머니집(오월어머니회)’과 2014년 4·16 참사 이후 만들어진 ‘4·16 가족협의회’의 ‘상호응시’ 과정과 공감 현상에 착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직간접적인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두 유족회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시민사회와 연대함으로써 진실 규명의 동력을 형성해왔다는 점,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공적 기능을 상실했을 때 사건의 진실을 재현하는 공론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¹¹⁾ 무엇보다 두 사례는 유족회라는 감정공동체¹²⁾를 중심으로 촉발된 강력한 행동주의(activism)를 보여주는 유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각각을 독립된 사건으로 다루기보다 두 집단을 비가시적인 형태로 소통시키고 있는 감정의 자장과 그 동학(dynamics)을 탐사하는데 보다 관심을 갖는다. 이 같은 관심과 분석대상은 최근 제안된 ‘공감장(共感場)’ 개념과 호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모든 공감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로부터 공통의 역사적 기억에 기초한 공감 현상들이 갖는 정치성과 문화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감장은 상이한 공감들이 마주치고 투쟁하는 관계의 망으로서 공감이 형성되고 생성되는 사회적 조건을 밝히려는 일종의 인식단위 또는 분석단위를 뜻한다.¹³⁾ 같

8) 유사한 맥락에서 과정 속에 놓여있는 사회적 체험의 구조로서 ‘감정구조’에 착목한 윌리엄스는 한 사회의 변화는 감정구조가 변화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서울: 경문사, 2003, 190-191쪽.

9) 사이트, 앞의 책, 112쪽.

10) 세월호 연대는 4·16세월호 참사의 극복과 해결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참여로 전개된 4·16운동의 연대 양식을 지칭한다.

11) 김명희·김양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7쪽.

12) 감정공동체는 감정에 기반하고 감정적 유대를 결속의 주된 원리로 삼는 공동체를 뜻한다.

은 맥락에서 두 유가족의 강력한 행동주의와 공감을 가능케 한 사회적 조건 및 감정적 동인에 대한 이 글의 해명은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한국 사회운동의 감정적 토대와 문화적 동학을 해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 글의 서술은 ‘오월어머니회’ 및 5·18 유가족의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¹⁴⁾와 4·16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2016년 진행한 「참사 피해자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 대상 실태조사」 자료집, ‘4·16 기억저장소’가 축적한 구술증언집, 그리고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이 유가족 및 형제자매들의 목소리를 담아 출간한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2015), 『다시 봄이 올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2016)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⁵⁾ 각 텍스트는 현상학적 기술과 비개입적 내러티브의 보존 및 기록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재구조화와 재귀적 연구의 공간을 열어놓는다.

이상의 자료에 기초해 이 글은 세월호 연대의 작동방식에서 드러나는 세 유형에 감정동학에 주목했다. 첫째, 5·18 유가족과 4·16 유가족의 상호응시 과정에서 발현된 원통과 깨달음의 감정동학이며, 둘째, 세대와 세대를 동시대적으로 엮어내고 서로를 참조하여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이다. 셋째, 추모의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확대되고 있는 공감장이다. 이러한 상호감정의 발생동학과 유형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유족의 상(喪)의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루트 패러다임’에 대한 미나베 유코의 통찰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13) 전남대 감성인문학연구단이 최근 제안한 공감장(共感場)은 감성의 사회적 성격을 해명하면서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담보하는 인간의 감성적 동인을 분석·비판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15-21, 51쪽.

14) 김화숙, 「여성의 사회적 저항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형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5) 이 외에도 2014~2016년 유가족 간담회를 통한 2편의 녹취록, 진도평목향과 목포신항에서 얻은 참여관찰 결과와 사진 기록, 인터넷 매체에서 유통되는 세월호 관련 사진자료 및 신문기사를 참고·활용하였다.

II.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

일본의 항공기 대형참사 유족의 삶을 연구한 정신의학자 노다 마사아키는 가족 상실을 경험한 유족들은 일정한 통과의례를 수반한 상(喪)의 과정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사별에 직면해 기존의 사회관으로부터 분리되고, 위기로 가득찬 과도기를 통과하여, 새로운 사회관으로의 통합을 찾는다. 그것은 원래의 위치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여행이다. 이 여정을 ‘유지(遺志)의 사회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죽은 사람이 남긴 ‘유지(遺志)’의 실체를 상징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고인의 생명을 영속시키려는 심리기제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유족은 유지(遺志)의 사회화를 통해서 실은 자기 자신의 재(再)사회화, 나아가 -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라는 가혹한 문을 통과하고 난 후 - 사회관계의 재구축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창조적이고 다양할 수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 이 논의를 접목한 미나베 유코는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恨)의 역학』(2015)에서 1970년 전태일의 분신과 그 이후 만들어진 - 1986년 8월 12월 이소선을 초대 회장으로 한 - ‘전국민주화운동유족협의회’의 작동방식을 섬세하게 고찰한 바 있다. 유족들은 크게 비애의 심리 과정, 문화로서의 의례 과정, 그리고 가치의식의 전복을 동반하는 사회 과정을 거쳐 죽은 자와 산 자의 연대라는 너른 들판에서 재(再)사회화 과정을 통과한다. 예컨대 통과의례의 첫 단계는 장례다.¹⁷⁾ 장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유족과 그 이외의 사람들이 비애를 공동으로 표출하는 연대감에서 비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인·강화하는 점에 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비애의 작업’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장례라는 분리의례의 의미를 지닌 문화적 장치는 유족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16) 노다 마사아키,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서혜영 옮김, 팬타그램, 2015, 254-255쪽.

17) 장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해 내는 ‘분리의례’다. 산 자는 장례라는 분리의례를 통해 전이기에 들어가며, 사회에의 재통합 의례를 통해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 반 겐넵, 『통과의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전경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5. 198-199쪽.

18) 미나베 유코,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의 역학』, 김경남 옮김, 민속원, 2015,

상(喪)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녀는 “한국 사회에 특유한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¹⁹⁾을 추출해낸다. 루트 패러다임은 죽은 자를 중심으로 유족과 유족, 유족과 사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집단으로의 이행 혹은 재통합 과정을 가리킨다. 이 작동방식은 터너가 사회극의 전개 과정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반구조(anti-structure)라 말한 것과 유사하다.²⁰⁾ 여기서 사회극(social drama)이란 어떤 사회 공동체 내에 중요한 계기를 형성하는 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구조(structure)’와 ‘반구조(anti-structure)’ 사이에서 전개되는 동적인 사회과정의 단위를 말한다. 구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반구조(anti-structure)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 모델들의 생성을 지시한다. 예컨대 유족과 사회는 ‘민주국민장’이라는 의례 시스템을 통해 일련의 커뮤니티스(communitas)²¹⁾를 형성했다. 광주 망월동이나 모란공원 등에 묻힌 ‘열사’들에게 매년 추모의례를 지내며, 숭배가 이루어진다. ‘추모’의 장에서 반복되는

213-216쪽.

- 19)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은 빅터 터너(V. Turner) 식으로 말하면 문화적 유전코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 민주화운동에 접목시킨 마나베는 1970년 이후 전대일이라는 ‘열사’의 형성을 통해 가동된 루트 패러다임이 선명하고 자각적인 운동으로 이동하게 된 기원을 ‘1980년 광주’에서 찾는다. 그리고 ‘1986년’을 거치면서 이 운동에 이념화된 ‘의(義)’라는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본다. 위의 책, 29, 308쪽.
- 20) 사회극의 전개과정에서 반구조에서 창출된 대체모델은 정치적인 조절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회·정치적 역할행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의두·이기우 옮김, 민속원, 2014, 16, 56쪽.
- 21) 터너에 따르면 사회관계에는 2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법적·경제적인 지위가 구조화되고 분화된 계급적인 체계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한 개인으로 구성된 미분화된 중간집단의 양식이다. 후자를 터너는 커뮤니티스(communitas)라 부르며, 사회생활을 구조와 커뮤니티스를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달리 말해 커뮤니티스란 “역사적·특질적·구체적 개인들 사이의 어떤 매개되지 않은 관계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런 본질적인 방법”을 말한다. 이를테면, 인간적 아이덴티티의 만남인 ‘자발적 커뮤니티스’의 양식 속에서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은 총체적으로 어떤 단일한 동시 발생적·유동적 사건 속으로 흡수된다. 커뮤니티스는 ‘호른다’. 이 흐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상황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자발적 커뮤니티스’라 말할 수 있다면, ‘규범적 커뮤니티스’는 여러 가지 자발적 커뮤니티스를 다소간 지속적인 토대 위에서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려고 시도하는 일종의 하위문화 혹은 하위집단을 말한다. 이 또한 하나의 ‘지속적인 사회체계’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책, 72-81쪽.

의례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 대항 담론과 가치의식을 자신의 내부에 각인한다. 대학생은 운동 동아리에 입회하여 농촌 활동이나 공장 활동, 혹은 야학 교사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민중을 학습하고 세미나, 정기집회에 참여하면서 운동 의례와 문화를 내면화한다. 또한 이 같은 심리·문화·사회 과정을 반복하여 ‘전국민주화운동유족협의회’는 의제(擬制) 친족집단으로 결속되었다.²²⁾ 미나베가 루트 패러다임이라 지칭한 이 대항적 반구조의 작동방식은 죽은 자와 유족, 그리고 유족과 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회적 연대의 발현 양식을, 나아가 한국 저항적 시민사회의 내밀한 발생동학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사회적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재생산·변형되고 있는 과정적 구조를 포착하기에 유용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4·16 이후 세월호 연대의 작동방식이 내보인 특유의 루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도 유망하다.

부연하자면, 정치적 유가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루트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감정은 빼놓을 수 없는 매개적 동인이다. 최근 문화적 전환을 이끈 몇몇 학자들은 정치에서 감정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규정짓는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 유대다. 『열정적 정치』의 편자 중 한 사람인 사회학자 제스퍼(J. M. Jasper)는 사회운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두 종류의 감정을 구별한다. 상호감정(reciprocal emotion)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해 지속되는 감정과 관련된다. 이는 친밀함, 우정, 사랑, 연대, 충성 그리고 그것들이 발생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감정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일컫는다. 또한 공유된 감정(shared emotion)이라 부르는 것은 외부자들에 대해 화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분노를 키운다. 상호감정과 공유된 감정은 비록 구분되지만 서로를 강화하면서 운동문화를 구축한다.²³⁾

이러한 감정적 유대의 구축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문화적 동학이 바로 ‘의례’이다. 의례 행위는 형식을 통해 친밀성을 전달한다. 이 속에서 친밀성과 정체성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다. 반복되는 의례 참여 경험은 연대감 - “우리 모두는 함께 이곳에 있고, 우리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22) 미나베 유코, 앞의 책, 215, 294쪽. 이는 앞서 이 글의 서두에서 말한 대항적 친밀권 혹은 친밀한 공공권의 발생동학과 공명한다.

23) 굿윈·제스퍼·폴레타(편), 앞의 책, 40-44쪽.

있음에 틀림없다” - 을 산출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집합기억 - “우리 모두 함께 그곳에 있었다” - 을 산출한다. 즉, 감정은 정치적 의례가 의존하는 중심축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능력을 지닌 정치적 학습의 수단이다. 이 점에서 감정은 무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감정은 자신과 타자, 주체와 객체, 존재론적인 것과 인식론적인 것을 융합시킨다. 즉 정체성과 정치적 관행의 토대로 감정이 자리하며, 감정은 하나의 대안적인 정치논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이렇게 볼 때 인지와 감정은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 통상 감정과 인지는 둘 중 하나만이 행동을 틀지우는 것처럼 대치되지만 감정은 인지와 서로 묶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²⁵⁾ 즉, 감정은 분별없는 정서적 격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개인이 지닌 중요한 가치와 목적에 맞게 고율된 지적 반응이다. 모든 감정은 세상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유발한다.²⁶⁾ 세월호 참사의 사회과정에서 발현된 독특한 정치감정도 이 같은 가치의식을 내포한 지적 구성물로 이해될 수 있다.

Ⅲ.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²⁷⁾: 루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제까지의 논의를 분석의 자원으로 삼아 ‘오월어머니회’와 ‘4·16 가족협의회’를 교통하는 감정동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두 사례는 유족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의 루트패러다임과 그 경향성을 포착하기 위한 유형적 사례

24) 위의 책, 144-145쪽.

25) 위의 책, 33쪽.

26)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62-77쪽.

27) 감정동학(emotional dynamics)은 감정이 사회운동을 어떻게 이끌고 변화시키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다. 이 개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의 속성을 상황적·관계적 논리로 파악하면서 행위의 양가성이나 맥락성을 설명할 수 있게 돕는다. 박형신·정수남, 앞의 책, 242쪽.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에 대해서는 박형신(2010), 고도경쟁 사회에서 생산되는 공포의 발생 메커니즘과 노동자들의 감정동학에 대해서는 박형신·정수남(2015), 5·18 이행기 정의에 연루된 다층적 행위자들의 부끄러움의 감정동학에 대해서는 김명희(2016)를 참고하라.

로서 의미를 갖는다.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두 감정공동체는 첫째, 진실의 은폐로 진정한 애도가 방해받은 공동체이며, 둘째, 따라서 - 다른 재난 사례와 다소 달리 -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에 맞서 처음부터 진실규명이라는 가치(의식)를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 삼은 공동체라는 점, 셋째, 처음에는 자조모임의 성격에서 출발한 공동체가 점차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기존의 사회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직접행동과 사회연대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점, 넷째, 사회운동을 통해 애도와 치유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장의 주된 관심은 두 정치적 유가족의 상호소통 과정에서 발현된 감정동학이 4·16 운동이 촉발한 세월호 연대 특유의 루트 패러다임과 대안적인 정치논리의 핵심적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논하기 위해 우선 각 감정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억압되고 지연된 애도의 감정공동체: 오월어머니회와 4·16 가족협의회

1) 오월어머니집(오월어머니회)의 형성과 활동

2004년 4월 개관한 광주광역시 양림동 소재 ‘오월어머니집(오월어머니회)’의 전신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발족한 ‘5·18구속자가족회’다. 1980년 5월 27일 정부군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하고, 5·18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맨 처음 ‘5·18구속자가족회’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등 여러 단체가 결성되어 5·18피해자 규명, 5·18 진실규명, 관련자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등의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그 중 5·18구속자석방과 5·18진실규명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5·18구속자가족회’는 노영숙에 따르면 일련의 ①태동기(1980-1983), ②저항기(1983-2000), ③성장기(2000-현재)를 거쳐 2000년 오월여성회(현 ‘오월어머니회’)로 거듭나게 된다.²⁸⁾

28) 오월어머니집 구성원의 대다수는 5월 항쟁에서 사망과 부상 또는 구속된 피해자의 가족들이며 일부는 본인이 직접 5월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태동기에 해당하는 5·18구속자가족회는 재판에 대한 공동 대책을 모색하면서 1980년 8월 결

특히 광주항쟁 20주년이 되는 2000년 5월 ‘오월여성회’로의 개편은 성장기(2000-현재)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당시 ‘5·18구속자가족회’를 이끌었던 안성례 전회장을 비롯한 주요 멤버들은 5·18의 진실을 바르게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는데 5·18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오월여성회’를 창설하였다. ‘오월여성회’는 매월 모임을 갖고 회원들 간의 교류를 다지며 치친 심신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또 ‘오월여성회’ 가족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풀어 책을 만들어 5·18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2006년 11월 개소한 ‘오월어머니집’은 광주 운동권의 젊은이들이 작은 한옥 한 채를 임대하여 -마땅히 모일 곳이 없었던- 오월여성회에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오월여성회’를 ‘오월어머니회’라 개명하고 광주광역시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다. 상주할 공간을 마련한 오월어머니집(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은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 오월어머니상 시상사업, 민족화해를 위한 국내외의 운동 단체들과의 교류사업,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어머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오월어머니집 프로그램을 통해 오월어머니들의 삶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외로운 노년을 보내야했던 어머니들이 오월어머니집에 모여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고 생기를 되찾아 점차 삶에 애착을 찾게 된 것이다. 오월어머니집은 인권NGO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교육 및 재활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도 보유한 다목적 인권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²⁹⁾

흥미로운 점은 가족협의회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수행집단³⁰⁾이자 치유

성됐다. 당시 ‘5·18구속자가족회’는 여러 종교단체의 지원을 통해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찾아가 피해의 규모 및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② 이후 ‘5·18구속자가족회’는 1982년 12월 5·18관련 구속자들이 모두 석방된 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자 1983년 3월 “민주화운동구속자가족협의회(민가협)”로 명칭을 바꾸어 재결집하였다. 점차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단위의 양심수 지원활동을 전개하던 민가협은 1985년 서울의 민주화운동실천구속자가족협의회(민가협)와 연계하여 활동 범위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③ 그리고 오월여성회가 창립되자 과거 ‘5·18구속자가족회’로부터 이어져왔던 ‘광주민가협’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오월여성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노영숙, 앞의 논문, 2015, 44-45쪽.

29) 위의 논문, 29-40쪽

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면모 뿐 아니라, 오월어머니집의 개소 이후 국내 및 국제인권교류의 장이자 아시아 인권레짐의 허브로서 급격히 성장한 과정이다. 노영숙에 따르면 해가 지나면서 오월어머니집은 광주의 명소로 떠올랐고, 회원과 내방객의 수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물론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2011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 혁신전략에 의해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건설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오월어머니집의 역사적 전개와 활동도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³¹⁾

그 활동영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①인권교육을 통한 광주정신의 계승 ②트라우마 치유와 재활센터 ③여성인권 국제교류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이 같은 활동을 매개로 오월어머니집이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국내 및 국제 유가족 인권단체와 서로의 아픔을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종의 ‘규범적 커뮤니티스’³²⁾로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예컨대 오월어머니집은 한국전쟁 이후 피해유족 및 부마사태/민주화운동 유가족, 아르헨티나 오월광장어머니회 및 이란-하바란의 어머니들,³³⁾ 재독

30) 수행 집단(carrier group)은 외상적 사건을 청중 입장에 있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발화자를 뜻한다.

31)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오월어머니집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지방정부-NGO의 파트너십은 지역발전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서 아시아 인권현장의 구축은 오월어머니집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 44-45쪽.

32) ‘규범적 커뮤니티스’에 대해서는 주석 21번을 참고하라.

33) 아르헨티나 ‘오월광장어머니회’는 1976-183년까지 진행된 아르헨티나 군부의 ‘추악한 전쟁’으로 약 9,000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1979년 8월 22일 발족하였다. 군부의 강권탄압은 1983년 12월 10일 민선정부가 들어선 뒤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CONADEP)의 활동과 인권재판을 통해서 공식 청산의 대상이 되었으나 완전하게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오월광장어머니회’는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오월광장어머니회’ 활동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 비폭력 직접행동을 통해 대안적인 저항운동을 지향한 점이다. 박구병,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아메리카연구』 19(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6, 77쪽. 이 역시 다른 사회적 문제를 폭넓게 제기하는 인권NGO로 성장하고 있다. 유사한 유형적 사례로 이란 ‘하바란의 어머니들(Mother of Khavaran)’ 등에 대해선 노영숙, 앞의 논문, 51-55쪽을 참고하라.

한인교회 및 교포단체, 미얀마 88민주어머니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허브단체로 기능하면서 아시아 인권레짐의 일부로 성장하게 되었다.³⁴⁾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에 대한 오월어머니회의 지원활동과 공감의 발화 또한 이러한 토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오월어머니회의 역사과정은 4·16 가족협의회와의 발전과정에서 일정부분 재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자료1〉 광주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2006년 5월 <오월 어머니집 설립 취지문>에는 “이 집은 1980년 5월 (전, 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본인과 그 가족(특히 온갖 고생을 마다 않고 투쟁해 오신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고 쓰고 있다(노영숙, 2015: 41).

2) 4·16 가족협의회와의 형성과 활동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처음에 4·16 유가족은 정치적 이슈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보통 시민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부르짖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자 결사체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이 있었다.³⁵⁾ 유가족은 참사 직후

34) 위의 논문, 46-59쪽.

35) 사건 발생 3일 후인 4월 18일 학부모 명의로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구조 활동이 지지부진한 데다 재난본부에서 대규모 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이 박 전대통령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수백 명의 잠수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구조 현황을 보고하자, 진도 체육관의 가족들은 청장이 보고를 끝마치기도 전에 “거짓말이야!”를 비롯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연합뉴스』, 2014.4.17). 약 열흘 뒤인 4월 29일 세월호 유가족은 유가족대표위원회 명의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형식은 기자회견문이고 제목도 없어 정식 성명서 모양새도 아니었지만 상당한

부터 구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5일 후 정부당국에 대한 구조작업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기 위해 팽목항에서 청와대로 행진한 순간 냉엄한 한국정치의 현실에 직면했다. 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할 뿐 아니라 유가족의 행진을 방해하고 심지어 강제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점차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할 대상이나 불온한 세력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유가족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활동의 목표와 방향성 및 방법을 설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호소문과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촛불시위, 가두시위, 밤샘농성, 장거리 행진, 북 콘서트, 장기 집단단식, 입법청원, 법적 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수단을 통해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행동’했다.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 인터넷 TV 방송국을 개설하여 활동 내용을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등 진실규명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다시 말해 언론의 진실규명 방해와 왜곡 보도에 맞서 유가족 스스로가 사건의 진실을 직접 규명하고³⁶⁾ 청중에게 전달하는 수행집단으로 변모한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의 조직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진실규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들과 연대하고 활동을 조직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은 ①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모임 ②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모임 ③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직접 가입을 지향한 포괄적 형태의 상설모임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사건 직후인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약칭 ‘세월호가족대책위’)가 공식 발표했다. 이후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조직을 정비하여 2014년 9월 21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 ‘4·16가족협의회’)로 공식 출범했다.³⁷⁾ 이런 유가족의 조직적·의식적 변화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감상적 기대의 포기,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의식 변화를 내보였다. 김기석, 앞의 책, 256쪽.

36) 세월호 유가족의 공식 활동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에 직접 나서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없어진 VTS 항적을 직접 복원했고 뒤늦게나마 수거된 가족들의 핸드폰 등에 담긴 영상을 조직적으로 복원했다. 위의 책, 261쪽.

37) 4·16가족협의회 홈페이지 <http://416family.org>.

있었다. ‘분노’는 가치의식의 전복과 감정적 유대를 매개하는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4·16가족협의회’는 억압되고 지연된 애도의 공동체이자 진실과 정의(正義)의 공동체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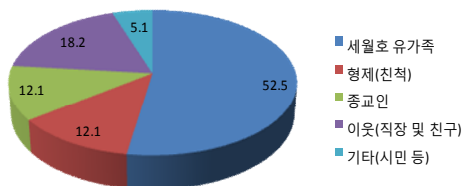
② 그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진실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던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전국의 8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세월호 참사 대응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조직은 실종자 수색구조 촉구 및 진도 팽목항에서 방문자 안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 존엄과 안전에 대한 인권선언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출범과 함께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세월호 운동의 중심체로 등장했다.

③ 참사 1주년이 지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세월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2015년 6월 28일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대책위원회, 자발적 지역모임과 개인들이 합류하여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연대’)를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4·16 참사에 대응한 ‘통합적 상설단체’로 구성되었다. 유가족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빠른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고, 상설적인 논의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4·16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인양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4·16 연대는 다중심성, 자발성, 확장성, 수평적 전국·해외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단체 간 연대기구가 아니라- 시민회원 가입을 기반으로 한 ‘단일한 사회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4·16 연대는 지역 및 풀뿌리 간 수평적 교류·연결(네트워크)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민연대와 구별된다.³⁸⁾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네트워크 방식(지향)의 적극적인 결합은 5·18 진실규명운동과 차이를 가르는 분명한 지점이다. 전례가 없던 양자(유족회와 시민연대)의 전면적 결합은 4·16운동이 촉발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족회를 결속시키는 감정동학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례는 크게 다르다 볼 수 있는데, 인류학자 이현정은 세월호 유가족이 보여준 강력한 행동주의의 원천으로 두 가지 감정 경험에 주목한다. 하나는 국가조직 및 정치적

38) 위의 책, 263-264쪽; 4·16연대 홈페이지 <http://416act.net> 참고.

〈자료2〉 지지가 되어주는 관계



출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6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며, 다른 하나는 자식의 죽음을 막지 못다는 부모로서의 미안함과 죄책감이다.³⁹⁾ 앞서 말했듯 이러한 감정들은 4·16 가족협의회를 하나의 감정공동체로 응집시키는 정서적 토대가 되었다.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별 및 자녀상실 경험을 다룬 현상학적 사례연구는 가족협의회가 애도와

분노의 공동체이자 치유의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유가족들은 불화와 이혼, 소외와 낙인 등 다양한 형태로 겪은 가족관계, 친족관계, 이웃관계, 사회관계의 단절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지가 되어주는 관계”로 세월호 유가족(52.5%) 및 4·16 가족협의회 관련 활동을 꼽고 있다.⁴⁰⁾ 유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의 간담회 초청을 받으면서 위로와 큰 힘을 받았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유족들은 진상규명활동 그 자체를 자녀와의 사별에 대한 애도활동으로 여기면서, 죽은 자녀가 자기 자신의 일부분으로 자아 안에 살아있게 하여 현존으로서의 치유적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⁴¹⁾ 말

39) 이현정, 「수동적 시민에서 저항적 주체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국가권력에 맞서왔는가?」, 서재정·김미경 엮음,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한울아카데미, 2017, 276쪽.

40)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피해자 군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명: 참사 피해자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 대상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6. 8), 57쪽.

41) “간담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간담회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울다가 웃다가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위로가 되는 거는 간담회나 북 콘서트나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내 얘기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을 만날 때 힘이 나더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랑 미움 이런 것도 알아 차려지고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김은미,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상실 경험

하자면 진실규명 활동은 곧 자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다.

2. 원통과 깨달음의 감정동학: 유족과 유족을 잇는 세월호 연대

요컨대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유족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만 빠져있던 것이 아니었다. 유족들은 국가 관료 및 관련자들의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과 마주하면서 국가가 자신들과 같은 소위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유가족들의 정치적인 자각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족들은 그간 사회운동을 자신과는 무관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 여기고 무관심했던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했다. 참사 이후 정부의 실망스러운 대응들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은 사회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평범하게 순응적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오로지 정치적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들을 더 이상 폭력과 경멸로 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기에 스스로 일어나야한다는 자각’ 속에서 유가족들의 정치적인 의식 또한 함께 성장해갔다.⁴²⁾

이러한 정치적 깨달음 혹은 역사적 반성은 5·18 유가족의 생애사에서도 유사하게 각인된 부분이다. 자식의 죽음과 구속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사회역사적인 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이 요구된다. 그러한 작업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객관화하거나 과거의 삶과 현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식틀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월 유가족들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자신에게만 닥쳐온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실은 그러한 괴로움을 만들어낸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유족들은 자식의 삶과 그로 인한 본인의 고통이 외로운 싸움만은 아니라고 느낀다.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차원으로 맥락화시키는 것은 마음을 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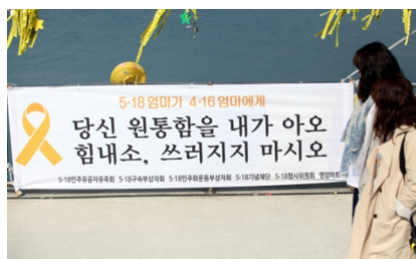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92쪽에서 재인용.

42) 이현정, 앞의 책, 281, 291쪽

하게 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우면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지애’를 느끼는 차원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동지애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고통을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⁴³⁾

그리고 5·18 유가족들의 사례에서 고통의 공감에 뿌리내린 깊은 연대감은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례에서도 재현될 뿐 아니라 서로를 참조하며 보강한다. 아래의 두 사진은 세월호 연대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상호응시와 대면을 통해 촉발된 역사적 반성의 시공간을 보여준다. 왼쪽의 사진은 ‘오월어머니집’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18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5년 4월 11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조속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정부에 촉구하며 내걸었던 펼침막이다.⁴⁴⁾ 이 펼침막에는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오른 쪽 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인 2017년 5월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세월호 유가족 40여명이 방문해 오월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의 하나다.⁴⁵⁾

〈자료2〉 5·18 유가족과 4·16 유가족의 상호응시



43) “목요집회에서 설교나 감옥 간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호소하고 하는 걸 [듣고] (...)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들이 발표하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또 상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동지애를 느끼고” 김화숙, 앞의 논문, 38-39쪽에서 재인용.

44) 『한겨레신문』, 2015. 4.21.

45) 『뉴스1』, 2017. 5.18; 『오마이뉴스』, 2017. 3.26.

이 사진이 있음직한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언론사 기자에 의해 우연히 포착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지원하는 가장 활발한 지원 활동을 했던 지역이 광주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도 빈번히 등장했던 5·18 관련한 죄책감과 깨달음의 서사에서도 확인된다.

내가 5·18 진실을 알고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희생된 것 같고 더 미안하고 죄책감이 더 들거든요.⁴⁶⁾

이를테면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5년 5월 17일 광주에 갔을 때의 이야기다. 광주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많이 도와줬다. 광주에는 시민상주모임도 하고 또한 세월호 재판을 광주에서 많이 했다. 그때마다 세월호 가족들을 많이 도와줘서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인 5·18 전야제에 가게 되었다. 저녁때 도청 앞에서 전야제를 참석해서 5·18 어머님들과 유가족 엄마들이 만났는데 5월 광주 어머니들이 세월호 유가족 엄마들 한 분씩 손을 잡고 꼭 안으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다 안다...'였다. 그때 무덤덤하게 갔던 세월호 엄마들이 다 오열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 그동안에 '힘내세요' 등 수없이 응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엄마들이 듣고 싶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싶었다. 수십 년 전 자식과 남편을 잃은 백발의 5월 어머님들이 세월호 엄마들을 안아주셨다. 그때부터 세월호 엄마들이 5월 엄마들을 친정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자주 찾아뵙는다. 그 출발이 된 날이 5월 광주였다.⁴⁷⁾

이들은 원인을 모르고 자식을 잃어야만 했던 원통함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 그리고 진실규명이라는 공통의 시대적 책임에 대한 깨달음을 매개로 역사적 반성의 루트 패러다임에서 -미나베가 말한 '의제 친족집단'과 같이- 새롭게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46)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 『4·16 구술증언록-유가족편 제2권』, 4·16기억저장소 홈페이지, <http://416memory.org/>.

47) 『오마이뉴스』, 2017. 3.26.

48) 단원고 고(故) 오영석 군의 어머니 권미화와 오월 어머니집 회원 이귀임의 대화의 맥락에서 이러한 결속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요새 세월호 참사 때 영상이나 사진이 자

3.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세월호 연대

또 하나 주목해야할 지점은 세대와 세대를 하나의 공감장으로 엮어내고 있는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동학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가르침을 따랐던 아이들을 잃고 나서, 희생자 부모들이 감내해야했던 뼈아픈 후회는 그동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의 내면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반성과 연관된다. 또한 유가족들은 많은 사람들(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돈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팽목항에서부터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무고한 학생들을 쉽사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던 까닭이다. 즉 참사는 가족들의 세계관, 특히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통한 일련의 가치역전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상상하고 있다.⁴⁹⁾

세월호 부모세대에게 드러나는 후회와 죄책감, 뉘우침의 서사는 -나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시민들이 뼈저리게 공유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세월호 생존학생 및 희생자 형제자매들에게 세월호 세대가 깊어져야 할 책임감의 형태로 더욱 단호하게 드러난다.⁵⁰⁾

주 나오잖아요. 내가 담요 덮고 울고 있는 사진, 그걸 방송에서 보셨나 봐요. 그래서 걱정돼 전화하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끝까지 싸우려면 건강 잘 챙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맨날 우리가 울고 있는 모습만 보이니 마음이 아리신 거죠. (그 전화 받고) 나도 마음이 아렸어요.” 『오마이뉴스』, 2016.12. 9.

49) 이현정, 앞의 책, 297-306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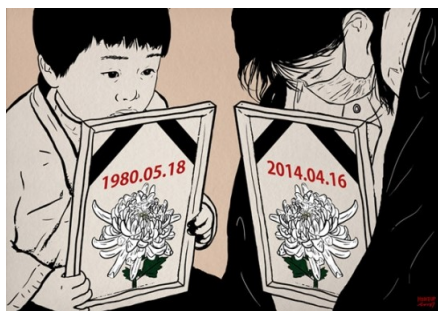
50) “416 관련해서 제가 새롭게 만난 활동가 청년들이 그러세요. ‘청년하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진실서포터즈’라고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형제자매 중에서 진실서포터즈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곳에선 정말 열띠게 토론해요. 세월호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어떻게 할까, 어떤 방식으로 나갈까 토론해요. 이름도 좋아요. 진실서포터즈. 그곳에 갔을 때 힘을 얻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세월호 관련한 일에 필요하면 무조건 나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사고 이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는지 몰랐어요. 그때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전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사고 이전에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다시 봄이 올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비, 2016, 328쪽.

애들이 죽은 건,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이 시대의 어른들. 제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난다면 죽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기로 다짐했어요. 성호랑도 약속했어요.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그걸 넘어서 저보다 어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의견을 존중할거예요.⁵¹⁾

정치권의 임기는 몇년이지만 세월호 형제자매라는 이름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 세대에서도 꼭 밝혀낼 것이다. 그걸 권력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야빠들한테도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야빠들이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도 우리가 자라난다. 권력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돼요. 일이던 지나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광주민주화운동만 봐도 수십 년을 싸워서 진실을 밝혔어도 아직도 일베는 조롱하잖아요. 폭도라고 세월호 가족들도 나중에 빨갱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이겠죠. 진실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중략) 지칠 만하면 청문회에서 쏟아내는 거짓말을 듣고 확 속이 뒤집히고... 아주 이 나라가, 이 정부가 형제자매들의 가슴에 불을 훑~ 질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우리의 숙명 같은 거죠. 하하...⁵²⁾

부끄러움보다 더욱 단호한 책임감을 동반하는 뉘우침의 감 정동학은 제프리 올릭(J. Olick)이 ‘후회의 정치(politics of regret)’라 말한 것과 유사하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대면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 올릭은 후회의 정치에서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사회의 규범적 성숙과 정을 다루었다. 후회의 정치는 역사의식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현상이지만, 이는 대안적 가능성의 지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다르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개인은

〈자료3〉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세월호 연대



51) 위의 책, 219쪽.

52) 위의 책, 333-334쪽.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말 그대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4. 추모의 지역네트워크와 확대되는 공감장:

지역과 지역을 잇는 세월호 연대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유족의 상(喪)의 과정에 동참한 광범한 시민연대의 물결이다. 사실 세월호 참사 및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반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민사회 자체가 유가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얻기도 했다. 예컨대 국민대책회의는 기존의 800여개 단체가 회원조직으로 가입하면서 다시 한 번 시민사회가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경우, 전국의 지역별로 혹은 해외까지도 120여 개의 지지단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동력을 제공받기도 하고 반대로 시민사회의 조직과 활동을 자극하기도 하는 등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의 지역, 인적 네트워크 및 이슈영역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었다.⁵⁴⁾ 이는 유족과 사회 사이에서 작동하는 루트 패러다임이 확장된 단면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이하 ‘시민상주모임’)이다. 시민상주모임은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가슴이 먹먹해진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꾸린 대표적인 공동체 모임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을 때인 2014년 11월15일 ‘세월호 진실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빛고을 1000일 순례’를 시작했다.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 순례를 하며 광주 전지역을 누볐고, 진도 팽목항, 경기도 안산, 서울 광화문 등의 순례길에 나섰다. 그리고 2017년 8월 11일 1,000일째를 맞았다. 천일순례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세월호 진실규명 촉구였

53) 올릭에 따르면, 근대사회가 이전 사회보다 다른 체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대안적 가능성의 지각 때문이었다. 이는 근대적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그 대표자에게도 해당된다. 제프리 올릭, 『기억의 지도: 집단기억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강경이 옮김, 옥당, 2011, 216-217쪽.

54) 김기석, 앞의 책, 276쪽.

다. 또 다른 목표는 ‘100개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이다. 이렇게 이어진 추모의 물결은 교육공동체·환경운동 등 새로운 형태의 마을운동으로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⁵⁵⁾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연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도에서도 기억공간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세월호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터를 잡은 ‘기억공간 리본(re:born)’은 자원활동가들과 더불어 세월호와 관련된 기획 전시와 토크콘서트, 영화상영과 토론회, 서명 운동과 캠페인 등을 벌여왔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억의 장소화를 이끈 주체가 처음에는 설립자 개인에서 시작했지만 문화와 예술적 정서, 전문성을 공유하는 제주 이주자들, 공동체 조직, 피해자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억공간 리본(re:born)’에는 관광객이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제주 4·3 항쟁, 간첩단조작사건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그럼으로써 이 공간은 세월호를 넘어 국가에게 희생당한 기억을 공유하는 장소로 재해석되고 있다.⁵⁶⁾ 그리고 ‘제주416기억위원회’는 내년을 목표로 도민모금운동 등을 통해 제주에 416기억조형물과 기억공간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⁵⁷⁾

무엇보다 4·16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1천회가 넘는 풀뿌리 시민참여에 기초해 만들어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과 특히 지역 차원에서 시민들의 토론 및 문화제가 결합된 참여형 촛불시위는 시위문화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점이다. 시위문화는 앞서 말한 정기적 의례의 한 형태이다. 이 속에서 발현된 집합감정(상호감정)은 저항의 즐거움과 결부되어 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집합적 동작이나 노래에 몰입하는 것과 같은 집합적 활동의 기쁨에서 즐거움이 나온다. 이것은 대부분 다른 사회운동과 체제들 역시 추구해온 문화적 프로젝트다.⁵⁸⁾ 일찍이 뒤르케임

55) 마을 주부들과 세월호 노란 리본을 만드는 ‘쭈마리봉스’라는 소모임이나 마을 인권문화제 및 나눔장터 등이 그 사례이다. 『한겨레신문』, 2017. 8.10.

56) 신혜란은 이와 같은 제주도 기억공간을 세월호 기억이 대안적 영토로 옮겨 재영토화되는 기억의 공간정치의 사례로 분석한 바 있다. 세월호의 목적지이면서 대안적 삶을 상징하는 제주에서 제주문화이주자 네트워크, 희생자 네트워크, 관광객에 의지한 느슨한 네트워크형 기억의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 of memory)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공간과사회』57,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143-145쪽

57) 『뉴스1』, 2017. 4.16.

〈자료4〉 지역과 지역을 잇는 세월호 연대



왼쪽부터 춤추는 광주시민상주, 안산, 진도 팽목항, 목포신항, 제주 기억공간 리본(re:born)

또한 『종교생활의 기본형태』(1912)에서 적극적 승배를 논하며 의례가 사회 형성에서 지닌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의례는 개인과 집단을 도덕적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사람들이 의례를 거행하는 것은 물리적 효과 때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여금 과거에 충실하게 하고 그것의 규범적인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의례는 결국 집합의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소생시키며, 이러한 의례를 통하여 집단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통일성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한다.⁵⁹⁾

이렇게 볼 때 최근 입지 문제로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안산추모공원의 건립은 안전·생명·인권 교육 및 기억의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의 재발 방지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속한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인권레짐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오월어머니집’의 경로는 앞서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는 구체적인 장소성을 획득할 때에만 탄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요컨대 마을/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기반한 일상적인 추모공간

58) 굿윈·제스퍼·폴레타(편), 앞의 책, 40-44쪽.

59) 이를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들의 본질을 강화시킨다. 에밀 뒤르케임,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민영사, 1992, 513-520쪽.

의 확대는 ‘공감의 반대벡터로서 무력감·비공감·반애도’⁶⁰⁾에 맞서 ‘인권의 지역화’를 촉진할 유력한 경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⁶¹⁾

IV. 토론 및 전망: 대안적 수행집단과 친밀한 공공권의 가능성

이제까지 5·18과 4·16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을 교통하고 있는 공감의 자장과 감정동학을 세월호 연대의 루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얹힌 생애사적 고통을 뚫고 역사적 반성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국면들을 거칠게나마 드러내 보여준다. 이 시간은 단선적이고 절대적이며 양적이라기보다 유동적이고 관계적이며 질적인 시간일 것이다. 이 시간 속에서 ‘세월호’는 과거의 국가폭력과 현재의 국가폭력의 극복을 동시대적 과제로 각인한 범국민 양심회복운동이자 참여형 시민연대의 대명사로, 흩어져있던 인권의제들을 대면케 하는 새로운 루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8월 16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참사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침몰의 원인과 진실규명의 과정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가족, 시민들은 세월호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차 알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마지막 지점은, 이러한 반성을 가능케 한 조건이 과연 무엇이었는가의 문제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시민연대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재난공동체와 달리- 공통된 슬픔과 분노를 공유한 감정적 유대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대안적인 가치의식과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회의 진실규명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한다면, 대안적인 가치의식의 결합이 세월호 연대에

60) 천정환, 『애도의 한계와 적대에 관하여』,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현실문화, 2016, 197쪽.

61) ‘인권의 지역화’에 대해서는 김중섭, 『인권의 지역화: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집문당, 2016을 참고하라.

만 고유한 감정양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해야할 두 번째 조건은 진실의 왜곡과 망각의 명령에 맞서 대안적인 서사를 시의적절하게 창출했던 대안적 수행집단(alternative carrier groups)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지난 3년 6개월 동안 80종 이상의 저서가 발간되었고, 여러 편의 다큐와 영화가 제작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의 재현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타자의 사회적 고통을 청중에게 공감 가능한 ‘서사’로 전달한 작가/예술가와 활동가들, 특히 ‘416세월호작가기록단’의 작업은 지식생산의 주체가 변화한 것만큼이나 지식생산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설명적 적합성은 물론 서사적 적합성을 담보하는 재현 작업은 친밀한 연대에 기반한 공공권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 친밀권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중의 의미가 있다. 첫째로 친밀권의 타자는 안면 없는 일반적인 타자, 추상적인 타자가 아니다. 그러한 인칭성을 결여한 공간을 친밀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둘째로 친밀권의 타자는 신체를 갖춘 타자이다. 타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배려가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체이다. 국가가 매개하는 비인칭적이고 추상적이며 강제적인 연대와 달리, 친밀한 공공권이 매개하는 연대는 구체적인 ‘얼굴이 보이는’ 연대를 통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한 연대 감각을 부여한다. 특히 친밀한 유대의 터전이 되는 ‘지역’은 연대의 모태이자 연대성을 경험하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서⁶²⁾ 세월호 연대가 확장한 풀뿌리 지역 연대-지역 내 연대·지역 간 연대-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대안적인 정치형식의 가능성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대안적 수행집단의 재현 작업을 매개로 4·16 참사에서 촛불혁명에 이르는 기간 우리 사회가 보여준 규범적인 성숙 과정은 질적으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는 사회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운동의 감정적 토대와 문화적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에 구체성을 더해보고자 하였다.

62) 강수택, 「지역연대의 의미와 유형」,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소, 2015, 55쪽.

참 고 문 헌

1. 연구논저

-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창비, 2015.
- _____, 『다시 봄이 올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비, 2016.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피해자 군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명: 참사 피해자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 대상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6. 8.
- 강수택, 『지역연대의 의미와 유형』,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2015.
- 구원·제스퍼·폴레타(편),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박형신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2.
- 김기석, 「유가족은 왜 활동가가 되었나: 한국 민주주의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16.
- 김동춘·김명희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역사비평사, 2014.
- 김명희,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3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 _____,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재구성 장치로서 친밀적 공공권(親密的 公共圈)의 가능성: 코리안 디아스포라 생활세계 비교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론」, 『민주주의와 인권』 16(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 김명희·김광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016.
- 김은미,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상실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중섭, 『인권의 지역화: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집문당, 2016.
- 김화숙, 「여성의 사회적 저항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노다 마사아키,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서혜영 옮김, 팬타그램, 2015.
-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형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 미나베 유코,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의 역학』, 김경남 옮김, 민속원, 2015.
- 레이먼드 윌리엄스,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경문사, 2003.
- 박구병,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아메리카연구』 19(2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6.
- 박형신,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 『정신문화연구』 3(2),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0.
- 박형신·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 반 겐넬, 『통과의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진경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5.
-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의두·이기우 옮김, 민속원, 2014.
-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이음, 2009.
- 신명진, 「세월호 유가족의 사별경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공간과 사회』 57,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 에밀 뒤르케임,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민영사, 1992.
- _____, 『사회분업론』, 민문홍 옮김, 아카넷, 2012.
- 이동진,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유족회 사건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9(2), 한국사회사학회, 2014.
- 이현정, 「수동적 시민에서 저항적 주체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어떻게 국가권력에 맞서왔는가?」, 서재정·김미경 엮음, 『침묵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한올아카데미, 2017.
-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 제프리 울릭, 『기억의 지도: 집단기억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강경이 옮김, 옥당, 2011.
- 천정환, 「애도의 한계와 적대에 관하여」, 『팽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현실문화, 2016.
- 피에르 클라스트,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인류학 논고』, 홍성흠 옮김, 이학사,

2005.

- Aretxaga, Begonia, *Shattering Silence: Women, Nationalism, and Political Subjectivity in Northern Irel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Casey, Edward. S.,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in K. P. Pillips, Browe, Stephen, & Biesecker, Barbara, eds., *Rhetoric, Culture, and Social Critique: Framing Public Memory*,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4.
- Kim, Myung-Hee, "The Possibility of Intimate Public Sphere: Political Familism of Divided Koreans", *S/N Korea Humanities* 2(1), 2016.
- Wright, Brendan, "Raising the Korean War Dead: Bereaved Family Associations and the Politics of 1960-1961 South Korea", *The Asia-Pacific Journal* 41(2), 2015.

2. 언론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 『국민일보』, 2016. 4.12.
- 『뉴시스1』, 2017. 4.16.
- 『뉴시스1』, 2017. 5.18.
- 『연합뉴스』, 2014.4.17
- 『오마이뉴스』, 2016.12. 9.
- 『오마이뉴스』, 2017. 3.26.
- 『한겨레신문』, 2015. 4.21.
- 『한겨레신문』, 2017. 8.10.
- 4·16 연대 홈페이지 <http://416act.net>.
- 4·16 기억저장소 홈페이지 <http://416memory.org>.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Abstract

Families Against the State: The Emotional Dynamics of Sewol-Ferry Solidarity and Root Paradigm

Kim, Myung-Hee*

This study examined the emotional dynamics of Sewol-Ferry solidarity, which has echoed the historic events of 5.18 since the accident in 2014, based on the concept of bereaved family mourning and root paradigm.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d on three types of emotional dynamics revealed through Sewol-Ferry solidarity: the first is the emotional dynamics of resentfulness and realization expressed as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May 18th Movement, shared their experiences with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April 16th Sewol-Ferry accident; the second is the emotional dynamics of regret and repentance created by linking generations contemporarily and referring to each other; and the third is the venue of sympathy, expanded by linking regions through a regional network of remembrance. Each of these emotional dynamics reveals a new phase of solidarity in which bereaved families and citizens are creating a time for historical reflection, overcoming the hardships of life intertwined with state violence. This paper intends to facilitate such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al foundations and cultural dynamics of social movements.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IHU), Konkuk University.

Key words : Sewol-Ferry Solidarity, Mourning of the Bereaved Families, Root Paradigm, Emotional Dynamics,
Historical Reflection.

교신: 김명희 05029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문과대학(19동) 301호
(E-mail: kcckmh@daum.net)

논문투고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10. 03

게재확정일: 2017. 10. 04

‘민족-영화’ 개념의 변천 : ‘조선영화’에서 ‘코리안시네마’까지*

김성정**

- I. 들어가며: 개념사와 ‘민족-영화’
- II. 영화’ 수입과 ‘조선영화’ 개념 등장
- III. ‘한국영화’ 개념의 등장과 확산: ‘민족영화’와 ‘국산영화’
- IV. ‘한국영화’ 개념 내 위계관계
- V. ‘민족영화’ 개념을 둘러싼 쟁투
- VI. 나가며: 글로벌 장에서의 ‘민족영화’

국문요약

이 글은 ‘영화’를 실제로 정의하는 것에서 한걸음 벗어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영화’라는 문화기술적 매체가 조선으로 수입되면서 함께 전파된 ‘영화’라는 개념의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기술 혁신에서 서사 매체, 그리고 문화 산업으로의 전환된 ‘영화’의 개념적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영화’는 영화가 수입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보편적 ‘영화’, 즉 영화의 기준이 되어 버린 할리우드와의 대립과 모방 사이에서 개념적 분화가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영화’ 수입 초기에는 형식과 형태는 모방 대상으로 하면서도 내용이나 서사에서는 ‘차이’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총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AKS-2016-KSS-1230006)의 일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강조하며 ‘조선영화’, ‘국산영화’, ‘방화’ 등의 개념을 구축하였다면, 20세기 말부터는 내용이나 서사의 차이 또한 희미해지고 오히려 산업적 가치에 주목하여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서 ‘한국영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조하는 ‘코리안시네마’ 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개념사적 방법을 통해 ‘민족-영화’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식민-독립-전쟁-산업화-민주화 등의 역사적 국면을 거친 현재 한국에서 ‘영화’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민족-영화’ 개념의 불균등성과 불완정성을 확인하려는 작업이다.

주제어: ‘민족-영화’, ‘국산-영화’, ‘한국-영화’, ‘코리안시네마’, 개념사.

I. 들어가며: 개념사와 ‘민족-영화’

이 글은 남한에서 ‘민족영화’ 개념의 궤적을 개념사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식민지 조선시기부터 한류 담론이 확장되는 21세기 초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사는 각 역사적 시기에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사용과 의미에 주목한다.¹⁾ 개념은 “단어에 포박되어 있”지만 단어가 지칭하는 고정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항상 다의적이며 모호한 것을 의미한다.²⁾ 더욱이 개념은 단순히 실재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시대의 구체적인 언어행위(speech act)의 일부분을 이룬다. 개념은 “특정 사회집단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또한 그들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고, 현실을 “통합시키고, 각인시키며, 폭발시키는 힘을” 가진다.³⁾ 개념사적 연구방법은 지금껏 한국영화사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영화’, ‘민족영화’, ‘한국영화’와 같은 기표가 가리키는 기의가 사실은 영화라는 매체의 수용부터 식민지 해방, 분단, 세계화 등 여러 번의 변형을 거친 개념적 구성물임을

1) 개념사의 기본적 접근에 대해서는 라인하르트 코젤렉, 『자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리디아 리우, 『언어황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 등을 참고하라.

2)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51-57쪽.

3) 나인호,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keyword’ 연구와 개념사』, 『역사학연구』 29, 역사학회, 460쪽.

밝히려는 시도이다.

영화를 개념으로 접근할 때 19세기 후반 서구에서 ‘발명’되어 전파된 ‘영화’라는 매체의 기술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실재’로써 영화라는 매체와 기술력이 각 지역으로 일괄적으로 수입되고 통용되면서 ‘영화’는 번역되거나 신조어를 통해 지칭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적 전파의 단계를 넘어 영화의 자국화를 고민하게 되는 수용과 변형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족영화’라는 개념어가 등장하게 된다. 게다가 민족영화라는 개념은 특정 영화의 텍스트적 성격이나 영화산업의 실재를 설명하는 범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 시대 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영화’, 즉 ‘조선영화’로 시작되어 ‘코리안시네마’로 변천된 ‘-(하이픈)영화’의 궤적을 추적하는 이 논문은 각 시기별로 영화라는 매체에서 다루고자 했던 ‘민족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할리우드는 보편성에 대항하여 ‘영화’가 정의하는 ‘조선’, ‘한국’, ‘민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1900년대부터 1925년까지는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후에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발간한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시리즈를 이용하여 ‘조선영화’, ‘국산영화’, ‘방화’, ‘민족영화’, ‘한국영화’, ‘코리안시네마’ 등의 개념어의 용례를 분석하였다.⁴⁾ 영화라는 개념의 수용과 변형을 분석하는 것은 보편적 영화로 통용되는 ‘할리우드’에 대한 모방, 대립, 경합 등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민족영화’라는 개념 구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민족영화는 ‘할리우드’라는 ‘보편’과 긴장 관계 구축을 통해 부단한 차이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구축해왔고, 이는 ‘민족’의 영화, 즉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담지한 영화에 대한 열망을 엿보게 한다.

4)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로 의미 있는 영화 관련 잡지나 문예지를 폭넓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 글의 통시적 성격으로 인해 충분한 자료와 용례를 담아 내지 못했다. 한 세기를 넘는 시간성을 고려하여 개념(들)의 궤적을 살펴본다는 것은 상당히 힘겨운 작업에 분명하다. 한편의 논문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영화를 둘러싼 개념들의 충돌, 경합, 생성의 메커니즘을 다 담아내는 것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화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영화의 역사를 개념사적 방법으로 재해석하여, 한국영화라는 ‘실재’가 사실은 개념에 의해 구성되고, 규정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규명하는 것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각 시기 ‘민족영화’ 그 자체가 명확한 실체 혹은 특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담론적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민족적’인 것을 규정하려 했던 것이다.

II. ‘영화’ 수입과 ‘조선영화’ 개념 등장

일본을 거쳐 수입된 ‘영화’라는 형태가 조선의 맥락에서 어떻게 전파·변형되는지는 1910년대 후반에 등장한 연쇄극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당시 조선에서 활발하게 제작, 상영되던 활동사진의 형태는 연극이나 공연의 일부분으로 결합된 방식인 연쇄극(연쇄활동사진)의 형태였다. 연쇄극은 연회, 연극, 연주 등 공연 중간에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이 활용된 형태이고, 이 당시 스토리나 배경 설명을 해주는 변사 또한 활동사진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⁵⁾ 특히 변사의 목소리와 설명을 통해 서양 활동사진은 종족적인 것으로 탈바꿈되고, 조선인들에게 동족어인 조선어를 확인하게 하였다.⁶⁾

사실 연쇄극의 기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910년대에 일본의 대중연예의 양식이 조선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⁷⁾ 특히 1919년에 조선 최초의 활동사진이라고 천명한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⁸⁾는 연쇄극의 형태였다. 단성사에서 상영된 <의리적 구토>의 제작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신문 기사에서는 “오날々시卜지 요선에 ㄷㅣ흔 활동스진은 전혀 업서々 한갓 유감히 역엇던 바”,⁹⁾ 일본 동경에서 촬영 기사를 불러들여 조선

5) 『매일신보』, 1913.06.20; 『매일신보』, 1914.08.31 등을 참고하라.

6) 게다가 변사 중의 몇몇은 영화 상영 중간에 정치적 언설을 하기도 하였고, 이는 관객들에게 조선인이라는 종족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면서 동시에 제국의 식민지인임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이화진, 『소리의 정치』, 현실문화, 2016, 44-56쪽.

7) 기록상으로 일본 최초의 연쇄극 공연은 1904년의 동경 니혼바시 부근에서 공연된 <정로의 황군>이라는 작품에서 해전 장면의 일부를 영사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1913년 6월 고베의 大黒座 공연에 출연 중이던 아마자키가 연쇄극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희문, 「‘한국영화’의 개념적 정의와 기점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11, 1996, 21쪽.

8) 그 당시의 신문에서의 표기법은 <의리적 구투>로 쓰고 있지만, 병기된 한자어의 현대어 번역은 <의리적 구토>가 더 정확해 보인다.

최초의 활동사진이 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조선인이 주축이 되어 조선에 대해 촬영한 것을 조선 활동사진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앞선 기술의 상징으로 일본인 촬영기사가 함께 작업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또한 포착된다. 또한 <의리적 구토>는 서양의 것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는 이유에서 ‘조선’ 활동사진으로 정의된다.

1920년대 초반까지 ‘조선영화’라는 실체는 제작되지 못했고, ‘조선영화’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다. 일본이 조선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인이 중심이 된 민간의 충분한 자본,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산업적 상황은 ‘조선영화’라는 개념이 충분히 합의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의미한다. ‘조선영화’의 개념이 조금씩 명확해 진 것은 1926년 즈음이었다. 1924년에 조선최초의 영화사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윤백남프로덕션, 고려영화제작소, 고려키네마 등이 속속 작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마침내 1926년에 나운규의 <아리랑>이 제작·상영되었기 때문이다⁹⁾. 매일신보에 실린 <아리랑>의 감상문은 그 당시 ‘조선영화’라는 개념이 어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엿보게 한다. 글을 쓴 신영화는 <아리랑>을 본 느낌을 “예술에 국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동포의 손으로 되고 우리 환경에 각겨운 영화란만큼 그만큼 환의가 큰 것이다. 그보다도 밤낮 시시불한 영자만 비치던 자막 우해 낮하난 언문 글자가 몹시 그”리웠다고 표현한다.¹⁰⁾ 활동사진의 시대에는 변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어를 듣는 것은 가능했지만, 스크린에서 조선어문을 확인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런 사정에 조선 관객들이 스크린에 담긴 조선어를 읽는 것은 종족으로써의 의식과 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아리랑>은 ‘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해석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아리랑>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야

9) 『매일신보』, 1919. 10.02. 「단성사의 신계서(新計書)도선 본위의 활동사진을 미구에 영사할 계획이다., 강조는 필자.

10) 무성영화인 <아리랑>의 주인공인 광인 영진은 지주의 머슴이며 왜경의 앞잡이인 기호가 여동생인 영화를 범하려하자 살해한다. 하지만 이 극적인 경험으로 미쳐있었던 영진이 제 정신을 찾게 된다. 영화는 일제시기 ‘미쳐’있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민족을 서글프게 그리면서도, 동시에 저항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11) 『매일신보』, 1926.10.10. ‘신영화 『아리랑』을 보고/포영(抱永)’.

본격적으로 ‘조선영화’에 대한 개념 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리랑>은 ‘조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기존의 조선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스케일, 서양 배우와 비견될 정도로 선 굵은 배우의 연기, 그리고 빠른 전개와 볼거리 등으로 조선인들의 서양영화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민족적이고, 조선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조선영화’라는 개념은 미국영화라는 기준점에서 구성되고, 스스로 영화의 의미와 성공의 비결을 미국영화의 모방에서 찾기도 한다. 나운규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화나는데 서양사람 흉내를 내서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줄립고 하품나지 않은 작품을 만들리라 그러자면 쓰림이 있어야 되고 유모-어가 있어야 된다. 외국물 대작만 보던 눈에 빈약한 감을 없이 하려면 사람을 많이 출연시켜야 한다. ...이렇게 처음된 <아리랑>은 의외로 환영을 받았다. 조름 오는 사진이 안이었고 템포가 빠르고 스피드가 있었다. 외국영화 흉내를 낸 이 작품이 그 당시 조선 관객에게 맞았던 것이다.”¹²⁾

나운규는 <아리랑>이 민족적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서양이라는 타자를 내재화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조선 ‘최초’의 ‘민족영화’라고 알려진 나운규의 <아리랑>은 서양영화와 조선적 내용의 혼성물(hybridity)이었다. 흥미롭게도 그 당시에는 ‘모방’했다는 것이 이 당시 관객이나 평론가들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선진적인 것으로 의미화 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조선영화’의 개념은 향토적 풍경과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의미화된다.¹³⁾ 일본 제국이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외국영화에 대한 경계심을 높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1934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활동사진 영화 취체규칙’¹⁴⁾은 조선에서 일본영화를 국산영

12) 나운규, 「<아리랑>을 만들 때」, 『조선영화』, 창간호, 1936, 46~48쪽; 김소연, ‘식민지 시대 조선영화 담론의 (탈)경계적 (무)의식에 관한 연구’, 『비평문학』 48, 2010.

13) 이화진, ‘식민지 영화의 내셔널리티와 ‘향토색’: 1930년대 후반 조선영화 담론 연구’, 『상허학보』 13, 2004.

14) “활동사진 영화 취체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교화상 우량한 영화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강제로 상영하게 한다. 2. 일본 국민성에 비판하는 외국영화 수입, 상영을 제한한다. 3. 일본을 오해하게끔 하는 영화의 수입을 금지한다. 4. 현재 조선에 있어

화의 범주로 재규정하게 된다. 이제 조선영화는 일본영화와 같은 ‘국산영화’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제국 내에서 일본영화와 구별되는 종족영화의 위치하게 된다.¹⁵⁾ 이제 조선영화는 조선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제국 내의 다른 곳으로 ‘조선영화’라는 차이를 지닌 종족지로 유통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193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영화가 국외에 조선을 알리는 상품성을 지닌 매체라는 성격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좀 더 “미화시켜 표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대두된다.¹⁶⁾ 예컨대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담은 것이 외국의 관객들에게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향토적인 것을 담아내면서도 아름답게 미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미국영화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방편으로 리얼리즘을 주목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하지만 과연 그 시기 조선영화에서 미학적으로 뚜렷하게 특징이 구축되었는가는 의문이다. 다만 주목할 점은 미국영화의 기술력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조선영화의 열등감을 투영한 것이 바로 리얼리즘을 통한 ‘조선적인 것’의 재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당수의 내셔널시네마들의 궤적 과도 유사성을 지닌다. 다만 대부분의 내셔널시네마는 영화 수입초기부터 미국영화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구성했던 것에 반해, 조선영화의 경우 미국영화에 대한 동경과 일본을 경유한 ‘근대’에 대한 적대감이 복잡하게 얹혀 ‘조선영화’의 개념이 형성되어갔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영화의 상영은 총체 6할2푼여 일본내에서는 평균 2할여를 점하고 있으나 조선 민중에 일본 내지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국산영화[일본영화]를 혼합 상영시킨다. 5. 수입출 영화의 허가를 설치하여 조선 내 문화가 조선 외에 오진되는 것을 방지한다. 6. 보호위생상의 견지에서 관객의 연령을 제한한다. 김소연, 2010, 60쪽에서 재인용.

15) 백문임, 『입화의 영화』, 소명출판, 2015, 71-72쪽.

16) 『조선일보』, 1937.04.24~04.27.

Ⅲ. ‘한국영화’ 개념의 등장과 확산: ‘민족영화’와 ‘국산영화’

해방이 되자 상당수의 영화인과 지식인들은 민족문화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영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앙신문에 1945년 11월 23일과 24일에 연재된 안석주의 글을 보면, “영화는 자주국가에 있어서 발전”이 가능하며, 이제 독립국가를 건국함에 있어 영화가 빈곤하게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교화운동의 도구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달 후 안석주는 네 번에 걸쳐 쓴 연재 기사에서 다시금 “민족영화” 창조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는 “민족의 맘, 민족의 생활, 민족의 감정에서 기획”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¹⁷⁾

조선인들만의 ‘민족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영화인들이 공유했던 의식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해방으로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1945년 8월 19일에 발 빠르게 결성되고, 뒤이어 좌익 진영에서도 조선프로레타리아영화동맹을 11월 5일에 결성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족적 감흥과 **을 수습하고 정리할 사이도 없이 조직을 피하여 역사적 발전 *****문화, 예술분과와 갖치 영화에 있어서도 영화인을 망라하여 「영화건설본부」를 창설하였고 그후 진보적 젊은이들로 하여금 「프로영화동맹」이 1935년 「카푸」(원문 일부파손)하기 위하여 종파주의를 급속히 청산하고 현하 민족(통일)전선투쟁에 있어 문화활동의 중요성과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화운동의 기본노선을 발견하고 전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프로영맹(映盟)」으로부터의 제의와 쌍방(건설본부)와 성의있는 노력으로 **해야 마춤내 거년(거년 12월 16일의 영화계 초유사적인 양단체의 통합과 아울러 기타 영화인도(이북까지) 총참가하여 「조선영화동맹」을 조직하게 되었는데 (원문 일부파손)…그러면 조선영화가 나아갈 민주주의적 민족영화(민족영화의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 해명은 다음기회로 미뤄둔다)란 것을 결국 인민의 마음을 영화로, 즉 영화가 인민과 가치 살며 인민 속에서 ****하여 인민을 계몽하고 ****을 위한 **을 주는 영화라 할 수 있으니 특수계급을 위한 영화여서도 안될 것이오 따라서 비민주주의적 인민의 자유와 이익을 배반하는

17) 『중앙신문』, 1945.11.23, 안석주, 「건국과 문화제언/민족영화의 창조」; 『중앙신문』 1946. 01.21.~1.24, 안석주, 「영화는 민족과 함께 1-4」.

반동적 영화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¹⁸⁾

흥미롭게도 정치적 노선에서 이견이 존재했던 두 단체가 이렇게 빠르게 통합되는 이유는 바로 힘을 합쳐 ‘민족영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민족영화는 계급성을 드러내기보다 조선인의 삶에 닿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과거 일제의 식민통치 잔재에서 벗어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는 “민주주의적 민족영화”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인민의 삶에 대한 영화이면서 동시에 특수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민국가 전체 인민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45년 12월 16일에 통합되어 신설된 <조선영화동맹>은 사실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자국 영화산업 없이는 ‘민족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카프에서 활동 해온 서광제의 기고문에서 다시 확인되는데, 그는 영화촬영소를 현대식으로 완비하지 않고는 결코 조선의 영화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외국영화의 관세에서 생기는 수입 전부를 조선영화제작에 보조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¹⁹⁾

이 당시 외화, 즉 미국영화의 기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미군정이라는 사회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미국영화는 조선의 영화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예컨대 1945년 11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미국 극영화가 422편, 미국의 뉴스영화는 289편이 수입되었던 반면에 제작된 조선영화는 17편, 조선의 뉴스영화는 35편, 공보부의 뉴스영화는 38편에 불과하였다.²⁰⁾ 특히 미군정이 직접 관할하였던 중앙영화배급소는 몇몇 상영관에게 미국영화만 상영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²¹⁾ 미국영화에 대한 경외의 시선이 적대적 입장으로 변하

18) 『중앙신문』, 1946. 02.24, 「영화운동의 노선 1-2: 추민」, 강조는 필자.

19) 『서울신문』, 1946. 05.26, 서광제, 「(영화) 건국과 조선영화」.

20) 정종화, 『한국영화사: 한 권으로 읽는 영화 100년』, 한국영상자료원, 2007, 87쪽.

21) “미국 영화와 『뉴-스』를 배급하는 기관인 중앙 영화사에서는 서울 시내 17개소 상설관에 다음과 같은 강압적인 7대 조건을 제시하여 장 총감 고시(告示)의 뒤를 이어 또 하나의 크다란 문제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제시조건. 1. 3개월분으로 영화 5본 1회에 계약할 것. 2.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납부할 것. 3. 영화5본을 3개월 내에 적당히 상영할 것. 4. 뉴-쓰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3개월 분 8만원을 **할 것. 5. 극장 통감입장자를 사절할 것. 6. 선전비는 극장부담으로 할 것. 7. ***는 매일 중앙영화배급사에 보

게 된 시점은 이 즈음이다.²²⁾ 그리고 이 시기부터 ‘국산(國產)영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한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성원인 ‘국민’이 주도하여,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안이 고안되기 시작하였다. 즉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된 것의 의미를 중요시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조선 자본·산업·영화인에 의한 영화 제작이 ‘민족영화’의 중요한 요건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영화의 시장 장악을 막고 ‘국산영화’의 진흥을 위해 검열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영화를 쏙아내고, 일제시기에 수입된 제국 영화의 재상영을 막고, 민족적 정취에 맞는 국산영화를 진작시킨다는 목적으로 검열이 이루어진 점은 흥미롭다.

해방기의 혼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영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작되지 못한다. 물론 이 시기에 군정에 의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고, 부산 지역 등의 영화관은 연일 만원을 이뤘다는 보도가 있지만 ‘민족영화’라는 개념이 확산되거나 담론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한편 1953년 정전이 선포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기에 이른다. 특히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남한의 경우 정전을 기점으로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공식명칭이 ‘조선’의 이름을 대신하게 된다. 주지하듯 정치적 변화는 개념의 변화와 긴밀한 관계성을 지닌다. ‘조선’이 아닌 남한에서는 ‘조선영화’라는 개념이 빠르게 소멸되지만, 그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민족영화’가 적극적으로 해석되지도 못한다. 오히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는 ‘한국영화’, ‘국산영화’, ‘방공영화’ 등이고, 이는 ‘조선영화’를 대체하면서도 동시에 그 당시 남한이라는 국민국가의 영화가 어떤 의미 체계로 구성되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분단 이후에 영화인들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영화의 제작 편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소위 말해 1960년대라는 한국영화의 중흥기를 가능하게 했던 여러 기반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춘향전>, <장

고할 것.” 『동아일보』, 1947.07.05., 「미영화(美映畵)의 시장화/ 억압되는 조선문화」.

22) “이제 옴터나오는 우리 영화의 삭것혀 강인하고 황성한 성장력을 가진 미국영화의 트니 타무를 시무려하는 것이었다. 하야 만일 이것이 그대로 착근한다면 조선영화의 짝은 노란작 채로 고사하고 말 운명을 등지고 말었다.” 『서울신문』, 1946.05.26., 용천생, 「외국영화수입과 그 영향」.

화홍련전>, <단종애사> 등의 옛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들이 꾸준한 인기를 얻었지만, 영화인들의 위기의식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 위기의식의 근원은 제작되고 있는 영화들이 충분히 ‘한국적’ 혹은 ‘민족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 있다. 특히 한국영화의 작가의식, 즉 창작의식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아리랑』, 『임자없는 나룻배』, 『나그네』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민족적 『레지스탕스(저항)』정신과 『리리시즘』이 혼연 혼합된 세계”를 다른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한다.²³⁾ 앞서 분석한 것처럼 ‘한국영화’의 원형으로 소환된 위의 세 영화는 미국영화의 영향을 받아 혼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이 시기에 다시 호명되면서 영화의 성격 중에서 식민지 시기의 비탄에 잠긴 조선인의 삶을 그려낸 점, 열악한 농촌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오롯이 ‘민족적’인 영화로 그 의미의 타각이 이루어진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1950년대 반공 문제 또한 민족영화가 지향해야만 하는 목적이라는 주장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한다.²⁴⁾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난 후부터 남과 북의 근본 과제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각기 분단된 국민국가가 된 남과 북은 그만큼 각자 국민국가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 골몰하게 된다. 이 시기에 남한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영화 산업의 구축을 통해 한국인에 의한, 한국 자본으로, 한국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산’을 강조하면서 ‘한국영화’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국산영화’라는 개념이 ‘한국영화’와 혼재되어서 사용된 이 유가 바로 여기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의식한 반공적 내용을 담은 영화를 한국영화의 한 부분으로 개념화하는 점이다.

IV. ‘한국영화’ 개념 내 위계관계

산업적 열악함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실상 관객에게 선택 받을 수 있는 영

23) 『경향일보』, 1956. 07.18, 유두연, 「한국영화의 위기/ 창작의식 결여/ 상반기 결산」.

24) 『한국일보』, 1955. 07.24, 김종문, 「국산 반공영화의 맹점 - <피아골>과 <죽음의 상자>에 대하여」.

화를 제작해야 한다는 강박은 1960년대를 관통한다. 이 시기에 한국영화는 1962년에 제작편수가 100편을 넘어선 이래로 1969년에는 200여 편을 훌쩍 넘어설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고, 관객의 수도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활기를 띤 영화업에 재능 있는 신인감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였고, 5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시작한 신상옥, 유현목, 김기영 등이 작가 주의적 영화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5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꿈틀거려 온 세계시장으로 진출이라는 꿈 또한 6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다. 특히 1962년 제9회 아시아영화제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에 이른다. 일본영화가 서구 시장에 진출했던 것과 같이 한국영화 또한 영화제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 또한 등장하였다.

“...가장 손쉽고 확실한 길이 「우리의 것」, 한국적인 「올리지날리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좀 전세기인 사랑의 모탈을 담으면서도 옛 감정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잘 그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청순한 감명을 뽐여준 것은 아시아영화제의 성격상 오히려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명 프로듀서 삼삼웅 씨의 「그러한 아름다운 속임수 만에 머무를 수 없다.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다 세계성을 띤 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의미를 새겨듣고 싶다....우리의 「올리지날리티」를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영화계의 당면한 큰 「테마」라고 생각된다.”²⁵⁾

이제 한국영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나 힘겨운 현실을 담아내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세계성을 띤 한국영화라는 개념은 우리의 것을 현대화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이야기와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 그만큼 영화 산업의 현대화가 필수적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또한 중요한 자원일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에 외화에 책정된 세금을 한국영화에 지원해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주장은 영화의 산업적 성격을 정부 주도로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게다가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여 근대화라는 목표를 설정한 박정희 정권에게 한

25) 『동아일보』, 1962.05.18, 「아시아영화제의 교훈/ 좀더 시야를 넓혀야/ 한국 보여줄 영화 제작이 선결/ 해외 진출 길은 열린 셈」.

국영화를 진흥하는 것은 영화의 근대화, 즉 영화산업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1962년에 최초의 영화법이 제정된 것으로, 영화산업의 기업화를 통해 국산영화시장의 보호와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영화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화제작사의 요건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산영화 제작자에게만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서, 많은 수의 국산영화가 영화 수입 쿼터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략하게 된다. 1966년 영화인의 건의에 따라 영화법이 개정되면서 영화사의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1970년의 영화법 3차 개정에서는 국산영화 제작과 외화 수입업을 분리되었다.

정부주도의 영화산업 육성은 빠른 시간 내에 ‘산업’의 꼴을 갖추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영화라는 매체가 필수적으로 산업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영화인들은 더더욱 정부주도의 신속한 한국영화 산업 구축에 동의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 신파 혹은 멜로드라마라고 지칭되는 낮은 수준의 장르영화가 양산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르영화에 포함되지 않는 리얼리즘, 작가영화가 생산되기도 한다.²⁶⁾산업의 측면에서 신파, 멜로드라마의 흥행은 한국영화가 양적 성장을 계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한국영화’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졌다. 1960년대 상당수 영화인들과 대중은 질 낮은 ‘한국영화’와 신파, 멜로드라마를 동의어로 인식하였고, 세계무대에 건줄 수 있는 ‘한국적’인 것을 다룬 ‘한국영화’로 리얼리즘적, 작가주의적 영화를 주목하고 있었다. 즉 ‘한국영화’ 개념 내에 영화 장르에 따른 위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9년에 발간된 최초의 영화사인 <한국영화전사>(이영일, 1969)에서는 다시금 민족영화의 효시로써 나운규의 <아리랑>을 주목하면서, 민족적 리얼리즘이 한국영화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²⁷⁾ 신파=과거/낮은 것 혹은 현재의 질 낮은 한국영화, 리얼리즘=작가주의적, 현실 고발적 한국

26) 1960년대의 한국영화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서들은 상업적 장르영화와 리얼리즘적 작가주의 영화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27)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1969, 86쪽.

영화라는 이항대립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상업성을 지닌 영화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영화 사이의 갈등관계 또한 위의 이항대립에 접속된다. 예컨대 대중들을 매혹시키는 신파는 질이 낮은 한국영화이고, 상업성은 낮지만 리얼리즘이라는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는 ‘한국’영화의 정체성에 대한 좌표 이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의식이 확 대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영화내의 위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얼리즘의 미학적 영역을 ‘민족적’인 것과 결합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이영일의 민족적 리얼리즘의 계보로 나운규의 <아리랑>을 필두로,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 <나그네>, 최인규의 <자유만세>, 그리고 유현목의 <오발탄>을 주목한 것에서 다시금 확인된다.²⁸⁾ 김소연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영화사에서 ‘리얼리즘’은 “만능 키”로 작동하면서, 미국영화에 대항하는 내셔널시네마로써 한국영화의 특성을 규정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영화 내에서 나쁜 영화와 좋은 영화를 구분 짓는 규범적 잣대로 활용된다.²⁹⁾ 이 과정에서 리얼리즘적 작가주의 영화는 신파와 멜로드라마와 같은 장르영화보다 더 ‘민족적’이고, ‘한국영화’의 대표성을 지닌 영화라는 개념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면 한국영화 산업이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열세를 반영하곤 했는데, 할리우드를 비롯한 외국영화보다 산업적으로 열악하고, 이로 인해 ‘상업성’이 비교적 낮은 영화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상업성’과 ‘대중성’을 표방한 한국영화보다 처음부터 ‘상업성을 지양한’ 리얼리즘적 영화가 한국영화 내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28) 이영일의 한국영화전시는 리얼리즘의 계보를 나운규에서부터 유현목까지 정리하고 있다. 이순진, 「한국영화사 연구의 현단계: 신파, 멜로드라마, 리얼리즘 담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2, 2004, 204쪽.

29) 김소연, 「전후 한국의 영화담론에서 ‘리얼리즘’의 의미에 관하여」, 『매혹과 혼돈의 시대: 50년대의 한국영화』, 도서출판 소도, 2003, 18쪽.

V. ‘민족영화’ 개념을 둘러싼 쟁투

1970년대는 한국영화의 암흑기로 잘 알려져 있다.³⁰⁾ 구조적 요인으로는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영화 상영관을 찾는 관객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신시대에 접어든 박정희 정권이 영화를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영화계의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쳐 더욱 짙어진 열 패감과 좌절감에 빠졌다가, 전두환 정권시기에는 에로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연명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영화의 가치는 고사하고, 산업적 자생력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민족영화론’이다. 대안적 영화를 추구했던 이 시기의 영화인들은 크게 민주화운동에 거점을 둔 민족영화론자들과 이른바 ‘문화원 세대’를 모태로 하는 영화비평가들로 구분될 수 있다.³¹⁾ 민족영화론자들은 할리우드를 비롯해서 이미 유사 할리우드(pseudo Hollywood)가 되어버린 충무로의 상업영화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영화제작과 소재 및 서사 양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운동 방향을 설정하였다면, ‘열린 영화’ 모임이나 ‘작은 영화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구축해 온 비평 진영은 민족영화진영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공유하면서도 대안으로 유럽영화로 대표되는 예술영화의 미학적 성과물을 주목했다.

사실 ‘민족영화’라는 기표와 개념은 국민국가 설립 초기에 잠깐 언급되다가 곧이어 영화와 관련된 의미망 내에서 그 자취를 감췄다. 산업적 측면에서 국민국가적 독립성을 강조한 ‘한국영화’와 ‘국산영화’ 개념이 널리 통용되면서 ‘민족영화’ 개념의 자리를 소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정후가 곳곳에서 성숙되고,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

30) 한국영화는 1969년에 229편이 제작된 이래로, 1971년에는 202편, 1972년에는 122편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게다가 유신정권이 1973년 다시 한 번 영화법을 개정하면서 만든 영화진흥공사는 정권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다수의 국책영화를 제작하였고, 이는 영화계를 점점 더 통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31) 김소연 ‘민족영화론의 변이와 ‘코리안 뉴 웨이브’ 영화담론의 형성’, 『대중서사연구』 12(1), 2005, 287-318쪽.

국민 관객은 단순히 한국·의· 영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영화’의 가치를 찾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때 재등장하게 된 개념이 ‘민족영화’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기존 ‘한국영화’ 개념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그 무엇을 ‘민족영화’ 개념으로 해석하여 의미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한국영화’, 즉 한국의 ‘영화’로 지칭되며 동시에 질 낮은 장르 영화와 동의어가 되어 버린 대부분의 상업영화에 대한 반대 향으로써 ‘민족영화’ 개념의 등장이었다. 80년대 대안적 ‘한국영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의 발로를 서울영화집단³²⁾에서 펴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1983)의 서문을 통해 살펴보자.

“그렇다면 한국영화는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꾸 나가야 되는 것일까? 프랑스영화처럼, 독일영화처럼, 일본영화처럼, 국제영화제에 나가 상타고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도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아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대의 영화 정신이 버려야 할 미신이다. 선부른 국제주의가 우리의 실상을 왜곡하며 우리 의식을 외세에 종속시키고 있다. 어떤 특정의 영상미학이 우리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그대로 합당할 리도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국제적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반대로 “향토적이다” “토속적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적이다”라고 소재주의나 자기 편견에 빠져 ‘국제적’이 되고자 하는 것도 환상일 것이다.”³³⁾

여기서 ‘민족영화’는 ‘예술적’ 혹은 ‘작가주의적’ 영화를 통한 국제주의적 해결이나, 자국의 문화를 낭만화하는 방식의 문화민족주의적 시각 모두를 경계한다. 제3세계 영화나 선부른 민중주의 또한 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좀 더 근원적인 수준에서의 민중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한국영화’의 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는데, 다시금 소환된 것이 바로 나운규의 <아리랑>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조명되는

32) 서울영화집단은 서울대학교의 알라성영화연구회 출신 회원을 주축으로 8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모임이다. 첫 공동작품은 <아리랑 관놀이>를 제작하였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 영화 등 제3세계 영화로 관심을 모아갔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역사는 김수남, 『한국 독립영화』, 살림 출판, 2005을 참조하라.

33) 장선우, 『새로운 삶, 새로운 영화』, 서울영화집단 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학민사, 1983, 14쪽.

<아리랑>은 “영화라는 매체가 영화인들에게는 일제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문화운동”의 징표로 해석되며, 영화인 나운규는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의 투사로 재위치된다.³⁴⁾ 이는 지금껏 한국영화사의 정전으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영화 <아리랑>과 나운규를 독립운동, 민족운동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80년대 중반까지도 ‘민족영화’의 텍스트적 특성이나 성격에 대한 선명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영화집단의 경우 <아리랑>을 위시한 리얼리즘의 계보를 주목하는 동시에 탈춤, 판소리, 서사무가, 민요 등과 같이 구전되는 전통문화의 양식을 영화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열려진 영화”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세계 영화사에 등장한 미학적 발명은 각 시대의 “혁명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영화 또한 현재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하는 미학적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한 ‘민족영화’의 시대적 사명은 남북 분단과 단절을 극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분열의 현실을 통일로 맞아들”이고, “단절된 가슴을 일체로” 만들어내, “스스로 확장운동하는 전승력의 예술로 귀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⁵⁾

80년대는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열망이 요동치면서 사회 급변이 감지되던 시기였다. 87년의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제도적 민주주의가 조금씩 안착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난 시절 반공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된 좌파 소설가와 시인, 그리고 지식인의 대규모 해금조치가 단행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88년 3월 31일 정지용, 김기림의 작품이 해금되었고, 7월 29일에는 남·월북 작가 120여 명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진다. 게다가 민주화의 열풍에 따라 소위 ‘이념도서’가 출간되기 시작하였고, 상당수의 사회과학서적과 무크지 등이 출간되었다. 그만큼 역사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소거되어 온 문학, 이념, 역사 등이 다시 소환되었고, 이를 통해 절름발이로 존재해온 한국의 담론장을 완전하게 복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렸던 시대이기도 하다. 영화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이전의 ‘한국영화’ 개념은 국민국가의 영화, 즉 일본 제국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동시에 분단되어 있는 북한의 반대항에 위치되어 형성

34) 서울영화집단 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학민사, 1983, 291쪽.

35) 위의 책, 321-322쪽.

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영화’ 개념이 원조가 될 수 없는 모방물이며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게 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민족영화’ 개념의 재등장은 이러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절름발이가 되어 버린 ‘한국영화’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된다.

‘민족영화’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민족영화>라는 무크지에서이다. 1989년에 처음으로 출간되어 두 편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의미심장하게도 부제는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길”이었다. 그만큼 ‘민족영화’ 개념을 전면화하면서, 지금까지의 ‘한국영화’를 무언가 결여되어 제 위치를 찾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의미화하며, 동시에 정당한 위치 회복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은 80년대 초반 ‘민족영화’에 대한 고민은 제도권 영화(상업영화)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르쥬아 비평의 차원을 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³⁶⁾ 80년대 초반 ‘민족영화’ 개념은 상업영화의 구조 내에서 기존 ‘한국영화’를 반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해결책 또한 글로벌 상업영화 혹은 제도권 영화 구조 내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민족영화’라는 개념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 인식의 확대와 실천력을 담보하려는 의지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선언한다.³⁷⁾ 사실 80년대 초반 재등장한 ‘민족영화’ 개념은 과거 ‘조선영화’에서 ‘조선적인 것’에 대해 고민한 것과 비슷하게 한국영화에 대한 존재적인 질문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운동이 막을 내리고 다시금 담론의 장에 등장한 ‘민족영화’ 개념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상업영화 구조가 보편적 ‘영화’ 개념의 등가물이 되어 온 것을 비판하면서 ‘영화’ 개념의 전면적 확장을 주장하고, 동시에 정치운동으로서 민족영화를 주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영화’가 단순히 개념에 머물지 않고 <민족영화론>이라는 사회 운동적 차원으로 옮겨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민족영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주창된 민족영화론은 이론(사상), 조직, 실천을 바탕으로 ‘운동적’ 성격과 지향을 띤다는 점에서 기존 ‘민족영화’라는 개념과 구별되었다. 즉 민족영화라는 범주는 “민족현실의 극복을 위한 민족해방 민중민

36) 민족영화연구소 엮음, 『민족영화 1: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도서출판 친구, 1989, 2쪽.

37) 위의 책, 14쪽.

주주의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민주, 자주, 통일의 과제 해결”에 복무하는 제도권, 비제도권 영화(운동)를 모두 망라하며, 민족영화 활동은 노동계급운동의 일부이며, 노동계급적 관점과 당파성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³⁸⁾

민족영화연구소에서 펴낸 무크지인 <민족영화>의 구성에서 이 당시 민족영화운동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데, <민족영화 1>편에서는 노동계급운동과 민족영화운동에 관한 창간특집이 실리고, 비제도권적 영화제작 시도로써 기획기록영화 <깡순이, 슈어 프로덕츠 노동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상세하게 소개한다. 그만큼 노동계급의 문제를 ‘민족영화’의 중요한 콘텐츠로 주목한 것이고, 영화제작 방식 또한 충무로와 같은 기존 제도권 영화 제작 방식이나 시스템 밖의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민족영화>가 참조점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해외사례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권 영화였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 북한의 영화이론을 소개하면서 주체문예이론과 <영화예술론>을 상세하게 소개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민족영화’에서 강조하는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라는 방향성을 정치적 매체로써 영화를 주목한 사회주의의 영화에서 찾고자 한 것은 흥미롭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분단 이래로 사실상 인식의 무지 상태로 남아 있던 북한영화나 사회주의권 영화를 복원하여 ‘민족영화’를 구성하고자 하는 야심을 읽어낼 수 있다. 즉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에서 민족과 민중은 북한 주민 또한 포함하고 있었고, 진정한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통일을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사실 냉전의 각축장이었던 한국에서 사회주의권의 문화는 금기 대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북한의 문화는 ‘금기’ 수준을 넘어 철저한 부정과 무지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반공영화에 대한 반발심이 깊었던 ‘민족영화’ 주창자들에게 북한영화는 ‘앞’의 대상이기는 하였지만, 미래상으로 내세우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한국영화의 역사에서 소거된 북한의 흔적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문화

38) 민족영화연구소 엮음, 민족영화 1: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도서출판 친구, 1989, 14쪽.

2>편에서는 1930년대 전후 카프영화활동을 재조명한다. 즉 카프영화운동을 담론장으로 복귀시켜, ‘민족’영화로 완성되지 못한 ‘한국영화’의 계보를 온전히 하려는 시도이다. <민족문화 2>편에서는 지금껏 카프영화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를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확장된 반공주의가 사회주의자 영화운동에 대한 논의를 삭제한 채 한국영화를 구축하게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결국 현재의 절름발이 한국영화를 만들어냈다고 반성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민족영화운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카프영화운동을 상당부분 참조하고 있었는데, <민족문화 2>편에서 소개된 강호의 글은 민족영화운동 진영이 복원하고자 했던 카프영화운동의 성격을 짐작케 한다.³⁹⁾예컨대 강호는 1920년대 후반 카프영화운동을 반성하면서, 영화 제작을 위해서 자본주의와 결탁한 것이 1920년대 카프의 큰 실책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영화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카프 영화인을 육성하고, 이들의 전문화를 추구해야 하며, 작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동시에 부르주아 영화의 배급망이나 상영망이 아닌 대안적인 영화 제작 및 상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민족영화운동은 1920년대의 카프운동을 참조하여 제도권 영화 혹은 상업영화의 구조를 뛰어넘어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의 소재와 주제를 ‘민족’과 ‘민중’의 복원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영화 2>편에서 주목한 ‘민족영화’의 예시가 바로 <파업전야>이다. 사실 <파업전야>는 미학적 성과나 서사적 측면에서의 독창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민족영화론자들은 이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노동대중의 눈으로 엄혹한 현실과 생활과 투쟁의 전형적인 것을 전형(인물)을 통해 형상화하였고, 노동계급이 자기해방의 주체로 떨쳐 일어서는 각성의 과정과 의지를 역동적으로 구현하였고, 생활과 투쟁과 각성에 있어서 노동대

39) 1933년에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조선영화운동의 신방침: 우리들의 금후활동을 위하여”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편집진은 “이 글을 게재하는 이유는 카프영화운동의 주요활동기간이었던 1928~1931년을 겪으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오류와 편향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노력들이 현재 우리 영화운동의 여러 문제에 비추어 공감하는 바가 크고, 또 귀감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족영화연구소 엮음, 『민족영화 2: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1990, 263쪽.

중의 동지적 애정을 따듯하고 낙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에서 찾는다.⁴⁰⁾ 게다가 <파업전야>가 상업영화 구조의 제작, 배급, 상영 방식에 반기를 들고, 전문 배우나 감독이 아닌 영화 활동가가 영화제작에 참여한 점, 그리고 상업영화의 배급망이 아닌 대학과 공장을 중심으로 배급, 상영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민족영화운동 진영에서는 <파업전야>를 새로운 제작, 배급, 상영 모델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상업영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노동대중의 시선을 전면화했다는 측면에서 ‘민족’과 ‘민중’의 주체화 문제에 진일보를 이루어냈다고 주장한다.

상업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한국영화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민족민주운동의 맥락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실천으로써 영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한 민족영화론자들은 ‘민족’과 ‘민중’의 개념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민족영화가 체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식민지 매관영화의 영화사상과 반북반공영화”라고 명시한 것에서 드러나는데,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신파와 멜로드라마라는 ‘한국영화’를 배격하고 박정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된 ‘반공영화’가 아닌 노동자와 농민 등이 주체가 되는 영화를 생산하고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¹⁾ 이런 맥락에서 상업 자본은 타도의 대상이 되며, 지금껏 무지와 반목의 영역에 유폐되었던 북한은 재해석의 대상으로 다시 자리잡는다. 즉 ‘민족영화’에서 주창한 ‘민족’과 ‘민중’은 결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과거 극복을 통해 함께 복원되어야 하는 무엇으로 위치된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영화론자들은 “민족민중영화” 혹은 “민중민족영화”라는 두 용어를 한국영화의 지향으로 의미화한다.

하지만 <파업전야>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드러나듯 여전히 ‘민족영화’의 미학적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⁴²⁾ 사실 <파업전야>는 영화비평가 진영에서는 한국영화의 미학적 성과를 훼손한 작품으로 비판받았다. 할리우드의 서사양식을 그대로 베껴 쓴 것 같은 구조 때문에 <파업전야>는

40) 이정하, 「90년대 영화운동의 선언」, 민족영화연구소 엮음, 『민족영화 2: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1990, 195쪽.

41) 이용관 외, 「현단계 영화운동의 점검과 모색」, 민족영화연구소 엮음, 『민족영화 2: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1990, 21쪽.

42) 「특집 2/<파업전야>의 성과와 그 평가」, 민족영화연구소 엮음(1990), 『민족영화 2: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1990, 180쪽.

한국영화의 리얼리즘 계보에 걸맞지 않은 작품이라는 것이다.⁴³⁾이 영화를 둘러싼 입장 차는 영화비평가들이 지향하는 ‘민족영화’가 민족영화운동 진영과는 크게 달랐음을 짐작케 한다.

영화비평가 진영의 움직임은 영화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 발행한 <열린 영화>에서 구체화된다. 이 저널은 서구의 영화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서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는 영화 형식과 서사 양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이들은 영화언어의 과학성에 주목하면서, 리얼리즘이라는 미학적 전통과 한국적 영화의 관계성 회복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리얼리즘의 회복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리얼리티 묘사에 대한 서구 중심의 영화사상 비판 및 리얼리티/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 연구)를 영화제작과 영화연구의 두가지 측면에서 지속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은 관념적으로 거론되는 한국적 영화언어의 개발 및 민족영화의 실체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⁴⁾

즉, ‘민족(민중)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리얼리즘이라는 미학적 전통의 재구축과 한국적 영화언어를 위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영화론자들이 ‘운동’적 성격에 천착해 미학적 형식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면, 영화비평가들의 경우 ‘민족영화’ 개념은 한국적 리얼리즘 혹은 미학의 구축과 동의어였다. 이들의 입장은 <영화언어>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1989년 봄에 발간된 1호에서는 한국영화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비평의 역할에 대한 글이 실려 있고, 미국영화직배저지 및 영화진흥법 쟁취투쟁의 의의와 문제점을 다룬 기획기사도 눈에 띈다. <영화언어>가 지향하고 있는 대안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운동과 영화문화’, ‘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 등의 글에서는 프랑스의 누벨바그와 같은 미학적 영화운동을 한국영화의 대안으로 참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언어> 2호에서는 <오! 꿈의 나라>를 소개하고, 폴란드 영화 <철의 사나이> (1981, 안제이 바이다 감독)에 대한 심층 기사를 통해 폴란드의 노

43) 조재홍, 「한국 영화산업의 변화와 독립제작의 현주소: <과업전야>의 경제적 측면과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영화언어』 6, 1990, 12쪽.

44) 전양준, 「영화/리얼리즘/이데올로기 II」, 『열린 영화』 3, 1985, 52쪽.

동운동이나 제3세계 영화미학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도 한다. 이후 영화비평가들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을 소개하거나, 고다르, 바쟁 등 프랑스의 영화 이론과 서사 양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영화언어>라는 저널 제목이 시사하듯 이들은 영화의 ‘언어’, 즉 형식, 서사 양식, 미장센, 사운드 등에서 대안적 영화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영화언어>에 참여한 주요 인물 중에서 <민족영화> 무크지를 이끌던 이정하, 이효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영화를 포함한 사회주의 영화와 1920년대 카프영화운동의 복원을 통해 ‘민족영화운동’의 방향성을 찾으려는 일련의 영화학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 비평가 집단으로 수렴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몇몇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영화’ 개념이 쇠락하고, 영화의 형식과 미학적 가능성에 천착한 ‘대안영화’ 개념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만큼 ‘민족’과 ‘민중’의 복원을 통한 ‘민족영화’ 구축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 밖의 영화운동을 통한 민족영화 구축이라는 기획이 결국 제도권 영화로 빠르게 흡수되었던 1990년대 영화 산업의 특성과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한 ‘운동’으로서 ‘민족영화’가 보편적인 ‘영화’ 개념에 충분한 균열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VI. 나가며: 글로벌 장에서의 ‘민족영화’

‘민족영화’ 개념은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국영화가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게 되면서, ‘민족영화’ 진영에서 ‘운동’으로 참여했던 많은 영화인들이 영화산업으로 흡수되기도 하였고, <영화언어>를 중심으로 한 비평가들 또한 영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제도화된 비평 진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예컨대 <파업전야>를 만들었던 독립영화단체 <장산곶매>의 주요 멤버인 이은, 장동홍, 장윤현, 홍기선 등은 90년대 중반부터 제도권 영화를 제작, 감독하기 시작하였고, 대안영화 담론을 구축했던 영화 비평집단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우후죽순으로 창간된 영화 저널리즘과 비평지를 중심으

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⁴⁵⁾ ‘민족영화’ 논쟁의 주요 집단이 이렇듯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영화 산업이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쳐 그 몸집을 불려나갔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이 유입된 만큼 더 많은 영화 인력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손길은 제도권 밖의 영화를 지향했던 이들을 맹렬한 기세로 포섭하게 된다.

하지만 ‘민족영화’ 개념의 흔적은 1990년대를 관통하여, 2000년대의 한국영화의 전성기에도 그 면면이 확인된다. 예컨대 1990년에 결성된 ‘한국독립영화협의회’는 80년대 ‘민족영화’ 진영과 비평 진영의 운동적, 이론적 성과물 중에 하나이고, 이후 1998년에 한국독립영화협회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창립선언문을 살펴보면,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의 반대 개념이고, ‘독립’의 의미는 단순히 검열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지향과 정의로운 목적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 독립은 ‘그 무엇을 위한’ 일일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 화려하고 기름진 화면보다는 치열하고 정직한 장면들로 새로운 영상언어를 만들기 위해, 우린 상투적 영화공식에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한 사람의 인권, 소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우리는 독립이 삶과 영화의 진실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믿는다. 갖가지 타협과 흥정, 매스컴의 각광, 각종 영화제 초대장, 먹음직스러운 뷔페음식... 이들로부터 초연하게 물러나 작은 진실을 위해 작은 카메라를 정조준 할 때 영화는 비로소 독립하는 것이다...”

제도권 한국영화와는 구분되는 ‘민족영화’에 대한 열망이 ‘독립영화’로 수렴되면서, 이제 ‘독립영화’가 ‘한국영화’ 개념의 중요한 한 축이 된다.

45) <씨네 21>(1995), <키노>(1995), <프리미어>(1995)를 시작으로 <씨네버스>와 <필름 2.0>은 2000년에, 그리고 2001년에는 <무비위크>가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영화 관련 저널리즘과 비평지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으로 영화 평론의 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고, 영화에 대한 담론적 논의보다는 산업적 측면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영화 저널리즘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키노>, <씨네버스>, <로드쇼>가 2003년에 폐간하고, <필름 2.0>, <프리미어>, <스크린>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차례로 문을 닫게 된다. 끝까지 버티던 <무비위크> 또한 2013년에 폐간하면서, 이제 영화 잡지는 <씨네21>이 유일하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충무로 중심의 상업 영화 또한 일대 변화를 겪게 된다. 1992년 삼성이 <결혼이야기>를 제작하면서 영화산업에 뛰어든 이래로 현대와 대우가 뒤이어 진출하게 되는데,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출한 대기업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었던 충무로 제도권 영화의 구조를 바꾸고, 영화의 다양한 수익창출 구조를 모색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영화 제작을 본격화한다. 1997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은 영화산업에서 철수하게 되지만,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한국영화산업에는 창업투자회사 자본들이 대기업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메우게 되고, 2000년대 이후에는 CJ, 오리온, 롯데와 같은 제2기 대기업이 진출하여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역을 수직 통합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2007년부터는 SK와 KT 양대 통신사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안정적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영화산업에 뛰어들면서 실로 ‘영화’는 ‘산업’이 된다.⁴⁶⁾

2000년대 들어서 한국영화의 약진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호재에 힘입어 한국영화는 상당한 수준의 자본력과 몇몇 기업의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적 통합 구조의 독과점 체제까지 갖추진 상태였고, 한국영화의 국내 시장 점유율 또한 50%를 상회하고 있었다. 더욱이 한국영화의 자본, 인력, 내용 등이 점차 초국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영화’에서 ‘한국’의 명확한 의미가 흐려지고 있었다. 예컨대 해외 시장을 노리고 합작영화를 제작하거나, 해외 배우를 기용하여 영어로 영화를 제작한 사례, 또는 한국의 대표적 영화감독들이 외국 자본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례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산업적 상황은 ‘보호해야만 하는’ ‘자국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대두되게 하였고, 몸집이 커져버릴대로 커져버린 상업영화는 단순히 국내시장의 보호책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익창출을 위해서 세계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만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기 위해서 ‘한국영화’는 ‘한국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던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글로벌 관객들에게 익숙한 정서와 주제를 담아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영화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이라는 영토에 매여 있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민국

46) 한국영화의 산업화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은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한류-동아시아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문화황단과 민주주의」, 『중국현대문학』 42, 2007.

가의 매체라는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의 자본, 한국 영화인과 관객, 한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한국적 내용을 담는 ‘한국영화’ 개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착되는 개념적 변화는 ‘한국영화’의 영어 번역어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코리아 필름’, ‘코리아시네마’ 개념의 등장이다.⁴⁷⁾영화를 지칭하는 영어 표현으로 필름(film)이 영화의 제작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시네마(cinema)는 제작부터 상영, 관객의 해석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과정을 포함한 용어이다.⁴⁸⁾과거 ‘영화’라는 매체가 단순히 텍스트적인 특성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두 용어 차이를 반영한 번역어가 필요치 않았지만, ‘영화’ 개념이 영화를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실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필름과 시네마는 반드시 구분해야만 하는 개념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국영화 산업의 급격한 산업화와 관객의 일상 변화, 그리고 더 많은 미디어 매체 등장 등의 이유로 영화는 이제 필름적 성격(텍스트와 제작)과 시네마적 성격(배급, 상영, 해석)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영화의 필름적 성격은 점차적으로 무국적화 혹은 초국적화 되지만, 시네마적 성격은 ‘영화보러가기(cinema-going)’의 문화적 특징, 한국 관객의 해석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한국’이라는 시공간에 긴밀하게 접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한국영화’의 대체 개념으로 ‘한국-필름’, ‘한국-시네마’이 아니라 ‘코리아’이라는 번역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표기한 이유일 것이다. 2000년대 이래로 글로벌 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영화’는 영어로 Korean film 혹은 Korean cinema로 번역되어 유통되었다. 한류의 인기는 더 많은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제 한국영화는 세계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빠지지 않고 소개될 뿐만 아니라

47) 코리아시네마는 신조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코리아씨네마』라는 영화 잡지가 이미 1970년대에 존재했었고, 『실버스크린』이라는 영화 자막을 가리키는 영어 용어의 번역 사례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1970년대에도 한국영화의 국제화 욕망이 자리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 잡지는 본격적인 ‘코리아시네마’를 다루고 있기 보다는 유명배우들의 화보와 영화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코리아시네마’라는 개념구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8) 루이스 자네티, 『영화의 이해』, 김진혜 옮김, 현암사, 2000.

아시아 전역의 상영관에서 배급·상영되기도 한다. 문제는 세계 영화 시장 내 초국적 주체이면서, 지역과 로컬 영역에서 여전히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한국영화는 기존 ‘한국영화’ 개념이 지닌 강한 국적성 및 영토성과 양립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지역(아시아), 로컬의 관계를 횡단하는 한국영화를 지칭하는 ‘Korean film’ 혹은 ‘Korean cinema’을 영어 번역어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러한 한국 영화의 초국적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장의 연관성 속에서만이 ‘한국적’일 수 있는 한국영화의 현 상황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영화의 발명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할리우드는 글로벌 시장을 독점해왔다. 할리우드는 엄청난 수의 영화와 기술적 진보를 앞세워 보편적 개념으로써 ‘영화’와 사실상 동가 개념으로 유통 확산되어 왔다. 게다가 할리우드는 미국영화로 출발했던 초기와는 다르게 자본, 인력, 텍스트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영화로 완전히 탈바꿈 했다. 한편 각 로컬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영화’와 구분되는 ‘-(하이픈)영화’를 만들 것인가를 골몰해왔고, 그 성과로 인해 다양한 영화 관련 개념들의 분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이픈)영화’는 보편적이면서도 기술적 진보의 영역에 위치한 할리우드를 어느 정도는 모방하거나 내재화해야만 하는 태생적 위치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로컬의 ‘-(하이픈)영화’는 텍스트적 맥락에서 기준이 되는 할리우드와 구별되는 특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담론적이고 개념적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차이와 구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해왔다. 즉 개념적 수준에서 할리우드와 ‘-(하이픈)영화’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수렴되며, 때로는 타협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오고 있다.

움직이는 생물로써 개념은 끊임없이 경쟁하여 확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멸되어 새로운 개념이 그 자리를 메우기도 한다. 개념의 이러한 쟁투와 변화는 그만큼 특정 시점에서 영화의 실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화라는 실재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짧은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일본제국-식민지 조선이라는 층위에서 ‘조선영화’ 개념은 처음에는 불명확하게 쓰이다가, 점차적으로 ‘종족지’로서 위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해간다. 대한민국 수립이후에는 ‘조선영화’ 개념은 쇠락하게 되고, 미국(할리우드)-한국의 관계성 내에서 국민국가의 영화면서 동시에 열등한 모방물이라는 의미의 ‘한국영화’ 개념과 제도권 영화 밖의 새로운 영화를 추구하

며 운동적 성격을 강조한 ‘민족영화’ 개념이 혼용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글로벌-아시아(한류의 시장)-한국이라는 의미망 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업적 가치를 주목한 ‘코리안 필름’, ‘코리안 시네마’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식민지 시기부터 ‘민족’이라는 고민이 담긴 ‘한국영화’ 개념은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국민 경제의 일부 분으로서 ‘한국영화’만이 살아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민족’이라는 고민이 소거된 ‘한국영화’ 개념이 말해주는 것은 ‘문화’가 삭제된 채 ‘산업’이 되어 버린 한국영화의 실체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저

-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한류-동아시아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문화횡단과 민주주의」, 『중국현대문학』 42, 2007.
- 김소연, 「전후 한국의 영화담론에서 ‘리얼리즘’의 의미에 관하여」, 『매혹과 혼돈의 시대: 50년대의 한국영화』, 도서출판 소도, 2003.
- 김소연, 「민족영화론의 변이와 ‘코리안 뉴 웨이브’ 영화담론의 형성」, 『대중서사연구』 12(1), 2006.
- 김소연, 「식민지 시대 조선영화 담론의 (탈)경제적 (무)의식에 관한 연구」, 『비평문학』 48, 2010.
- 김수남, 『한국독립영화』, 살림 출판, 2005.
- 나운규, 「<아리랑>을 만들 때」, 『조선영화』, 창간호, 1936.
- 나인호,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keyword’ 연구와 개념사」, 『역사학연구』 29, 2006.
-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 라인하르트 코젤렉,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
- 루이스 자네티, 『영화의 이해』. 김진해 옮김. 현암사, 2000.
- 리디아 리우,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
- 민족영화연구소 엮음, 『민족영화 1: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도서출판 친구, 1989.
- 민족영화연구소 엮음, 『민족영화 2: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도서출판 친구, 1990.
- 백문임, 『임화의 영화』, 소명출판, 2015.
- 오영숙, 『1950년대, 한국영화와 문화담론』, 소명출판, 2007.
- 이순진, 「한국영화사 연구의 현단계: 신파, 멜로드라마, 리얼리즘 담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2, 2004.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삼예사, 1969.
- 이화진, 「식민지 영화의 내셔널리티와 ‘향토색’: 1930년대 후반 조선영화 담론 연구」, 『상허학보』 13, 2004.
- 이화진, 『소리의 정치』, 현실문화, 2016.
- 장선우, 「새로운 삶, 새로운 영화」, 서울영화집단 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학민사,

1983.

전양준, 「영화/리얼리즘/이데올로기 II」, 『열린 영화』 3, 1985.

정종화, 『한국영화사: 한 권으로 읽는 영화 100년』, 한국영상자료원, 2007.

조재홍, 「한국 영화산업의 변화와 독립제작의 현주소: <파업전야>의 경제적 측면과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영화언어』 6, 1990.

2. 언론자료

『경향일보』, 1956.07.18.

『동아일보』, 1947.07.05.

『동아일보』, 1962.05.18.

『매일신보』, 1913.06.20.

『매일신보』, 1914.08.31.

『매일신보』, 1919.10.02.

『매일신보』, 1926.10.10.

『서울신문』, 1946.05.26.

『서울신문』, 1946.05.26.

『조선일보』, 1937.04.24.~04.27.

『중앙신문』, 1946.01.21.~1.24.

『중앙신문』, 1945.11.23.

『중앙신문』, 1946.02.24.

『한국일보』, 1955.07.24.

Abstract

Conceptual History of ‘Ethnic/National-Film’ ; From ‘*Choseon* Film’ to ‘Korean Cinema’

Kim, Sung-Kyung*

This article attempts to approach ‘film’ as a concept. As ‘film’ was imported to Choseon as a cultural medium, the concept of film was also transmitted to Korean peninsular from Japan. That is, film as a concept has gone through the trajectories of being a symbol of modernity, narrative medium, and finally culture industry. It has to be said that the concept of ‘film’ in Korea has been located in the dichotomy between Hollywood, the universal form of film, and local film. Film in Korea constructed itself as mimicry of Hollywood in terms of form and style in the beginning of the film history whereas it also formulated distinctive features in narrative and content by emphasizing ‘differences’ from the Hollywood. However, in recent years, those differences have faded away. Rather Korean film tries to construct its own identity from its industrial strength in both domestic and global market. Given this, conceptual history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how ‘ethnic/national-film’ and its conceptual meanings have been developing in each historical conjuncture of the colonial, independenc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 Assistant Pr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교신 : 김성경, 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E-mail: kksocio@kyungnam.ac.kr)

논문투고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10. 04

게재확정일: 2017. 10. 04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양미경*

- I. 머리말
- II. 다문화 관련 정책
 - 1. 다문화 관련법과 제도
 -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III.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정책 및 교육 현황
 - 1. 다문화 전문 인력 정책
 - 2.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현황
- IV.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제언
 - 1.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
 - 2. 제도 운영 측면
 - 3. 전문가 활용 측면
- V. 결론 및 제언

국문요약

세계화,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거부할 수 없는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은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체류 외국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¹⁾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인력 등 우수인력 전략적 유치 및 재외동포 포용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²⁾ 이에 예상되는 갈등과 부작용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다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에서는 개념과 역할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³⁾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전문가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위과정의 내용 개정 및 표준 교재 개발, 1급 자격을 위한 이수교육 개설과 보수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각 부처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협업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다문화 전문 인력,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다문화사회통합정책,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 및 2급.

I. 머리말

한국 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2016년 말 2백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⁴⁾ 주민등록 외국인수는 제주도 지역만 하더라도

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7, 790쪽.

3)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9,593명으로 제주도 전체의 3.0%다.⁵⁾ 전국의 다문화가정은 27만 8천 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199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체류가 허용된 난민의 숫자도 1,828명에 달한다. 귀환 동포와 해외유학생 또한 급증하는 등 이주 유형 및 국적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의 진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2000~2008년 국가별 거주 외국인수를 비교해본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거주 외국인 수는 5.9% 증가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이 기간 평균 19.9%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⁶⁾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인력 등의 우수인력 전략유치 및 재외동포 포용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⁷⁾ 하지만 한국인들은 현재 한국이 다문화사회라는 데 74.7%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주민에게 배타적인 경향은 여전히 심하다. 2015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100점 만점에 53.95점으로⁹⁾ 2011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편이지만 일자리나 범죄율 등에 대한 위협인식은 증가하였다.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 자기인식’은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낮은 편으로¹⁰⁾ 사회적 부작용과 갈등이 예측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의 역사가 길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했던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조차도 다문화 관련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여겨진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다문화적 국민국가 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상호 공존해야 한다.¹¹⁾ 다

4) 법무부,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

5) 제주특별자치도청, 「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2017.

6)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7)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 2017, 790쪽.

8) 『동아일보』 2010년 10월 16일자,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2010.

9)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수용성지수 결과」, 2016.

10)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수용성지수 결과」, 2016.

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의 방향에서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없지만 이민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은 2008년 한국사회학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인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이 정책 제안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다문화사회 교육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필요 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¹²⁾ 2008년 처음 시작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강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이 시작되었다. 학계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자격 인정을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¹³⁾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배출된 전문 인력 활용 미흡과 수요에 비해 과잉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⁴⁾ 교재내용, 이수시간, 수료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고¹⁵⁾ 다문화 전문인력의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의 중장기적 로드맵 제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¹⁶⁾ 현재까지도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제도의 틀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제도 운영, 전문가 활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1) James A. Banks·모경환·최충욱·김명정·임정수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28쪽.

12) 김혜순 외,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한국사회학회, 2008.

13) 정지윤,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14) 민무숙 외,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6-3, 2009.

15) 설동훈·김찬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2009.

16) 이성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2011.

II. 다문화 관련 정책

1. 다문화 관련법과 제도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 정책의 시초를 살펴보면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2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2010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었다. 외국인정책 법률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 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사회통합 분야 예산 중 결혼이민자와 자녀 관련 예산은 877.6억원으로 75%에 달했으며, 2012년에는 1,183.9억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¹⁸⁾ 다문화가족에 비하여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설치되어 이민자, 외국인 적용지원과 민원행정 부처별로 지원되던 외국인 서비스 운영이 통합된 점은 고무적¹⁹⁾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이민자관련 정책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민자 적용 법령²⁰⁾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이민자관련 정책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민자 적용 법령

정부부처	내용	관련 법령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 가장 많은 예산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2016년 기준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
행정자치부	58개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	
교육부	교육청을 통해 학교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에서 다문화학생들을 지원.	

17) 양미경,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경제학회지, 2015.

18)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19) 법무부,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설치·운영- 정부3.0보도자료」, 2016. 12. 6.

20) 박복순 외,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지원. 95개 고용센터와 산업인력공단외 39개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 정책위원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300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이민자를 교육.	제한외국인차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한편 다문화 전문 인력에 관련된 법령은 대부분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표 2〉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법령

법적 근거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 39조 1항, 3항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민자 대상으로 강의할 한국어 강사와 한국사회이해 강사,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인력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기본요건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2012.10.15. 신설, 2016.6.15. 개정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법적 근거. 다문화사회전문가 등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 운영.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위탁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가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현재 대학에만 전문인력 양성, 보수 교육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로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2013.1.16.	시행의 근거.‘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 중 한국사회이해교육 강사의 자격은 다문화사회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이거나,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
법무부훈령 제966호 제정 (법무부훈령 제1023호개정) (2014. 11.27. 제정, 2015.11.23. 일부 개정)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2호 가목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015.6.15개정) 참조.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이란 이민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한다.²¹⁾ 제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 한 것으로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에서 관할한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로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을 포함한다.²²⁾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은 2017년 기준 47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과 253개의 일반운영기관이 선정되었다²³⁾.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0~3)단계 교육, 법무부 주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그리고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이며 2016년 7월 17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분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과목 강사 자격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기준이 나타나 있다.

〈표 3〉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개요²⁴⁾

단계	0~3단계 교육	4단계 교육	5단계 기본과정	5단계 심화과정 교육
교육 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등 영주자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한국사회이해 (국적·체류상담포함)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 료자 대상.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정체성, 국가안보, 통일, 외

21)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적 취득(국적회복, 특별귀화 제외)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가 영주자격(F57)을 신청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3) 법무부 이민통합과,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현황」 (법무부 공고 제2016-254호), 2016. 12. 6.

24)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http://www.socinet.go.kr>), 2017. 5. 2 검색.

			소양	교, 헌법 가치 등
이수 시간	기초, 초급, 중급 등 최대 415시간		50시간	20시간
주관	운영기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특징	(1~3) 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강사 자격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120시간)이수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또는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법무부장관과 협의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개설된 이민·다문화관련 대학(원) 정규과정에서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Ⅲ.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정책 및 교육 현황

1.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관련 정책은 2008년 12월 법무부에서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시작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분야에서 다문화 전문인력 단기양성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 국가차원에서 통합적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외국인 관련 정책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전국 20개 ABT(Active Brain Tower)대학에 단기양성과정을 위탁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ABT대학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과정 학위과정을 개설하였다.²⁵⁾

초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계획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25) 법무부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과정 개설계획 자료」, 2010.

제도의 목표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시적·종합적 연구, 지역 및 대상에 대한 개별 특성 고려한 다문화정책,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양성, 각종 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추진,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연구소’와 이민정책 전문대학원 개설 등²⁶⁾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이해 프로그램의 강사 양성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었다.

2.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현황

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1, 2급 구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다문화사회 전문가 구분)에 명시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²⁷⁾

2급	1급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 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p> <p>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다문화 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26) 법무부 보도자료, 「다문화 사회통합 ABT대학으로 20개 대학 지정」, 2008. 5. 23.

2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개정 2015.6.15).

2)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과목

2008년 당시의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과정은 총 40시간 교육으로 기초소양 12과목(25시간), 전공소양 4과목(15시간)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총 80시간 교육으로 기초소양 7과목(48시간), 전공소양 14과목(66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민·다문화 관련법(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의 이해와 이민자 출신국 별 문화 이해 등이 추가되었고,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안작성법이 추가되었다.²⁸⁾ 2015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과목은 아래와 같다.

〈표 5〉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이수 과목²⁹⁾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법제 및 정책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교육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다문화(사회)교육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다문화일반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실습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50시간 이상)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재,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재,
대학원	3과목 9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이상
대학 전문대학	5과목 15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3) 다문화사회전문가 과목 개설 대학

2012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에서는 성결대(경영행정 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석·박사과정), 계명대(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 사회학과 석사과정), 동아대(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다문화과정 석사과정), 목원대(산업정보언론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석사과정) 등 4개의 대

28)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안내 자료」, 2010.

2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개정 2015.6.15.).

학을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대학으로 지정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인정 요건을 위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지정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석사, 박사) 취득 자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공표하였다.³⁰⁾ 2017년 현재 다문화사회관련 과목 개설 대학은 총38개 대학이며 학부과정은 14개 대학, 대학원 과정은 30개 대학 35개 단과대에 개설되어 있다. 일반대학원에 다문화학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동국대가 유일하며 특수대학원 중 행정, 정책대학원은 6개 대학,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학과는 16개 대학에서 다문화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는 주로 한국어교육 위주로 총 14개 대학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표 6〉 다문화사회전문가 과목 개설대학 현황³¹⁾

과정	계열	대학명	
학부과정	대학	배재대, 강릉원주대, 동덕여대, 원광디지털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중대, 부산외대, 충신대, 대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건양사이버대, 화신사이버대, 목원대, 선문대	14
	일반대학원	동국대 국제다문화학과, 성결대 행정학과, 목원대 한국어다문화학과,	3
대학원과정	특수대학원 기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인하대, 중앙대, 우석대, 목원대, 평택대, 조선대, 동아대, 성산호대학, 평택대, 조선대, 동아대, 성산호대학, 전남대, 명지대	16
	교육대학원	인하대, 부산외대, 부산외대, 명지대, 한국외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공주교대, 서울교대, 건국대, 전주대, 중원대, 경기대, 계명대	16
	대학원 소개		35

4) 이수교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 보수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교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이 부여되며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4년 10월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인정 대학(원) 및 요건 안내」, 2012.

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관련과목 개설대학 공지」, 2017.

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0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기관³²⁾을 통해 이수교육을 시작하였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이 총괄하고 수도권은 한국이민재단, 중부권, 남부권 등 세 곳에 전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수교육 후에는 위탁교육을 맡은 대학의 총장 명의로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증을 발급한다.

〈표 7〉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내용 (2017년 6월 2일 기준)³³⁾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제4조 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	합계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총15 시간
이민법제론(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10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2시간	
특강	2시간	
비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학위과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 (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임. 특강은 교육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기 법, 사례연구, 명사특강 등 교육과목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함		

2016년 이전까지는 다문화사회 관련 학위과정 졸업예정자들의 이수교육(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 기존 다문화사회전문가 역량강화 보수 교육을 통합 시행하여 교육의 목표나 교육 내용 설정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 2016년부터는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인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자 역량강화 보수교육은 이민정책의 이해, 이민관련법, 다문화시대와 사회윤리와 인권, 이슬람사회와 문화, 지역사회와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지위, 한국사회이해 교수기법 및 교수방향,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교수기법 토론, 교육사례 공유, 다문화명사 특강 등을 시행한다.³⁴⁾

3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기관 공문」, 2016. 6.

3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관련과목 개설대학」, 2016.

34)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www.socinet.go.kr(검색일: 2017년 6월 7일).

IV.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언

1.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개념 및 기대 역할의 명확화다.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은 제도를 만들고 양성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1, 2급 구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다문화사회 전문가 구분)에만 명시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한정된 범위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 2급의 자격 기준일 뿐 석박사 과정을 포함한 고학력 전문가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지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이나 전문성 수준의 구분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09년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시행 당시 다문화 전문 인력의 개념을 ‘기능적 전문성과 다문화적 역량의 소양을 갖추고 이주자 및 다문화 관련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³⁵⁾ 즉, 다문화관련 기관 종사자나 통역, 한국사회이해나 한국어 강사,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전문 인력으로 본 것이다. 초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계획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제도의 목표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시적·종합적 연구, 지역 및 대상에 대한 개별 특성 고려한 다문화정책,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양성, 각종 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추진,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위한 ‘다문화사회통합 연구소’와 이민정책 전문대학원 개설 등³⁶⁾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이해 프로그램의 강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문화사회전

35) 민무숙 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2009연구보고서-6-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36) 법무부 보도자료, 「다문화 사회통합 ABT대학으로 20개 대학 지정」, 2008.

문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협의로 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목적을 효율적인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전문가 양성으로 본다면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³⁷⁾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개발,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가진 무의식적인 편견과 사고방식, 확증편향,³⁸⁾ 전문성의 부식화 등을 경계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이민정책, 다문화교육 그리고 사회통합교육 등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세상의 변화를 읽고 정보를 활용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³⁹⁾에 다문화관련 새로운 직업 및 직무, 교육 방법 등을 연구하고 반영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몫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등에도 이러한 내용의 교육은 거의 없으므로 자발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한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2. 제도 운영 측면

어떤 분야이든 전문가 제도를 계획할 때는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정책 방향이 무엇이고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초기에는 배출된 인력들이 주로 복지 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강의 인력이 수요에 비해 과잉 양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제도 도입 초기에 업무 분야별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요소나 전문성

37)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38) 곽호완·박창호·이태연·김문수·진영선, 『실험심리학용어사전-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시그마프레스, 2008.

39)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과정에서 명확하게 규명 되지 않고 교육이 진행되는 점이 지적되었고.⁴⁰⁾ 이수시간과 이민정책, 행정 등 분야로 확대 연계하여 질적 수준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⁴¹⁾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지위와 역할 또한 변화, 확대되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다문화사회 한국에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를 파악하여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활기찬 이민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의 실행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의 목표는 교육·상담·행정·연구 각 분야의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가 양성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별 목표도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직무 관련하여 체계적인 직무표준화를 수립하고 양성교육 내용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자신의 전문성과 연계된 부분과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의 공통 전문성, 강의를로서의 교수역량, 교수법 등을 포함하고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의 인정 기준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규정(2015.1.1.시행)’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위과정 이수자 수료증 발급 전 필수교육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제4조제2항)과 역량강화 보수교육은 법제 관련 내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이수 후 법무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나 학위를 수여한 대학 총장 명의가 아닌 이수 교육을 주최한 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훈령 제656호

40) 민무숙 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2009 연구보고서-6-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41) 설동훈·김찬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2009.

제19조. 법무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부여되기로 하였으나 아직 1급 인정을 위한 별도의 이수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의 대상이 되는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현재 이들에게 특화된 이수교육이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된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의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보수교육의 내용은 이민법제론(10시간-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법, 난민법, 국적법), 한국의 이민정책(2시간) 특강⁴²⁾ 등 주로 법제론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최근 동향 업데이트, 우수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빈도, 기한 등과 받지 않았을 때의 제재,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등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다문화사회이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은 운영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 강사등록을 해야 강사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기준에 이미 명시된 자격이므로⁴³⁾ 등록 절차는 불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전문가 활용 측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하여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개념과 기대 역할이 새롭게 규정된다면 다문화사회전문가 활용범위는 거의 전 분야에 해당한다. 특히 다문화의 포괄적인 개념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재외동포를 포함한 이주배경 개인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이주민 지원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부터 기업의 비즈니스 부문과 KOICA, IOM, UN, UNESCO 등 국제협력과

4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2의 제2항,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기준”.

지 다양한 곳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제도상으로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는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최근 법무부 귀화 민간면접관 자격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이 포함된 것처럼⁴⁴⁾ 배출된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의지 또한 중요하다.

그동안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정책은 다문화 담론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정책이 만들어진 측면이 많고, 더욱이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다문화 관련 정책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은 이민 다문화 사회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취합하고 이민행정, 이민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4차산업혁명과 세계화 영향으로 더욱 분주해진 이주의 시대에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급격하게 진행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에 예측되는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계, 정책입안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다문화담론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토양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2017년 7월 이민정책 학술지인 이민과 통합(The Journal of the Migration and Integration)을 창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민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 현황을 볼 때 일반 내국인과 다문화로 분류되는 다문화사회 일원들의 소통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해결해 줄 전문가의 양성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 관련 법령과 정책,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정책 및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 및 발전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전

44) 법무부 보도자료,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2014년4월 훈령(제939호) 개정」, 2014.

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에서는 개념과 역할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⁴⁵⁾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위과정의 내용 개정 및 표준 교재 개발, 1급 자격을 위한 이수교육 개설과 보수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은 세계 속의 한국 사회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뿐 아니라 이민 정책 수립, 실행, 다문화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다문화사회현상의 변천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역량, 활용도 바뀌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훌륭한 전문가를 배출해내고 전문가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제도의 담당부서인 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과도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 배출된 다문화사회전문 인력들의 현황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아쉽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각 부처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협업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45)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저

- 강정향,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에 관한 연구: 인적·사회적·심리적 자원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곽호완·박창호·이태연·김문수·진영선,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2008.
- 김혜순·김재경·엄한진·최선헌,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 제안」, 법무부용역보고서, 2008.
- 민무숙 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전문 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2009 연구보고서-6-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 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박복순 외,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설동훈·김찬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법무부, 2009.
- 양미경,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경제학회지, 2015.
- 이성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2011.
- 정지윤,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 James A. Banks·모경환·최충옥·김명정·임정수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2. 언론 및 정부 보도자료

- 『동아일보』 2010년 10월 16일자,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 위원회, <http://news.donga.com/List/Series>, 2010(2017년 6월 5일 검색).
-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안내 자료」, 2010.
- _____,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설치·운영」- 정부3.0 보도자료, 2016. 12. 6.
- _____,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6.
- _____,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www.socinet.go.kr(2017년 6월 7일 검색).
- _____, 『이민과 통합』, 창간호 (2017년 7월호), 2017.
- 법무부보도자료,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2014년 4월 훈령(제

939호) 개정, 2014.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보도자료, 「다문화 사회통합 ABT대학으로
20개 대학 지정」, 200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인정 대학(원) 및
요건 안내」, 2012.

_____ ,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
가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훈령 제966호, 2015.

_____ ,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현황」, 법무부 공고 제2016-254호, 2016.

_____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
육 실시기관 공문」, 2016. 6.

_____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7.

_____ , 「다문화사회 관련과목 개설대학」, [http://
www.socinet.go.kr/soci/comm](http://www.socinet.go.kr/soci/comm)(2017. 6. 2 검색).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http://www.socinet.go.kr>).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2017, [http://www.jeju.go.kr/open/government/
stats/population](http://www.jeju.go.kr/open/government/stats/population).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
건 및 이수과목’

Abstract

Analysis and Proposal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raining System in Korea

Yang, Mi-Kyung*

In the glob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ging,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ving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as one of the policies to cope with anticipated conflicts and to respond in advanc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by outlining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system based on analysis of past and current multicultural professional training process and proposing development plan.

First of all,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s and role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e provis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Article 39 (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econd,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contents of the degree course, the development of standard textbooks, the opening of completion course for the first grad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aintenance system. Finally, in

* Vice Direct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t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terms of professional utilization, the scope of the rol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hould be extended to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law, arts, public affairs, social work, and business and th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ponsible depart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place th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Unfortunately, there is a limit to the statistical data of existing professionals, I hope that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will increas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rough this study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search and collaborate with multicultural professionals of various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Key Words : multicultural professionals,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raining system, multicultural expert, Multicultural Society Integration Policy,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Certification.

교신 : 양미경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E-mail : listentomiky@gmail.com)

논문투고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09. 30

게재확정일: 2017. 09. 30

지역신문의 대학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용복**, 김치완***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및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간신문에 나타난 대학보도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의 보도 유형과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 등의 형식적 구성을 검토하고, 보도 논조와 주요 행위자, 중심주제, 뉴스가치를 확인함으로써 대학보도 특성을 분석했다.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총 1442개의 대학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이 이뤄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도 유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설/분석, 칼럼/논단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보도에 대한 뉴스 게재면은 사람면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면, 사회면 순이었다. 다음으로, 신문사별로 정보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학보도가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분석을 통해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기사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보도의 논조는 중립적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 보도가 부정적 보도에 비해 9배 이상 높았다. 대학보도에서 어떤 행위자나 집단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학본부가 가장 많았으며, 교수, 학생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보도 중심주체 차원에서 대학보도는 전반적으로 대학행사 홍보와 개인 업적에 대한 내용들을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보도에 있어서 각종 대회 수상과 논문상, 연구실적 등의 우수성을 강조한 영향성과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는 유용성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뉴스가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지역일간신문이 대학보도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신문사 입장에서 대학이 중요한 출입처로 관심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지역신문, 대학보도, 내용분석, 형식적 특성, 내용적 특성.

I. 문제 제기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이슈와 현안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주변인들과의 대화나 각종 커뮤니티 활동에서 소식과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 대화나 커뮤니티 활동만으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기에는 그 범위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뉴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경험케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며,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대학의 발전상과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지역언론은 그 어떤 미디어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언론의 대학보도가 어떤 이슈와 내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지는 대학이나 대학 진학을 앞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대학보도는 대학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강조하거나 축소하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보도기사는 그 대학의 호감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

오늘날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수한 신입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학 지원자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대학이 외부에 비쳐진 전반적인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³⁾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 주변 친구나 진학담당 교사, 학부모 등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에게 지역언론은 그 대학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누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은 지역민을 독자나 시청자로 하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대학 홍보와 광고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언론사의 대학평가 기사는 교육여건, 연구수준, 교육비용, 사회평판도 등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으로 학생의 대학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⁴⁾ 언론의 교육보도와 관련된 태도와 시각이 이러한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실의 인식과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⁵⁾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대학보도 뉴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학보도 뉴스를 다룬 연구는 대학PR 관점에서 전국일간신문 뉴스보도를 내용분석하거나,⁶⁾ 대학 보도자료가 지역일간신문에 어떻게 보도되

- 1) 최태룡,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대학-경상대학교에 대한 진주시민의 인식 2008년」, 『지역사회학』 11(2), 2010, 63-90쪽.
- 2) Rynes, S. L. (In press). Recruitment, job choice, and post-hire consequences: A call for new research directions. In M.D. Dunnette & L. Hough (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nd ed.).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forthcoming, 1991.
- 3) 유태용·이종구, 「대학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9(2), 1996, 41-60쪽.
- 4) 오대영, 「언론사 대학평가 기사가 고교생의 대학평가와 언론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4), 2015, 102-130쪽.
- 5) 손승혜·황하성·장윤재, 「한국 언론의 교육보도 특성과 뉴스 가치 분석」, 『미디어와 교육』 1(1), 2011, 115-145쪽.
- 6) 황성욱·이종혁, 「대학보도 분석을 통한 대학이미지 향상 PR전략 탐색: 프레임 분석을

는지를 연구한 논문⁷⁾과 한국과 미국신문의 대학보도에 대한 비교 연구⁸⁾ 등이 있다. 또 대학보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보도에 대한 특성과 뉴스가치를 분석한 연구⁹⁾와 교육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연구¹⁰⁾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보도와 관련한 내용분석이나 심층인터뷰 접근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전반적인 대학보도 방식과 시각을 검토하고, 대학보도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이 보도됐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지역신문은 전국신문과 비교해 신문 미디어 고유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대학보도 연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 뉴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언론의 대학보도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신문의 보도 유형과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 등의 형식적 구성을 검토하고, 보도 논조와 주요 행위자, 중심주제, 뉴스가치는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신문의 대학보도 특성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간신문에서 제공하는 대학보도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분석해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뉴스 생산 관행과 뉴스가치

언론사는 보도, 논평, 해설 등을 위한 뉴스를 취재하여 기사나 프로그램 등을 생산하는 조직이다. 언론사의 상품인 뉴스 생산 과정은 계획을 위한 편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2011, 123-154쪽.

7) 김희정, 「대학의 대언론홍보에 관한 연구: 대학 보도자료의 지역 신문 보도 경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3), 2006, 141-178쪽.

8) 심재철·정완규·김균수, 「한국과 미국 신문의 뉴스가치 비교: 대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3), 2003, 95-124쪽.

9) 손승혜·황하성·장윤재, 앞의 2011 글, 115-145쪽.

10) 황하성·손승혜·장윤재, 「교육 보도에 있어서 정보원, 뉴스 선정, 취재 관행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1), 2012, 247-277쪽.

집회의, 수집 단계의 취재관행, 뉴스선택의 가치기준, 역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독특한 기사작성 방식 등 관행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¹¹⁾ 따라서 뉴스가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기사화 방식, 나아가 정보를 얻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나름의 관행들을 발달시킨다.¹²⁾ 뉴스 생산 관행은 조직 구조의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대로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뉴스 생산조직은 이러한 관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삿거리를 수집해 뉴스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고, 그들만의 배타적 체제를 유지했다.¹³⁾

뉴스 생산의 1차 수행자는 취재기자이다. 기자는 현장에서의 취재 행위를 통해 뉴스 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기자들은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구조화된 일상과 관행, 그리고 표준화된 취재 방식을 통한 직업인으로서의 면모를 훨씬 강하게 가진다.¹⁴⁾ 이렇게 작성된 뉴스는 지면과 시간 제약에 따라 뉴스생산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차 생산된 뉴스를 대상으로 각 소속 부서장이 다시 뉴스가치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 기사를 최종 선택한다. 하지만 뉴스생산 과정은 이처럼 단편적이고 선형적이지 않은 않다. 특정 이슈에 대해 사회적 규범과 가치, 미디어 조직의 압력과 제약, 언론관행, 언론인의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의 여러 요인들이 미디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¹⁵⁾ 갠스(Gans, 1979)¹⁶⁾는 기자, 미디어조직, 사건, 미디어조직 외부 등 네 가지 요인이, 맥콤스(McCombs, 2004)¹⁷⁾는 정보원, 다른 미디어, 미디어 규범과 전통

11) 김사승, 「취재현장과 뉴스룸 내부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방송학보』 26(4), 2012, 7-46쪽.

12) 김동규·김경호,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2), 2005, 33-68쪽.

13) 김송희·윤석년, 「디지털 환경에 따른 지역신문 뉴스생산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2), 2009, 207-242쪽.

14) 박진우·송현주,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 49-68쪽.

15) Shoemaker, P. J., & Reese, D. R.,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s*". New York: Longman. 1996, 김원웅(옮김), 미디어 사회학, 나남, 1997.

16) Gans, H. J.,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17) McCombs, M. E., "*Setting the agenda*", Cambridge: Polity, 2004.

등 세 가지 요인이 미디어의 뉴스생산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았다. 여기에는 기자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전문성은 물론 취재원 선택, 마감 시간, 인력 구조, 객관주의, 내부 조직의 가치와 철학, 경영 여건, 취재원과의 관계, 광고주의 영향, 정부의 압력, 시장 상황, 정치경제적 이념과 입장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개입한다.¹⁸⁾ 이는 게이트키퍼의 개인적 가치 및 판단이나 미디어 내부 조직의 결정권보다 오히려 외부 집단의 개입이나 입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¹⁹⁾

그런 점에서 기자, 미디어조직, 미디어 외부 요인은 뉴스생산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신문기사가 기자 보다 미디어조직의 보도방향에 의해 좌우되고, 미디어조직 규모는 뉴스생산 과정에 영향을 준다.²⁰⁾ 미디어조직은 폐쇄적이면서 독자적인 게이트키퍼를 통해 뉴스생산 과정을 작업관행의 연속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뉴스 제작의 효율성과 뉴스 품질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있다.²¹⁾ 이처럼 뉴스의 선택과 배제는 수많은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ing)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많은 선행연구들은 뉴스의 선택과 배제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뉴스가치라고 전제하고 뉴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치에 주목해 왔다.²²⁾

특정한 가치 또는 대상을 위해 선택된 사실이 뉴스화 된다. 전통적인 뉴스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뉴스 선택(news selection)에 관련된 뉴스가치이며, 두 번째는 제대로 보도했느냐는 뉴스 평가(news evaluation) 가치이며, 세 번째는 보도된 뉴스가 얼마나 탐사적인 성격을 갖

18) 이완수·배정근, 「경제 뉴스 품질에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 탐구: 경제 뉴스 전문 매체 생산자와 소비자 집단에 대한 표적 집단 면접(FGI)」,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4), 2016, 102-149쪽.

19) 이완수,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 :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 2006, 295-332쪽.

20) 오대영·최민음, 「한국 일간지의 헬스기사 보도양상: 종합지와 경제지의 차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6(2), 2016, 101-144쪽.

21) 김경모,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49(1), 2012, 7-37쪽.

22) 심미선·강혜란, 「지상파 및 인터넷에서만 방영된 19대 총선 관련 뉴스에 대한 대학생 집단의 뉴스가치 평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뉴스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4), 2013, 85-130쪽.

느냐는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와 관련된 뉴스가치이다.²³⁾ 언론 입장에서 뉴스가치는 뉴스를 취재, 제작, 전달하는 과정에서 뉴스 기관의 입장, 제작 관행, 언론인의 특성, 기술적 요인, 뉴스 제작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²⁴⁾

슈메이커, 데니얼리언, 그리고 브렌들링거(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1)²⁵⁾는 뉴스가치 기준을 시의성, 갈등성, 인간 흥미성, 연관성, 영향성, 선정성 등으로 보았다. 슈메이커와 포에(Shoemaker & Poe 2009)²⁶⁾는 뉴스가치를 일탈성과 사회적 유의성이란 개념으로 분류했는데, 일탈성은 인간적 흥미성, 선정성, 예외성, 탈규범성, 사회적 갈등성, 갈등의 치열성으로 다시 구분했다. 일탈적 사건이나 정보는 본능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뉴스 이용에 적용해 보면 일탈성 높은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가 독자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다.²⁷⁾

국내에서의 뉴스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이종혁, 길우영, 강성민, 그리고 최윤정(2013)²⁸⁾은 4개의 최상위 요인과 10개의 차상위 요인, 30개의 하위 측정항목들로 ‘뉴스가치 구조모델’을 제시했는데, 최상위 요인으로는 사회적 중요도, 새로운 볼거리, 수용자 관련성, 인간적 흥미 등으로, 차상위 요인으로는 영향성, 저명성, 심층성, 갈등성, 참신성, 활동성, 유용성, 근접성, 오락성, 이야기 등으로 뉴스가치를 제시했다. 뉴스의 본질적 속성을 뉴스가치라고 정의한 이민웅(2008)²⁹⁾은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시의성, 뉴스 영향의 세기에 따라 뉴스가치가 달라진다는 영향성, 평정 보다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갈등성, 어떤 변화가 발생할 때 뉴스가 된다

23) 심재철·정완규·김균수, 앞의 2003 글, 98-100쪽.

24) 손승혜·이창현, 『TV 저널리즘과 뉴스 가치: 한국, 영국, 미국 TV뉴스의 내용 분석』, 한국언론재단, 1999.

25)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s: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37, 1991.

26) Shoemaker, P. J., & Poe, T. P., “Gatekeeping theory”. New York : Routledge, 2009.

27) 이종혁, 「뉴스의 일탈성이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진화론, 인지부조화, 정보 효용성을 바탕으로 모델 도출」, 『한국언론학보』 53(6), 2009, 241-261쪽.

28) 이종혁·길우영·강성민·최윤정, 「다매체 환경에서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종합적 구조적 접근: ‘뉴스 가치 구조모델’ 도출」, 『한국방송학보』 27(1), 2013, 167-212쪽.

29) 이민웅, 『저널리즘의 본질과 실천』, 나남, 2008.

는 뉴스성,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의 밀접성과 관련된 근접성, 유명한 사람이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저명성, 비정상적인 일에 대한 진기성, 군중의 시위, 난동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행동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뉴스가치가 높아진다는 다기성, 수용자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상 수용자의 성격 등 10가지를 뉴스가치로 들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이 수용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흥미로울 것이냐 하는 중요성과 흥미성을 최고의 뉴스 가치로 꼽고 있다. 심재철(2003)³⁰⁾은 뉴스가치를 일탈성과 사회적 유의미성, 객관성과 사실성(진실성과 관련성), 공평성(균형성과 중립성), 공표성, 설명성, 통합성, 폭로성, 난폭성, 다양성, 전문성 등으로 구분했다. 심재철 등(2003)³¹⁾은 뉴스 가치를 갈등성, 인간적 흥미성, 선정성, 진실성, 공정성, 완전성, 전문성, 공표성, 설명성, 통합성, 시의성, 관련성 등으로 분류했다. 이창현과 손승혜(1999)³²⁾는 뉴스가치를 시의성, 갈등성, 저명성 등의 경성 뉴스 요인과 인간적 흥미, 부정성, 신기성 등의 연성 뉴스 요인, 그리고 영향성, 활용성 등의 유용성 항목과 TV 뉴스의 특성을 고려한 영상적 볼거리 요인들로 구분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뉴스 가치에 대한 분류는 순서와 내용을 약간 달리하지만 그 본질적 속성과 연결에 있어서는 모두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2. 대학보도의 뉴스가치

대학(university)은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상호간 인격자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며, 이러한 진리탐구를 바탕으로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3대 기능이 제도화된 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공동체 내에서 대학 안팎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논평의 기능도 요구된다. 또한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와 화젯

30) 심재철,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뉴스가치에 관한 소론」, 『방송통신연구』 47, 2003, 33-60쪽.

31) 심재철·정원규·김균수, 앞의 2003 글, 98-100쪽.

32) 이창현·손승혜, 「뉴스 아이템의 특성에 따른 TV 뉴스의 중요도 차이」, 『한국언론학보』 44(1), 1999, 412-440쪽.

거리, 애깃거리를 제공하는 오락 기능과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기능도 필요하다. 즉 대학보도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리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대학의 학문적, 문화적 성과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학 문제를 이슈화해 심층 취재함으로써 대학 환경을 감시하는 언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학보도의 뉴스가치는 미디어의 넓은 취재영역과 기능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우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89개의 대학과 10개의 교육대학, 2개의 산업대학과 138개의 전문대학, 기타 47개교 등 모두 386개교가 있으며, 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208만4807명, 교육대학 1만5903명, 산업대학 3만3245명, 전문대학 69만7214명, 기타 35만2670명, 대학원 33만2768명 등 학생 351만6607명에 교원 9만371명을 포함해 모두 360만6978명이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³³⁾ 여기에 국립대 공무원과 사립대 사무직원,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한 동문들까지 합하면 대학 인구는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많은 대학과 대학 소속 구성원들을 취재범위로 하는 대학보도의 영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대학보도는 대학의 문제를 이슈화해 심층취재함으로써 대학 환경을 감시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보도의 중요한 기능은 문화 창조와 전승에 있다. 대학은 진리탐구의 상아탑으로 모든 지식이 생성되고, 응용되는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학문의 연구를 통해 문화적 유산이 축적됐으며, 그것의 교육은 후세로의 문화적 전승을 기약했던 것이다.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뉴스보도의 중요성은 더욱 돋보인다. 현재의 지역대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대학은 서울·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로 인한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 미충원률 증가,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 미흡 및 파트너십 부재,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질적 수준 저조 등이 다양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한다. 지역민의 요

33)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index> 2017. 7. 26. 접속.

구와 기대에 의해 대학이 설립됐으므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대학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물론 서울에 집중돼 있는 다수의 대학들은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지역민들의 여망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입각해 성립됐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이슈나 문제를 지역언론이 외면한다면 결국은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대학은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국공립대학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2/3를 점유하는 사립대학이 수행하지 못하거나 앓고 있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중국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역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발전 전략을 포함한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평생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민들의 일상에 관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지역사회가 지역대학에 대해 생각만큼의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역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지 않아도 대학의 일이지 지역 사회의 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대학보도에 있어서 무엇이 뉴스로서 선택과 주목을 받고, 어떠한 일은 왜 뉴스로서 배제되고 축소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뉴스가치를 담은 보도 기사를 쓰는 일은 그 과정 자체로서 중요하다.

3. 대학보도 선행 연구

국내 언론의 대학보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시도돼 왔는데, 그것도 몇 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까지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

황성욱과 이종혁(2011)³⁴⁾은 언론 노출도가 높은 2개의 서울 사립대학에

34) 황성욱·이종혁, 앞의 2011 글, 138-148쪽.

대한 전국일간신문을 분석한 결과, 주요 대학들 중 비교보도가 단독보도보다 많았고, 논조는 중립>긍정>부정의 순서였으며, 심층기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교수, 타대학관계자, 정부관계자, 졸업생, 사설입학 관계자, 학생 등의 뉴스 정보원이 보도의 주요 소스로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긍정 기사의 경우에는 대학성과 이슈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입시/입학, 대학의 경영, 교수관련 이슈, 그리고 대학이미지 관리 이슈 등이, 부정 기사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입학이슈, 졸업생 관련 이슈, 교수관련 이슈, 대학경영 이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내는 등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연구자도 밝혔듯이 서울에 소재한 2개의 상위권 대학의 신문보도만을 분석했기에 다양한 보도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황하성 등(2012)³⁵⁾은 언론사의 교육 관련 기사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언론사의 대학보도를 포함한 교육보도에 대한 취재 관행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기관들을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이들 산하기관의 정부부처 공무원과 같은 인적자원과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보도자료가 기사의 주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언론사 기자들은 교육 관련 뉴스 기사 선택에 있어서 독자 또는 시청자들의 관심사와 그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대학 입시 문제가 가장 큰 뉴스 주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와 관련 없는 주제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교육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김희정(2006)³⁶⁾은 지역 국립대학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보도자료가 게재된 지역일간신문을 분석대상으로 대학의 보도자료가 어떻게 기사화됐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학 보도자료는 단과대학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포내용은 학술관련 행사에 관한 것으로, 자료형태는 요약문이나 실제 행사에 사용하는 초대장 및 안내문을 그대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도자료에 의한 지역 일간신문의 보도방향은 대부분 중립적인 기사였으며, 긍정적인 보도방향이 부정적인 보도방향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게재면은 동정면이 가장 높은

35) 황하성·손승혜·장윤재, 앞의 2012 글, 26-28쪽.

36) 김희정, 앞의 2006 글, 27-33쪽.

비율을 나타내며, 보도자료의 내용이 기사내용에 반영되는 비율은 약 6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보도자료의 내용은 일단 기사화가 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방향이나 더 나아가 학교홍보에 좋은 효과를 주는 긍정적 보도방향으로 게재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보도자료가 중요한 취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규명했다.

심재철 등(2003)³⁷⁾은 한국과 미국 신문이 대학이슈와 쟁점을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를 뉴스가치에 초점을 뒀 비교했다. 그 결과 국내 신문은 미국 신문과 비교해 대학 기사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도했으며, 공정성, 전문성, 탐사성의 뉴스가치가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밝혀냈다. 또한 국내 신문은 대학개혁의 기능적이며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보도에서 미국 신문과 비교해 교육 이념적이며 철학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적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심재웅, 김균수, 그리고 이정훈(2001)³⁸⁾은 국내외 신문의 대학기사의 특징과 뉴스가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외 신문은 국내 신문과 달리 대학교육 기사에서 이슈를 보다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국외 신문은 기사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작성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신문은 새로운 뉴스의 개발보다는 손쉽고 틀에 박힌 보도를 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문이 대학기사를 흥미롭게 쓰기 위해서는 초점 구조, 일화적 프레임, 흥미 프레임 등 다양한 글 쓰기 방식이 도입돼야 하며, 단순한 이슈의 전달보다는 이슈의 극화 및 개인화, 인간적 흥미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준만(1993)³⁹⁾은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통해 한국언론과 민주주의 위기를 지적하고, 대학 보도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한국언론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범적·시론적 연구를 시도했다.

37) 심재철·정완규·김균수, 앞의 2003 글, 23-26쪽.

38) 심재철·심재웅·김균수·이정훈, 「교육보도와 뉴스가치: 국내의 신문의 대학기사 비교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4-24쪽.

39) 강준만,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권, 1993, 31-54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보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지역일간신문들의 각기 다른 보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보도의 형식적 특성으로 기사 유형과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에 대해 분석했다. 다음으로, 대학보도의 논조와 대학보도에서 주로 다루지는 사람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 대학보도에서 강조되고 부각된 중심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보도에서 중요한 뉴스가치는 무엇인지와 지역일간신문별로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연구문제 1 :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대학보도의 형식적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1-1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기사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1-2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뉴스 게재면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1-3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정보 형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대학보도의 내용적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1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논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2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주요 행위자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3 : 각 신문사의 대학보도의 중심주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4 : 대학보도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등장하는 중심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 제주지역 일간신문 대학보도에서 중요한 뉴스가치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제주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등 5개 지역일간지⁴⁰⁾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기간은 2015년

40) 제주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일간신문은 모두 6개이다. 1945년 10월 1일 제주일보(지금은 제주신보), 1989년 4월 22일 한라일보, 1990년 6월 2일 제민일보, 1999년 3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했다. 이 분석 시기는 3월에 입학해서 2월에 졸업하는 1년간의 학사일정에 맞춰 운영되는 대학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등 5개 지역일간신문⁴¹⁾에 보도된 대학과 관련된 기사들의 내용분석을 위해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제주지역 국립대학인 ‘A대’, ‘A대학’, ‘A대학교’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 자료를 수집했다. 검색어를 제주지역의 국립대학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인 ‘대학’으로 검색할 시에는 연구범위로 설정한 ‘대학보도’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많은 일반 뉴스가 수집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대상을 제주지역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지리적 영역인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그 규모나 구조적 차원에서 범위가 좁고 경험적으로 접근하기 쉬워 보다 넓은 범위의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탐사 및 연구의 기초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교수나 대학 관계자가 취재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대학보도와 관련되지 않은 뉴스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신보 362건(25.1%), 한라일보 263건(18.2%), 제민일보 283건(19.6%), 제주매일 210건(14.6%), 제주신문 324건(22.5%) 등 총 1442건의 기사가 연구에 이용됐다.

월 30일 제주매일(주간발행에서 2004년 일간지 전환), 2013년 11월 22일 제주신문 등이 잇달아 창간됐다. 마지막으로, 2015년 11월 16일 제주일보가 창간됐지만, 분석기간에 일부만 포함돼 있어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주일보가 창간될 당시 제주에서 제주일보 제호로 2개의 신문이 동시에 발행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5년 12월 1일자로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가 제호를 기존 제주일보에서 JJ제주일보로 변경했고, 추후 12월 15일자부터 다시 제주신보로 제호를 변경해 발행하고 있다.

- 41)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일간신문의 평균 발행부수는 15,558부로 전국 평균 60,000부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신보는 2016년 발행부수가 22,460부로 2위인 제민일보 18,417부 보다 4043부가 많았다. 반면에 유료부수는 한라일보가 11,549부로 제민일보의 유료부수 11,262부보다 287부 많았다. 실질적 구독자수를 평가하는 유통율에서는 한라일보가 64.0%로 가장 높았고, 제민일보 61.15%, 제주신보 46.79% 순이었으면, 반면에 제주신문은 28.05%로 나타났다.

(2) 분석유목과 신뢰도

본 연구는 지역일간신문에서의 대학보도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했다. 분석유목은 기사 유형,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 보도 논조, 주요 행위자, 보도 중심주제, 뉴스가치 등 7개 항목이다.

보도 유형은 ① 스트레이트 ② 해설/분석 ③ 기획/특집 ④ 인터뷰 ⑤ 사설 ⑥ 칼럼/논단 ⑦ 독자투고 ⑧ 사진 ⑨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스트레이트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친 보도 중심의 기사를 말하며, 해설/분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동기, 중요성, 배경, 분석, 전망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사다. 기획/특집은 기획 특집 기사 및 연재물 기사를 말하며, 인터뷰는 특정 인물과의 대담 및 인터뷰 위주로 구성돼 있는 기사, 칼럼/논단은 신문사 내 논설위원이 쓴 사설과 신문사 비상임 논설위원이나 대학교수 기고 글이 시론이나 칼럼으로 게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독자투고는 외부 필자가 기고한 글의 형태를 말하며,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별개의 단독 사진의 경우에 하나의 기사로 취급했다. 이외의 기사들은 기타로 분류했다.

뉴스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사 게재면은 5개 분석대상 신문⁴²⁾이 거의 유사한 지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① 1면 ② 종합(2-3면) ③ 사회(4-5면) ④ 경제 ⑤ 문화 ⑥ 사람면(동정) ⑦ 오피니언 ⑧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1면과 종합면은 그날 발생한 뉴스 가운데 중요한 기사를 다루는 지면이다.

정보 형태는 ① 공개 정보 ② 재가공 정보 ③ 단독입수 정보 ④ 단독개발

42) 제주신보의 지면 구성은 1면, 2~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교육·문화, 7면 경제, 8~9면 사람과 사람들, 10면 전국종합/기획, 11면 열린 페이지·날씨, 12면 스포츠·연예, 13면 방송·운세, 14~15면 오피니언, 16면 전면광고를, 한라일보의 1면, 2~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경제, 7면 기획, 8면 문화, 9~10면 전면광고, 11면 스포츠·TV·운세, 12~13면 사람과 사람, 14~15면 오피니언, 16면 전면광고를, 제민일보의 1면, 2~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경제, 7면 스포츠, 8면 문화, 9면 TV·연예, 10면 전면광고, 11면 기획, 12~13면 일과 사람들, 14~15면 오피니언, 16면 전면광고를, 제주매일은 1면, 2~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경제, 7면 전국종합/기획, 8면 TV·연예, 9면 매일게시판, 10~11면 사람과 사람, 12면 문화, 13면 스포츠, 14~15면 오피니언, 16면 전면광고를, 제주신문은 1면, 2면 오피니언, 3면 종합, 4~5면 사회, 6면 경제, 7면 행정, 8면 문화, 9면 스포츠, 10면 전국종합, 11면 전면광고, 12~13면 사람들, 14면 오피니언, 15면 TV·연예, 16면 전면광고로 구성돼 있다.

정보 ⑤ 기타 등으로 측정했다. 정보 형태 분류는 이완수·배재영·임봉수 (2015)⁴³⁾와 이건호(2008)⁴⁴⁾의 선행연구를 인용했다. 공개 정보는 대학보도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모든 언론에게 공개된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한 기사이며, 재가공 정보는 공개 정보를 중심으로 했지만,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주어진 정보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 등을 추가 취재해 정보 내용을 보강한 기사를 말한다. 단독입수 정보는 특정 취재원이 한 언론사에게만 정보를 줘서, 해당 언론사가 그 내용을 단독이나 특종으로 보도한 기사이며, 단독개발 정보는 기자의 독자적 기획이나 탐사에 의해 발굴된 기사를 의미한다.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구분했다.

보도 논조는 기사에 드러난 대학보도와 관련된 태도로서 기사 제목과 리드문에 있는 긍정적,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근거로 ① 긍정 ② 부정 ③ 중립으로 분류했다.

대학보도와 관련한 기사에서 어떤 집단이나 기관이 비중 있게 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 주요 행위자를 분석했다. 언론이 그 이슈와 관련된 여러 주요 행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어느 계층이나 집단이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⁴⁵⁾ 주요 행위자는 기사 제목과 리드문에서 주어가 분명히 제시되고 능동적 행동이 드러난 경우 주요 행위자로 범주화 했으며, 가장 중요한 행위자를 선별했다. 구체적인 주요 행위자들로 ① 교수 ② 학생 ③ 직원 ④ 동문 ⑤ 일반도민 ⑥ 총장 ⑦ 대학본부 ⑧ 단과대학/소속기관 ⑨ 연구소/연구센터 ⑩ 산학협력/사업단 ⑪ 교육부/국가기관 ⑫ 제주도/제주도교육청 등 지방기관 ⑬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보도 중심주제는 ① 입시/입학 ② 실태/통계 ③ 교육정책 ④ 비리/사고 ⑤ 행사/홍보 ⑥ 선거 ⑦ 인사동정 ⑧ 대학 경영/성과 ⑨ 개인성과 ⑩ 발전

43) 이완수·배재영·임봉수, 「지역신문 뉴스구성요소의 구조분석: 부산일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3), 2015, 17-18쪽.

44) 이건호, 「한·미 신문기사의 심층성과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 6개 한국 신문과 2개 미국 신문 1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5), 2008, 13-14쪽.

45) 임양준,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1), 2010, 348쪽.

기금/장학금 ⑪ 기타 등으로 유목을 정리했다. 이러한 유목 사용은 손승혜·황하성·장윤재(2011)⁴⁶⁾에서 사용한 분류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했다. 입시/입학은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한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실태/통계는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대학통계 관련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교육정책은 교육부 등 국가기관이 발표한 교육 관련 정책을 다룬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비리/사고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비리 및 사건, 사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행사/홍보는 대학 행사와 관련한 홍보성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선거는 대학 총장 및 단과대학장, 학생회장 등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선거 관련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인사동정은 총장, 교수 등 대학 관련 인사들의 개인적인 인사와 동정, 교수 채용 등의 기사를 포함한다. 대학 경영/성과는 일반적인 대학 경영 이슈와 경영 성과, 국가사업 선정, 학술협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성과는 대학 교수나 대학원생, 학생들의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 저술상이나 우수도서 선정, 최초 연구 및 성과, 학회장 취임 등의 개인적인 업적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발전기금/장학금은 발전기금이나 장학금 기탁 및 전달을 포함한 이와 관련한 보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뉴스가치는 선행연구(정수영·남상현, 2012)⁴⁷⁾를 인용해 ① 시의성 ② 저명성 ③ 영향성 ④ 유용성 ⑤ 갈등성 ⑥ 부정성 ⑦ 인간적 흥미 등 7개 유목으로 분류했다. 시의성은 뉴스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사건이 얼마나 최근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측정된다. 구체적으로 어제와 오늘 발생한, 혹은 발생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뉴스에 해당한다. 저명성은 뉴스가 사회적으로 저명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장소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나 장소에 관한 뉴스이다. 영향성은 뉴스에서 언급되는 사건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평가로서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강도가 높은 경우의 뉴스이다. 유용성은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에 대한 평가로서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46) 손승혜·황하성·장윤재, 앞의 2011 글, 142-143쪽.

47) 정수영·남상현, 「지상파TV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무보도와 단독보도 뉴스에 관한 연구: 뉴스 주제와 뉴스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4), 2012, 282쪽.

얻을 수 있는 뉴스에 해당한다. 갈등성은 뉴스 주체 간의 폭력, 충돌, 싸움, 긴장 등 갈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평가로서 개인, 집단 상호간의 싸움, 대립 등에 관한 뉴스이다. 부정성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감시를 통해 환경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적 가치관에 반하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뉴스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적 흥미는 사건의 비중이나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수용자들의 흥미/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에 대한 평가로서 독특하고 흥미 있는 요소들이나 볼거리, 진기하거나 색다른 것을 다루는 뉴스에 해당한다. 기사에는 여러 가지의 뉴스 가치가 겹쳐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뉴스가치를 선정했다.

〈표 1〉 분석 유목

항 목	측정 방식
지역일간신문	① 제주신보(구 제주일보) ② 한라일보 ③ 제민일보 ④ 제주매일 ⑤ 제주신문
기사 유형	① 스트레이트 ② 해설/분석 ③ 기획/특집 ④ 인터뷰 ⑤ 사실 ⑥ 칼럼/논단 ⑦ 독자투고 ⑧ 사진 ⑨ 기타
뉴스 게재면	① 1면 ② 종합(2~3면) ③ 사회(4~5면) ④ 경제 ⑤ 문화 ⑥ 사람면 ⑦ 오피니언 ⑧ 기타
정보 형태	① 공개 정보(보도자료 의존 기사) ② 재가공 정보 ③ 단독입수 정보 ④ 단독개발 정보 ⑤ 기타
보도 논조	① 긍정 ② 부정 ③ 중립
주요 행위자	① 교수 ② 학생 ③ 직원 ④ 동문 ⑤ 일반도민 ⑥ 총장 ⑦ 대학본부 ⑧ 단과대학/소속기관 ⑨ 연구소/연구센터 ⑩ 산학협력/사업단 ⑪ 교육부/국가기관 ⑫ 제주도/제주도교육청 ⑬ 기타
보도 중심주제	① 입시/입학 ② 실태/통계 ③ 교육정책 ④ 비리/사고 ⑤ 행사/홍보 ⑥ 선거 ⑦ 인사동정 ⑧ 대학 경영/성과 ⑨ 개인성과 ⑩ 발전기금/장학금 ⑪ 기타
뉴스가치	① 시의성 ② 저명성 ③ 영향성 ④ 유용성 ⑤ 갈등성 ⑥ 부정성 ⑦ 인간적 흥미

연구자와 두 명의 코더는 정확한 분석유목의 측정을 위해 전체 분석 대상의 4% 가량에 해당하는 보도기사 50건을 임의 추출해 교차적으로 코딩했다. 연구자와 두 명의 코더는 분석항목에 대해 이틀에 걸쳐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재코딩함으로써 신뢰도 수준을 높였다. 신뢰도 검증은 코헨의 카파(Cohen's k) 공식을 이용했다. 분석 항목별 신뢰도 수준은 보도 유형 0.88, 정보 형태 0.78, 보도 논조 0.86, 주요 행위자 0.74, 보도 중심주제 0.74, 뉴스가치 0.72

로 전 항목에 대해 0.72-0.88을 보였다. 코딩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IV. 분석 결과

1. 대학보도의 형식적 특성

1) 대학보도의 기사 유형

대학보도에 대한 지역일간신문의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신문사별 보도량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신문보도는 전체 1442건으로, 제주신보가 25.1%(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신문 22.5%(324건), 제민일보 19.6%(283건), 한라일보 18.2%(263건), 제주매일 14.6%(210건) 순이었다.

〈표 2〉 신문사별 기사 유형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보도 유형	스트레이트	341(94.2)	247(93.9)	226(79.9)	191(91.0)	309(95.4)	1314(91.1)
	해설/분석	12(3.3)	6(2.3)	37(13.1)	10(4.8)	6(1.9)	71(4.9)
	기획/특집	4(1.1)	0	4(1.4)	2(1.0)	0	10(0.7)
	인터뷰	1(0.3)	1(0.4)	3(1.1)	0	1(0.3)	6(0.4)
	사설	0	0	2(0.7)	0	0	2(0.1)
	칼럼/논단	3(0.8)	3(1.1)	8(2.8)	2(1.0)	4(1.2)	20(1.4)
	독자투고	0	2(0.8)	1(0.4)	0	0	3(0.2)
	사진	1(0.3)	4(1.5)	2(0.7)	4(1.9)	4(1.2)	15(1.0)
기타		0	0	0	1(0.5)	0	1(0.1)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chi^2=96.56$, $df=32$, $p<.001$

대학보도에 대한 보도 유형으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91.1%(1314건)로 가장 많았고, 해설/분석 4.9%(71건), 칼럼/논단 1.4%(20건), 사진 1.0%(15건), 기획/특집 0.7%(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 보도 유형에 있어서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가 월등히 많았다. 전반적으로 대학보도에 대한 지역일

간신문 보도가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취재원이 언론에 보도를 요청하기 위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작성됐으며, 심층보도 형태인 해설분석형 기사나 기획특집형 기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 보도유형을 살펴보면, 제주신문 95.4%(309건), 제주신보 94.2%(341건)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다른 신문사 기사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의 지역신문도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신문사와는 달리 제민일보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이 79.9%(226건)으로 가장 낮았고, 반면에 해설/분석의 보도 유형이 13.1%(37건)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2) 대학보도의 뉴스 게재면

대학보도 기사가 게재된 지면을 분석했다. 뉴스 게재면 분석은 대학보도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대학보도에 대한 뉴스 게재면은 사람면이 49.8%(71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면 20.4%(294건), 사회면 20.1%(290건) 순이었다. 뉴스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1면과 종합면 비중이 전체 4.3%(62건)에 불과해 지역신문은 대학 뉴스를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보도가 가운데 일반적인 행사기사가 동정 위주의 사람면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면에는 대학 홍보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총장 동정이나 학교 행사 위주의 기사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게재면을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사람면 게재 경향이 뚜렷했으며, 제주신보의 경우 다른 신문사보다 문화면에 31.2%(113건)가 게재됐다. 반면에 제민일보는 대학보도의 사회면 게재(32.2%)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 신문사별 뉴스 게재면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게재면	1면	6(1.7)	6(2.3)	1(0.4)	6(2.9)	5(1.5)	24(1.7)
	종합(2-3면)	6(1.7)	10(3.8)	8(2.8)	5(2.4)	9(2.8)	38(2.6)

	사회(45면)	41(11.3)	43(16.3)	91(32.2)	48(22.9)	67(20.7)	290(20.1)
	경제	6(1.7)	0	4(1.4)	5(2.4)	5(1.5)	20(1.4)
	문화	113(31.2)	33(12.5)	37(13.1)	46(21.9)	65(20.1)	294(20.4)
	사람	182(50.3)	162(61.6)	121(42.8)	90(42.9)	163(50.3)	718(49.8)
	오피니언	0	5(1.9)	12(4.2)	2(1.0)	4(1.2)	23(1.6)
	기타	8(2.2)	4(1.5)	9(3.2)	8(3.8)	6(1.9)	35(2.4)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2=122.05$, $df=28$, $p<.001$

3) 대학보도의 정보 형태

신문사별로 정보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당일 발표된 보도자료 등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기사 작성 비중이 80.0%(115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한 경우가 13.2%(190건), 단독 개발 정보 4.9%(70건), 기타 1.8%(26건), 단독 입수정보 0.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보도가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이나 분석을 통해 기사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신문 89.2%(289건), 제주신보 85.1%(308건), 한라일보 84.0%(221건) 순으로 공개 정보를 통해 보도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제주신보와 제주신문 순으로 전체 보도량은 가장 많았으나 각각 85.1%, 89.2%의 기사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민일보는 공개 정보가 62.2%(176건)로서 가장 낮았으며, 재가공 정보가 21.2%(60건)로 가장 높았고, 단독개발 정보도 12.7%(36건)로서 다른 신문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이는 제민일보 대학담당 기자가 공개된 정보자료를 기초로 해석과 분석을 곁들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자 스스로 핵심정보를 발굴하거나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신문사별 정보 형태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정보 형태	공개 정보	308(85.1)	221(84.0)	176(62.2)	160(76.2)	289(89.2)	1154(80.0)
	재가공 정보	40(11.0)	26(9.9)	60(21.2)	38(18.1)	26(8.0)	190(13.2)
	단독입수 정보	0	0	2(0.7)	0	0	2(0.1)
	단독개발 정보	11(3.0)	10(3.8)	36(12.7)	8(3.8)	5(1.5)	70(4.9)
	기타	3(0.8)	6(2.3)	9(3.2)	4(1.9)	4(1.2)	26(1.8)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²=105.27, df=16, p<.001

2. 대학보도의 내용적 특성

1) 대학보도의 논조

대학보도의 논조를 보면 중립적 보도가 59.5%(858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긍정 36.5%(526건), 부정 4.0%(58건) 순이었다. 중립적 보도가 가장 많았으나, 긍정적 보도가 부정적 보도에 비해 9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긍정적 보도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는 대학본부(22.8%), 학생(21.1%), 교수(17.5%) 순이었고, 부정적 보도 중에서 주요 행위자는 대학본부와 학생(37.9%)이 공동으로 가장 높았고, 교수(5.2%) 순이었다. 또한 긍정적 보도에 있어서 중심주제는 개인성과(31.2%), 행사/홍보(26.6%), 대학경영/성과(22.2%) 순이었고, 부정적 보도 중에서 중심주제는 실태/통계(41.4%), 비리/사고(27.6%), 입시/입학(8.6%) 순이었다. 이는 보도자료에 의해 개인이나 대학 경영 성과를 지역신문이 보도화했기 때문에 긍정적 논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사별로 특이한 점은 전반적으로 중립적 보도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제민일보의 부정적 보도(35건)가 제주신보(11건)에 비해 최소 3배, 제주신문(2건)보다는 최대 1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기간 이 신문사 대학담당기자의 취재보도 태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신문사별 보도 논조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보도 논조	긍정	135(37.3)	107(40.7)	99(35.0)	65(31.0)	120(37.0)	526(36.5)
	부정	11(3.0)	5(1.9)	35(12.4)	5(2.4)	2(0.6)	58(4.0)
	중립	216(59.7)	151(57.4)	149(52.7)	140(66.7)	202(62.3)	858(59.5)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²=71.54, df=8, p<.001

2) 대학보도의 주요 행위자

대학보도에서 어떤 활동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나 집단이 비중 있게 등장했는지를 확인했다. 이는 뉴스보도를 통해 기사에서 인용한 사람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주로 누구의 입장과 시각을 통해 보도가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전체 대학보도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대학본부가 22.4%(32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수 16.0%(231건), 학생 15.0%(217건), 산학협력/사업단 12.0%(173건), 단과대학/소속기관 11.6%(167건), 연구소/연구센터 7.8%(113건) 순이었다. 그러나 직원(1.2%)과 동문(2.2%) 그리고 제주도/지방기관(0.3%)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학보도 특성상 대학3주체의 교수·학생·직원에 대한 뉴스보도 보다는 보도자료의 주요 정보원인 대학본부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신문에서 산학협력/사업단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는 보도가 18.8%(61건)로서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라일보에서 다뤄진 대학본부 보도 건수(46건)가 제주신보(80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6〉 신문사별 주요 행위자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주요 행위자	교수	53(14.6)	56(21.3)	46(16.3)	36(17.1)	40(12.3)	231(16.0)
	학생	53(14.6)	48(18.3)	49(17.3)	35(16.7)	32(9.9)	217(15.0)
	직원	6(1.7)	5(1.9)	4(1.4)	1(0.5)	2(0.6)	18(1.2)
	동문	8(2.2)	6(2.3)	6(2.1)	5(2.4)	7(2.2)	32(2.2)
	일반도민	8(2.2)	9(3.4)	6(2.1)	5(2.4)	4(1.2)	32(2.2)

	총장	27(7.5)	19(7.2)	18(6.4)	11(5.2)	25(7.7)	100(6.9)
	대학본부	80(22.1)	46(17.5)	70(24.7)	53(25.2)	74(22.8)	323(22.4)
	단과대학/소속기관	49(13.5)	28(10.6)	28(9.9)	26(12.4)	36(11.1)	167(11.6)
	연구소/연구센터	26(7.2)	12(4.6)	18(6.4)	18(8.6)	39(12.0)	113(7.8)
	산학협력/사업단	44(12.2)	27(10.3)	25(8.8)	16(7.6)	61(18.8)	173(12.0)
	교육부/국가기관	4(1.1)	2(0.8)	11(3.9)	3(1.4)	1(0.3)	21(1.5)
	제주도/지방기관	1(0.3)	2(0.8)	1(0.4)	0	1(0.3)	5(0.3)
	기타	3(0.8)	3(1.1)	1(0.4)	1(0.5)	2(0.6)	10(0.7)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²=81.75, df=48, p<.05

3) 대학보도의 중심주제

대학보도에 대한 중심주제를 살펴보면, 대학 행사와 관련한 홍보성 보도인 행사/홍보가 35.4%(511건)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교수나 학생들의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이나 최초 연구 및 성과 등을 포함한 개인성고가 17.8%(256건), 국가사업 선정 및 학술협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경영/성고가 17.5%(252건), 개인적인 인사와 동정, 교수 채용 등의 인사/동정이 7.0%(101건),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한 보도인 입시/입학이 5.8%(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리/사고 기사는 2.0%(29건), 선거 기사는 단 0.3%(4건)에 그쳤다. 선거 기사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연구기간 동안 대학 총장 선거가 없었으며, 매년 치르는 총학생회 선거에는 지역신문이 당선자 확정보도 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는 입시/입학, 비리/사고, 인사동정, 대학이나 개인의 성과, 발전기금/장학금에 대한 보도 내용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제민일보는 대학과 관련된 실태/통계 10.2%(29건)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정책이 8.1%(23건)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많은 반면에 행사/홍보 기사는 10.2%(29건)로 다른 신문사보다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신문사별 보도 중심주제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보도 중심 주제	입시/입학	23(6.4)	13(4.9)	16(5.7)	11(5.2)	21(6.5)	84(5.8)
	실태/통계	10(2.8)	10(3.8)	29(10.2)	6(2.9)	5(1.5)	60(4.2)
	교육정책	9(2.5)	9(3.4)	23(8.1)	6(2.9)	5(1.5)	52(3.6)
	비리/사고	7(1.9)	5(1.9)	9(3.2)	6(2.9)	2(0.6)	29(2.0)
	행사/홍보	133(36.7)	80(30.4)	70(24.7)	80(38.1)	148(45.7)	511(35.4)
	선거	1(0.3)	1(0.4)	1(0.4)	1(0.5)	0	4(0.3)
	인사동정	25(6.9)	22(8.4)	16(5.7)	20(9.5)	18(5.6)	101(7.0)
	대학경영/성과	60(16.6)	43(16.3)	54(19.1)	31(14.8)	64(19.8)	252(17.5)
	개인성과	68(18.8)	63(24.0)	45(15.9)	37(17.6)	43(13.3)	256(17.8)
	발전기금/장학금	24(6.6)	15(5.7)	12(4.2)	11(5.2)	15(4.6)	77(5.3)
	기타	2(0.6)	2(0.8)	8(2.8)	1(0.5)	3(0.9)	16(1.1)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²=112.82, df=40, p<.001

4) 대학보도의 주요 행위자들의 중심주제

대학보도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중심 주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교수들은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 등의 개인성과가 51.5%(11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사/동정 15.2%(35건), 행사/홍보 14.3%(33건) 순이었다. 학생들 역시 개인적인 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성과가 53.5%(116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행사/홍보 21.7%(47건), 실태/통계 5.5%(12건) 순이었다. 기사 빈도가 매우 낮은 직원은 행사/홍보 44.4%(8건), 인사/동정 22.2%(4건), 대학경영/성과 16.7%(3건) 순으로, 동문은 행사/홍보 31.3%(10건), 발전기금/장학금 28.1%(9건), 인사/동정 21.9%(7건)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민은 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기탁이나 장학금 전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기금/장학금이 90.6%(29건)를 차지했다.

총장은 국가사업 선정이나 학술협정 체결 등 대학경영/성과가 45.0%(45건)으로 가장 많이 보였고, 대학본부는 행사/홍보 31.0%(100건), 대학경영/성과 28.2%(91건), 입시/입학 17.0%(55건) 순이었다. 단과대학/소속기관, 연구소/연구센터, 산학협력/사업단 모두 행사/홍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운 대학경영/성과 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 주요 행위자들의 보도 중심주제 단위: 건(%)

		주요 행위자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일반도민	총장	대학본부
보도 중심 주제	입시/입학	0	8(3.7)	0	0	2(6.3)	0	55(17.0)
	실태/통계	8(3.5)	12(5.5)	0	0	0	0	33(10.2)
	교육정책	11(4.8)	9(4.1)	0	0	0	6(6.0)	8(2.5)
	비리/사고	3(1.3)	11(5.1)	0	0	0	1(1.0)	10(3.1)
	행사/홍보	33(14.3)	47(21.7)	8(44.4)	10(31.3)	1(3.1)	6(6.0)	100(31.0)
	선거	0	4(1.8)	0	0	0	0	0
	인사동정	35(15.2)	4(1.8)	4(22.2)	7(21.9)	0	31(31.0)	20(6.2)
	대학경영/ 성과	3(1.3)	1(0.5)	3(16.7)	5(15.6)	0	45(45.0)	91(28.2)
	개인성과	119(51.5)	116(53.5)	2(11.1)	1(3.1)	0	10(10.0)	0
	발전기금/ 장학금	7(3.0)	1(0.5)	1(5.6)	9(28.1)	29(90.6)	1(1.0)	6(1.9)
	기타	12(5.2)	4(1.8)	0	0	0	0	0
전체		231(100)	217(100)	18(100)	32(100)	32(100)	100(100)	323(100)

		주요 행위자						전체
		단과대학/ 소속기관	연구소/ 연구센터	산학협력/ 사업단	교육부/ 국가기관	제주도/ 지방기관	기타	
보도 중심 주제	입시/입학	17(10.2)	0	2(1.2)	0	0	0	84(5.8)
	실태/통계	2(1.2)	0	1(0.6)	4(19.0)	0	0	60(4.2)
	교육정책	2(1.2)	2(1.8)	2(1.2)	11(52.4)	1(20.0)	0	52(3.6)
	비리/사고	2(1.2)	0	2(1.2)	0	0	0	29(2.0)
	행사/홍보	107(64.1)	92(81.4)	95(54.9)	6(28.6)	3(60.0)	3(30.0)	511(35.4)
	선거	0	0	0	0	0	0	4(0.3)
	인사동정	0	0	0	0	0	0	101(7.0)
	대학경영/ 성과	35(21.0)	12(10.6)	56(32.4)	0	1(20.0)	0	252(17.5)
	개인성과	0	4(3.5)	3(1.7)	0	0	1(10.0)	256(17.8)
	발전기금/ 장학금	2(1.2)	3(2.7)	12(6.9)	0	0	6(60.0)	77(5.3)
	기타	0	0	0	0	0	0	16(1.1)
전체		167(100)	113(100)	173(100)	21(100)	5(100)	10(100)	1442(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1963.58, df=120, p<.001

3. 대학보도의 뉴스 가치

지역신문에서 중요시 한 대학보도의 뉴스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1442개 기사에서 나타난 뉴스가치는 영향성 27.3%(394건), 유용성 22.7%(327건), 시의성 19.4%(280건), 저명성 17.1%(246건), 인간적 흥미 8.7%(126건), 부정성 3.2%(46건), 갈등성 1.6%(23건)이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사건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성(27.3%)과 대학정보와 관련한 유용성(22.7%)이 대학보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뉴스가치였다. 반면에 환경감시 기능에 대한 부정성(3.2%)과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성(1.6%)은 대학보도에서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특이한 점은 제주매일과 제주신문의 부정성 뉴스가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민일보는 대학보도 뉴스가치에서 유용성(18.0%)은 가장 낮은 반면에 부정성(11.3%)과 갈등성(2.5%)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신문사별 뉴스가치

단위: 건(%)

		지역일간신문					전체
		제주신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뉴스 가치	시의성	69(19.1)	36(13.7)	42(14.8)	41(19.5)	92(28.4)	280(19.4)
	저명성	65(18.0)	44(16.7)	43(15.2)	33(15.7)	61(18.8)	246(17.1)
	영향성	92(25.4)	94(35.7)	83(29.3)	57(27.1)	68(21.0)	394(27.3)
	유용성	87(24.0)	55(20.9)	51(18.0)	55(26.2)	79(24.4)	327(22.7)
	갈등성	4(1.1)	3(1.1)	7(2.5)	7(3.3)	2(0.6)	23(1.6)
	부정성	10(2.8)	4(1.5)	32(11.3)	0	0	46(3.2)
	인간적흥미	35(9.7)	27(10.3)	25(8.8)	17(8.1)	22(6.8)	126(8.7)
전체		362(100)	263(100)	283(100)	210(100)	324(100)	1442(100)

$X^2=128.69$, $df=24$,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일간신문의 대학보도기사 분석을 위해 보도 유형, 뉴스 게재면, 정보 형태, 보도 논조, 주요 행위자, 보도 중심주제, 뉴스가치 등을 살펴해보았다. 이는 지역신문이 대학보도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어떤 논조와 내용을 통해 지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역대학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즉 지역신문에서

지역 최고의 고등기관인 대학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관으로 상정했다면 당연히 많은 수의 기사가 중요 지면에 소개되고, 스트레이트 뉴스 보다 심층적인 해설/기획 보도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 결과 대학보도에 대한 보도 유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설/분석, 칼럼/논단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 보도 유형에 있어서도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가 월등히 많은 것처럼 대학보도에 대한 지역일간신문 보도가 사실에 기반을 둔 스트레이트 기사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언론용으로 발표되는 보도자료에 의해 작성된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이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중대한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심층적인 해설분석형 기사나 기획특집형 기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획특집형 기사가 적다는 사실은 지역신문이 기획 기사를 다루기 위한 노력이 적거나, 대학 홍보팀에서 지역신문이 적극적으로 기획특집형 기사를 다루기 위한 취재협조에 대한 요청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또한 2건에 그치고 있다. 사실은 신문과 독자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사실과 객관적 수치,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공간⁴⁸⁾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론 일반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언론사의 입장을 표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⁴⁹⁾. 이를 통해 신문사 입장에서 대학 뉴스보도는 물론 대학이 중요한 출입처로 관심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대학보도 기사가 게재된 지면을 분석한 결과 대학보도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보도에 대한 뉴스 게재면은 사람면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면, 사회면 순이었다. 뉴스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1면과 종합면 비중이 전체 4.3%(62건)에 불과해 지역신문은 대학뉴스를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았다. 신문의 1면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포괄하는 공간으로 기사 선택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우선하는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⁵⁰⁾. 사람면은 통상 언론에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목소리

48) 홍주현·김경희,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2017, 162-177쪽.

49) 원숙경·문종대,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기별 뉴스프레임 비교 연구: 영남 지역 6개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20(3), 2016, 65-91쪽.

50) 홍병기,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뉴스가치 비교 분석: 국내 영자신문 사례 연구를 중

를 내지 못하는 일반 수용자들의 여론 중심의 민주주의 토대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입장에서 의미가 있지만⁵¹⁾, 주로 지역사회에서 매일 발생하는 지역민들이나 단체들의 이슈 가운데 선별되는 뉴스가 사람면에 배치된다⁵²⁾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보도가 언론사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보도가 행사나 동정 위주의 사람면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은 김희정(2006)⁵³⁾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기사의 절반 정도가 사람면(동정면)에 실고 있다는 결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다. 뉴스 게재면을 신문사별로 살펴봐도, 제주신보의 경우 다른 신문사보다 문화면 게재가 많았고, 제민일보는 대학보도의 사회면 게재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문사별로 정보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당일 발표된 보도자료 등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기사 작성이 대부분(80.0%, 1154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학보도가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이나 분석을 통해 기사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도자료란 정부나 기업 등 정보원이 특정 내용의 기사화를 목적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⁵⁴⁾. 언론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이용한 기사 작성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좋은 기사거리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⁵⁵⁾, 근래 지역언론에서 나타나는 보도자료 의존도 심화는 보도자료를 기초로 2차 취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용에 가까운 인용보도라는 지적⁵⁶⁾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보도가 뉴스 수용자들의 관심사와 그들에게 미칠 영

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3(2), 2013, 59쪽.

51) 임양준, 「한국 신문의 사람면에 대한 보도형태와 특성 연구: 4대 중앙일간지 사람면 박스기사에 실린 대표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0호, 2007, 251쪽.

52) 이경미·고영철·김경호,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 연구」, 『언론과 학연구』 7(3), 2007, 189-190쪽.

53) 김희정, 앞의 2006 글, 163쪽.

54) 임현수·이준용,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2), 2011, 7쪽.

55) 송병원·이명천·김요한,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이용과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4), 2014, 150쪽.

56) 한선, 「광주 지역 미디어 장(field)의 역학구조 변화: 뉴스 통신사의 출현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24(3), 2016, 98쪽.

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도자료 만을 취급함으로써 대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그대로 미디어나 수용자에게 투영될 여지가 있어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보도에 대한 지역일간신문의 관점과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보도의 논조를 보면 중립적 보도가 60%(858건)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보도가 부정적 보도에 비해 9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립적인 보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긍정, 부정기사의 순으로 나타난 전국일간신문의 대학보도를 분석한 황성욱과 이종혁(2011)⁵⁷⁾의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경우가 96.64%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긍정적인 기사는 2.01%, 부정적인 기사는 1.35%에 불과했다. 이를 비교하면 지역일간신문들은 전국일간신문 보다 지역대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언론 기자의 경우 대부분 그 지역대학 출신이므로 지리적 근접성과 공동의 유대감, 지속적 상호작용의 특징을 보이는 공동체적 속성이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 PR담당자의 지역언론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이 부정적 보도를 억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보도에서 어떤 행위자나 집단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학본부가 가장 높았으며, 교수, 학생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만 대학의 3주체인 직원과 동문 빈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우선 직원은 교육과 연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의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으로서, 뉴스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직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충분히 지역언론에서 다뤄질 만한 보도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직원 자체에서의 언론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문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역할하며, 발전기금 모금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점을 십분 이해하여 대학 홍보팀은 퍼블리시티 영역을 대학의 성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졸업 동문으로 확대해야 하며, 대학 동문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기사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동문들을 지역언론에 가능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대학의 개방성이 필요하다.

57) 황성욱·이종혁, 앞의 2011 글, 140쪽.

보도 중심주제는 어떤 측면을 미디어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수용자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도 중심주제 차원에서 대학보도는 대학 행사와 관련한 홍보성 보도인 행사/홍보를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 교수나 학생들의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이나 최초 연구 및 성과 등을 포함한 개인성과, 국가사업 선정 및 학술협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경영/성과, 개인적인 인사와 동정, 교수 채용 등의 인사/동정,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한 보도인 입시/입학 순이었다. 반면에 비리/사고 기사나 선거 관련 기사는 적었다. 대학보도는 전반적으로 대학행사 홍보와 개인적인 업적에 대한 내용들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보도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중심 주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교수들은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 등의 개인성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사/동정, 행사/홍보 순이었다. 학생들 역시 개인적인 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성과가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행사/홍보, 실태/통계 순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은 교수나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일반도민은 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기탁이나 장학금 전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기금/장학금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총장은 국가사업 선정이나 학술협정 체결 등 대학경영/성과가 가장 많았고, 대학본부는 행사/홍보, 대학경영/성과 순이었다. 나머지 주요 행위자들은 모두 행사 홍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운 대학경영/성과 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이 주목한 뉴스가치를 살펴보면, 각종 대회에서 수상과 논문상, 연구실적 등의 우수성을 강조한 영향성과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알리는 유용성, 세미나, 심포지엄 등 시의성 순으로 뉴스가치를 꼽고 있었다. 반면에 환경감시 기능에 대한 부정성과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성은 대학보도에서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특이한 점은 제주매일과 제주신문의 부정성 뉴스가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민일보는 대학보도 뉴스가치에서 유용성은 가장 낮은 반면에 부정성과 갈등성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지역일간신문은 영향성과 유용성 뉴스 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뉴스는 정보 혹은 홍보를 주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국의 신문과 방송이 교육 현실의 다양한 대상과 주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와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정책과 실행 방식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의 다양한 형식, 내용, 시각의 교육보도 실천이 요구된다는 손승혜 등(2011)⁵⁸⁾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던 한국 교육보도의 문제점인 홍보/소개성 입시 관련 보도 중심의 과도한 강조현상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대상이 제주지역 일간신문에 한정돼 있어 전국일간신문이나 다른 타지역 일간신문과의 비교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대상 언론을 지역방송과 인터넷신문을 제외한 지역일간신문으로 제한한 것도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보도의 여러 결과에 대한 지역신문이나 기자들의 보도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뉴스 내용에는 기자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직업적 관행, 언론사 논조나 미디어 외적 차원 등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추후 지역언론의 대학 출입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나 현장 관찰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보도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대학보도에 나타난 주요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둬 따라 효과분석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지역민들이 대학보도를 접한 이후의 지각이나 인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만큼 후속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58) 손승혜·황하성·장윤재, 앞의 2011 글, 136쪽.

참 고 문 헌

- 강준만,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권, 1993.
- 김경모,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49(1), 2012.
- 김동규·김경호,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2), 2005.
- 김사승, 「취재현장과 뉴스룸 내부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방송학보』 26(4), 2012.
- 김송희·윤석년, 「디지털 환경에 따른 지역신문 뉴스생산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2), 2009.
- 김희정, 「대학의 대언론홍보에 관한 연구: 대학 보도자료의 지역 신문 보도 경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3), 2006.
- 박진우·송현주,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
- 손승혜·이창현, 『TV 저널리즘과 뉴스 가치: 한국, 영국, 미국 TV뉴스의 내용 분석』, 한국언론재단, 1999.
- 손승혜·황하성·장윤재, 「한국 언론의 교육보도 특성과 뉴스 가치 분석」, 『미디어와 교육』 1(1), 2011.
- 송병원·이명천·김요한,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이용과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4), 2014.
- 심미선·강혜란, 「지상과 및 인터넷에서만 방영된 19대 총선 관련 뉴스에 대한 대학생 집단의 뉴스가치 평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뉴스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4), 2013.
- 심재철,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뉴스가치에 관한 소론」, 『방송통신연구』 47, 2003.
- 심재철·정완규·김균수, 「한국과 미국 신문의 뉴스가치 비교: 대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3), 2003.
- 심재철·심재웅·김균수·이정훈, 「교육보도와 뉴스가치: 국내외 신문의 대학기사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오대영, 「언론사 대학평가 기사가 고교생의 대학평가와 언론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4), 2015.
- 오대영·최민음, 「한국 일간지의 헬스기사 보도양상: 종합지와 경제지의 차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6(2), 2016.
- 원숙경·문종대,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기별 뉴스프레임 비교 연구: 영남 지역 6개 신문의 사실과 칼럼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3), 2016.
- 유태용·이종구, 「대학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9(2), 1996.
- 이건호, 「한·미 신문기사의 심층성과 신뢰도 및 독창성 분석: 6개 한국 신문과 2개 미국 신문 1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5), 2008.
- 이경미·고영철·김경호, 「제주지역 일간지 <사람면> 등장인물의 특성 연구」, 『언론과학연구』 7(3), 2007.
- 이민웅, 『저널리즘의 본질과 실천』, 나남, 2008.
- 이완수, 「인물뉴스의 특성과 결정요인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 2006.
- 이완수·배재영·임봉수, 「지역신문 뉴스구성요소의 구조분석: 부산일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3), 2015.
- 이완수·배정근, 「경제 뉴스 품질에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 탐구: 경제 뉴스 전문 매체 생산자와 소비자 집단에 대한 표적 집단 면접(FGI)」,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4), 2016.
- 이종혁, 「뉴스의 일탈성이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진화론, 인지부조화, 정보 효용성을 바탕으로 모델 도출」, 『한국언론학보』 53(6), 2009.
- 이종혁·길우영·강성민·최윤정, 「다매체 환경에서의 뉴스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종합적 구조적 접근: ‘뉴스 가치 구조모델’ 도출」, 『한국방송학보』 27(1), 2013.
- 이창현·손순혜, 「뉴스 아이템의 특성에 따른 TV 뉴스의 중요도 차이」, 『한국언론학보』 44(1), 1999.
- 임양준, 「한국 신문의 사람면에 대한 보도형태와 특성 연구: 4대 중앙일간지 사람면 박스기사에 실린 대표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0, 2007.
- 임양준,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1), 2010.
- 임현수·이준웅,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2), 2011.

- 정수영·남상현, 「지상파TV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무보도와 단독보도 뉴스에 관한 연구: 뉴스 주제와 뉴스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4), 2012.
- 최태룡,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대학-경상대학교에 대한 진주시민의 인식 2008년」, 『지역사회학』 11(2), 2010.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index> 2017. 7. 26. 접속.
- 한선, 「광주 지역 미디어 장(field)의 역학구도 변화: 뉴스 통신사의 출현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24(3), 2016.
- 홍병기,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뉴스가치 비교 분석: 국내 영자신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3(2), 2013.
- 홍주현·김경희,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2017.
- 황성욱·이종혁, 「대학보도 분석을 통한 대학이미지 향상 PR전략 탐색: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2011.
- 황하성·손승혜·장윤재, 「교육 보도에 있어서 정보원, 뉴스 선정, 취재 관행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1), 2012.
- Gans, H. J.,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 McCombs, M. E., “*Setting the agenda*”, Cambridge: Polity, 2004.
- Rynes, S. L. (In press). Recruitment, job choice, and post-hire consequences: A call for new research directions. In M.D. Dunnette & L. Hough (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nd ed.).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forthcoming, 1991.
- Shoemaker, P. J., & Poe, T. P., “*Gatekeeping theory*”. New York : Routledge, 2009.
- Shoemaker, P. J., & Reese, D. R.,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s*”. New York: Longman. 1996, 김원용(옮김), 미디어 사회학, 나남, 1997.
-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s: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37, 1991.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of Local Newspapers : Focusing on Content Analysis of Daily Newspapers in Jeju

Jung Yong Bok* · Kim Chi-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ormal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in daily newspapers of Jeju area. To achieve this purpos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were analyzed by considering types of reports in local newspapers and formal compositions, such as news insertion locations and forms of information, and identifying tones of reports, primary doers, central topics and values of news. The contents from a total of 1442 university news coverages were analyzed for a year from March 1st 2015 to February 28th 2016. As a result, straight articles occupied the largest proportion of reports, and it was followed by commentaries/analyses and columns/verdicts. People section occupied almost half the news insertion locations, and it was followed by culture section and general news se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forms of information among newspapers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university news coverages were mostly published through news releases, and based on this data, articles were written through commentaries or analyses. Neutral reports occupied the biggest proportion of tones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 Lead Author, Ph.D,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roportion of positive reports was nine time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negative reports. When analyzing doers or groups that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university news coverages, universities had the highest frequency, and it was followed by professors and students. University news coverages put emphasis on university event promotions and personal achievements overall. Moreover, the influence emphasizing prizes in competitions and paper prizes and excellence of research results and the usefulness of various event promotions on campus frequently appeared as values of news. This implies that local daily newspapers pay less attention to university news coverages, and for newspapers, universities are not regarded as important news beats.

Key Words : Local Newspapers, University News Coverage, Content Analysis, Formal Characteristics, Content Characteristic.

교신 : 김치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 dasan@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7. 08. 31

심사완료일: 2017. 09. 29

게재확정일: 2017. 10. 01

연구원 소식

회 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회 보

(2017. 07. 01~2017. 10. 31)

■ 학술용역사업

☐ 한라마 품평 기준안 수립 사업

- 사 업 기 간 : 2017. 6. 1 ~ 2017. 9. 30 (총 4개월)
- 지 원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연구 참여자 : 김석준(책임연구원), 최현(공동연구원), 서영표(공동연구원), 허원영(연구보조원)

☐ 2014선정 인문도시지원사업 종료

- 사업기간 : 2014. 9. 1.~2017. 8. 31.(총 3년)
-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나가다’ 주제로 제주 인문학의 지평 확대
- 지원기관 : 한국연구재단
- 연구참여자 : 김동윤(연구책임자), 전영준(연구책임자), 김은희(공동연구원)

■ 발간물

- ☐ 『탐라문화』 56호(2017. 10. 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	정	1983.	2.	23.	규칙 제	53호
개	정	1997.	11.	17.	규칙 제	383호
개	정	1999.	6.	29.	규칙 제	435호
개	정	2001.	8.	31.	규칙 제	495호
개	정	2004.	3.	1.	규칙 제	597호
개	정	2006.	8.	1.	규칙 제	692호
개	정	2011.	7.	14.	규칙 제	958호
개	정	2012.	11.	9.	규칙 제	1043호
개	정	2013.	10.	4.	규칙 제	1131호
개	정	2014.	8.	8.	규칙 제	12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하 “탐라문화연구원”라 한다)은 제주학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탐라문화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조사, 발굴, 연구 및 보존
2.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
3.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
4.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교류
5.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자료실 설치와 운영
7.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위원 해외파견
8. 외부기관의 위탁연구 및 용역사업

9. 그 밖에 탐라문화연구원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항

제4조(원장과 부원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탐라문화연구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탐라문화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연구센터)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제주어연구센터, 제주4·3연구센터, 제주사회문화조사연구센터, 신화·민속연구센터, 제주문화콘텐츠연구센터, 해양문화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인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연구위원, 전임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 보조연구위원 등의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 등의 명칭과 임용·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위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7조(조교 및 직원) 탐라문화연구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분과) 탐라문화연구원의 연구 활동 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구위원들이 각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1. 언어·문학분과: 제주어, 제주문학, 한국어, 한국문학, 외국어, 외국문학 등
2. 민속·예능분과: 민속, 종교, 의료, 음악, 미술, 체육 등
3. 역사·고고분과: 역사, 고고, 문화재 등
4. 철학·교육분과: 사상, 철학, 윤리, 심리, 교육 등
5. 사회·문화분과: 지리, 사회, 인류, 평화, 여성, 보건, 의료 등

6. 산업·경제분과: 농업, 수산, 경제, 경영, 관광, 무역 등

7. 자연·환경분과: 지질, 동물, 식물, 생태, 환경, 해양 등

제9조(운영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원장, 부원장,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편집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와 일반회계, 국내외 기관의 지원자금, 기부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조(시행세칙) 탐라문화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1983. 2. 23. 규칙 제5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11. 17. 규칙 제3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29. 규칙 제4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31. 규칙 제4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4. 3. 1. 규칙 제5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 규칙 제692호)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각 부처장 및 부학(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부처장 및 부학(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7. 14. 규칙 제9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9. 규칙 제10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4. 규칙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 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8. 8. 규칙 제12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 바,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1조(연구자의 의무와 대상)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란 연구원 규정 제6조(연구위원 등)에 해당하는 자, 학술지 <탐라문화>에 투고하는 자와 심사자, 그리고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조(위원회의 설치) 연구원 연구윤리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4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 관련 분야 인사 중,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연구원 관련 연구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 3인 이상, 또는 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사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연구자로서의 자격 정지
- 5) 주의 조치
- 6) 기타

10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11조(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4) 연구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규정 제12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3조 5항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탐라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 횟수)

『탐라문화』는 매년 3회 발행하며 간기는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3조(게재 원고의 내용과 종류)

1. 제주도의 문화 및 동아시아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의 종류에는 1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3. 『탐라문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 투고)

1.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간기 별 원고마감은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2. 논문 게재를 원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교정)

1.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 후,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

재 여부를 확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한다. 단 우리 연구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논문과 특집 및 기획 논문에 대해서는 2인의 심사의원을 위촉하여 게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 연구노트, 서평, 자료 소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 ② 연구 주제의 명확성과 방법의 적절성
 - ③ 참고문헌 및 인용의 적절성
 - ④ 학술적 가치와 완성도
 - ⑤ 학술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5.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을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8. 1차 판정 결과 제7조의 ⑤-⑦에 해당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결정에 해당하는 논문은 각기 전항에 의거해,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6조(접수 및 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접수 및 논문게재의 가부를 통고한다.
2.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1차 판정	2차 판정	비고
①	게재	게재	게재	게재	-	-
②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③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④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⑤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심사	수정 후 재심은
⑥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사항
⑦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결정		검토 후 결정.
⑧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⑨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⑩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2. 이 규정에서 제외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1. 투고자격과 방법

- 1) 투고를 희망하는 논문은 탐라문화연구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tamla.jams.or.kr>)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우리 연구원 상임연구위원 및 특별연구위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 3) 논문의 주제는 제주도 문화 및 동아시아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 4) 논문 투고 시에는 “원고 매수”를 명기하도록 한다. 본문의 원고량을 200자 원고지 매수로 환산한 후 본문 및 각주의 분량을 합산한다(본문의 경우 한글 - F10 - 문서 - 문서정보 - 문서분량 - 글자항목의 원고 매수 ; 각주의 경우 : 4줄당 200자 원고지 1매로 계산).
- 5)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article), 단보(proceeding & report), 서평(book review), 자료(research materials), 번역문(translation) 등으로 한다. 다른 서평의 경우에는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가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7) 논문심사를 원하는 연구자는 『耽羅文化』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아래아한글(이하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탐라문화연구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tamla.jams.or.kr>)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8) 논문의 투고는 該當刊記에 대하여 2개월 전까지 접수받고 발행 1개월 전에 심사 완료한 것에 한해서 게재가 가능하다.
- 9) 투고자는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확정 시에

는 게재 논문에 따른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연구논문의 게재료는 10만원, 전임 교원의 학술연구비 수령 논문은 30만원으로 한다.

- 10) 원고의 게재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11)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탐라문화연구원 전임교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편집규정(원고 집필 요령)

제출된 모든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 작성 요령>

- 1) 제출된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초과 게재료-조판면 기준 30면 이상 1면 초과당 1만원 부과)를 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어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꼭 필요한 경우 영어를 괄호 안에 적는다. 고유 명사의 경우 해당 언어 발음을 한글로 적되, 일상화된 고유 명사는 예외로 한다. 한자문화권의 경우 고유명사는 한자 표기를 할 수도 있다.
- 4) 『耽羅文化』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해야 한다. 영문 초록에는 제목, 이름, 소속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초록의 분량은 관사를 포함하여 250~300단어로 제한한다.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한다. 논문 말미에는 필자의 e-mail주소를 기록한다.
- 5) 그림 및 사진은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게재 결정 후에 원본 파일을 별도로 첨부한다.

- 6) 본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본문의 장과 절, 항 번호는 I-1-1)①의 순으로 한다. 투고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I·II·III·IV·V…)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본문에서는 논저 인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각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 쪽수를 기재하도록 하며, 인용 또는 언급된 논저는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본문의 경우}

- 예) … 지붕을 덮어 하루에 집의 외곽을 완성시켜 준다(현용준, 1986: 62-63쪽). (×)
- … 이러한 시점에서 박재운 외(2009 ; 2010)의 연구에서는… (×)
- … 표선리의 당캐할망당에서 신으로 모셔지는데, 바닷가에 나무를 깔고 모래를 덮어 해변을 만든 공을 인정해서 마을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³³⁾ (○)

33)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 203-204쪽. 표선리 당캐할망당 당신화에서는 ‘세명주’라 하기도 하고 ‘설맹디’라 하기도 하는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 것이라 했다(표선리원로회, 『표선리향토지』, 1996, 154-155쪽). 이 당의 본풀이는 “한라산의 거녀신 ‘설문대할망’ 신화와 유사하다. 다만 여신의 이름 ‘설문대’가 ‘세명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신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했다(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325쪽). 2009년 제주신당조사에서는 이당을 ‘표선리 당캐 세명주할망당’이라 했다(제주전통문화연구소편,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188쪽).

- 8) 본문 중에서 강조할 부분에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며, 다른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 9) 참고문헌의 순서는 ① 한국 ② 중국·일본 ③ 서양의 순서로 하고, 저서와 논문의 구별 없이 한국의 것은 가나다 순, 중국·일본은 한자음의 가나다 순, 서양은 알파벳 순서로 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 순서로 한다.
- 10) 한국·중국·일본의 참고문헌은 논문은 「 」, 저서나 학술지는 『 』, 서양의 것은 논문은 “ ”, 저서나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한다. 참고문헌에서는 쪽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예) 논문

홍이섭, 「한국사에 있어 이십세기전반기의 규정문제」, 『동방학지』 12, 1971.

윤용택, 「21세기에 다시 보는 제주도 돛통시 문화」, 『탐라문화』 2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Pizam, A, “Tourism impact: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4), 1978.

예) 저서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사회배경과 삼정의 문란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4.

Capra. J, *The Hidden Connections*, Doubleday, 1978.

예) 번역서

프리츠포 카프라,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김재희 옮김, 범양사, 1997.

Freire. P,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1996, 교육문화연구회(옮김), 『희망의 교육학』, 아침이슬, 2002.

3.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편집위원회의 구성) 우리 연구원은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 편집위원은 다년 간 연구해 온 중진학자 혹은 최근 3년간 전국 규모 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추천 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주제의 적합성에 관련된 심사를 수행하고, 주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견서}와 논문의 각 분야(문학, 역사, 철학, 사회, 언어, 교육 등), 지면사정을 고려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발표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기반으로 ‘특집논문’, ‘기획논문’ 등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의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집규정의 심의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告示

이번 탐라문화 제56호에 투고된 논문은 15편이고,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5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모두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총 장 허향진
 원 장 전영준
 운영위원 김동윤, 김동전, 김치완, 박성진, 배영환, 이동철,
 이창익, 조성식, 최 현
 부 원 장 김은희
 편집위원장 서영표
 편집위원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학), 류찬열(중앙대학교 교양학부),
 민영현(부산대학교 철학과), 박준호(전북대학교 철학과)
 배영미(일본 오사카대학교 언어문화연구과), 안종철(독일 튜빙겐대학교
 한국학과),
 장희홍(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진영중(성공회대 영어학),
 최낙진(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허대식(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홍종옥(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
 조 교 이영준
 편집조교 강현정

耽羅文化 제56호

초판인쇄 2017년 10월 25일
 초판발행 2017년 10월 31일
 발행인 허향진
 편집인 전영준
 발행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 : 064) 754-2310
 홈페이지 : <http://tamla.jejunu.ac.kr>
 E-mail : tamla@jejunu.ac.kr
 제작·공급 景仁文化社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1
 전화 : 031) 955-9301 FAX 031) 955-9310
